

2012년 통계청 정책연구보고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 심층분석

통 계 청
한국인구학회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귀 통계청과 체결한 연구용역사업 계약에 의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 심층분석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총연구기간	2012년 5월 29일 ~ 2012년 10월 31일
연구과제명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 심층분석		
연구책임자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주관연구기관명 (소속부서명)	한국인구학회		
요약			
<p>○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로서 우리나라 공식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항목을 중심으로 인구, 가구, 주택, 그리고 지역(방법론)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및 주택 전반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심층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과제는 지정과제 11개로 나뉜다.</p> <p>○ 먼저 연구과제를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구분야에 총 3개의 연구과제: 거주지 변동을 통해 본 인구이동: 최근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최진호), 통근통학 인구 및 특성 분석(은기수), 활동제약자 현황분석(염지혜)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특성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p> <p>- 가구분야는 총 4개의 주제: 고령자 및 독신자(1인가구) 특성분석(김정석), 혼인과 출산의 변화(이성용), 사회변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가구구조별 유형별 특성과 가족 관계연구(황명진), 다문화가구의 가구구성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혜경)을 통해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현상을 심층분석하였다.</p> <p>- 주택분야는 주거밀도의 변화(이재훈), 주택 관련 주거혼잡도 등 파생지표 개발(박신영)의 두 가지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택 및 주거 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까운 장래의 주거형태의 변화를 예측하였다.</p>			

- 마지막으로 점차 증가하는 지역별 인구주택자료의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화된 지자체의 통계적 욕구에 순응하고자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승환은 경상북도 노동생명표의 작성 및 기대직업여명의 추정이라는 주제로 연령별 경제참여율을 생애 주기로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과 경제참여의 지역적인 차이가 큰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김규성은 2015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방법 연구를 통해 프레임균등분할, 모수추정 기법개발을 통한 표본조사방법을 보여주어 인구조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분석이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인구, 주택, 총조사, 가구, 지역, 표본, 통계, 출산, 고령화
	영어	Population, housing, census, household, sample, statistics, fertility, ageing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와 심층분석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진호(아주대학교 교수)
	은기수(서울대학교 교수)
	염지혜(중원대학교 교수)
	김정석(동국대학교 교수)
	이성용(강남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황명진(고려대학교 교수)
	이혜경(배재대학교 교수)
	이재훈(단국대학교 교수)
	박신영(토지주택연구원)
	정승환(고려대학교 교수)
	김규성(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 현(서울복지재단)
	김경훈(고려대학교)
연구 보조원	김희연(서울대학교)
	서용희(성균관대학교)
	위숙영(고려대학교)
	김석호(성균관대학교)
자문위원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조영태(서울대학교)

목 차

< Part I. 인 구 - 요 약 >	1
제 1주제 : 거주지 변동을 통해 본 인구이동 :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	6
최 진 호(아주대학교)	
I. 서론	6
II. 본론	6
III. 결론	24
제 2주제 : 통근·통학 인구 및 특성분석 :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28
은 기 수(서울대학교)	
I. 서론	28
II. 본론	30
III. 결론	47
제 3주제 : 활동제약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현황 분석 : 연령집단 별 차이를 중심으로	52
염 지 혜(중원대학교)	
I. 서론	52
II. 본론	53
III. 결론	67

제 4주제 : 혼인과 출산의 변화 :	
교육수준에 따른 혼인상태 및 출산 분석	71
	이 성 용(강남대학교)
I. 서론	71
II. 본론	73
III. 결론	89
< Part II. 가 구 - 요 약 >	93
제 5주제 : 고령자 및 독신자(1인가구) 특성분석 :	
일인가구의 구조와 변화(연령대별 구성과 특성 연구)	96
	김 정 석(동국대학교)
I. 서론	96
II. 본론	100
III. 결론	114
제 6주제 : 사회변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	
가구구조별 유형별 특성과 가족관계 연구	117
	황명진(고려대학교)
I. 서론	117
II. 본론	117
III. 결론	133
제 7주제 : 다문화가구의 가구구성 및 특성에 관한 분석	135
	이 혜 경(배재대학교)
I. 서론	135
II. 본론	136
III. 결론	166

< Part III. 주택 - 요약 >	172
제 8주제 : 주거 밀도의 변화	175
	이 재 훈(단국대학교)
I. 서론	175
II. 본론	176
III. 결론	186
제 9주제 : 주택관련 주거혼잡도 등 파생지표 개발	189
	박 신 영(토지주택연구원)
I. 서론	189
II. 본론	190
III. 결론	212
< Part IV. 방법론 - 요약 >	215
제 10주제 : 경상북도 노동생명표의 작성 및 기대직업여명의 추정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를 이용한 노동생명표 작성 및 노동기대여명 추정	218
	정 승 환(고려대학교)
I. 서론	218
II. 본론	219
III. 결론	232

제 11주제 : 2015 인구총조사 표본조사방법 연구 235

김 규 성(서울시립대학교)

I. 서론 235

II. 본론 235

III. 결론 247

Part I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는 고령화 저출산과 다문화인구의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가구, 주택, 인구주택조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Part I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심층분석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 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로서 우리나라 공식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Part I은 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 제약자, 혼인과 출산의 변화 등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인구이동의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최진호 명예교수가 거주지 변동을 통해 본 인구이동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0년 인구 총 조사의 1% 원 자료와 총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집계자료이다. 이동은 시, 군, 구 경계를 넘어서 이주한 것으로 정의된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장래 총인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둘째, 시-도내 이동보다는 시-도간 이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권화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총 이동의 양이 감소하면서 비이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1차, 2차 및 귀환이동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1차 이동자는 상대적으로 젊고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대체로 높아서 미혼율도 높은 편이다. 2차 이동자는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서 관리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즉 전문직일수록 이동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이동에서 나타난 주요변화는 첫째, 점차 수도권의 인구집중 경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수도권 내 인구이동의 중심이 과거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이동분석결과, 목적지가 서울인 대도시권 내·외의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젊은층, 고학력자,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으로 인구집중이 발생하는 매력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으며, 특히 양질의 고등교육기회가 전국의 인재를 서울대도시권으로 끌어들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수도권인구의 인구집중경향은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세계 경기의 침체 때문일 수도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제 2장에서는 통근통학 인구 및 특성 분석(은기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구이동현상인 통근, 통학의 실태 및 주간인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인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인구개념으로 상주인구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잦은 이동이 특징인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의 잦은 이동, 주거지와 일터의 불일치가 높기 때문에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이나 학업을 위해 이동하는 주간인구는 상주인구 못지않게 많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상주인구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행정수요를 야기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주간인구가 더 중요한 인구개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주간인구보다 상주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도 단위에서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도 전통적으로 업무, 서비스의 중심지인, 주로 대도시의 중구에서는 상주인구는 작은 반면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아서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서울의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와 같은 서울의 도심부 및 부심부 혹은 새로운 도심부 지역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높았던 서울의 도심부는 주간인구유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지역의 강남구 및 서초구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오히려 주간인구지수가 더 커지고 있어 강남구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에도 주간인구지수가 이 지역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95년에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서울의 각 지역은 주로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었지만, 2000년에는 각 지역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일산, 분당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사이 서울로의 주간인구를 공급함에 있어, 서울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의 신도시나 위성도시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런 유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지역도 매우 다양하지만 1995년에 비해 2000년은 강남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서울 외곽의 경기지역에서 강남구로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가 많은 지역은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며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서부 경기지역이나 동북부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학 연구에서 인구이동은 주요 연구 분야로서 주로 5년, 1년, 6개월, 혹은 한 달 사이 등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인구이동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거주지의 경계를 벗어난 인구이동, 즉 통근·통학에 관한 분석은 인구학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잦은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며 결과인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서울을 둘러싼 지역 사이에서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이동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분석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에 따라 통근·통학지가 다르고,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편차가 크며, 연령, 교육수준, 직업구조 등 통근·통학자의 특성에도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분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제 3장에서는 활동제약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현황분석(염지혜)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활동제약을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제약 인구 비율도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다.

취업활동제약 내에서의 항목별 제약 인구비율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걷기 및 이동제약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64세 연령집단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걷기 및 이동항목에서 성별 활동제약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45-54세 연령에서는 0.2% p 차이로 남성이 더 높았으나 55-65세 이후의 연령집단 모두에서 매우 큰 차이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활동제약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45-54세 연령에서는 남성이 더 활동제약 비율이 높았지만 55-64세 연령집단부터는 여성들의 활동제약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해 남성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활동제약과 부(-) 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모든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 인구의 비율은 낮아졌다. 교육수준의 활동제약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진 연령대는 45-54세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갖춘 응답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활동제약을 보여준다.

활동제약의 문제에서 활동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구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문제시 된다. 만약 이들이 1인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다면 활동제약 때문에 사회로부터 괴리되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높다. 1인 가구 구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5세 이상으로 활동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9%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체계화된 정책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항목별 활동제약을 살펴보면 걷기 등 이동제약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일인 단독가구에서 이동 등 걷기제약이 이와 같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외출 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좀 더 세심한 서비스제공 등이 요구된다.

제 4장은 혼인과 출산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강남대학교의 이성용교수는 연구를 통해 교육수준에 따른 혼인상태 및 출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혼인과 출산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비혼구성비 변동 분석, 한국의 이혼구성비 변동 분석, 평균 출산아수의 변동 분석, 강남·북의 비혼구성비 분석, 강남·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비혼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1995년 이후의 비혼구성비 변동은 혼인시점의 연기뿐만 아니라 비혼자체의 변동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한국 남성의 비혼구성비도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특히 비혼구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성과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혼구성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두번째로 한국의 이혼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한국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별 이혼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이혼구성비는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 반면, 남성은 1995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구성비가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평균 출산아수의 변동을 살펴보자. 최근 코호트일수록 낮은 평균 출산아수를 보인다. 출산을 거의 마감하거나 마감한 연령대인 40대 이후를 살펴보면, 최근 코호트인 40대가 가장 낮은 평균출산아 수를 보인다. 교육수준별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35-39세 여성을 제외하고는 중졸 이하 여성이 가장 높은 출산아수를 보인다.

네 번째로 강남·북의 비혼구성비를 살펴보자. 여성의 경우, 25-39세는 강남이 45-49세는 강북이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강남이,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원에서는 강북이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30-34세 여성의 경우, 강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구성비가 낮아지는 반면, 강북은 반대로 높아진다. 남성은 30세 이후 강북이 강남보다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다섯 번째로 강남·북 이혼구성비를 살펴보자. 서울여성은 45-59세가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모든 연령에서 강북여성이 강남여성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고졸을 제외한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강북보다 강남이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를 비교해보자. 강남과 강북의 기혼여성 평균 출산아 수를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강남여성은 강북여성에 비해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또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제 1주제 : 거주지 변동을 통해 본 인구이동

-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 -

최 진 호(아주대학교)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인구 총 조사의 원 자료와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내 인구이동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2010년 인구 총 조사는 인구이동연구에 필요한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한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자료로는 알 수 없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2010년 시점의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이동현상을 개관하고 이를 과거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그 변화를 추적하려 한다. 또 인구 총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인구이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이동의 양을 추정하고 각 유형별 이동자의 특성도 분석한다.

또 오래 동안 인구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 온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주목하여 특별히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추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인구이동연구에서 그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대도시권의 인구이동을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중에서 서울대도시권을 선정하여, 그 동안에는 시, 도간 이동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동일생활권인 대도시권 내에서의 이동을 따로 분류해 내어 그 양을 추정하고 이들 대도시권내외간 이동자의 특성도 살펴보려 한다.

II. 본론

1. 한국 인구이동 변화추이

이 절에서는 먼저 한국의 인구이동이 그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표 1>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총 조사 항목 중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이용

하여 각 5년간의 이동자수와 이동률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이동은 시, 군, 구의 경계를 벗어나 이주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최근 2005-2010년의 5년간 한국의 5세 이상 인구 중 854만 1천명이 이동하였다. 이중 312만 명은 시, 도내의 다른 시, 군, 구으로 이동하였고 508만 3천명은 다른 시, 도로 이동하였다. 한편 33만 8천명은 국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이동률을 보면 2010년 현재 5세 이상 인구의 18.9%가 이동을 하였다. 한국에서 이동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5-1990년으로 24.6%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이동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05-2010년 5년간 이동률이 감소한 데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 도간 이동의 비율이 시, 도내 이동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1970년대 후반기에는 전체 이동 중 시, 도간 이동의 비율이 48.8%로 절반이 안 되었으나

<표 1> 한국의 인구이동추이

(단위 : 천 명, %)

	총 이동자수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기타 이동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1970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05)	16.2	7.1	9.1
1975~1980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1990	9,871 (100.0)	4,380 (44.4)	5,435 (55.1)	55 (0.6)	24.6	10.9	13.5
1995~2000	9,711 (100.0)	4,191 (43.2)	5,386 (55.5)	134 (1.4)	23.1	10.0	12.8
2005~2010	8,541 (100.0)	3,120 (36.5)	5,083 (59.5)	338 (4.0)	18.9	6.9	11.2

그 비율이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59.5%로 되었다. 이처럼 전체이동 중에서 시, 도간 이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서울이나 광역시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이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약 34만 명에 이르는 국외지역으로 부터의 이동을 들 수 있다. 표에서 기타이동으로 분류된 이 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고 최근 그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 또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2. 시, 도간 국내 인구이동

<표 2>는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순수 국내이동을 전입과 전출, 순 이동으로 나누어 각 시, 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에서 보면 전입이 가장 많은 시, 도는 경기로서 최근 5년간 156만 1천명이 타 시, 도에서 경기도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전체 시, 도간 이동자의 30.7%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전입이 많은 곳은 서울로 96만 6천명이 전입하여 총 시, 도간 이동자의 19.0%가 서울로 이동하였다. 세 번째로 전입규모가 큰 지역은 역시 수도권인 인천으로 31만 6천명이 전입해 전체 전입자의 6.2%가 전입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 시, 도간 이동자의 55.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해 아직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준다.

<표 2> 시, 도간 인구이동

(단위 : 천 명)

	전입					전출					순이동				
	65~70	75~80	85~90	95~00	05~10	65~70	75~80	85~90	95~00	05~10	65~70	75~80	85~90	95~00	05~10
서울	1,191	1,256	1,333	971	966	248	753	1,377	1,656	1,349	943	503	-44	-685	-383
부산	309	539	373	216	204	127	221	348	400	342	182	318	25	-184	-138
대구	-	-	292	201	161	-	-	213	248	241	-	-	79	-47	-80
인천	-	-	413	339	316	-	-	174	279	290	-	-	239	60	26
광주	-	-	186	164	135	-	-	122	144	137	-	-	64	20	-2
대전	-	-	199	210	183	-	-	96	152	177	-	-	103	58	6
울산	-	-	-	110	90	-	-	-	111	97	-	-	-	-1	-7
경기	346	905	1,457	1,680	1,561	320	437	727	908	1,004	26	468	730	772	557
강원	103	105	123	164	154	184	275	299	178	173	-81	-170	-176	-14	-19
충북	56	73	122	169	171	164	208	190	143	145	-108	-135	-68	26	26
충남	99	166	137	262	311	308	332	326	199	207	-209	-166	-189	63	104
전북	55	65	81	133	123	205	274	267	169	158	-150	-209	-186	-36	-35
전남	58	89	140	171	128	277	429	437	226	187	-219	-340	-297	-55	-59
경북	146	264	245	275	256	303	400	453	281	275	-157	-136	-208	-6	-19
경남	98	296	360	283	286	307	385	372	262	250	-209	-89	-12	21	36
제주	14	22	29	36	34	12	25	33	31	37	2	-3	-4	5	-3

한편 시, 도중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134만 9천명이 2005-2010년 5년간 다른 시, 도로 전출해 나갔다. 서울 다음으로 전출규모가 큰 시, 도로는 경기도가 100만 4천명, 부산이 342만 명, 인천이 29만 명 등의 순위를 이룬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입자수는 대부분의 시, 도에서 감소하였으나 충남에서만 전입자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의 규제조치 때문에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이 상대적인 개발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출에 있어서는 서울은 전출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경기도는 늘어나는 등 시, 도별로 증가와 감소가 엇갈리고 있다.

전입과 전출의 차이인 순 이동을 보면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 도는 경기도로 55만 7천 명이 증가하였다. 경기도다음으로는 특히 충남의 순 이동이 두드러지는데 충남은 인구이동의 결과로 10만 4천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동의 결과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는 우선 서울로 5년 동안에 38만 3천 명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산에서 13만 8천명이, 그리고 대구에서 8만 명, 전남에서 5만 9천 명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에서는 이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가면서 대도시 자체의 순 이동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 지역 중에서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기, 충북, 충남, 경북에서만 플러스의 순 이동을 나타낸다. 순 이동의 양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에서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나 증가의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구와 충남의 경우에는 거꾸로 인구이동의 결과로 인구의 감소나 증가가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면 각 도별로 시, 군 전출자들이 도내의 다른 시, 군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타도로 이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3>에서는 총 시, 군 전출자 중에서 타도로의 전출 비율, 그리고 타도 전출자 중에서 서울로의 전출자 비중을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면 최근 5년간 이동에서 타도로의 전출 비율이 가장 낮은 도는 경기도로 총 시, 군 전출자의 46.2% 만 경기도 외의 타도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경기도가 낮은 타도 전출률을 보이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여러 인구흡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대조적으로 타도 전출비율이 높은 도는 전남, 경북, 강원 등이다. 이 중에서 전남과 경북의 경우는 광주나 대구로의 이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강원의 경우는 도내에 마땅히 인구를 흡인할 요인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과거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은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전국 각지에서 인구를 받아들여 경기도로 내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도외 전출자 중 서울로 이동한 비율은 바로 서울과 각 도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외 전출자중 서울로의 이동비율이 가장 높아 서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는 경기로서 총 도외 전출자의 46.4%가 서울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서울로의 이동비율은 1960년대 후반기에는 78.4%였으나 특히 1995년 이후 그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 역시 서울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장으로 인해 굳이 서울로 이동하지 않고서도 서울로의 통근 등 경제활동이 용이해 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 도별 총 이동자의 타도 및 서울 이동 비율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5~2010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경기	68.5	78.4	58.8	71.2	61.6	60.5	51.3	47.6	46.2	46.4
강원	63.0	47.3	71.6	36.7	72.4	29.1	68.7	27.5	71.5	26.0
충북	74.9	51.8	76.5	36.1	68.3	28.4	70.1	20.3	65.9	19.3
충남	75.9	63.3	69.7	47.0	81.7	28.2	76.2	20.1	69.7	19.3
전북	65.1	63.4	71.0	49.3	63.7	41.9	62.6	30.8	64.0	23.4
전남	57.9	62.8	61.3	47.3	76.6	30.4	74.6	20.8	72.8	16.0
경북	49.0	43.6	38.1	32.0	71.1	16.6	70.4	14.6	71.8	13.8
경남	70.6	21.5	64.7	15.3	53.1	15.6	55.6	13.4	59.8	14.4
제주	50.0	41.7	62.5	32.0	55.9	33.3	52.5	32.3	77.1	29.7

경기도 다음으로 서울과의 의존도가 높은 도는 강원과 전북으로 나타난다. 강원과 전북은 과거에도 서울로의 이동비율이 높았었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 인구를 흡인할 만한 대도시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도와는 대조적으로 서울로의 이동비율이 가장 낮은 도는 경북과 경남으로 총 도외전출 이동자의 13.8%, 14.4%만이 서울로 이동하였다. 경북의 경우는 인근에 대구가, 그리고 경남의 경우는 부산, 울산 등의 대도시가 있어 서울과 견줄만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 경남을 제외한 모든 도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쳐진다. 다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서울로의 이동비율이 높은 강원도와 전북에 어떤 방법으로 지역의 인구정착기반을 조성해 주느냐하는 것은 계속되는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3. 인구이동의 유형

1) 인구이동의 유형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매 10년마다 끝이 0으로 끝나는 해의 인구 총 조사에서는 출생지와 더불어 5년 전, 1년 전 거주지를 묻고 있어 현거주지를 포함한 네 시점에서의 거주지를 비교하면 인구이동의 유형 분석이 가능하다. 이때 인구이동의 유형으로는 보통 1차이동, 정착이동, 2차이동 (반복이동) 그리고 귀환이동으로 분류한다.

1차이동은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그리고 1년 전 거주지는 같으나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최근 2009-2010년의 1년 사이에 이동한 것을 말한다. 정착이동은 출생부터 최근 1년 전까지의 기간사이에 출생지를 떠나 적어도 1번 이상 이동하였으나 2009-2010년 사이에는 이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2차 (반복) 이동은 2009-2010년 사이에 이동을 하였고 출생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이동을 한 경우로서 출생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귀환이동은 출생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이동을 경험하였으나 출생지와 현 거주지가 같아 출생지로 다시 돌아간 이동을 의미한다 (최진호, 2002).

이처럼 이동의 특성에 따른 유형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개개인의 이동 동기, 이동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이동의 결과 등이 이동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이동유형을 다 합친 총량적인 이동의 성격은 각 유형별 비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동의 유형별 분석에서 이동의 공간적 단위는 시, 군으로서 대도시의 구간 이동은 이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표 4> 우리나라 5세 이상 인구의 이동상 지위, 1990~2010

	(단위: %)		
	1990	2000	2010
비이동자	37.2	40.1	44.7
1차이동자	1.6	1.3	1.1
정착이동자	53.6	52.9	49.5
2차이동자	5.6	3.4	2.6
귀환이동자	2.1	2.3	2.1
합계 (사례수)	100.0 (773,669)	100.0 (821,386)	100.0 (432,926)

<표 4>는 우리나라 5세 이상 인구의 이동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2010년의 경우 한국의 5세 이상 인구 중 44.7%는 비이동자로 분류된다. 즉 이들은 출생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동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유형은 정착이동자로서 49.5%를 차지한다. 이밖에 1차이동자는 1.1%, 2차이동자는 2.6%를 나타낸다.

1990년, 2000년과 비교해보면 비이동자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즉 1990년에 비이동자는 37.2%였고 2000년에는 40.1%였으나 2010년에는 44.7%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비이동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한국에서 인구이동의 양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앞의 <표 1>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이동률은 1985-90년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다. 비이동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형태의 이동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동유형별로는 2차이동자의 비율이 가장 많고 귀환이동자, 1차이동자 순으로 비율이 줄어든다.

2)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표 5>는 2010년 현재 한국의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성을 보면 남자는 1차이동과 귀환이동, 그리고 2차 이동에서 여자보다 그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정착이동에서 남자보다 월등히 많다 여자의 정착 성향이 남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차 이동에 있어서는 2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2차이동과 귀환이동에 있어서는 20대 후반과 30대의 연령비율이 높다. 이는 1차 이동은 출생 후 처음 이동한 것이고, 2차나 귀환이동은 1차 이동을 한 이동자가 재차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1차 이동자 보다는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비율은 특히 정착이동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성향이 낮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학교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2차 이동에서 제일 높고 다음 1차 이동, 귀환이동에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동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학력이 이동성향을 높이기도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기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연령에 따른 이동성향의 차이를 반영해 미혼자는 1차이동자에서 많이 발견되고 기혼자의 비율은 정착 이동에서 높게 나타난다.

취업자의 비율은 2차 이동, 귀환이동, 정착이동에서 비교적 높고 1차 이동에서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1차 이동자 중에는 교육목적 이동해서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층이 상당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동유형별로 직업분포를 보면 관리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2차이동자, 1차이동자 그리고 귀환이동자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 성향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는 비이동자에게서 그 비율이 높는데 이는 산업의 특성상 농촌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5>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2010

(단위: %)

구분		비 이동자	1차 이동자	정착 이동자	2차 이동자	귀환 이동자
성	남자	50.9	52.7	45.9	51.7	52.1
	여자	49.1	47.3	54.1	48.3	47.9
연령	14이하	18.7	15.7	6.4	6.7	15.8
	15-19	9.6	10.7	4.1	3.5	6.5
	20-24	6.0	16.2	3.7	9.2	7.9
	25-29	7.4	18.2	6.0	14.2	12.8
	30-34	6.5	13.2	7.7	15.0	14.1
	35-39	6.8	7.7	9.9	12.8	12.4
	40-44	6.5	4.4	11.1	9.6	8.1
	45-49	6.3	3.3	11.7	7.4	6.5
	50-55	6.4	3.1	11.1	7.2	5.1
	55-59	5.3	2.0	8.1	5.0	3.4
	60 이상	20.6	5.5	20.2	9.3	7.3
교육	안 받았음	9.2	5.6	4.7	2.6	3.7
	초등학교	23.0	10.9	14.5	8.6	13.6
	중학교	13.2	6.2	12.3	6.7	8.4
	고등학교	26.7	22.4	33.7	28.5	26.0
	대학(4년제미만)	10.7	18.9	11.5	15.8	15.5
	대학교(4년제이상)	15.2	31.7	19.4	31.2	27.7
	대학원 이상	2.1	4.5	3.9	6.5	5.1
혼인 상태	미혼	35.1	56.0	19.3	32.0	37.4
	배우자 있음	51.9	37.7	67.7	58.0	54.4
	사별	9.7	3.4	8.5	4.9	3.3
	이혼	3.3	2.9	4.5	5.1	5.0
경제 활동 상태	주로 일하였음	50.9	49.1	53.4	55.7	53.8
	가사, 학교(학원)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3.8	3.1	3.3	2.9	3.3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1.6	2.5	1.7	2.3	2.3
	일하지 않았음	43.7	45.3	41.6	39.1	40.5
직업	관리자	1.8	2.1	3.1	3.7	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1	29.1	20.1	29.7	25.4
	사무 종사자	13.9	19.0	15.2	17.7	19.5
	서비스 종사자	7.8	10.6	10.2	9.2	9.0
	판매 종사자	10.7	9.8	12.7	10.4	1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3	2.4	6.8	2.5	9.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0	9.0	9.5	8.8	7.6
	장치·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9.4	12.8	12.9	11.9	8.0
	단순노동 종사자	8.0	5.4	9.6	6.1	7.4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동자의 특성은 이동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유형별 분석의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각 이동의 유형별로 이동의 이유나 동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 본다면 1차 이동은 취업과 관련된 이유 이외에도 고등교육을 받기위한 이동도 상당 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차 이동이나 귀환이동은 주로 취업과 관련된 이동이나 주택관련 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수도권외의 인구이동

한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문제가 주요 정책과제가 된 것은 이미 1960년대부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분석에서 수도권외의 인구이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공간적 범역으로 지역 간 격차나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때 비수도권지역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표 6>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외를 중심으로 한 인구이동을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수도권외의 인구이동은 크게 수도권 내에서 시, 도간의 이동,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 그리고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로의 전출로 나누어서 비교하고 있다. 먼저 최근 2005-2010년 5년간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을 보면 서울은 경기도와 인천에 대해서 이동으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 즉 지난 5년간 서울에서 경기도로는 약 91만 2천명이 이동하였으나 거꾸로 경기도에서 서울로는 46만 6천 명이 이동해 서울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44만 6천 명의 전출 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인천과의 관계에서는 서울에서 인천으로는 9만 9천 명이 이동해 나간 반면 인천에서 서울로는 6만 1천 명이 이동해 3만 8천의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인천과 경기도는 거의 비슷한 양의 인구를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기도에서 인천으로는 13만 2천 명이 이동하였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인 13만 5천 명이 인천에서 경기도로 이동하여 경기도가 약간의 순 이동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0년, 20년 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수도권내의 서울, 경기, 인천 간의 이동의 총량은 180만 5천명으로서 10년 전인 1995-2000년의 196만 2천 명보다는 감소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수도권외의 인구이동, 1985~2000

(단위 : 천 명, %)

	1985~1990	1995~2000	2005~2010
수도권 내 이동	1,656	1,962	1,805
서울 → 경기	825	1,098	912
→ 인천	160	126	99
경기 → 서울	440	432	466
→ 인천	102	122	132
인천 → 서울	64	65	61
→ 경기	65	119	135
수도권 외 전입	1,547 (100.0)	1,130 (100.0)	1,039 (100.0)
→ 서울	829 (53.6)	535 (47.3)	439 (42.3)
→ 인천	151 (9.8)	96 (8.5)	85 (8.2)
→ 경기	567 (36.6)	499 (44.2)	515 (49.6)
수도권 외 전출	622 (100.0)	881 (100.0)	838 (100.0)
서울 →	392 (63.0)	432 (49.0)	338 (40.3)
인천 →	45 (7.2)	95 (10.8)	94 (11.2)
경기 →	185 (29.8)	354 (40.2)	406 (48.4)
수도권 내외간 순이동			
수도권	925 (100.0)	249 (100.0)	201 (100.0)
서울	437 (47.2)	103 (41.4)	101 (50.2)
인천	106 (11.5)	1 (0.04)	-9 (-4.5)
경기	382 (41.3)	145 (58.2)	109 (54.2)

한편 2005-2010년 5년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총 103만 9천 명이 이동해 들어왔다. 이들 수도권 전입자중 서울로는 42.3%가, 49.6%는 경기도로 전입해 1965년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로의 전입자 수가 서울 전입자수를 능가하였다. 즉 10년 전인 1995-2000년의 경우 서울로는 47.3%, 경기도로는 44.2%가 전입하였고, 20년 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3.6%, 36.6% 이었다. 이처럼 서울로의 전입비율은 줄고 경기도로의 전입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서울 주변의 대도시권화의 영향 때문인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외로의 전출의 경우에도 서울로 부터의 전출비율은 감소하고 경기도로부터의 전출비율은 증가해 최근 2005-2010년에는 경기도의 전출 비율이 서울보다 더 많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보다 많아져 그만큼 전출자의 pool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수도권 내외간의 인구이동의 결과, 수도권 전체로는 총 20만 1천 명의 순 이동을 기록하였는데 이 순 이동의 양도 10년 전인 1995-2000년의 24만 9천 명과 비교하면 감소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인천의 순 이동은 마이너스로 되어 인천은 처음으로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최근 수도권 인구이동의 변화를 요약하면 첫째는 점차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경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이동의 중심이 과거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경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인구의 pool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경기도가 수도권 인구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개발 압력이 서울 주변지역으로 옮겨가 대도시권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 도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2000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즉 1995-2000년에는 한국의 시, 도간 총 이동의 73.8%가 수도권과 관련된 이동이었으나 최근 2005-2010년에 이 비율이 72.4%로 감소해 수도권의 비중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동의 흐름별로 보면 수도권으로의 전입비율과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수도권 외로의 전출비율은 미미하지만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관련 이동의 비중은 앞으로도 큰 변동 없이 거의 현재의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전국이동 중 수도권 이동의 비중, 1965~2010

(단위 : 천 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5~2010
수도권외에서 전입	1,164 (47.4)	1,414 (37.8)	1,547 (28.5)	1,130 (21.0)	1,038 (20.4)
수도권외로 전출	195 (7.9)	443 (11.8)	622 (11.4)	881 (16.4)	838 (16.5)
수도권내 이동	373 (15.2)	747 (20.0)	1,656 (30.5)	1,962 (36.4)	1,805 (35.5)
합 계	1,732 (70.5)	2,604 (69.6)	3,825 (70.4)	3,973 (73.8)	3,681 (72.4)
전국 시 도간 이동	2,457 (100.0)	3,739 (100.0)	5,435 (100.0)	5,386 (100.0)	5,083 (100.0)

그러면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이동자의 거주지분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이를 알기 위해서 <표 8>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최근 5년간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 분포를 보면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전입자를 보내고 있는 시, 도는 강원도로 총 수도권 전입자의 11.1%가 강원도에서 전입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에서 10.8%, 충남에서 10.7%가 전입하였고 경북의 9.3%, 전북의 8.9%의 순으로 수도권 전입자의 비율이 높다.

<표 8>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별 비율, 1985~2010

(단위 : %)

	1985 ~ 1990	1995 ~ 2000	2005 ~ 2010
부산	7.8	10.8	10.8
대구	4.4	6.9	7.7
광주	4.2	6.2	6.4
대전	3.3	6.8	8.6
울산	-	2.6	2.8
강원	13.1	11.4	11.1
충북	7.7	7.1	7.3
충남	13.9	10.4	10.7
전북	13.1	10.4	8.9
전남	15.2	9.8	6.9
경북	8.9	8.6	9.3
경남	7.2	7.0	7.6
제주	1.1	1.8	2.0
합계	100.0	100.0	100.0

5. 서울대도시권의 인구이동

앞에서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은 공식적인 계획단위로서 정부의 각종 행정집행에 있어서 주요한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은 기존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대도시권은 아니다. 대도시권이란 중심도시와 그 중심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인 근교나 위성도시가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는 광역생활권을 의미한다.

한국도 이제는 도시화의 단계에서 행정구역중심의 점적인 도시화에서 대도시와 그 주변을 아우르는 면적인 도시화로 이행 된지 오래되었다. 이미 서울은 1990년대 전반부터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부산과 대구에도 미쳐 이들 도시에서도 행정구역내의 상주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도시 인구의 감소는 대도시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대도시의 과밀로 인해서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도시권내에서는 중심도시인 대도시만의 인구변화가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포함한 대도시권의 인구변화에 주목하여 각종 국가계획의 수립이나 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metropolitan area 와 같은 공식적인 대도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제 이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수도권보다는 작은 범역인 서울대도시권을 설정하고 이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이동을 분석하려 한다.

1) 서울대도시권의 설정

보통 대도시권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기능적 연계성과 지역적 동질성이 사용된다. 기능적 연계성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통근권, 상권, 진료권 등으로 분석할 수 있고, 지역적 동질성은 주변지역이 도시적 특색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 가를 통하여 판단한다(최진호, 이종열, 198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를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이미 시도된 바 있는 몇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서울대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즉 서울과 대체로 30Km 정도 떨어진 반경 안에 위치하면서 주변지역의 서울에 대한 직업의존도, 그리고 서울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이 높은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편입하였다(권창기, 정현욱, 2007).

<표 9>는 이렇게 해서 설정된 서울대도시권에 포함된 시, 군을 나타낸다. 서울대도시권의 주변지역으로는 인천을 포함하여 수원, 성남 등 모두 21개의 시, 군이 포함되었다.

<표 9> 서울 대도시권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

서울대도시권 주변지역		
1. 인천	8. 안산	15. 의왕
2. 수원	9. 고양	16. 하남
3. 성남	10. 과천	17. 용인
4. 의정부	11. 구리	18. 파주
5. 안양	12. 남양주	19. 김포
6. 부천	13. 시흥	20. 광주
7. 광명	14. 군포	21. 양주

2) 서울대도시권 내의 인구이동

서울대도시권내에서의 인구이동은 크게 세 흐름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주변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 반대 흐름인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이동, 그리고 주변지역에 포함된 시, 군간 이동이다. <표 10>은 이 세 가지 이동의 양과 그 비율을 보여준다. 2005년 현재 서울대도시권에 포함된 서울과 21개의 주변 시, 군에 거주하고 있던 5세 이상의 인구 중 2005-2010년 사이 5년간 대도시권 내에서 시, 군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전체 거주자의 11.7%이다.

이들을 이동의 방향별로 보면 주변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사람이 전체주민의 2.5%,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간 사람이 4.6%, 그리고 주변지역 간 이동을 경험한 사람이 4.6%를 차지한다. 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인구 총 조사의 1% 표본자료임을 감안하면 대체로 5년간 주변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약 42만 명,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간 인구는 약 77만 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인 서울로 이동한 사람보다는 거꾸로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 이동해 나간 사람이 약 배 정도 더 많다. 그러면 인구이동 측면에서 서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은 어디인가?

먼저 주변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흐름 중에서는 전체 서울 전입자의 13.0%가 고양에서 전입하였고, 12.7%는 인천에서 그리고 10.8%는 성남에서 전입하였다. 이들 도시이외에도 부천, 의정부, 수원 등 도시에서 총 전입자의 6%가 넘는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였다. 한편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간 인구 중에서는 12.0%가 인천으로 이동하였고 10.6%는 고양으로, 9.7%는 성남으로 이동하였다. 이밖에도 용인으로 8.8%, 남양주로도 8.1%가 이동하였다. 이들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은 주변지역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주택이유의 이동이 상당수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전입지와 전출지를 분석한 결과 인구이동 측면에서 서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은 인천, 고양, 성남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 지역은 주변지역에 포함된 21개의 시, 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이들 지역안에는 1990년대에 개발된 일산, 분당, 중동 등 대규모의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찾아 볼 수 있다.

<표 10> 서울 대도시권의 이동

(단위 : %, 명)

대도시권내 이동		대도시권외에서 전입	
근교에서 서울로	21.5 (4,222)	서울로 전입	44.5 (3,904)
서울에서 근교로	39.1 (7,674)	근교로 전입	55.5 (4,863)
근교간	39.5 (7,752)		
합 계	100.0(19,648)	합 계	100.0(8,767)

3) 서울대도시권 외에서의 전입

그러면 서울대도시권 외에서 이들 지역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인구는 얼마나 되며 또 어느 시, 도에서 많이 이동해 오는가? <표 11> 은 2005-2010년 5년간 서울대도시권 외 지역에서 서울대도시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전 거주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약 39만 명이 서울대도시권 외에서 서울로 이동하였고, 약 49만 명은 서울대도시권 주변지역으로 이동하여 총 약 88만 명이 서울대도시권으로 이동하였다. 앞의 서울대도시권내의 인구이동에서도 보았듯이 서울대도시권 외에서도 중심도시인 서울 보다는 주변지역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제 이들 서울대도시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를 보면 서울로의 이동 중에서는 12.4%가 부산에서, 11.2%는 강원도에서 그리고 8.0%가 경북에서 전입하였다. 서울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의 타 지역에서도 7.5%가 전입하고 있으며,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면 각 시, 도에서 대체로 6%-8% 사이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서울은 각 시, 도 지역에서 끌고루 인구를 흡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대도시권의 주변지역으로 가장 많이 인구를 보내고 있는 시, 도는 경기 외곽지역으로 전체 전입자의 17.3%를 차지한다. 경기 다음으로는 서울 전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9.0%, 충남에서 8.6%, 경북에서 8.5%, 그리고 부산에서 8.4%가 전입하였다. 서울대도시권 주변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도시권 전체로 보면 경기도 외곽, 부산, 강원이 인구이동 측면에서 서울대도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11> 서울대도시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단위 : %, 명)

	서울 전입	근교 전입	대도시권 전체
부산	12.4 (484)	8.4 (408)	10.2 (892)
대구	7.5 (292)	6.4 (312)	6.9 (604)
광주	6.0 (236)	5.4 (264)	5.7 (500)
대전	7.6 (297)	6.5 (317)	7.0 (614)
울산	2.3 (91)	2.3 (110)	2.3 (201)
경기	7.5 (292)	17.3 (843)	12.9 (1135)
강원	11.2 (439)	9.0 (440)	10.0 (879)
충북	5.9 (229)	7.4 (361)	6.7 (590)
충남	8.7 (339)	8.6 (418)	8.6 (757)
전북	7.2 (280)	7.0 (342)	7.1 (622)
전남	6.0 (234)	5.8 (281)	5.9 (515)
경북	8.0 (313)	8.5 (411)	8.3 (724)
경남	7.4 (288)	6.2 (303)	6.7 (591)
제주	2.3 (90)	1.1 (53)	1.6 (143)
전체	100.0 (3904)	100.0 (4863)	100.0 (8767)

4) 서울대도시권 이동자의 특성

그러면 이들 서울대도시권 이동자는 이동의 그룹별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까? <표 12>는 이들의 주요한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동의 흐름별로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목적지가 서울인 이동에서 남자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흥미롭다. 즉 대도시권내에서 주변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동자중 여성의 비율이 52%로 나타나며, 대도시권 밖에서 서울로 이동한 사람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54.9%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이 특히 취업 등 여성들을 유인할 요인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동의 흐름별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의 비중은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로 이동한 흐름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중 43.4%가 20대이다. 이들은 주로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입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30대는 서울대도시권내에서의 이동에서 고르게 그 비중이 높는데 근교에서 서울로의 이동은 취업관련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 근교로의

이동이나 근교간의 이동은 주택관련 이유가 주요한 이동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비율은 특히 서울에서 근교로 이동한 흐름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은퇴 후 서울에서 근교로 이동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한편 서울대도시권 이동자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람 중 53.1%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서울로의 이동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기위한 이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고학력자들의 전근 등 직업관련 이동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자는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로 이동한 사람 중 5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도시권외에서 근교로 이동한 사람 중에서도 38.1%는 미혼이다. 반대로 기혼자의 비율은 대도시권내에서 근교 간 이동, 그리고 서울에서 근교로의 이동에서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상태에서도 역시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로의 전입에서 비취업이 높아 이 흐름에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대체로 서울로 향한 이동에서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난다. 즉 대도시권내의 근교에서 서울로 이동한 사람 중에서는 전문, 관리직 종사자가 37.8% 이며, 서울대도시권외에서 서울로 이동한 사람 중에서는 이 비율이 42.4%에 달한다. 따라서 서울은 고학력, 전문직종사자를 유인하는 흡인력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서울대도시권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서울 대도시권 내 이동			서울 대도시권 전입	
		서울로	근교로	근교간	서울로 전입	근교로 전입
성	남자	48.0	49.4	49.9	45.1	50.2
	여자	52.0	50.6	50.1	54.9	49.8
연령	14이하	13.6	11.5	15.8	8.0	13.6
	15-19	5.8	3.2	5.0	6.3	4.6
	20-24	6.0	3.9	4.1	18.8	9.0
	25-29	11.8	10.2	9.3	24.6	16.5
	30-34	14.4	17.8	14.4	11.9	14.9
	35-39	13.4	16.3	14.8	6.7	11.4
	40-44	10.4	8.9	10.9	5.7	8.7
	45-49	7.9	5.9	7.4	4.8	5.1
	50-55	5.4	6.0	6.4	3.8	4.3
	55-59	3.2	4.5	3.8	2.5	2.7
	60 이상	8.1	11.9	8.1	6.9	9.1
교육	안 받았음	3.5	3.9	4.2	2.4	4.3
	초등학교	11.3	11.2	12.6	8.0	12.8
	중학교	6.9	6.8	8.7	4.8	6.7
	고등학교	22.5	26.2	29.8	16.6	24.9
	대학(4년제미만)	14.0	16.0	14.3	15.1	16.0
	대학교(4년제이상)	34.0	28.9	25.5	45.9	29.7
	대학원 이상	7.8	7.0	4.8	7.2	5.6
혼인 상태	미혼	32.4	25.0	24.7	59.4	38.1
	배우자 있음	58.2	65.0	65.4	34.0	51.6
	사별	4.5	5.0	4.5	3.9	5.4
	이혼	4.9	4.9	5.4	2.7	4.9
경제 활동 상태	주로 일하였음	56.5	54.7	56.1	50.7	54.7
	가사·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3.1	3.0	3.0	3.9	2.2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2.4	2.6	2.0	1.8	2.4
	일하지 않았음	38.0	39.6	39.0	43.6	40.7
직업	관리자	5.7	4.0	4.2	4.0	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1	31.3	28.5	38.4	33.9
	사무 종사자	25.0	20.8	20.5	23.5	18.8
	서비스 종사자	8.8	8.1	7.9	10.0	9.6
	판매 종사자	13.1	13.3	12.6	10.7	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4	0.9	0.9	0.3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0	7.3	7.9	4.3	7.2
	장치·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5.1	7.9	10.9	3.7	10.5
	단순노동 종사자	4.9	6.6	6.6	5.1	6.1

Ⅲ.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0년 인구 총 조사의 1% 원 자료와 총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집계자료이다. 이 연구에서 이동은 우리나라의 시, 군, 구 경계를 넘어서 이주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2005-2010년 5년간 한국의 5세 이상 인구의 18.9%가 이동을 경험하였다. 시,도내 이동보다는 시, 도간이동이 더 많은데,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 확장되면서 대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이동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이동률이 하락한 데에는 세계적인 경기불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 도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인구의 전입량이 가장 많은 시, 도는 경기도이고 전출량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다. 순 이동에 있어서 인구이동으로 가장 많이 인구를 얻고 있는 시, 도는 경기도이고, 거꾸로 인구를 가장 많이 잃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대체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와 도 지역은 순 이동이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도 중에서는 충남, 충북, 경남 세 지역에서만 순 이동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 도간의 인구이동패턴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인구 총 조사는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인구이동의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0년 현재 한국의 5세 이상 인구 중 비이동자는 44.7%이며, 정착이동자는 이보다 더 많은 49.5%이다. 1차, 2차 및 귀환이동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과거에 비해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차 이동자는 상대적으로 젊고 아직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아서 미혼율도 높다. 여기에 비해 2차 이동자는 교육수준이 제일 높아서 관리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제일 많아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이동성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전체 인구이동의 양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에서도 모든 흐름에서 이동의 양이 감소하였다. 수도권으로의 전, 출입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경기도가 서울보다 이동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마찬가지로 수도권내외간의 순 이동도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내고 있는 지역은 강원, 부산, 충남 등지로 드러나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수도권보다 더 범위를 좁혀서 서울대도시권을 설정하고 서울대도시권 중심의 인구이동도 파악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보다는 서울대도시권의 인구집중이 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도시권내의 시, 군간 이동을 보면 서울에서 근교로의 이동이 반대의 흐름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대도시권 외에서의 전입에서는 서울보다 근교로의 전입이 1.2배 정도 더 많다. 서울대도시권으로는 상대적으로 경기 외곽과 부산, 강원에서 더 많은 전입자가 이동하였다.

서울대도시권 전입자의 특징을 보면 대도시권 내에서든 외에서든 목적지가 서울인 이동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많고, 젊으며, 고학력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 관리직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는 서울대도시권의 인구집중 매력요인은 여전히 상존해 있으며, 특히 양질의 고등교육기회는 전국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수도권의 인구집중경향은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세계 경기의 침체 때문일 수도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권창기, 정현욱, “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 국토연구, 52 (2007), 국토연구원, pp 39-58

최진호, “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김두섭 외 (편),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2002

-----, 이종열, “ 서울근교지역 교외화의 성격과 특징,” 국토연구,3 (1984), 국토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0년 인구 총 조사의 1% 원 자료와 총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집계자료이다. 이 연구에서 이동은 우리나라의 시, 군, 구 경계를 넘어서 이주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장래 총인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시, 도내 이동보다는 시, 도간 이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권화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이동의 양이 감소하면서 비이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1차, 2차 및 귀환이동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1차 이동자는 상대적으로 젊고 아직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아서 미혼율도 높다. 여기에 비해 2차 이동자는 교육수준이 제일 높아서 관리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도 높아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이동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이동에서 나타난 주요변화는 첫째, 점차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경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이동의 중심이 과거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서울대도시권의 인구이동분석결과 대도시권 내에서의 외에서든 목적지가 서울인 이동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많고, 젊으며, 고학력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 관리직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는 서울대도시권의 인구집중 매력요인은 여전히 상존해 있으며, 특히 양질의 고등교육기회는 전국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수도권의 인구집중 경향은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세계 경기의 침체 때문일 수도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제 2주제 : 통근·통학 인구 및 특성분석

-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¹⁾ -

은 기 수(서울대학교)

I. 서론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이동의 형태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이다. 지금까지 인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구개념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파악한 인구인 상주인구이다. 상주인구 개념은 비단 학문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원을 각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인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일터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지에서는 잠만 자고 하루 생활의 대부분은 주거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일터에서 보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일터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상주인구는 야간인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반면에 각 지역에는 상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나 일터를 찾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늘어난다. 이들은 인구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상주인구와 다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들은 상주인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행정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직장과의 불일치가 높아질수록 이처럼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인구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통계청에서는 상주인구 이외에 주거지의 경계 밖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면서 활동하는 인구를 주간인구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간인구 개념은 복잡하고 이동이 잦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각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시를 위해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1) 이 연구는 지난 15년간 통계청의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인구총조사 분석사업 중 통근통학에 관한 분석의 결과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통근통학을 분석하는 이 보고서는 과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새로운 인구개념이자 현실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간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간인구는 주거지의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인구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동의 유형과 이동에 걸리는 시간 등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

통계청에서는 인구센서스에서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근·통학의 여부, 통근·통학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간인구라고 칭하는 인구는 만 12세 이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구나 시의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를 뜻한다. 주간인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 \text{주간유입인구} - \text{주간유출인구} \\ &= \text{비통근·통학자수} + \text{지역내 통근·통학자수} \\ &\quad + \text{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수} \end{aligned}$$

이 연구는 만 12세 이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구나 시의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는 주간인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대상 지역은 전국 및 수도권이다. 먼저 전국의 통근·통학에 관해 기본적인 분석을 한다. 후반부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통근·통학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 대도시 및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주간인구의 의미가 높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몰려 있고, 서울에 생업의 터전이 있으면서도 주거는 서울 바깥에서 하면서 통근·통학하는 인구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문제로 쉽게 비화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수도권의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시기는 1995년, 2000년, 2005년 및 2010년 등 총 15년에 걸쳐 있다.

II. 본론

1. 기존 연구 검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1997년에 서울시 중구청의 의뢰를 받아 중구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은기수(1997)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중구에서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주간인구 개념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상주인구의 규모는 서울시에서 가장 적지만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비가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명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구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엄청나기 때문에 중구의 행정 및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의 개념보다도 주간인구의 개념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통계청(1997)은 제3회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에서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을 밝히고 있다. 통계청의 분석은 주간인구에 관한 표본조사 자료의 전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규모, 이동방향, 이동에 걸리는 시간 등 주간인구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은기수(2000)는 도심부의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의 대도시의 도심부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대비하여 상주인구의 감소와 주간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심부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상주인구의 지나친 감소로 인해 대도시 도심부의 공동화가 초래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은기수(2001)는 상주인구 및 주간인구 등 인구개념의 중요성을 계층구조 분석과 결합시키고 있다. 상주인구의 의미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의 계층구조 분석은 여전히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간인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은기수(2001)는 계층구조의 분석에서 주간인구의 개념을 고려할 필요성을 서울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동이 잦은 사회에서 주간인구의 개념을 이용해 계층구조를 분석한다면 연구대상지역에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동하는 인구의 특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2. 전국 통근·통학인구

이 절에서는 전국의 통근·통학인구 실태를 살펴본다.

1) 통근·통학인구 및 주간인구

다음 <표 1> 은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만 12세 이상 또는 세는 나이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이나 학업을 위해 단거리 혹은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3 이상이다. 1995년의 경우 대구지역의 통근·통학인구비율이 61%로 제일 낮고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 지역으로 70.6%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4.6%의 인구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보다는 도단위에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2000년에는 1995년에 비해 통근·통학인구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통근·통학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58.7%이고 대구가 58.9%이다. 반면에 역시 제주지역이 68.9%로 가장 높은 통근·통학인구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졌다. 흥미롭게도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에 2000년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통근, 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통근·통학은 단거리 혹은 장거리이동을 의미한다. 이동은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내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혹은 도를 넘어서도 이루어진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시나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근·통학은 흔한 일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시군구를 넘어서는 인구이동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사이에 차이를 낳는다.

<표 1>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

지역	통근·통학인구비율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서울	64.6	63.7	61.3	69.6	105	105	106	109
부산	61.5	58.7	56.5	63.5	98	98	98	98
대구	60.9	58.9	57.6	66.3	96	97	96	95
인천	63.1	63.1	61.6	68.8	96	95	95	95
광주	62.9	61.2	60.9	69.6	98	98	97	97
대전	62.0	61.5	60.0	69.4	98	99	98	98
울산	-	63.0	62.6	69.5	-	101	101	101
경기	62.8	63.9	62.6	70.1	93	95	95	93
강원	61.6	60.7	57.8	68.1	101	101	101	101
충북	64.6	64.6	61.5	70.6	101	101	101	102
충남	66.3	66.1	65.1	73.1	103	104	105	105
전북	65.8	63.5	59.8	68.9	100	100	100	100
전남	68.4	66.9	62.4	70.2	101	101	102	103
경북	65.0	63.4	61.8	70.3	104	103	104	105
경남	65.6	64.2	62.7	69.5	102	102	101	101
제주	70.6	68.9	56.7	76.1	100	100	100	100

주 : 주간인구지수=주간인구/상주인구*100

자료 : 1995, 2000, 2005, 2010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1995년과 2000년 모두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에서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 울산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101로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는 주간인구지수가 95에서 99 사이로 대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보다 대도시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오히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에는 1995년과 2000년 모두 주간인구지수가 105이었는데 201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09로 더 높아졌다. 이는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9% 정도 더 많은 것을 뜻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서울에서 서울 바깥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보다는 서울 주위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음을 뜻한다. 도 단위에서는 주간인구지수가 100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도와는 달리 경기지역만 1995년에 93, 2000년에 95, 2010년에는 98의 주간인구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기지역 전체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경기지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경기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간인구지수 120 이상인 시군구, 1995-2010

1995		2000		2005		2010	
지역	주간 인구 지수	지역	주간인 구지수	지역	주간인 구지수	지역	주간 인구 지수
서울중구	395	서울중구	292	서울중구	354	서울중구	348
부산중구	249	서울종로구	216	서울종로구	251	서울종로구	239
서울종로구	244	부산중구	191	부산강서구	213	부산강서구	214
인천중구	191	대구중구	168	부산중구	197	서울강남구	184
대구중구	167	서울강남구	166	대구중구	186	부산중구	180
서울강남구	160	인천중구	145	서울강남구	182	대구중구	169
서울영등포구	150	광주동구	141	인천중구	171	인천중구	163
광주동구	140	서울영등포구	138	서울서초구	140	서울서초구	147
서울용산구	135	부산강서구	133	광주동구	140	서울영등포구	138
대전유성구	134	서울용산구	131	서울용산구	134	광주동구	129
서울동대문구	126	서울동대문구	130	서울영등포구	133	서울용산구	125
서울서초구	125	서울서초구	121	부산동구	130	부산동구	124
경기김포군	125	대전유성구	120				
경기광주군	121						

자료 :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010 통계청 웹사이트

<표 2>는 일상생활에서 주간에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120이상인 지역을 골라 보여주고 있다.

1995년과 2010년까지 전국에서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중구이다. 2000년 현재 서울 중구의 상주인구는 116,631명인 반면 주간인구는 405,978명이다. 중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간에 중구에서 일이나 학업을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상주인구의 규모에 비해 매우 큰 것이다.

서울 중구를 비롯해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은 거의 모두 대도시 중심부이다.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서울 강남구, 서울 용산구 등 대도시의 도심부 지역은 모두 상주인구는 적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훨씬 많아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주간에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주간인구는 매우 작은 지역들이 있다.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부분 밤시간만 거주지역에서 보내고 주간에는 다른 시군구에서 생업을 위한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2) 통근·통학인구의 특성

통근·통학인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먼저 다음 <표 3>을 통해 전국의 통근·통학인구를 연령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표 3>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 1995-2010

연령	1995	2000	2005	2010
12-14	99.6	99.6	98.9	99.3
15-19	89.5	88.8	87.7	93.6
20-24	62.8	62.0	60.4	82.3
25-29	60.9	63.9	66.3	78.7
30-34	59.1	61.7	62.6	73.3
35-39	61.7	64.6	64.9	73.3
40-44	62.9	65.1	66.2	77.0
45-49	61.5	62.7	62.9	76.7
50-54	58.7	57.0	57.1	72.9
55-59	53.6	49.2	47.8	65.8
60-64	29.9	41.2	37.4	53.9
65세 이상		23.2	21.6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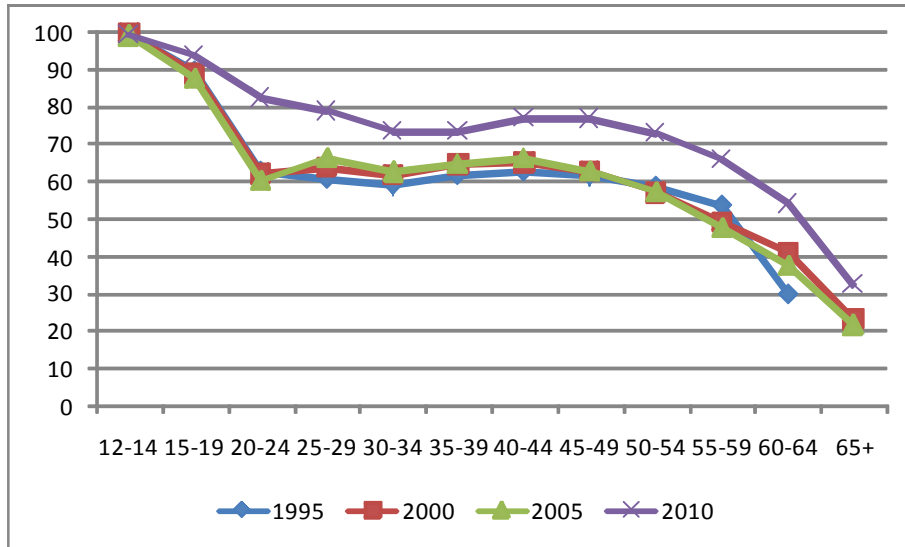
주 : 1995년은 60세 이상의 인구중 통근·통학 인구비율임.

자료 :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010 표본원자료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통근·통학비율이 가장 높다. 10대는 대부분 학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같은 시군구내에서나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어느 연령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12-14세 연령층에서는 거의 모든 인구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고, 15-19세 연령층의 통근·통학인구비율도 2010년에는 94% 정도로 높다.

20대에 들어서면 통근·통학인구비율이 낮아진다. 20세부터 49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0년의 경우 73%에서 82%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연령층이 되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갖지 않고 일상생활을 집에서 영위하는 인구가 많아진다. 이러한 인구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주부를 들 수 있다. 반면에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인구들은 일상생활에서 통근·통학을 할 수 밖에 없다. 20세부터 49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거의 2/3에 육박하는 인구들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일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50세 이상이 되면 통근·통학인구비율이 낮아진다. 2010년의 경우 65세 이상에서는 32%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그림 1> 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10

<그림 1>은 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변화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995, 2000, 2005, 2010년을 비교하면 우리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령별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10년에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의 변화인지, 아니면 자료상의 문제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한다.

다음 <표 4>와 <표 5>는 전체 인구를 비통근·통학 및 통근·통학의 형태에 따라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 2010

이동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비통근·통학	4.19	19.8	26.69	23.18	30.19	61.85
같은 시군구내	15.77	12.32	13.37	14.53	11.37	2.89
다른 시군구로	80.05	67.88	59.94	62.29	58.44	35.26
합	100.0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비통근통학은 표본원자료에서 통근통학을 안 한다고 대답한 경우이다 같은시군구내 이동과 다른 시군구로 이동은 다음 변수를 이용해 판단하였다. 거주지는 시도*1000+시군구, 통근통학지는 통근통학장소(시도)81000+통근통학장소(시군구)로 재구성하고,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하여 거주지와 통근통학지가 일치하면 같은 시군구내 이동, 거주지와 통근통학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구로 이동으로 판정하였다.

자료 : 201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비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10대 가운데 비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은 4.2%이지만 20대 20%, 30대 27% 등으로 높아져 60대 이상은 60%에 달한다.

통근, 통학은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심지어는 학생들도 자신의 거주지의 행정구역을 넘어 학교를 다니는 일이 많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0대들은 80% 이상이 매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시군구로 통학을 한다. 10대 가운데는 16%만이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비율은 감소한다. 40대에 다시 다른 시군구로 통근, 통학을 하는 비율이 약간 높아졌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시군구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직업별로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까? 다음 <표 5>은 직업별로 통근·통학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10

이동형태	1	2	3	4	5	6	7	8	9
비통근·통학	0.0	0.1	0.1	0.2	0.8	0.1	0.0	3.4	0.6
같은 시군구내	16.4	16.7	18.1	16.4	16.5	2.6	20.7	22.6	17.0
다른 시군구로	83.6	83.2	81.8	83.4	82.8	97.2	79.3	74.0	82.5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공 및 관련 직종 종사자,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주2: 비통근통학은 표본원자료에서 통근통학을 안 한다고 대답한 경우이다 같은시군구내 이동과 다른 시군구로 이동은 다음 변수를 이용해 판단하였다. 거주지는 시도*1000+시군구, 통근통학지는 통근통학장소(시도)81000+통근통학장소(시군구)로 재구성하고,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하여 거주지와 통근통학지가 일치하면 같은 시군구내 이동, 거주지와 통근통학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구로 이동으로 판정하였다.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일반적으로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통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서는 의외의 사실이 나타난다. 어느 직업보다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다른 시군구로 통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이해와 반하는 결과이다. 분석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았지만 아직 특별한 오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결과이므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장치, 조립직을 지닌 인구의 타시군구 통근 비율이 가장 낮다. 그 외의 직업에서는 직업에 따라 통근 유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수도권 통근·통학인구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괄하는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주위에 위성도시가 여러 곳에 이루어졌다. 지난 1980년대 말에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내에서도 강남이 개발되고 서울의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서울내에서도 인구의 재분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심부는 여전히 업무, 서비스의 중심지로 주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수도권의 인구는 서울내에서의 이동, 서울 및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끼리의 이동, 경기지역 내의 이동 등 여러 형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수도권내 인구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도권 통근·통학 형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통근·통학인구비율은 위의 <표 1>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2000년 현재 서울 인구의 69.6%, 인천 인구의 68.8%, 경기지역 인구의 70.1% 등 수도권에 속한 인구의 70%가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인구이동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분포를 다르게 만든다. 같은 시군구내에서의 이동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분포에 차이를 낳지 않지만 일이나 학업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경우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분포에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먼저 수도권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6>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 서울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양천구(65.1%), 동작구(65.3%), 관악구(64.4%) 순으로 나타난다. 주로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이다. 반면에 종로구(57.4%), 동대문구(59.7%), 영등포구(59.6%) 등 서울의 도심부나 오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울의 각 구의 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구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와 계양구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인천의 다른 구에 비해 높다. 옹진군은 섬지역이라 비교가 곤란한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에 속하고, 옹진군의 인구의 타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경기지역도 50-60%의 인구가 매일 타 시군구로 통근과 통학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분당, 일산 등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타 시군구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표 6>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만 12세 이상 인구 중 다른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비율, 2010
(단위: %)

	통근통 학안압	같은시 군구	다른시 군구		통근통 학안압	같은시 군구	다른시 군구
서울종로구	30.7	12.0	57.4	수원장안구	30.7	14.8	54.5
중구	30.5	7.3	62.2	수원권선구	28.8	16.8	54.5
용산구	32.1	5.8	62.1	수원팔달구	29.2	18.6	52.3
성동구	30.4	6.7	62.9	수원영통구	26.0	15.1	58.9
광진구	27.3	5.8	67.0	성남수정구	29.6	15.5	54.9
동대문구	32.7	7.7	59.7	성남중원구	28.9	18.5	52.6
중랑구	30.8	5.6	63.7	성남분당구	30.9	9.9	59.2
성북구	30.2	6.1	63.7	의정부시	32.8	10.4	56.8
강북구	32.2	4.5	63.2	안양만안구	29.5	14.6	55.9
도봉구	33.3	4.3	62.4	안양동안구	29.6	9.0	61.4
노원구	31.8	6.7	61.5	부천원미구	29.5	9.5	61.0
은평구	32.2	7.0	60.8	부천소사구	32.3	7.8	60.0
서대문구	30.3	5.8	63.9	부천오정구	31.7	7.6	60.7
마포구	30.0	8.1	61.9	광명시	30.1	6.4	63.5
양천구	29.9	5.0	65.1	평택시	29.5	18.7	51.8
강서구	30.5	8.9	60.6	동두천시	35.5	7.3	57.3
구로구	30.0	7.5	62.5	안산상록구	28.4	17.2	54.5
금천구	30.7	6.7	62.6	안산단원구	26.7	21.9	51.4
영등포구	30.4	10.0	59.6	고양덕양구	30.9	11.5	57.6
동작구	29.3	5.5	65.3	고양일산동구	29.6	10.5	59.9
관악구	29.2	6.4	64.4	고양일산서구	29.7	11.0	59.4
서초구	29.2	7.3	63.6	과천시	29.7	4.1	66.3
강남구	28.5	12.3	59.2	구리시	30.1	4.7	65.2
송파구	29.4	9.1	61.5	남양주시	33.1	8.1	58.8
강동구	30.5	8.0	61.6	오산시	25.1	11.9	63.0
인천 중구	32.1	8.9	59.0	시흥시	26.1	11.9	62.0
동구	36.3	6.1	57.7	군포시	30.0	6.8	63.2
남구	31.8	9.5	58.7	의왕시	30.5	4.2	65.4
연수구	29.2	8.7	62.1	하남시	31.3	4.7	64.0
남동구	31.3	12.4	56.4	용인처인구	27.9	16.8	55.3
부평구	33.1	10.1	56.7	용인기흥구	31.5	11.5	57.1
계양구	29.5	8.1	62.3	용인수지구	33.6	6.1	60.3
서구	30.2	14.0	55.9	파주시	31.6	11.0	57.5
강화군	28.6	3.3	68.1	이천시	26.9	16.7	56.4
옹진군	27.4	0.2	72.4	안성시	27.4	16.1	56.5
				김포시	29.9	12.3	57.8
				화성시	27.2	14.0	58.8
				광주시	31.5	10.9	57.6
				양주시	29.7	11.8	58.5
				포천시	31.6	12.0	56.4
				여주군	27.5	3.0	69.5
				연천군	34.0	8.4	57.6
				가평군	36.1	2.3	61.7
				양평군	31.1	4.4	64.5

자료 : 2010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

다음 <표 7>은 수도권에서 매일 이동하는 인구들의 이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수도권내 주간인구 이동유형

이동유형	1995	2000	2005	2010
서울 → 서울	52.0	42.1	39.9	39.2
서울 → 인천	1.2	1.2	1.0	1.0
서울 → 경기	7.8	10.2	8.0	6.0
인천 → 서울	2.5	3.0	2.2	2.1
인천 → 인천	7.5	5.3	6.6	7.9
인천 → 경기	1.4	2.3	2.2	1.6
경기 → 서울	17.5	20.1	16.5	14.1
경기 → 인천	1.1	1.4	1.6	1.3
경기 → 경기	8.9	14.4	22.0	26.9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1995, 2000, 201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수도권에서 주간에 이동하는 인구들의 이동유형 가운데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995년에는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0년에는 42%로 10%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이 비율이 39.2%로 또 다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동유형은 경기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유형이 서울내에서 이동하는 유형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에 와서는 이동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경기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2000년에는 경기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즉 경기 내에서 통근과 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 중 14.4%만 차지했었는데, 2010년에는 경기내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26.9%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1/4을 넘어서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이동유형이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이 유형에 속하는 이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이 유형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아졌다. 2010년 현재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 가운데 이 유형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수도권에서 주간에 서울내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지만, 서울내에서 이동하는 유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다음 <표 8>은 서울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내에서 주간에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1995년에 37.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는 35.9%로 1.5% 포인트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이 비율이 35.5%로 약간 더 감소하였다. 반면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인구이동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0.6% 포인트만 증가해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 비율이 35.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주간에 이동하는 유형과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8> 서울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

이동유형	1995	2000	2005	2010
강북 → 강북	37.4	35.9	33.9	35.5
강북 → 강남	15.4	16.7	17.4	14.9
강남 → 강북	19.8	19.4	18.6	14.2
강남 → 강남	27.4	28.0	30.1	35.4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1995, 2000, 201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서울 주간인구의 변화

이 절에서는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주간인구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다음 <표 9>를 보자. <표 9>는 서울의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간에 일어나는 인구이동의 결과로 서울내 여러 구 사이에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크기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 중구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395로 주간인구의 크기가 상주인구 크기의 거의 4배에 달하고 있었다.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292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의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2010년에는 서울 중구의 주간인구지수가 348로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구에 유출하는 인구에 비해 유입되는 인구의 비로도 쉽게 확인된다.

<표 9> 서울의 유입·유출 비 및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지수의 변화량 2010-2000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종로구	6.5	6.4	7.0	5.5	244	216	251	239	23
중구	13.1	9.8	12.0	10.2	395	292	354	348	56
용산구	2.1	2.3	2.1	1.7	135	131	134	125	-6
성동구	1.4	1.1	1.0	1.1	115	104	100	103	-1
광진구	0.4	0.7	0.8	0.8	80	92	94	94	2
동대문구	1.8	2.4	1.4	1.5	126	130	112	113	-17
중랑구	0.4	0.4	0.3	0.3	78	83	79	80	-3
성북구	0.9	0.9	0.9	0.8	96	98	97	95	-3
강북구	0.2	0.4	0.4	0.4	69	82	79	83	1
도봉구	0.6	0.5	0.3	0.3	83	81	76	80	-1
노원구	0.5	0.4	0.5	0.6	80	85	86	87	2
은평구	0.4	0.4	0.3	0.3	79	84	80	81	-3
서대문구	1.3	1.4	1.3	1.3	112	110	108	113	3
마포구	1.1	1.2	1.2	1.6	102	106	106	113	7
양천구	0.4	0.4	0.5	0.5	76	82	84	83	1
강서구	0.7	0.7	0.5	0.5	90	93	85	87	-6
구로구	1.3	1.1	1.0	1.2	111	101	101	105	4
금천구	0.5	0.6	1.0	1.5	80	89	99	118	29
영등포구	2.5	2.5	2.0	2.4	150	138	133	138	0
동작구	0.5	0.6	0.7	0.8	81	90	91	93	3
관악구	0.5	0.6	0.4	0.5	81	88	81	83	-5
서초구	1.7	1.7	2.2	2.3	125	121	140	142	21
강남구	2.9	3.9	4.0	4.1	160	166	182	184	18
송파구	0.7	0.8	0.9	0.9	90	95	97	95	0
강동구	0.5	0.5	0.4	0.4	84	86	83	83	-3

자료 :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010 인구총조사 표본 원자료

종로구도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주간인구지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10년 현재 서울 종로구의 경우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의 2.4배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더 높은 지역이 많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와 영등포구이다. 이들 세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간인구지수가 높다. 이는 서울의 도심이니 중구, 종로구 등의 구도심과 강남구 및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부도심, 그리고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구 중심의 또 다른 부심이 있음을 매우 간단하게 보여준다. 즉 주간인구지수를 통해 우리는 서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인구가 주간에 어떻게 이동, 집중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표 10> 인천 및 경기 시부의 유입·유출 비 및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지수의 변화량 1995- 2000	지수의 변화량 2005- 2010	
인천 중구	4.6	3.7	4.9	5.1	191	145	171	162.9	-46	-8.1	
인천 동구	1.0	1.7	1.4	1.2	100	115	112	105.2	15	-6.8	
인천 남구	1.0	1.1	0.9	0.7	100	101	96	98.2	1	2.2	
인천 연수구	0.2	0.3	0.4	0.6	64	78	82	90.6	14	8.6	
인천 남동구	0.9	0.9	1.2	1.0	98	98	106	100.1	0	-5.9	
인천 부평구	0.9	0.5	0.5	0.6	96	89	85	89.5	-7	4.5	
인천 계양구	0.3	0.3	0.5	0.5	74	86	85	86.5	12	1.5	
인천 서구	0.8	0.8	0.8	0.9	96	96	95	97.6	0	2.6	
수원시	1.1	1.0	0.6	0.5	102	99	93	91.2	-3	-1.8	
성남시	0.5	0.5	0.7	0.6	82	89	92	90.1	7	-1.9	
의정부시	0.7	0.6	0.5	0.5	93	89	87	87.7	-4	0.7	
안양시	0.6	0.8	0.7	0.5	89	94	92	87.3	5	-4.7	
부천시	0.5	0.6	0.6	0.3	86	91	90	83.4	5	-6.6	
광명시	0.3	0.3	0.4	0.3	71	80	80	79.1	9	-0.9	
평택시	0.9	1.1	1.3	1.7	99	101	103	106.0	2	3.0	
동두천시	0.9	0.9	0.6	0.6	99	98	92	93.0	-1	1.0	
안산시	1.3	1.2	0.9	0.9	105	103	98	97.9	-2	-0.1	
고양시	0.3	0.4	0.5	0.4	76	85	88	86.4	9	-1.6	
과천시	1.1	1.1	1.5	1.4	102	105	115	112.9	3	-2.1	
구리시	0.6	0.7	0.6	0.6	85	92	90	88.9	7	-1.1	
남양주시	0.5	0.3	0.3	0.3	87	84	85	84.7	-3	-0.3	
오산시	1.5	1.0	0.7	0.5	112	100	93	87.2	-12	-5.8	
시흥시	0.9	0.7	1.0	1.2	96	94	101	103.2	-2	2.2	
군포시	0.4	0.4	0.5	0.6	76	83	86	88.0	7	2.0	
의왕시	0.4	0.4	0.4	0.6	75	80	81	86.1	5	5.1	
하남시	0.3	0.6	0.8	0.7	76	88	94	93.6	12	-0.4	
용인시	1.0	1.2	0.8	0.6	115	104	95	91.4	-11	-3.6	
파주시	1.9	1.0	1.0	1.2	98	100	100	102.2	2	2.2	
이천시	1.9	1.7	1.6	1.8	107	105	104	106.0	-2	2.0	
안성시	0.8	1.9	1.6	2.3	106	108	106	110.0	2	4.0	
김포시	2.8	1.9	1.4	1.3	125	114	106	105.6	-11	-0.4	
화성시			2.6	2.1			129	117.4		-11.6	
광주시			1.0	1.2			99	102.9		3.9	
양주시			0.9	0.8			98	96.1		-1.9	
포천시			4.0	4.4			118	120.0		2.0	

주 :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는 1995년에는 군부이었음.

주간인구지수의 변동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 금천구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금천구의 주간인구지수는 무려 29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서울 동대문구는 주간인구지수가 비교적 크게 감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중심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주간인구지수도 지난 10년 사이에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표 10>은 서울 밖의 인천 및 경기 시부의 인구 유입 및 유출과 함께 주간인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천만 살펴보면 인천 중구는 인천의 중심구로서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훨씬 많다. 2010년에는 유입인구 대 유출인구 비가 5.1로 지난 199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주간인구지수는 2010년에 16.29로 2005년보다 작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만, 상주인구 또한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동구도 2010년의 주간인구지수가 2005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에 인천연수구는 여전히 유입인구에 비해 유출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주간인구지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인천남동구는 지난 5년동안 주간인구지수가 감소하였다. 유입인구에 비해 유출인구의 비가 지난 5년 사이에 감소했고, 이는 주간인구지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동안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화성시다. 화성시는 2010년 현재 주간인구지수가 117인데, 2005년에는 이 수치가 129였다. 그래서 지난 5년 사이에 주간인구지수가 11.6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화성시보다 작지만, 부천시에서도 주간인구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부천시의 2005년 주간인구지수는 90이었는데, 2010년에는 이 수치가 다시 83.4로 감소하고 있다. 유입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도 지난 5년 사이에 0.6에서 0.3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부천시는 주간에 다른 곳에서 끌어들이는 인구보다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차 더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부천시의 실정이다.

경기의 시부에서 지난 5년 사이에 주간인구지수가 증가한 지역은 의왕시이다. 의왕시는 지난 5년 사이에 유입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가 0.4에서 0.6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주간인구지수가 81에서 86으로 증가하였다. 의왕시는 여전히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래도 지난 5년 사이에 주간에 다른 곳에서 의왕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간인구지수 상으로 보면 경기지역 내에서는 포천시의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다. 2010년 현재 포천시의 주간인구지수는 120으로 매우 높은 지수를 보여준다. 상주 인구나 유출 유입인구를 고려하면 포천시에는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이다. 포천시 다음으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경기 시부지역은 화성시(117.4), 과천시(113), 안성시(110), 평택시(106), 이천시(106), 김포시(105.6) 등으로 나타난다.

3)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통근·통학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표 11>은 2000년 현재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표 12>는 2010년 현재 역시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00
(단위: %)

출발지	-30분	-40분	-50분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평균(분)	표준편차(분)
인천	5.9	6.9	3.9	27.3	39.2	16.8	75.9	26.8
수원	3.9	7.6	4.5	30.8	36.5	16.8	75.3	25.7
성남 수정, 중원	24.0	16.2	7.1	32.0	17.6	3.1	53.8	22.3
성남 분당	19.8	20.6	8.8	27.2	19.5	4.2	55.8	24.0
의정부	19.6	10.9	6.7	28.0	28.1	6.7	61.2	26.2
안양	11.2	17.8	9.3	40.1	22.0	2.7	58.8	20.3
부천	22.0	13.8	6.9	30.0	23.1	4.1	56.7	24.6
광명	44.2	11.2	7.0	22.4	13.4	1.7	45.3	23.2
평택	1.3	0.0	2.6	22.4	43.4	30.3	89.0	26.6
동두천*	0.0	2.0	0.0	9.8	33.3	54.9	103.7	28.8
안산	4.6	6.4	5.1	24.7	42.6	16.5	76.8	25.7
고양 덕양	18.6	14.3	8.3	31.1	24.6	3.1	57.6	22.6
고양 일산	6.2	12.8	8.0	31.5	32.1	9.5	67.3	23.7
과천	31.5	21.5	12.2	22.8	10.9	1.0	45.9	18.8
구리	29.0	14.1	5.7	33.4	15.3	2.5	51.7	22.5
남양주	18.1	12.4	6.1	26.8	27.1	9.5	62.8	28.3
오산*	2.1	6.2	10.4	20.8	32.1	29.2	81.8	29.4
시흥	8.6	12.0	7.1	22.2	36.4	13.6	71.5	28.3
군포	4.9	11.2	7.1	10.6	32.7	3.6	64.2	18.8
의왕	6.6	14.6	4.9	38.5	31.0	4.4	63.6	20.7
하남	43.5	16.2	6.0	17.8	13.2	3.3	46.5	25.6
용인	11.3	14.4	11.3	29.7	23.7	9.5	63.3	25.3
파주	1.7	3.4	6.2	22.0	44.1	22.6	82.6	26.9
이천*	0.0	0.0	0.0	30.2	58.1	11.6	79.3	17.7
안성*	0.0	0.0	0.0	7.7	57.7	34.6	93.1	18.0
김포	12.7	10.0	8.1	24.7	33.6	10.8	68.0	27.9
군부	6.4	8.6	5.7	23.1	34.7	21.5	68.0	27.9

주 : * 60 사례 이하임.

자료 :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2>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10

	-30분	-40분	-50분	-1시간	-1시간30분	1시간30분>	평균(분)	표준편차(분)
인천중구	9.4	6.3	3.1	12.5	50.0	18.8	86.6	25.8
인천동구	8.1	2.7	2.7	18.9	37.8	29.7	86.8	22.7
인천남구	11.3	1.9	0.0	22.0	43.4	21.4	84.5	22.1
인천연수구	8.6	4.3	0.0	8.6	41.4	37.1	95.3	27.7
인천남동구	11.0	1.2	3.1	18.3	48.2	18.3	83.4	21.8
인천부평구	14.0	3.0	1.8	25.1	42.7	13.4	78.6	21.1
인천계양구	26.0	5.5	0.6	22.1	32.6	13.3	73.5	26.8
인천서구	17.4	5.6	2.8	18.1	34.7	21.5	81.9	27.4
강화군	18.2	0.0	0.0	0.0	45.5	36.4	102.8	25.4
수원	11.2	2.7	2.4	27.2	42.7	13.9	79.0	22.3
성남	33.8	9.6	7.5	25.6	20.3	3.1	59.7	21.0
의정부	32.5	5.4	4.9	17.7	31.8	7.8	70.3	25.0
안양	25.9	5.6	5.8	31.3	28.5	3.0	63.6	20.3
부천	29.7	6.2	6.6	26.6	27.1	3.9	63.7	22.4
광명	49.8	7.1	4.8	19.1	17.6	1.5	51.4	23.0
평택	6.5	0.0	0.0	9.7	61.3	22.6	92.4	18.4
동두천	20.0	3.3	0.0	16.7	36.7	23.3	82.5	21.1
안산	9.8	2.4	0.6	12.8	52.4	22.0	87.1	23.0
고양	25.1	6.4	4.8	22.5	33.2	8.0	69.0	24.4
과천	43.0	9.1	14.9	24.8	7.4	0.8	47.8	18.7
구리	43.8	10.1	5.6	25.5	13.1	1.9	52.9	21.2
남양주	25.1	6.2	4.6	24.9	30.9	8.3	69.4	24.7
오산	0.0	0.0	4.6	22.7	54.6	18.2	80.9	21.0
시흥	22.2	6.4	3.2	23.8	29.4	15.1	76.7	26.3
군포	13.0	6.0	6.0	30.0	39.5	5.5	69.9	18.3
의왕	26.9	6.2	5.4	23.1	35.4	3.1	68.4	19.0
하남	46.1	7.8	2.3	22.8	19.2	1.8	55.8	25.0
용인	14.5	3.4	4.7	27.2	39.9	10.3	75.3	22.5
파주	14.8	1.6	3.1	17.2	48.4	14.8	82.1	22.5
이천	21.4	0.0	0.0	7.1	57.1	14.3	80.0	24.9

<표 12>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10 (위에서 연속)

	<=30	31-40	41-50	51-1시간	1-1시간 반	1시간 반이상	평균	표준 편차
안성	27.3	0.0	18.2	9.1	27.3	18.2	81.9	31.4
김포	24.8	8.1	3.1	17.4	29.2	17.4	75.1	30.7
화성	17.1	3.4	2.3	14.8	31.8	30.7	87.7	24.6
광주	17.5	2.8	2.8	25.2	36.4	15.4	77.1	25.2
양주	14.3	3.8	1.9	12.4	48.6	19.1	83.0	23.6
포천	8.3	8.3	0.0	25.0	50.0	8.3	76.4	28.4
여주군	8.3	0.0	0.0	16.7	58.3	16.7	84.5	18.1
연천군	22.2	0.0	0.0	0.0	55.6	22.2	88.1	34.4
가평군	27.3	9.1	0.0	0.0	36.4	27.3	83.3	32.4
양평군	17.7	2.9	2.9	26.5	41.2	8.8	75.2	21.6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거의 모두 1시간을 넘는다. 이는 학생으로 통학하는 경우를 포함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으로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면 대학생으로서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위의 분석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우 최소 1시간에서 많게는 거의 두시간정도 교통에 시간을 들여야 서울의 일터에 도착할 수 있다. 경기의 시부 가운데는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통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가장 적다. 그 다음은 광명, 구리, 하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통근을 하는 경우이다. 과천의 경우 고개 하나만 넘으면 서울이고, 광명, 구리, 하남의 경우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과천이나 광명, 구리, 하남에 거주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대단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통근·통학을 해야 한다. 베드타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천 연구수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통근·통학에 소요하고 있다.

Ⅲ. 결론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구이동현상인 통근·통학의 실태 및 주간인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인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인구개념으로 상주인구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잦은 이동이 특징인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동이 잦고 주거지와 일터 사이에 불일치가 높기 때문에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이나 학업을 위해 이동하는 주간인구는 상주인구 못지 않게, 지역에 따라서는 상주인구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행정수요를 야기하는 등 현대사회에서는 주간인구가 더 중요한 인구개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유입인구보다는 유출인구가 더 많아 주간인구보다 상주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도 단위에서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도 전통

적으로 업무, 서비스의 중심지인, 주로 대도시의 중구에서는 상주인구는 작은 반면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아서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서울의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서울의 도심부 및 부심부 혹은 새로운 도심부 지역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임이 드러났다. 특히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높았던 서울의 도심부에서 주간에 인구의 유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지역의 강남구 및 서초구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오히려 주간인구지수가 더 커지고 있어 강남구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도 주간인구지수가 이 지역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95년에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서울의 각 지역에는 주로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었지만 2000년에는 일산, 분당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각 지역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사이에 서울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의 신도시나 위성도시의 서울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런 유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지역도 매우 다양하지만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강남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밝혀졌다. 서울 외곽의 경기지역에서 강남구로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며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서부 경기지역이나 동북부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학 연구에서 인구이동이 주요 연구분야 이지만 주로 5년, 1년, 6개월, 혹은 한달 사이 등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이 분석의 대상이었다. 일상생활에서 거주지의 경계를 벗어난 인구이동, 즉 통근·통학에 관한 분석은 인구학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잦은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결과이기도 한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서울을 둘러싼 지역 사이에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이동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의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분석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에 따라 통근·통학지가 다르고,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편차가 크며, 연령, 교육수준, 직업구조 등 통근·통학자의 특성에도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분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 참 고 문 헌 >

- 은기수. 1997. “주야간활동인구 개념” 『비전 중구 2000-상주인구회복과 인간위주 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_____. 2000. “도심부의 인구문제” 김창석 외 공저. 『도시중심부연구』. 제7장. 서울:보성각.
- _____. 2001.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4권 제1호.
- _____. 2002. “제15장.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 _____. 2006. “2005년 인구총조사 분석사업: 통근통학과 주간인구”
- 통계청. 1997.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제3회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통계청.

<부표 1> 지역별 주간 인구이동 형태, 2010

지역		통근 합	통학 합	통근 통학 안합	지역		통근 합	통학 합	통근 통학 안합
서울	종로구	53.1	16.2	30.7	경기	수원시	53.1	18.1	28.8
	중구	53.4	16.1	30.5		성남시	52.9	17.1	30.0
	용산구	53.0	14.9	32.1		의정부시	50.9	16.3	32.8
	성동구	52.7	16.9	30.4		안양시	53.2	17.2	29.6
	광진구	55.8	16.9	27.3		부천시	52.2	17.2	30.7
	동대문구	50.5	16.8	32.7		광명시	52.4	17.6	30.1
	중랑구	54.7	14.6	30.8		평택시	54.3	16.2	29.5
	성북구	52.2	17.6	30.2		동두천시	49.9	14.7	35.5
	강북구	52.4	15.4	32.2		안산시	52.6	19.8	27.6
	도봉구	50.1	16.6	33.3		고양시	51.3	18.6	30.2
	노원구	49.2	19.0	31.8		과천시	51.4	18.9	29.7
	은평구	52.2	15.6	32.2		구리시	51.9	18.0	30.1
	서대문구	51.7	18.0	30.3		남양주시	50.0	16.8	33.1
	마포구	53.1	16.9	30.0		오산시	60.0	14.9	25.1
	양천구	50.3	19.8	29.9		시흥시	55.6	18.3	26.1
	강서구	53.6	15.9	30.5		군포시	53.0	17.0	30.0
	구로구	55.2	14.8	30.0		의왕시	51.6	18.0	30.5
	금천구	53.5	15.8	30.7		하남시	54.8	13.9	31.3
	영등포구	54.7	14.9	30.4		용인시	51.1	17.6	31.4
	인천	동작구	53.1	17.6		29.3	파주시	53.2	15.3
관악구		54.7	16.1	29.2	이천시	57.4	15.7	26.9	
서초구		52.7	18.1	29.2	안성시	57.4	15.2	27.4	
강남구		51.9	19.7	28.5	김포시	52.3	17.8	29.9	
송파구		52.1	18.5	29.4	화성시	56.6	16.2	27.2	
강동구		51.8	17.7	30.5	광주시	53.5	15.0	31.5	
중구		54.2	13.7	32.1	양주시	55.0	15.3	29.7	
동구		53.0	10.8	36.3	포천시	55.6	12.8	31.6	
남구		51.6	16.6	31.8	여주군	56.2	16.3	27.5	
연수구		50.9	19.9	29.2	연천군	56.2	9.8	34.0	
남동구		51.6	17.2	31.3	가평군	53.2	10.7	36.1	
부평구		49.9	17.0	33.1	양평군	57.4	11.5	31.1	
계양구		50.1	20.4	29.5					
서구		51.4	18.5	30.2					
강화군		62.3	9.1	28.6					
옹진군		66.0	6.6	27.4					

제 3주제 활동제약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현황 분석: 연령집단 별 차이를 중심으로

염 지 혜(중원대학교)

I. 서론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준비되지 않으면 향후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2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7%이지만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게 되어 불과 2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2011). 또한 50년 뒤인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배 이상인 1천762만 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0.1%에 해당한다. 즉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국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통계청, 2011).

이와 같이 급속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중 활동제약을 갖게 되는 노인의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특히 전체인구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활동제약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어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활동제약 뿐만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 인구 중 활동제약을 갖고 있는 중령자들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도 이들이 향후에 노인인구 층에 포함되었을 때 어떠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선천적이든 혹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요인이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특히 최근에 중령자들과 노인인구의 활동제약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활동제약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고령자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연령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각 연령집단 내에서 항목 별 활동제약자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활동제약 문항에 대한 응답이 중복응답이므로 각 항목에 대해서만 활동제약을 갖는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각 연령집단 내에서 취업활동제약 인구 중 각 항목 제약인구를 살펴보고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항목의 활동제약자인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성별, 교육수준, 1인 단독 가구여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인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부터 현재 노인의 활동제약 수준 및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층에 포함될 중령자들의 활동제약수준 및 특성을 연령대 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향후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 효과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집단 별 현황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카이제곱검정 등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한다. 통계프로그램으로 SAS 9.2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II. 본론

1. 연구결과

1) 연령집단 별 활동제약 인구 및 단일 항목에서만 활동제약 인구

연령집단 별 활동제약 인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연령집단 별 활동제약 인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제약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한 항목이라도 제약이 있는 경우는 45세 이상 인구의 17.0%로 75세 이상에서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활동 제약과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가 다른 항목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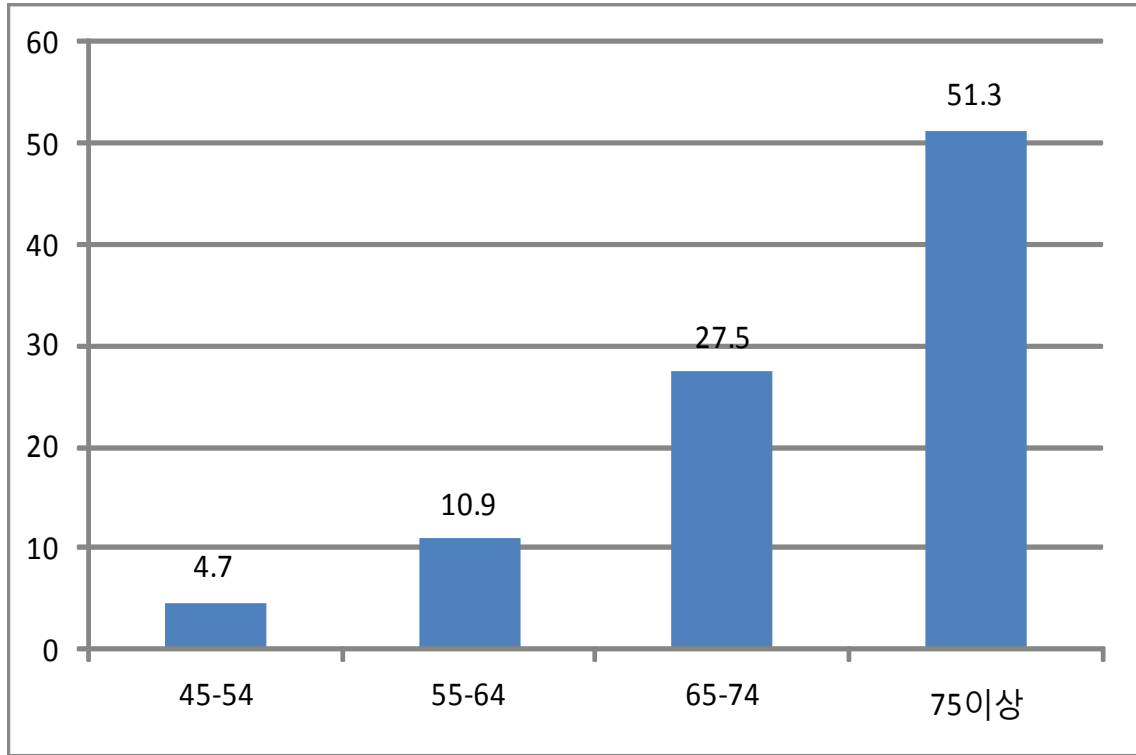
해 활동제약 비율이 낮았다. 표 2는 연령집단 별 총 활동제약 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에 따라 활동제약의 수 평균 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 수 평균 값은 높아졌다.

<표 1> 연령집단 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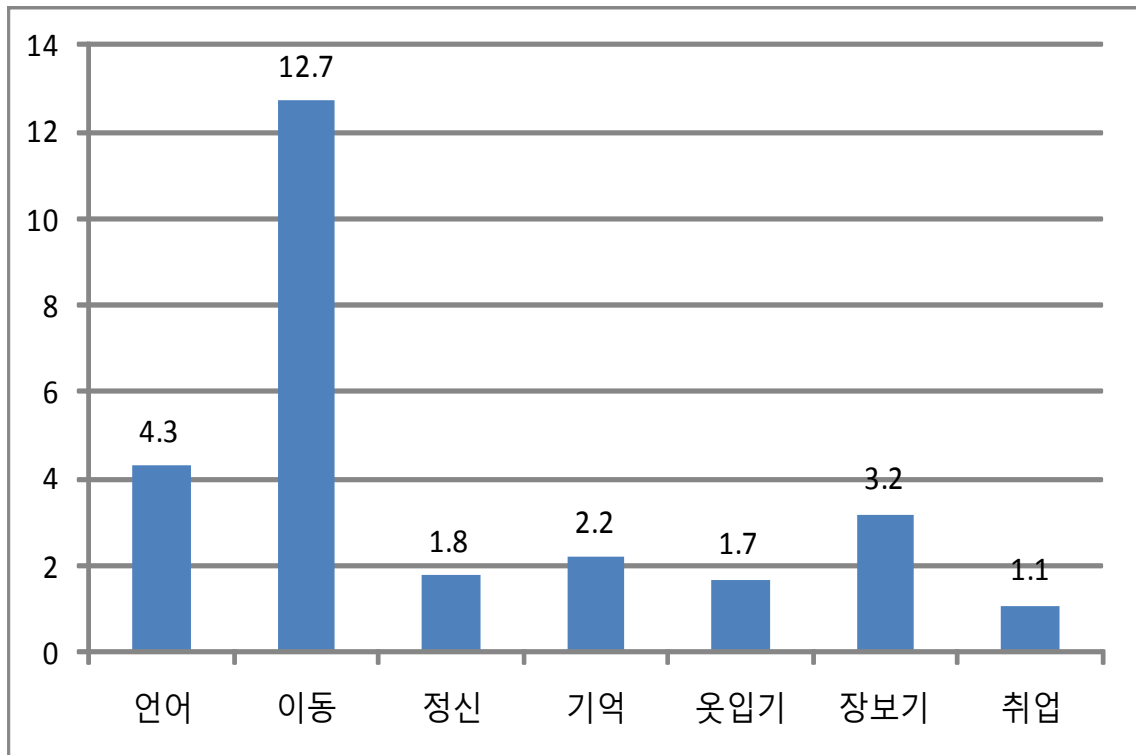
	연령 집단									
	45-54		55-64		65-74		75이상		전체(45세+)	
	n	%	n	%	n	%	n	%	n	%
계	78,089	100.0	52,999	100.0	40,498	100.0	25,164	100.0	196,759	100.0
제약 있음	3,649	4.7	5,788	10.9	11,146	27.5	12,914	51.3	33,497	17.0
제약 없음	74,449	95.3	47,211	89.1	29,352	72.5	12,250	48.7	163,262	83.0
시청각 언어장애	900	1.2	1,203	2.3	2,351	5.8	4,064	16.2	8,518	4.3
시청각 언어장애만 있음	613	0.8	711	1.3	1,013	2.5	1,207	4.8	3,544	1.8
걷기 등 이동제약	1,882	2.4	3,959	7.5	8,747	21.6	10,499	41.5	25,037	12.7
걷기 등 이동제약 만 있음	1,283	1.6	2,757	5.2	5,639	13.9	5,239	20.8	14,918	7.6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743	1.0	661	1.3	861	2.1	1,332	5.3	3,579	1.8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만 있음	454	0.6	338	0.6	273	0.7	302	1.2	1,367	0.7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338	0.4	550	1.0	1,239	3.1	2,166	8.6	4,293	2.2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만 제약	104	0.1	137	0.3	177	0.4	181	0.7	599	0.3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289	0.4	414	0.8	933	2.3	1,782	7.1	3,418	1.7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만 제약	50	0.1	48	0.1	75	0.2	74	0.3	247	0.1
장보기·병원가기	452	0.6	781	1.5	1,898	4.7	3,233	12.9	6,364	3.2
장보기·병원가기만 제약	130	0.2	150	0.3	229	0.6	212	0.8	721	0.4
취업활동	441	0.6	570	1.1	931	2.3	300	1.2	2,242	1.1
취업활동만 제약	199	0.3	238	0.5	275	0.7	53	0.21	765	0.4

<표 2> 연령집단별 총 활동제약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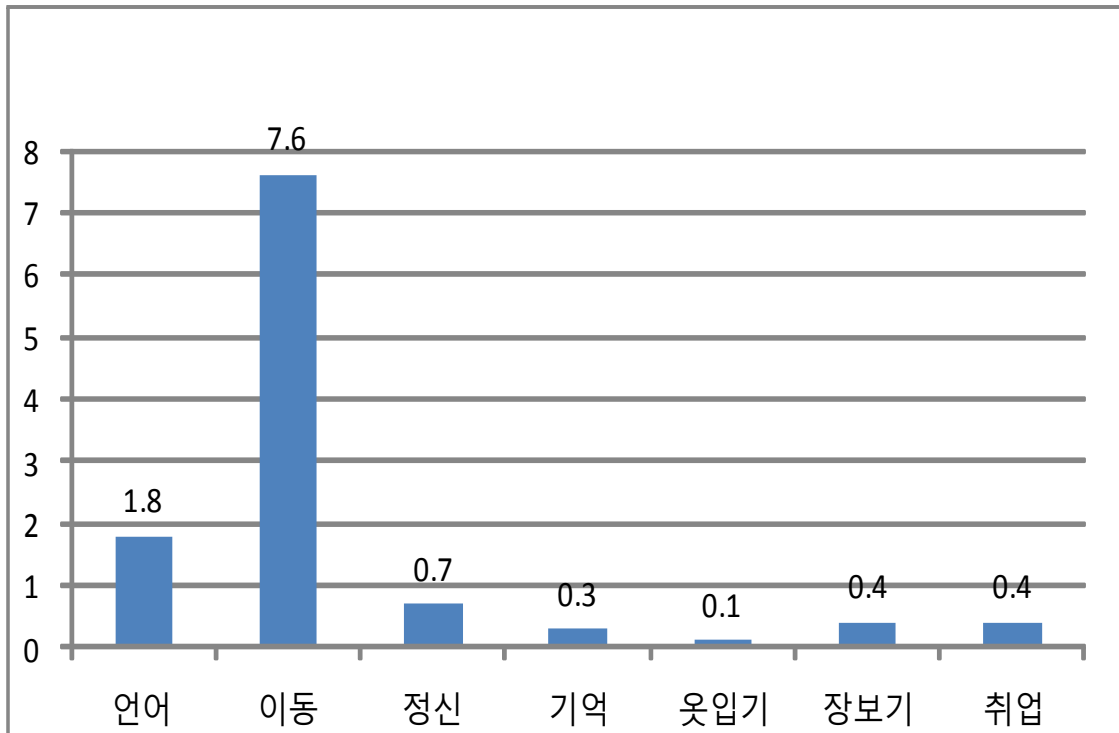
구분	응답 자수	평균	표준 편차	df	F	p	사후 검정
45 -54 (a)	78,089	0.0646	0.3503	3	11024.4	<.0001	a≠b≠c≠d
55 -64 (b)	52,999	0.1536	0.5329				
65 -74 (c)	40,498	0.4188	0.8695				
75세 이상(d)	25,164	0.9270	1.2488				



<그림 1> 연령집단 별 활동제약 비율



<그림 2> 항목 별 활동제약 비율(중복응답) : 45+



<그림 3> 단일항목 활동제약 비율(중복아님)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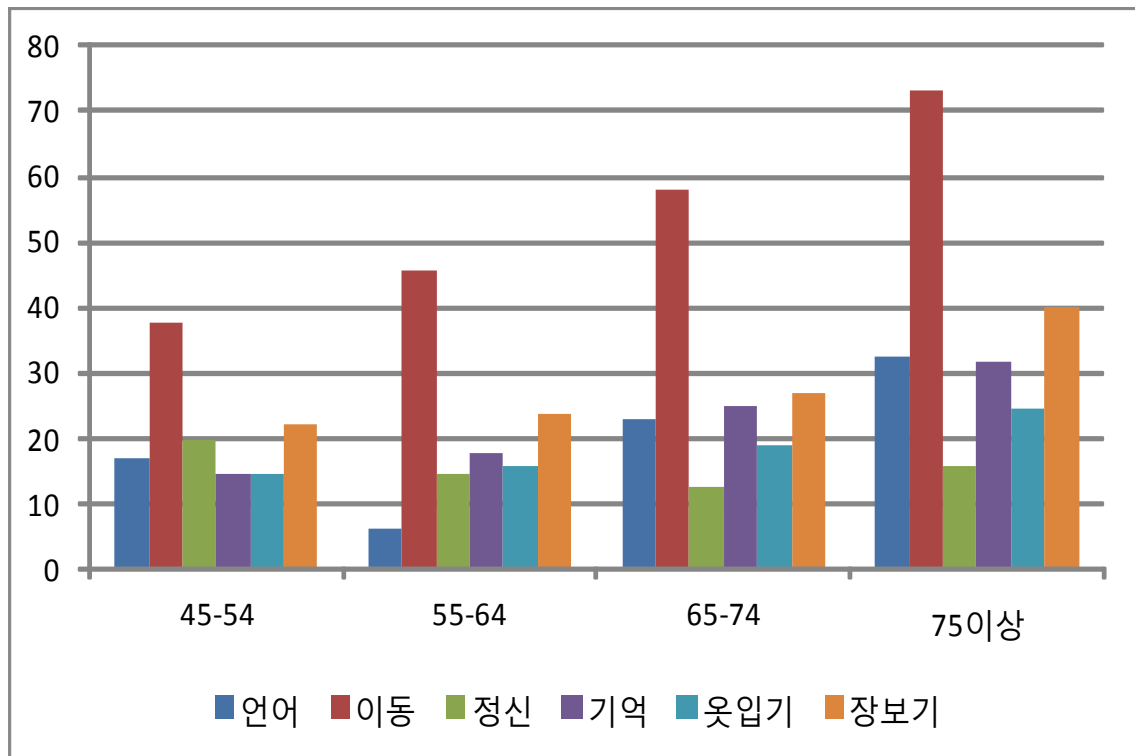
그림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항목별 활동제약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걷기 등 이동제약이 중복 응답과 단일 항목 활동제약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웃입기와 같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활동제약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집단 별 취업활동제약 인구 중 각 항목별 활동제약 인구

연령집단 별 취업활동 제약인구 중 각 항목의 활동제약 인구 비율 현황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취업활동 제약이 있는 인구 중 걷기 등 이동제약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45-54세 연령집단에서는 취업활동 제약자 중 걷기 등 이동제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 활동제약 비율은 고른 분포를 보인다. 한편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55-64세에서는 시청각 언어장애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 연령집단 별 취업활동 제약인구 중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연령 집단 별 취업활동 제약인구									
	45-54		55-64		65-74		75이상		전체(45세+)	
	n	%	n	%	n	%	n	%	n	%
계	441	100.0	570	100.0	931	100.0	300	100.0	2,242	100.0
시청각 언어장애	76	17.2	93	16.3	213	22.9	98	32.7	480	21.4
걷기 등 이동제약	166	37.6	261	45.8	540	58.0	219	73.0	1,186	52.9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82	18.6	84	14.7	118	12.7	48	16.0	332	14.8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65	14.7	101	17.7	233	25.0	95	31.7	494	22.0
웃입기·목욕하기·밥먹기	64	14.5	91	16.0	176	18.9	74	24.7	405	18.1
장보기·병원가기	97	22.0	135	23.7	249	26.8	120	40.0	601	26.8



<그림 4> 연령집단 별 취업활동제약 내의 항목별 제약인구비율

3) 연령집단 내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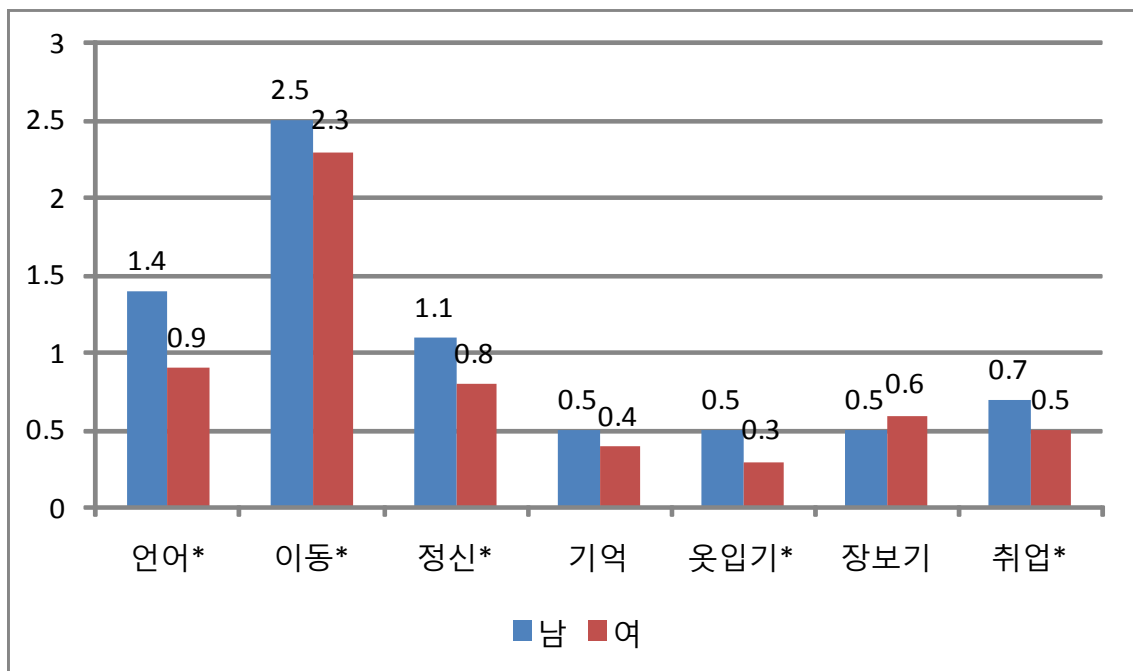
연령집단 내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를 살펴보면 45-54세 연령집단에서는 남성중 활동제약을 한 항목이라도 갖고 있는 비율이 5.1%, 여성의 경우는 4.2%로

남성이 더 높았다(표 4 참조). 그림 5를 살펴보면 걷기 등 이동제약이 가장 높았으며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활동제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45-5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45-54				전체		χ^2 (p)
	남		여		n	%	
	n	%	n	%			
계	38,605	100.0	39,493	100.0	78,089	100.0	
제약 있음	1,976	5.1	1,673	4.2	3,649	4.7	34.1207***
제약 없음	36,629	94.9	37,820	95.8	74,449	95.3	
시청각 언어장애	552	1.4	348	0.9	900	1.2	51.5966***
걷기 등 이동제약	979	2.5	903	2.3	1,882	2.4	5.1658*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411	1.1	332	0.8	743	1.0	10.3925**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175	0.5	163	0.4	338	0.4	0.7459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172	0.5	117	0.3	289	0.4	11.8004***
장보기·병원가기	203	0.5	249	0.6	452	0.6	3.7158
취업활동	258	0.7	183	0.5	441	0.6	14.602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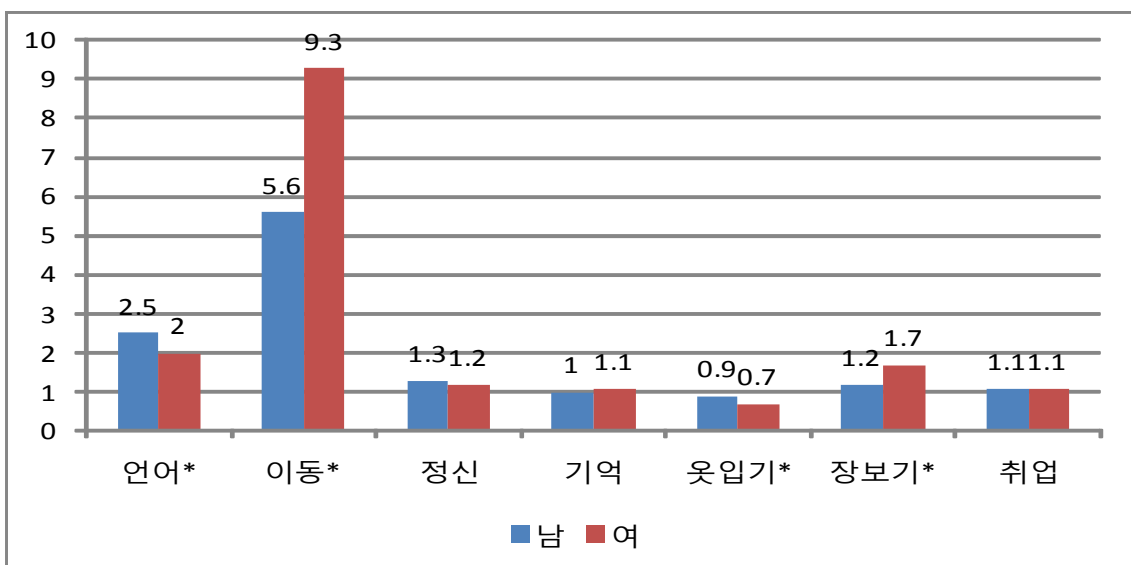
<그림 5> 45-5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비율

한편 55-6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 활동제약 인구 비율은 45-54세 연령집단과 반대로 여성의 경우 12.5%, 남성이 9.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각 항목 별 활동제약을 보더라도 걷기 등 이동제약이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45-54세 보다 훨씬 증가해 남녀 각각 5.6%, 9.3%에 달했다(그림 6참조).

<표 5> 55-6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55-64				전체		χ^2 (p)
	남		여		n	%	
	n	%	n	%			
계	25,690	100.0	27,309	100.0	52,999	100.0	
제약 있음	2,363	9.2	3,425	12.5	5,788	10.9	152.1157***
제약 없음	23,327	90.8	23,884	87.5	47,211	89.1	
시청각 언어장애	651	2.5	552	2.0	1,203	2.3	15.6886***
걷기 등 이동제약	1,429	5.6	2,530	9.3	3,959	7.5	262.4483***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336	1.3	325	1.2	661	1.3	1.4919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251	1.0	229	1.1	550	1.0	1.7900
웃입기·목욕하기·밥먹기	235	0.9	179	0.7	414	0.8	11.4829***
장보기·병원가기	307	1.2	474	1.7	781	1.5	26.6525***
취업활동	269	1.1	301	1.1	570	1.1	0.377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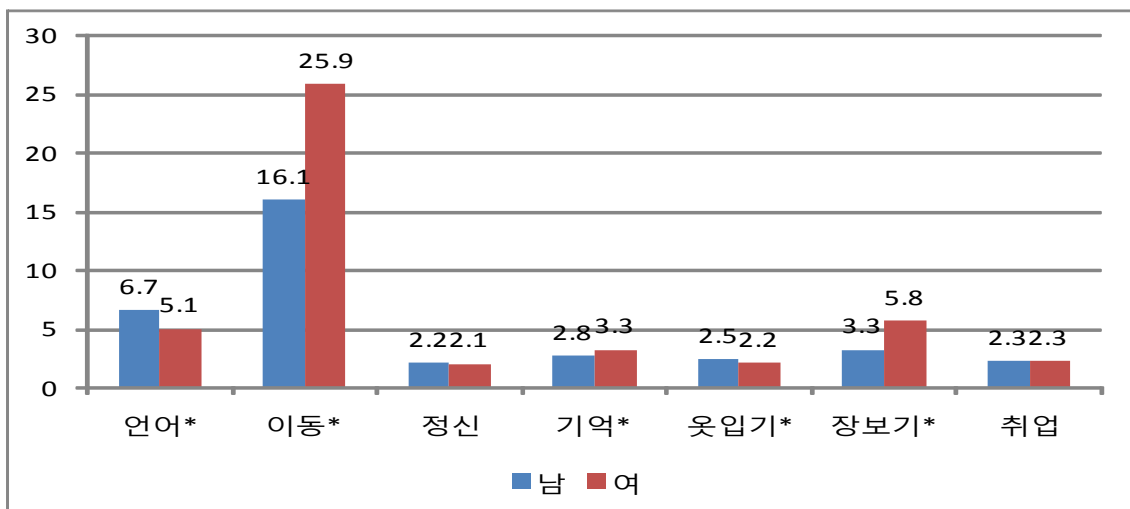
<그림 6> 55-6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비율

표 6은 65-7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활동제약 인구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활동제약 인구 비율은 앞선 연령집단에 비해 남녀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해 각각 22.8%, 31.2%에 달했다. 이는 항목 별 활동제약 비율을 살펴보다도 앞선 연령집단에 비해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역시 걷기 등 이동제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세 배, 여성은 두 배 이상 증가해 각각 16.1%, 25.9%에 달했다.

<표 6> 65-7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활동제약 인구

	65-74				전체		χ^2 (p)
	남		여		n	%	
	n	%	n	%			
계	17,748	100.0	22,750	100.0	40,498	100.0	
제약 있음	4,054	22.8	7,092	31.2	11,146	27.5	346.9494***
제약 없음	13,694	77.2	15,658	68.8	29,352	72.5	
시청각 언어장애	1,192	6.7	1,159	5.1	2,351	5.8	47.9530***
걷기 등 이동제약	2,852	16.1	5,895	25.9	8,747	21.6	570.3926***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388	2.2	473	2.1	861	2.1	0.5490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489	2.8	750	3.3	1,239	3.1	9.8558**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439	2.5	494	2.2	933	2.3	4.0424*
장보기·병원가기	588	3.3	1,310	5.8	1,898	4.7	133.4464***
취업활동	407	2.3	524	2.3	931	2.3	0.004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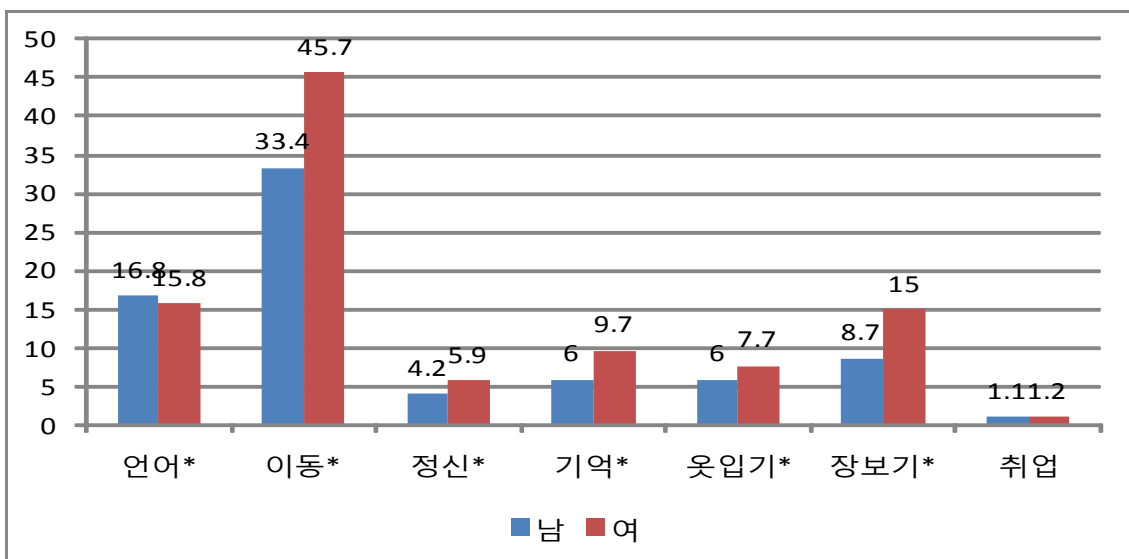
<그림 7> 65-74세 연령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활동제약 인구 비율

표 7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를 보여주고 있다. 75세 이상 남성의 경우는 44.4%, 여성은 54.9%가 활동제약이 있다고 응답해 고령층 여성은 활동제약이 없는 사람보다 활동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 집단의 여성들은 적어도 두 명 중 한 명이 활동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령 집단도 역시 걷기 등 이동제약이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여성은 45.7%나 이 항목에 대해 활동제약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 연령집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장보기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영역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75 이상				전체		χ^2 (p)
	남		여		n	%	
	n	%	n	%			
계	8,586	100.0	16,578	100.0	25,164	100.0	
제약 있음	3,815	44.4	9,099	54.9	12,914	51.3	247.4025***
제약 없음	4,771	55.6	7,479	45.1	12,250	48.7	
시청각 언어장애	1,444	16.8	2,620	15.8	4,064	16.2	4.2948***
걷기 등 이동제약	2,867	33.4	7,582	45.7	10,449	41.5	354.9454***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360	4.2	972	5.9	1,332	5.3	31.4802***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555	6.0	1,611	9.7	2,166	8.6	76.1212***
웃입기·목욕하기·밥먹기	511	6.0	1,271	7.7	1,782	7.1	25.2908***
장보기·병원가기	749	8.7	2,484	15.0	3,233	12.9	197.9777***
취업활동	96	1.1	204	1.2	300	1.2	0.6272

* P<.05, ** P<.01, *** P<.001



<그림 8>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성별 각 항목 활동제약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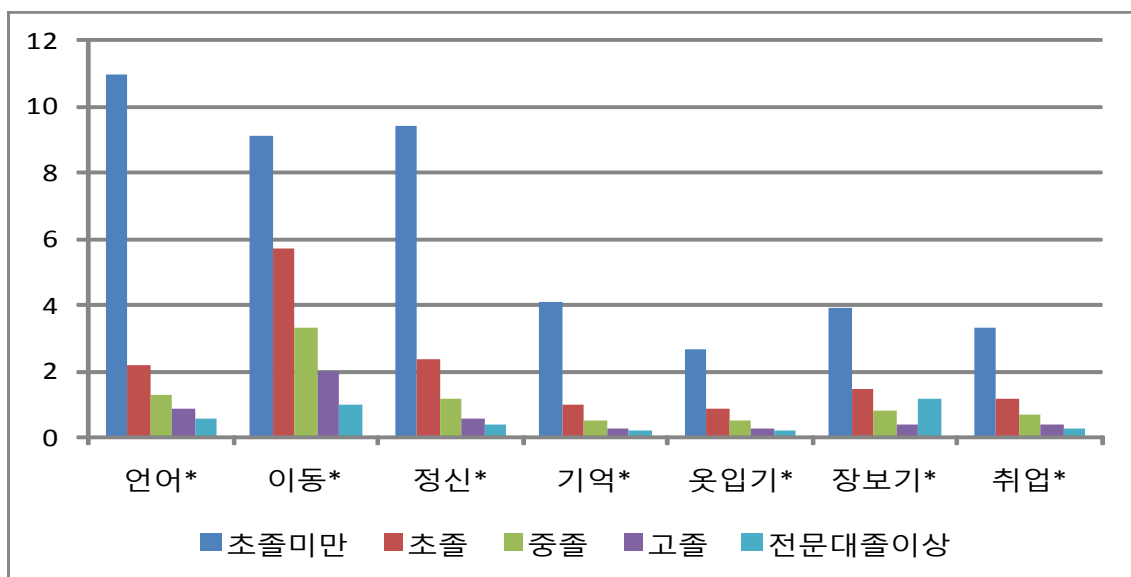
4) 연령집단 내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활동제약 인구

표 8은 연령집단 내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수준을 보여준다. 45-54세 연령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활동제약을 보여주는데 특히 시청각 언어장애, 걷기 등 이동제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영역에서 다른 교육수준을 받은 응답자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활동제약을 갖고 있었다.

<표 8> 45-5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45-54										전체		χ^2 (p)
	초졸 미만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n	%	n	%	n	%	n	%	n	%	n	%	
계	1,057	100.0	7,515	100.0	12,677	100.0	36,135	100.0	20,714	100.0	78,098	100.0	
제약 있음	283	26.8	791	10.5	766	6.0	1343	3.7	466	2.3	3649	4.7	2137.7737***
제약 없음	774	73.2	6,724	89.5	1911	94.0	34,792	96.3	20,248	97.8	74,449	95.3	
시청각 언어장애	116	11.0	166	2.2	162	1.3	324	0.9	132	0.6	900	1.2	1039.5820***
걷기 등 이동제약	96	9.1	431	5.7	424	3.3	720	2.0	211	1.0	1,882	2.4	797.8072***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99	9.4	179	2.4	157	1.2	232	0.6	76	0.4	743	1.0	1080.3323***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43	4.1	74	1.0	63	0.5	121	0.3	37	0.2	338	0.4	417.5960***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29	2.7	64	0.9	61	0.5	103	0.3	32	0.2	289	0.4	246.2322***
장보기·병원가기	41	3.9	116	1.5	103	0.8	157	0.4	35	1.2	452	0.6	407.1967***
취업활동	35	3.3	89	1.2	92	0.7	159	0.4	66	0.3	441	0.6	231.587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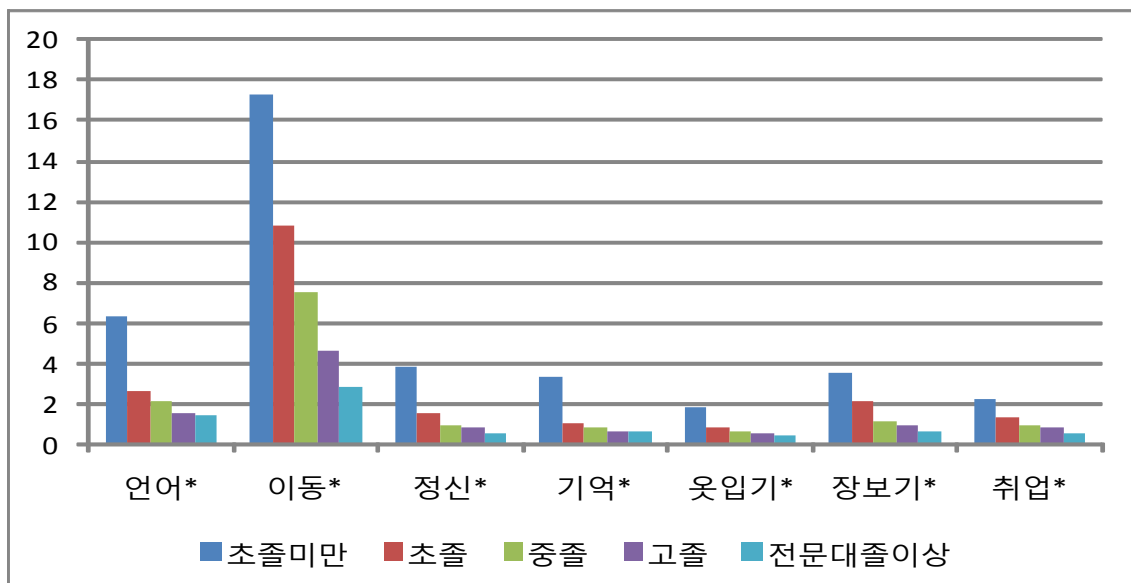
<그림 9> 45-5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비율

표 9와 그림 10에서는 55-6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활동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2%, 15.0%, 10.7%, 7.2%, 5.0%로 점점 줄어들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은 낮아졌다. 45-54세 연령과 마찬가지로 걷기 등 이동제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활동제약의 교육수준에 의한 격차는 45-54세 연령 집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항목의 활동제약 경우는 교육수준에 의한 격차가 다른 항목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9> 55-6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55-64										전체	χ^2 (p)	
	초졸 미만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n	%	n	%	n	%	n	%	n	%			
계	2,931	100.0	14,786	100.0	11,943	100.0	16,318	100.0	7,021	100.0	52,999	100.0	
제약 있음	769	26.2	2,212	15.0	1,278	10.7	1,177	7.2	352	5.0	5,788	10.9	1,437.7964***
제약 없음	2,162	73.8	12,574	85.0	10,665	89.3	15,141	92.8	6,669	95.0	47,211	89.1	
시청각 언어장애	183	6.3	398	2.7	258	2.2	261	1.6	103	1.5	1,203	2.3	274.6054***
걷기 등 이동제약	506	17.3	1,600	10.8	894	7.5	757	4.6	202	2.9	3,959	7.5	1,050.4417***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115	3.9	237	1.6	120	1.00	146	0.9	43	0.6	661	1.3	230.7761***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100	3.4	167	1.1	112	0.9	121	0.7	50	0.7	550	1.0	184.4186***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55	1.9	138	0.9	87	0.7	101	0.6	33	0.5	414	0.8	64.5256***
장보기·병원가기	106	3.6	328	2.2	142	1.2	158	1.0	47	0.7	781	1.5	215.8200***
취업활동	68	2.3	201	1.4	113	1.0	146	0.9	42	0.6	570	1.1	75.794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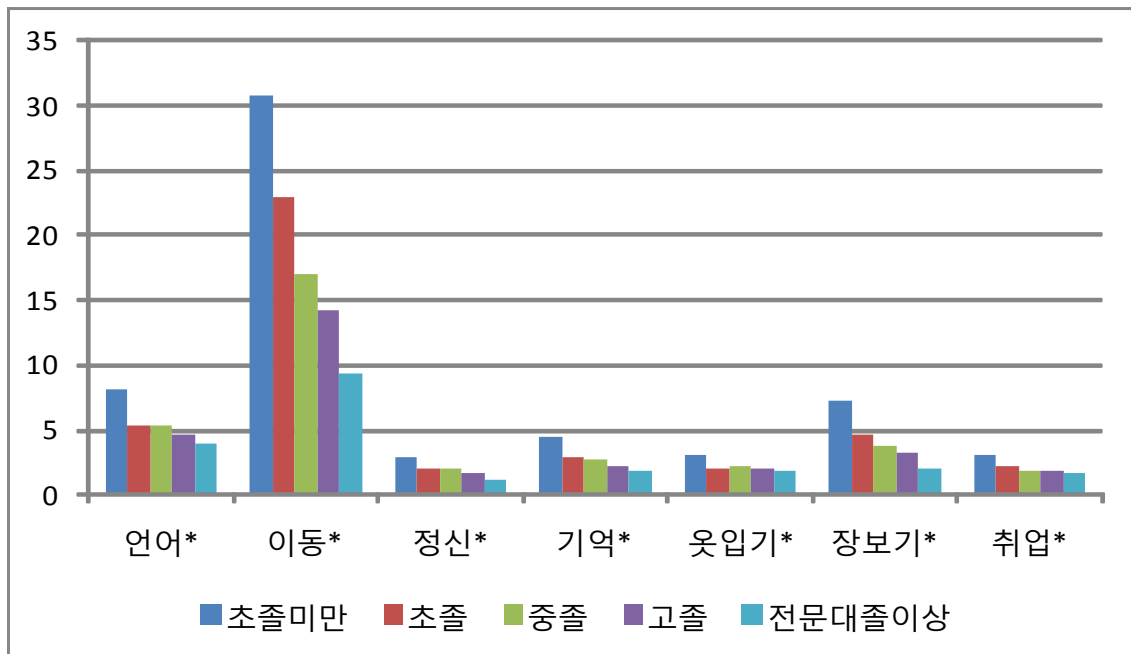
<그림 10> 55-6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비율

표 10과 그림 11은 65-7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령집단도 앞의 두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동 등 걷기 제약이 모든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65-7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65-74										전체		χ^2 (p)
	초졸 미만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n	%	n	%	n	%	n	%	n	%	n	%	
계	9,536	100.0	15,735	100.0	5,931	100.0	6,335	100.0	2,961	100.0	40,498	100.0	
제약 있음	3,653	38.3	4,503	28.6	1,359	22.9	1,218	19.2	413	14.0	11,146	27.5	1,120.7699***
제약 없음	5,883	61.7	11,232	71.4	4,572	77.1	5,117	80.8	2,548	86.1	29,352	72.5	
시청각 언어장애	774	8.1	856	5.4	314	5.3	290	4.6	117	4.0	2,351	5.8	135.9016***
걷기 등 이동제약	2,938	30.8	3,619	23.0	1,013	17.1	898	14.2	279	9.4	8,747	21.6	1,032.9416***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272	2.9	320	2.0	127	2.1	106	1.7	36	1.2	861	2.1	42.8587***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431	4.5	452	2.9	163	2.8	137	2.2	56	1.9	1,239	3.1	103.1575***
웃입기·목욕하기·밥먹기	290	3.0	333	2.1	128	2.2	128	2.0	54	1.8	933	2.3	31.3400***
장보기·병원가기	694	7.3	716	4.6	218	3.7	211	3.3	59	2.0	1,898	4.7	231.7285***
취업활동	293	3.1	364	2.3	114	1.9	111	1.8	49	1.7	931	2.3	43.076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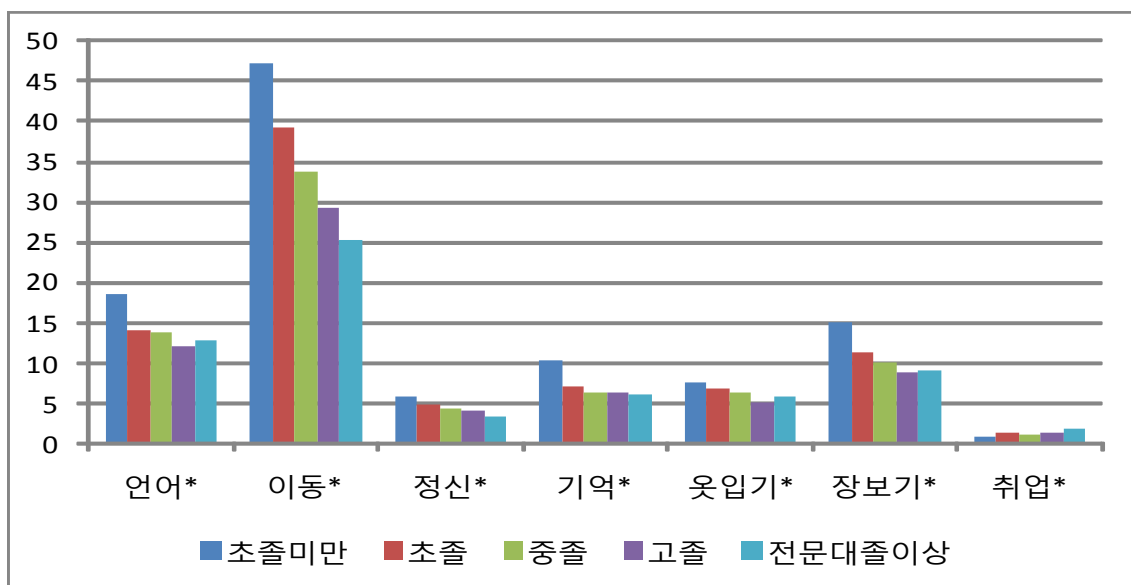
<그림 11> 65-74세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비율

표 11과 그림 12는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영역의 활동제약을 표시하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도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 비율은 낮아졌으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응답자도 35%가 활동제약이 있다고 응답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11>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75세 이상										전체		χ^2 (p)
	초졸 미만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n	%	n	%	n	%	n	%	n	%	n	%	
계	12,554	100.0	7,838	100.0	1,836	100.0	1,898	100.0	1,038	100.0	12,250	100.0	
제약 있음	7,239	57.7	3,816	48.7	789	43.0	707	37.3	363	35.0	12,914	51.3	536.5929***
제약 없음	5,315	42.3	4,022	51.3	1,047	57.0	1,191	62.8	675	65.0	12,250	48.7	
시청각 언어장애	2,333	18.6	1,111	14.2	254	13.8	232	12.2	134	12.9	4,064	16.2	114.4258***
걷기 등 이동제약	5,937	47.3	3,072	39.2	619	33.7	557	29.4	264	25.4	10,449	41.5	462.2250***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743	5.9	393	5.0	81	4.4	79	4.2	36	3.5	1,332	5.3	25.5920***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1,297	10.3	565	7.2	119	6.5	122	6.4	63	6.1	2,166	8.6	97.4383***
웃입기·목욕하기·밥먹기	968	7.7	536	6.8	119	6.5	99	5.2	60	5.8	1,782	7.1	21.9697***
장보기·병원가기	1,908	15.2	887	11.3	185	10.1	168	8.9	85	9.2	3,233	12.9	138.1466***
취업활동	122	1.0	107	1.4	22	1.2	29	1.5	20	1.9	300	1.2	13.7386**

* P<.05, ** P<.01, *** P<.001



<그림 12>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 별 각 항목의 활동제약 비율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 비율은 낮아졌으나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가 덜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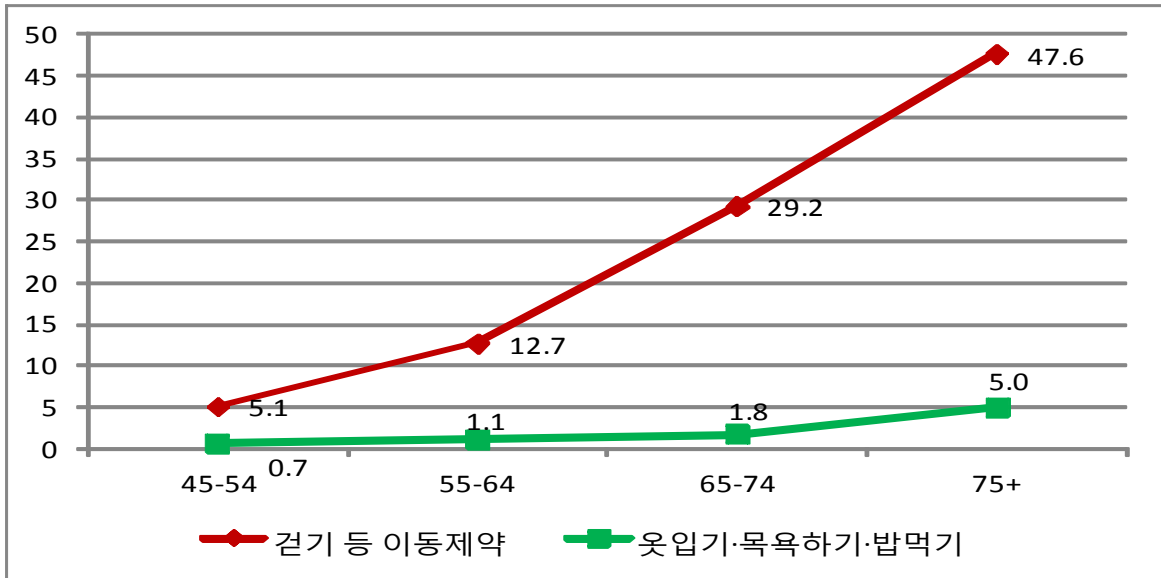
5) 연령집단 내에서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활동제약 인구

활동제약의 문제가 가장 문제시 되는 경우는 활동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구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들이 1인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다면 활동제약 때문에 사회로부터 괴리되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 시야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표 12와 그림 13으로 각 연령집단 내에서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활동제약 인구를 제시하고 있다.

1인 가구 구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5세 이상으로 이는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여성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75세 이상 1인 가구 중 활동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9%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체계화된 정책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겠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항목별 활동제약을 살펴보면 걷기 등 이동제약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일인 단독가구에서 이동 등 걷기제약이 이와 같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외출 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좀 더 세심한 서비스제공 등이 요구된다.

<표 12> 각 연령집단 내에서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각 항목 활동제약

	45-54 1인 가구			55-64 1인 가구			65-74 1인 가구			75세 이상 1인 가구			전체		
	n	%	p	n	%	p	n	%	p	n	%	p	n	%	
계	6,751	8.6		5,884	11.1		7,750	19.1		7,242	28.8		27,627	14.0	
제약 있음	655	9.7	***	1,056	18.0	***	2,767	35.7	***	4,123	56.9	***	8,601	31.1	***
시청각 언어장애	139	2.1	***	202	3.4	***	518	6.7	***	1,215	16.8		2,074	7.5	***
걷기 등 이동제약	346	5.1	***	748	12.7	***	2,263	29.2	***	3,449	47.6	***	6,806	24.6	***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	147	2.2	***	126	2.1	***	156	2.0		254	3.5	***	683	2.5	***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52	0.8	***	82	1.4	**	256	3.3		573	7.9	*	963	3.5	***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48	0.7	***	66	1.1	**	140	1.8	**	360	5.0	***	614	2.2	***
장보기·병원가기	73	1.1	***	142	2.4	***	439	5.7	***	956	13.2		1,610	5.8	***
취업활동	90	1.3	***	98	1.7	***	200	2.6		63	0.9	**	451	1.6	***



<그림 13> 연령집단 내에서 1인 가구여부 별 각 항목의 활동제한 비율(%)

그림 13은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네 연령집단 모두에서 1인 단독 가구 구성 응답자 중 활동제한을 갖는 비율과 2인 가구 이상에서 활동제한을 갖는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만을 보여준다. 걷기 등 이동제한과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제한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1인 단독가구 응답자의 비율이 2인 가구 이상에서의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제한과,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취업활동과 같은 영역은 1인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응답자 중 활동제한을 갖는 비율과 2인 가구 이상에 살고 있는 응답자 중 활동제한을 갖는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그림 13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75세 이상의 연령에서도 시청각 언어장애, 장보기 병원가기 활동제한 비율은 1인 단독가구 여부와 관계가 없었다.

Ⅲ.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연령집단 내에서 항목 별 활동제한자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활동제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중복응답이므로 각 항목에 대해서만 활동제한을 갖는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둘째, 각 연령집단 내에서 취업활동제한 인구 중 각 항목 제한인구를 살펴보고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항목의 활동제한자인지 고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성별, 교육수준, 1인 단독 가구여부 별 각 항목의 활동제한 인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활동제약을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 제약 인구 비율도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다.

둘째, 취업활동제약 내에서의 항목별 제약 인구비율은 역시 모든 연령집단에서 걷기 및 이동제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64세 연령집단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걷기 및 이동항목에서 성별 활동제약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45-54세 연령에서는 0.2% p 차이로 남성이 더 높았으나 55-65세 이후의 연령집단 모두에서 여성이 매우 큰 차이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활동제약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45-54세 연령에서는 남성이 더 활동제약 비율이 높았지만 55-64세 연령집단 부터는 여성들의 활동제약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해 남성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전경숙(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활동제약과 부(-) 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모든 연령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제약 인구의 비율은 낮아졌다. 교육수준의 활동제약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진 연령대는 45-54세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갖춘 응답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활동제약을 보여주었다. 이는 허재현·조영태(2008)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 특히 65세 이상 인구 중 활동제한 노인의 분포는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낮은 교육수준의 활동제한이 가장 높은 교육수준의 활동제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제약의 문제가 가장 문제시 되는 경우는 활동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구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들이 1인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다면 활동제약 때문에 사회로부터 괴리되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 시야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구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1인 단독가구의 경우 그 구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75세 이상으로 활동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9%에 달했다. 이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즉 75세 이상이면서 1인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노인들의 경우 적어도 두 명 중 한 명이 활동제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인 단독가구인 65-74세 집단은 약 29%, 75세 이상 집단은 약 48%가 걷기 및 이동제약을 갖고 있으므로 이 연령대의 경우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의 제약은 친목집단에 참여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제약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1인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체계화된 정책적인 지원으로 활동제약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참 고 문 헌 >

- 전경숙(2008). 노년기 건강의 사회적 요인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8(3), 459-475.
- 통계청 (1960; 2000; 2005) 《한국의 사회지표》 (<http://www.nso.go.kr/>).
-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 《KOSIS, 인구 · 가구, 인구총조사》 (www.kosis.kr)
- 통계청 (2005-2010) 《KOSIS, 인구 · 가구, 인구동향조사》 (www.kosis.kr)
- 통계청 (2010) 《KOSIS, 인구 · 가구, 주민등록인구통계》 (www.kosis.kr)
- 허재현·조영태(2008). 서울시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활동제한 및 건강행태. 한국노년학, 28(1), 87-104.

제 4주제 : 혼인과 출산의 변화

- 교육수준에 따른 혼인상태 및 출산 분석 -

이 성 용(강남대학교)

I. 서론

20세기 후반,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연령과 비혼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서구의 이론들이 서구의 혼인율 감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물론 그 이론들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혼인을 사회적 규범에 의한 당위성보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경향에 있다. 결혼 당사자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복지를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결혼전략을 꾀한다(Macfarlane, 1986; Jones and Gubhaju, 2009).

신가정경제이론(Becker, 1981)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결혼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재한 것을 얻고 또 상대방에 부재한 것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가족의 일차생계자 역할을 해왔고 여성은 집안일을 책임져 왔다. 이러한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은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란 이데올로기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정당시 되어 왔다.

이 이론의 핵심은 역할 전문화이다. 전통적 맥락에서 여성은 바깥 혹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 대신 자녀의 출산과 양육들을 책임진다. 남성은 집안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대신, 바깥일, 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했다. 여성은 남성의 역할 전문화(바깥일에 대한 책임)로부터 집안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혜택을, 남성은 여성의 역할 전문화(집안일에 대한 책임)로부터 바깥일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이러한 역할전문화는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 생산에 종사하게 했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의 가족 소비단위로 만들었다. 그 결과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전문화의 상황은 바뀌었다. 많은 여성들이 점점 그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특히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임금노동 일자리를 얻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오늘날 여성들은 집안일보다 바깥일에 더 매력을 느끼고 헌신하여 한다. 그 결과 결혼은 이전과 같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와 같이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성별 역할전문화를 약화시켰고 혼인의 혜택을 감소시켰다. 역할전문화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소득역량이 높을수록,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역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으로 남거나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의 의견도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비혼의 증가보다 혼인의 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펜하이머의 혼인시점 이론은 혼인시점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여성의 비혼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거부한다(Oppenheimer and Lew 1995; Oppenheimer, 1988; 1997). 이 이론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일자리 불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베커의 이론은 기회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 오펜하이머의 이론은 선호와 기회 모두에 관심을 가진다. 선호의 관점에서, 혼인시점 이론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혼인전략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가정한다. 여성은 결혼을 연기한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갖는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수준을 획득할 때까지 연기한다. 일자리 혹은 학업을 위해 혼인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반드시 비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 자리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생활수준에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혼인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여성들은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구하기 힘들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낮은 교육수준의 남성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기회의 관점에서, 혼인시점의 연기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불안정성과 일치한다. 일자리 불안정성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적으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는 배우자감의 장래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시점을 연기해야 한다. 또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부모세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성별 역할전문화가 무너지면서, 남녀의 배우자 선택에서 중시되는 요인들도 바뀔 수 있다. 남성의 수입만으로는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는 사고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한 배우자 선택요인이 되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임금노동이 확산되면서, 배우자 선택에서 중시되는 요인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귀속지위보다 성취지위가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베커의 신가정이론과 반대로, 오펜하이머의 혼인시점이론은 사회경제적 변동은 비혼의 변동보다 혼인 연기에 초점을 맞춘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과 낮은 여성은 혼인시점이 다를 뿐, 최종적인 혼인의 비율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신가정이론은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형성, 즉 비혼과 이혼의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가정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과 이혼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비록 베커의 신가정이론은 남성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했지만, 두 이론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과 이혼의 비율이 낮아진다고 가정한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비혼과 이혼구성비를 남녀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적 특성 못지 않게 지역적 특성도 개인의 비혼과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여 교육수준이 이혼과 비혼 구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이한지를 분석하겠다. 특히 강남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좋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강북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혼인상태의 변동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0년 센서스를 이용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출산아수를 분석하고, 또 강남과 강북에서의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출산아수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II. 본론

1. 한국의 혼인상태 및 출산 분석

1) 비혼구성비 분석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여성의 비혼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만일 비혼구성비의 변동이 단지 혼인시점의 연기로 인한 것이라면, 비록 30대에서는 비혼구성비가 증가할지라도 40대 이후 비혼구성비는 이전 코호트와 최근 코호트가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30-34세 여성의 비혼구성비를 살펴보면, 1995년(1961년부터 1965년생 코호트) 6.2%에서 2010년(1976년부터 1980년생 코호트) 28.5%로 증가했다. 45-49세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1995년(1946년부터 1950년생 코호트) 1.1%에서

2010년(1961년부터 1965년생 쿠폰) 3.3%로 증가했다. 최근 15년 동안, 각각의 5세 연령대들은 비혼구성비가 3~4배로 증가했다. 40-44세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1995년(1951년부터 1955년생 쿠폰) 1.8%에서 2010년(1956년부터 1960년생 쿠폰) 5.9%로 증가했다. 1961-1965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이 45-49세까지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은 1956-1960년생 여성의 1.4배, 1951-55년생의 2배이다.

30-34세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지난 15년간 무려 약 22.3%가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30대 초반 한국 여성 16명 중 1명이 비혼이었지만, 2010년에는 3.6명 중 1명이 비혼 여성이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35-39세 3.1%에서 12.4%로 9.3%, 40-44세 1.8%에서 5.9%로 4.1%, 45-49세는 1.1%에서 3.3%로 2.2%가 증가하였다. 30대 여성의 비혼구성비 증가는 혼인시점의 연기로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40대 여성의 비혼구성비 증가를 단지 혼인시점의 연기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995년대 이후의 비혼구성비의 변동은 혼인시점의 연기뿐만 아니라 비혼 자체의 변동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1>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비혼구성비: 1995-2010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이상	전체
1995	30-34세	3.5	5.6	8.9	9.5	21.4	6.2
	35-39세	1.5	3.3	6.0	6.2	15.9	3.1
	40-44세	1.0	2.2	4.0	4.0	16.2	1.8
	44-49세	0.6	1.7	4.4	3.0	6.7	1.1
2000	30-34세	7.9	7.4	13.7	15.1	26.4	10.2
	35-39세	2.7	3.5	5.9	6.5	16.8	4.3
	40-44세	1.4	2.3	4.3	5.6	12.7	2.5
	44-49세	0.9	1.9	3.6	3.9	15.9	1.6
2005	30-34세	18.5	13.5		21.8	33.3	18.3
	35-39세	7.5	5.6		8.8	19.4	7.3
	40-44세	2.5	2.7		5.2	12.4	3.5
	44-49세	1.4	2.1		4.5	11	2.3
2010	30-34세	28.2	21.9	27.0	34	37.3	28.5
	35-39세	17.2	9.6	11.9	15.3	23.1	12.4
	40-44세	5.4	4.3	6.3	8.2	15.6	5.9
	44-49세	2.0	2.5	4.6	5.3	12.5	3.3

비혼구성비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든 연령대와 시기에 높아지고 있다. 1995년 2010년 사이, 44-49세 한국여성의 경우 중졸은 0.6%에서 2%로, 고졸은 1.7%에서

2.5%, 전문대 4.4%에서 4.6%, 대졸 3%에서 5.3%, 대학원 6.7%에서 12.5%로 증가하였다. 증가율은 중졸이 3배로 가장 높지만, 증가폭은 대학원졸이 가장 크다.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원졸의 여성이 다른 교육수준의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소득수준도 가장 높을 것이다. 즉 다른 교육수준의 여성들에 비해, 혼인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가장 클 것이므로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성별 역할전문화가 약화되면서, 임금노동을 통해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성이 혼인시장에서 점점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혼인을 연기하고 또 자신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남성(혹은 고소득이거나 좋은 직업의)과 혼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학원졸 여성들은 다른 교육수준의 여성보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혼인시장이 작다. 요컨대, 대학원 여성은 혼인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높은 기회비용의 손실뿐 아니라 적합한 배우자들이 부족한 혼인시장의 특성이 비혼율의 상승을 인도할 것이다. 한편 남성은 가장 낮은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으로 인해 적합한 배우자를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비혼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교육수준은 최근 세대일수록 상승했다. 45-49세 비혼구성비를 보면, 1951-1955년생 코호트는 고졸이상, 1956-65년생은 대졸(전문대 포함), 1961-65년생 코호트는 전문대 여성이 평균보다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였다. 이는 20세기 후반 급증된 교육수준의 향상에 기인한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로 올수록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최근의 높은 비혼구성비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전체 여성 중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이는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비혼구성비의 격차는 30대와 40대가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중졸이하 여성과 대학원 이상 여성의 격차는 30-34세 17.9%에서 9.1%로, 35-39세 14.4%에서 5.9%로 감소한 반면, 40-44세는 15.1%에서 10.2%로, 45-49세는 6.1%에서 10.5%로 증가했다. 즉 30대 여성은 교육수준에 따른 비혼구성비 격차가 감소했지만, 40대 여성은 증가하였다. 이는 30대 중졸 여성의 비혼구성비가 급증한 현상을 반영한다. 비록 대학원 여성의 비혼구성비가 증가하였지만, 중졸여성만큼은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40대는 비혼구성비가 대학원여성이 중졸여성보다 더 큰 폭은 증가한 현상을 반영한다.

<표 2>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비혼구성비: 1995-2010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이상	전체
1995	30-34세	35.1	18.7	14.5	13.9	13.8	18.6
	35-39세	13.3	5.1	3.4	3.0	3.2	6.1
	40-44세	4.7	1.9	1.6	1.0	1.5	2.6
	44-49세	1.8	0.8	0.0	0.6	1.3	1.2
2000	30-34세	50.7	28.2	24.5	23.4	22.9	27.1
	35-39세	26.2	10.5	6.6	5.6	5.0	10.2
	40-44세	10.3	3.8	2.1	2.0	1.7	4.5
	44-49세	4.1	1.6	1.0	1.1	1.1	2.2
2005	30-34세	65.2	42.3		39.7	31.8	40.9
	35-39세	45.2	21.9		13.0	9.4	18.1
	40-44세	23.7	9.4		4.6	3.1	8.8
	44-49세	9.9	3.9		2.2	1.4	4.6
2010	30-34세	67.6	52.3	48.4	50.1	38.9	49.8
	35-39세	52.0	31.6	25.2	23	15.2	26.9
	40-44세	37.6	17.8	12.1	9.9	6.0	14.8
	44-49세	19.4	8.4	5.6	4.5	2.2	8.2

한국남성의 연령별 비혼구성비도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남성의 연령별 비혼구성비는 30-34세 18.6%에서 49.8%로 31.2%, 35-39세 6.1%에서 26.9%로 23.8%, 40-44세 2.6%에서 14.8%로 12.2%, 45-49세 1.2%에서 8.2%로 7%증가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큰 폭으로 비혼구성비가 증가하였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30대 남성의 비혼구성비 증가는 혼인연기로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40대 남성의 높은 비혼구성비는 비혼 자체의 증가—특히 비자발성에 의한—에 기인한다(이성용, 2012). 2010년 현재, 45-49세 한국남성 11명 중 1명이 비혼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비혼 증가가 여성보다 남성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함축한다.

한편 여성과 반대로, 남성의 비혼구성비는 모든 시기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45-49세 남성의 비혼구성비는 중졸 4.1, 고졸 1.6, 전문대 1.0, 대학교 1.1, 대학원 1.1이고, 2010년에는 중졸 19.4, 고졸 8.4 전문대 5.6, 대학교 4.5, 대학원 2.2이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44-49세 남성의 경우 중졸은 1.8%에서 19.4%로, 고졸은 0.8%에서 8.4%, 전문대 0.0%에서 5.6%, 대졸 0.6%에서 4.5%, 대학원 1.3%에서 2.2%로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중졸과 고졸 남성들이 대졸 혹은 대학원 남성보다 비혼구성비가 훨씬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낮은 교육수준의 남성은 배우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중졸이하와 대학원 이상 남성 사이의 격차는 30-34세 21.3%에서 28.7%로, 35-39세 10.1%에서 36.8%로, 40-44세는 3.2%에서 31.6%로, 45-49세는 0.6%에서 17.2%로 증가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교육수준에 따른 비혼구성비 격차가 크며 그 격차도 지난 15년 사이 증가했다. 이는 여성이 비해 남성의 비혼에 개인적인 사회적 역량 즉 교육수준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혼구성비 분석

한국여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여성의 연령별 비혼구성비는 30-39세 1.7%에서 3.9%로 2.2%, 40-49세 2.9%에서 8.6%로 5.7%, 50-59세 1.7%에서 7.7%로 6%, 60세 이상이 0.6%에서 2.0%로 1.4% 증가했다. 40대와 50대에서 이혼구성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이혼구성비: 1995-2010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이상	전체
1995	30-39세	2.6	1.5	1.2	0.7	1.7	1.7
	40-49세	2.8	3.1	4.1	2.4	2.3	2.9
	50-59세	1.5	2.9	1.9	3.5	0.9	1.7
	60세 이상	0.5	1.1	1.5	1.5	3.1	0.6
2000	30-39세	4.8	2.5	1.3	1.0	0.8	2.3
	40-49세	5.0	4.8	4.2	2.5	2.5	4.6
	50-59세	3.2	4.1	4.2	3.2	5.2	3.4
	60세 이상	1.1	1.5	3.5	2.3	3.9	1.1
2005	30-39세	8.3	4.9		2.0	1.6	3.7
	40-49세	8.0	7.1		4.8	4.4	6.8
	50-59세	4.7	6.0		4.3	4.8	5.0
	60세 이상	1.1	2.8		2.5	4.6	1.3
2010	30-39세	9.4	6.2	2.7	1.8	1.4	3.9
	40-49세	10.5	9.6	7.6	5.3	4.7	8.6
	50-59세	7.3	8.5	7.8	6.8	5.7	7.7
	60세 이상	1.7	4.0	4.8	3.8	3.2	2.0

비혼구성비와는 달리, 교육수준과 이혼구성비는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 30대는 모든 시기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구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40대도 2000년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과 이혼구성비는 부적관계를 보인다. 한편 50대는 교육수준과 이혼구성비가 어떤 특정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 60대 이상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구성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교육수준에 따른 이혼구성비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는 30-39세 1.9%에서 8.0%로, 40-49세 1.8%에서 5.8%로, 50-59세는 2.6%에서 2.8%로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2.6%에서 2.3%로 감소했다.

<표 4 >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이혼구성비: 1995-2010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이상	전체
1995	30-39세	3.3	1.2	0.7	0.4	0.2	1.2
	40-49세	4.1	2.0	1.4	1.2	0.5	2.5
	50-59세	1.8	1.3	2.2	1.2	0.8	1.6
	60세이상	0.5	0.6	0.8	0.7	0.6	0.5
2000	30-39세	5.1	1.9	1.0	0.6	0.5	1.6
	40-49세	7.5	3.8	2.1	1.5	1.0	3.9
	50-59세	4.8	3.4	2.7	2.2	1.4	3.8
	60세이상	1.1	1.3	1.2	1.1	0.2	1.1
2005	30-39세	8.2	3.8		1.3	0.5	2.6
	40-49세	10.7	6.2		3.2	1.3	5.7
	50-59세	7.0	4.8		3.3	1.6	5.2
	60세이상	1.7	2.3		2.0	1.0	1.9
2010	30-39세	6.7	3.9	1.7	1.1	1.0	2.3
	40-49세	12.9	8.3	5.2	3.9	2.2	6.7
	50-59세	9.9	7.4	6.1	4.7	2.6	7.4
	60세이상	2.7	3.6	3.7	3.0	1.8	3.0

한국남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도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남성의 연령별 비혼구성비는 30-39세 1.2%에서 2.3%로 1.1%, 40-49세 2.5%에서 8.6%로 6.1%, 50-59세 1.6%에서 7.7%로 6.1%, 60세 이상이 0.5%에서 3.0%로 2.5% 증가했다. 40대와 50대에서 이혼구성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1995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구성비가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중졸 남성의 이혼구성비와 대학원 남성의 이혼구성비 사이의 차이는 30-39세 3.1%에서 5.7%로, 40-49세 3.6%에서 10.7%로, 50-59세는 1.0%에서 7.3%로 증가했다. 60세 이상 남성은 0.1%에서 0.9%로 증가했지만, 이혼구성비가 1995년에는 대학원이상 남성이 중졸 남성보다 높은 반면 2010년에는 반대로 중졸 남성이 대학원 남성보다 더 높다.

3) 출산아수 분석

초저출산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혼인연령의 상승이다. 앞의 분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이래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비혼구성비는 최근 급증하였고, 그보다 낮은 연령별 출산율을 보였던 30대 초반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증가하였다.

<표 5 > 2010년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평균출생아 수

		전체	중졸이하	고졸	대졸 (전문대포함)	대학원
20-24세	(1986-90년생)	0.87	0.97	0.92	0.74	0.38
25-29세	(1981-85년생)	1.01	1.30	1.19	0.91	0.74
30-34세	(1976-80년생)	1.44	1.63	1.61	1.37	1.17
35-39세	(1971-75년생)	1.79	1.81	1.85	1.75	1.58
40-44세	(1966-70년생)	1.95	2.02	1.99	1.90	1.81
45-49세	(1961-65년생)	1.99	2.07	1.97	1.94	1.93
50-54세	(1956-60년생)	2.10	2.23	2.01	1.94	1.89
55-59세	(1951-55년생)	2.40	2.60	2.18	2.07	2.06
60세 이상	(1950년 이전 생)	3.90	4.03	2.82	2.66	2.56

<표 5>는 만 20세 이상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를 교육수준별로 보여준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낮은 평균 출산아수를 보인다. 출산을 거의 마감하거나 마감한 연령대인 40대 이후를 살펴보면, 최근 코호트인 40대가 가장 낮은 평균출산아 수를 보인다.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35-39세 여성을 제외하고는 중졸 이하 여성이 가장 높은 출산아수를 보인다. 대졸과 대학원 기혼여성은 고졸이하의 기혼여성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특히 대학원 기혼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2. 강남·북 혼인상태 및 출산아수 비교

1) 강남북 여성의 비혼구성비 비교

< 표 6 > 2010년 서울 강남·북 여성의 연령별 비혼구성비

	서울전체	강남	강북
20-24세	98.6	99.4	98.4
25-29세	87.0	89.4	86.5
30-34세	49.3	54.2	48.2
35-39세	23.0	26.8	22.3
40-44세	11.5	11.6	11.5
44-49세	5.9	5.2	6.0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별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25-29세와 30-34세 사이(37.7%), 그리고 30-34세와 35-39세 사이(26.3%)에서 높은 감소폭을 보인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할 때, 25-29세와 30-34세 사이에서는 강북(38.3%)이 강남(35.2%)보다, 30-34세와 35-39세 사이는 강남(27.4%)이 강북(25.9%)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인다. 이는 강남여성이 강북여성보다 더 혼인시점을 연기하는 경향에 기인할 수 있다. 한편 44-49세에서 강북이 강남보다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이런 현상에는 가장 높은 교육수준의 강북 여성들이 보여주는 높은 비혼구성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된다.

<표 7> 2010년 교육수준에 따른 강남북 여성의 연령별 비혼구성비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20-24세	72.1	64.6	98.8	94.6	99.6	99.0	99.6	99.6	99.2	99.0
25-29세	40.9	45.4	83.6	74.7	89.2	85.1	90.5	90.2	89.2	92.0
30-34세	63.5	44.3	61.8	42.7	54.7	47.7	53.9	50.6	49.7	51.7
35-39세	25.3	20.3	27.0	19.2	31.0	21.3	25.4	24.0	26.3	29.9
40-44세	12.2	8.2	11.7	8.9	14.4	12.4	9.1	13.2	16.0	24.7
45-49세	4.6	4.1	4.6	4.6	8.6	7.7	4.4	7.4	7.5	19.1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혼구성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북과 강남을 비교하면,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강남이 강북보다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중졸, 고졸, 전문대졸에서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강남여성이 강북여성보다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반면 교육수준이 대학원이상인 경우에는 강남여성이 강북여성보다 낮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여성이 혼인시장에서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에서의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에서의 교육수준 낮은 여성에 비해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인 40대 이후 여성의 경우, 강북여성이 강남여성보다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이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비혼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의 주거비와 생활비 수준 차이를 감안할 때, 어떠한 40대 이후까지 비혼인 여성은, 비슷한 교육수준의 기혼 여성에 비해, 값비싼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강남보다 강북에서 주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34세의 경우 강북과 강남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강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구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강북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강남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혼인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강북은 그 반대로 높은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혼인은 자발적인 성향이 높은 반면, 낮은 여성의 비혼은 비자발적인 성향이 높을 수 있다. 강북과 달리, 강남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남성의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5-39세 강남은 전문대가 약간 높을 뿐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강북은 대학원과 대학원이 전문대이하의 교육수준 여성보다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이며, 그 격차가 강남보다 크다.

40-44세는 강남은 대졸이 가장 낮지만 전문대와 대학원졸 여성이 중졸 고졸 여성보다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반면 강북은 중졸 고졸 여성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여성이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특히 강북의 경우 대학원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중졸과 고졸 여성의 비혼구성비의 2배나 된다.

45-49세 강남은 대졸이 중졸 고졸과 비슷한 수준의 비혼구성비를 보이며 전문대와 대학원 여성이 더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강북은 중졸 고졸 여성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여성이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이며, 특히 대학원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중졸과 고졸 여성 비혼구성비의 4.6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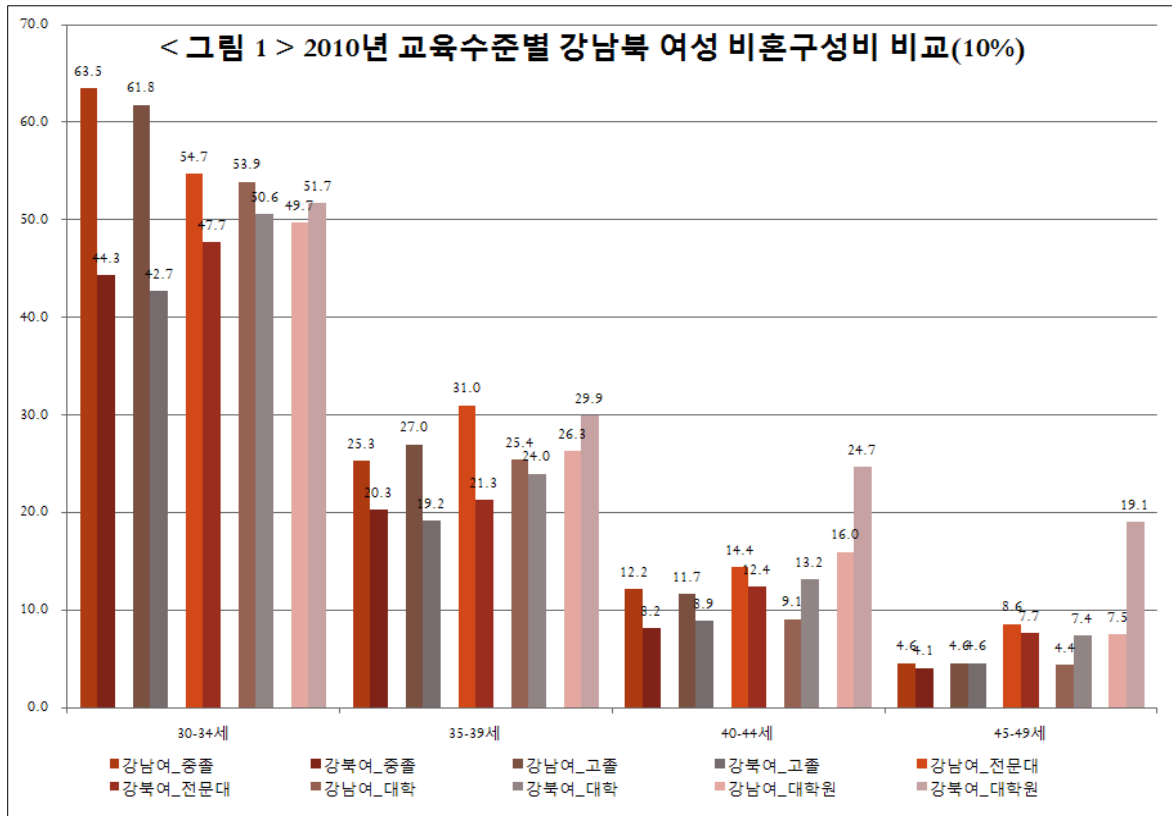
<표 8> 2010년 강남북 남성의 연령별 미혼구성비

	서울전체	강남	강북
20-24세	99.7	99.8	99.6
25-29세	94.7	95.4	94.6
30-34세	66.9	66.5	67.0
35-39세	35.9	33.9	36.0
40-44세	20.4	14.9	21.4
44-49세	10.3	5.9	11.2

여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별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25-29세와 30-34세 사이(27.8%) 및 30-34세와 35-39세 사이(31%)에서 높은 감소폭을 보인다. 여성과 달리 전자 연령대보다 후자 연령대에서 더 큰 감소폭을 보인다. 그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혼인연령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면, 25-29세와 30-34세 사이는 강남(28.9%)이 강북(27.6%)보다, 30-34세와 35-39세 사이는 강남(32.6%)이 강북(31%)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인다. 이는 여성과 달리 강북남성이 강남남성보다 혼인시점을 더 연기하는 경향에 기인할 수 있다. 여성과 달리 30-49세 사이의 모든 연령대에서 강북이 강남보다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여 준다. 이는 경제 수준이 낮은 강북지역의 남성들이 높은 강남지역의 남성보다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45-49세에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은 강북이 강남의 거의 2배가 된다.

<표 9 > 2010년 교육수준에 따른 강남북 남성의 연령별 비혼구성비

	중졸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졸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20-24세	100.0	96.4	99.6	99.2	100.0	99.7	99.9	99.8	100.0	100.0
25-29세	90.4	88.0	93.5	90.6	94.8	94.2	96.3	96.1	93.7	93.9
30-34세	75.9	75.7	71.9	70.1	74.2	68.0	65.6	66.2	57.5	60.2
35-39세	64.9	55.6	50.4	45.1	42.8	38.7	32.8	32.0	20.4	22.7
40-44세	51.0	45.4	27.8	28.1	19.8	19.7	13.3	16.3	6.2	10.2
45-49세	26.5	25.7	12.8	13.9	7.8	8.4	3.8	6.9	2.1	4.5



강북과 강남을 비교하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 남성은 강남이 강북보다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고졸의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의 비혼구성비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4년제와 대학원이상인 경우에는 강남남성이 강북남성보다 낮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이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특히 40대에, 강북남성이 강남남성보다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서울남성과 대학원이상인 서울남성 사이의 격차는 30-34세 16.1%, 35-39세 32.2%, 40-44세 36.8%, 45-49세 22.1%이다.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30대 전반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차이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는 2배로 증가한다. 물론 40대 후반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여성이 비해 남성이 교육수준에 따른 비혼구성비 차이가 더 큰 폭으로 변화한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혼에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함축한다. 30대보다 40대에서 더 큰 격차를 보인다. 교육수준 차이는 혼인의 연기보다 비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30-34세의 경우 여성과 달리 강북과 강남 남성은 4년제 대졸이상이 전문대 이하보다 낮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남성과 대학원이상인 남성 사이의 비혼구성비 격차는 강북보다 강남이 더 크다.

35-39세에서는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하일 경우는 강남이 강북보다, 그러나 대학원졸인 경우는 강북이 강남보다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남성과 대학원이상인 남성 사이의 비혼구성비 격차는 강북보다 강남이 더 크다.

40-44세에서는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는 강남이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인 경우는 강북이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남성과 대학원이상인 남성 사이의 비혼구성비 격차는 강북보다 강남이 더 크다.

45-49세에서는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남이 강북보다 낮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비록 그 차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지만,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남성과 대학원이상인 남성 사이의 비혼구성비 격차는 강북보다 강남이 더 크다.

2) 강남·북 이혼구성비 비교

서울여성의 경우,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 사이의 여성이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혼인 직후 얼마동안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서구와 달리, 한국은 자녀의 성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강북과 강남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에서 강북여성이 강남여성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며, 40-54세 사이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 표 10 > 2010년 서울 강남북 여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

	서울전체	강남	강북
30-34세	1.3	1.0	1.4
35-39세	4.3	3.0	4.6
40-44세	7.8	5.6	8.3
45-49세	9.9	8.2	10.3
50-54세	10.5	8.4	10.9
55-59세	8.9	8.0	9.0
60-64세	6.5	5.7	6.6
65-69세	4.7	4.5	4.7
70세이상	2.1	1.7	2.1

<표 11>은 65세 이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 이혼구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서울여성들은 전문대가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지만,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60세 이후에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의 서울여성은 대졸여성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는 사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이상의 여성은 대학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활동력이 높은 연령대인 60세 이전에 대학 여성보다 오히려 낮은 이혼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 표 11 > 2010년 교육수준에 따른 서울여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30-34세	6.4	3.6	1.1	0.6	0.6
35-39세	11.2	7.5	3.6	2.3	1.9
40-44세	15.7	10.6	6.5	4.3	4.3
45-49세	14.9	11.6	8.1	5.7	5.8
50-54세	13.3	10.9	9.5	7.1	5.6
55-59세	10.1	8.9	9.5	5.9	5.8
60-64세	7.1	6.3	5.2	4.7	5.7
65-69세	4.7	5.0	5.3	3.3	4.5
70세이상	3.3	2.1	5.7	3.2	3.8

<표 12>는 교육수준에 따른 강남북 여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를 보여준다. 먼저 35-44세를 살펴보자. 중졸여성의 경우, 강남은 강북보다 훨씬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이 연령대의 중졸 강남여성 중 5명 중 1명이 이혼여성이다. 강남중졸 여성이 35-39세에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여주는 것은 강남 중졸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결혼 직후 더 빨리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앞의 비혼구성비 분석에서 30대에서 강남 중졸여성은 강북 중졸여성보다 훨씬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였다.

이는 강남의 중졸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특히 30-44세, 혼인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혼인을 하더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한다. 가장 잘 사는 지역에서 가장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은 혼인과 이혼 모두에서 가장 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여성은 이와 반대 현상을 보인다. 강남이 강북에 비해 낮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 표 12 > 2010년 교육수준에 따른 강남북 여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 비교

	중졸 여성		고졸여성		전문대 여성		대학교 여성		대학원 여성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30-34세	0.0	6.9	2.9	3.7	1.5	1.0	0.6	0.6	0.4	0.6
35-39세	23.1	10.6	6.2	7.6	2.9	3.7	2.3	2.3	1.3	2.2
40-44세	20.0	15.5	10.1	10.7	5.4	6.7	3.5	4.5	4.0	4.5
45-49세	16.4	14.8	12.6	11.4	8.5	8.0	5.1	6.3	4.6	6.6
50-54세	12.0	13.4	10.5	2.9	9.0	9.7	5.7	7.8	4.6	6.1
55-59세	11.0	10.0	9.0	2.4	9.2	9.7	5.4	6.1	4.5	6.8
60-64세	8.0	7.0	5.6	2.1	4.2	5.7	4.0	5.1	3.5	7.2
65-69세	4.6	4.7	4.9	1.8	4.7	5.5	3.9	3.0	4.1	4.8
70세 이상	4.9	3.2	3.3	2.1	3.8	6.7	2.6	3.5	0.0	5.3

이혼구성비가 가장 높은 중졸 여성과 낮은 대학원 혹은 4년제 대학교 졸 여성 간의 이혼구성비 격차는 강남이 강북보다 훨씬 크다. 즉 강북에 비해 강남에서 여성의 이혼구성비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50세 이후의 연령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고졸이하의 여성은 강남이 강북보다 더 큰 이혼구성비를, 전문대 이상의 여성은 강북이 강남보다 더 큰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또한 이혼구성비의 변이도 강남이 강북보다 더 크다. 특히 교육수준이 대학원이상인 여성의 경우 강북은 강남에 비해 훨씬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이는 어쩌면,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강북여성이 자신과 동등한 교육수준의 강남여성과 경제적 삶의 비교에서,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으로써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 수 있다.

<표 13> 2010년 서울 강남북 남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

	서울전체	강남	강북
30-34세	0.6	0.6	0.6
35-39세	2.3	1.9	2.3
40-44세	4.7	3.4	4.9
45-49세	7.1	5.0	7.6
50-54세	7.7	5.2	8.1
55-59세	7.2	4.3	7.8
60-64세	5.8	3.5	6.2
65-69세	4.5	3.2	4.7
70세 이상	2.4	1.6	2.5

<표 13>에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에서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강북과 강남을 비교하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에서 강북이 강남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지만, 50-59세 사이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 표 14 > 2010년 서울남성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이혼구성비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30-34세	2.8	1.4	0.6	0.3	0.4
35-39세	7.0	4.3	2.0	1.3	1.1
40-44세	10.8	7.4	4.2	2.8	2.0
45-49세	14.2	9.7	7.1	4.5	2.8
50-54세	13.8	8.8	7.0	4.5	3.0
55-59세	11.0	7.9	6.8	4.6	2.0
60-64세	7.7	5.9	6.2	4.0	2.0
65-69세	5.4	4.3	4.5	3.6	2.4
70세이상	4.1	3.8	5.4	3.2	3.2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 이혼구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과 달리 모든 연령에서 대학원 이상인 남성이 대학 남성보다 낮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이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을 막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약간 낮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 표 15 > 2010년 교육수준에 따른 강남북 남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 비교

	중졸 남성		고졸남성		전문대 남성		대학교 남성		대학원 남성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30-34세	3.9	2.7	1.9	1.3	0.8	0.6	0.4	0.3	0.5	0.4
35-39세	4.1	7.3	5.0	4.2	2.3	1.9	1.2	1.3	0.9	1.1
40-44세	9.2	10.8	5.5	7.6	4.0	4.2	3.1	2.7	1.9	2.1
45-49세	13.7	14.2	10.6	9.6	6.5	7.2	3.7	4.7	2.1	3.2
50-54세	13.1	13.9	8.7	8.9	5.3	7.3	3.9	4.7	2.3	3.4
55-59세	9.0	11.1	7.0	8.0	5.2	7.1	3.0	5.2	1.2	2.5
60-64세	5.3	7.9	5.6	5.9	6.3	6.1	2.2	4.8	0.9	2.8
65-69세	6.4	5.3	2.9	4.5	5.8	4.2	2.0	4.2	2.4	2.4
70세이상	4.9	4.0	1.3	4.1	3.0	6.4	1.3	3.9	2.5	3.0

여성과 달리 남성은 거의 모든 셀에서 강북이 강남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여 준다. 그러나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여성에 비해 작다. 이를테면 이혼구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인 45-49세의 경우 중졸과 대학원 사이의 이혼구성비 격차는 강남 11.6, 강북 11이다(여성은 강남 11.8, 강북 8.2이다). 여성에 비해, 지역간 경제적 차이가 남성의 이혼구성비에 작은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이혼에는 개인의 교육수준 못지않게 주거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반면, 남성의 이혼에는 주거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강남·북 기혼여성의 출산아수 비교

<표 16>은 강남북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기혼여성 평균 출산아 수를 비교해 보면, 20대와 45-54세는 강남이, 55세 이상은 강북이 더 높은 평균 출생아 수를 보인다. 출산률이 가장 높았던 세대, 베이비 붐 이전 세대(1954년 이전에 태어난 기혼여성들)를 살펴보면, 강북이 강남보다 더 높은 출생아 수를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55-59세는 대학만이, 60세 이상에서는 중졸, 고졸에서 강남이 더 높은 출생아 수를 보인다.

제 일차 베이비 붐세대라고 할 수 있는 45-54세 기혼여성은, 흥미롭게도,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강남이 강북보다 더 높은 평균 출생아 수를 보인다. 그러나 제2차 베이비붐 세대라 할 수 있는 35-44세 기혼여성은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34세 이하의 기혼여성은 아직 출산이 마무리하지 않은 연령이며, 오히려 출산을 시작하는 연령이라 할 수 있다. 대졸 이상에서, 30-34세의 대졸여성을 제외하고는 강남이 강북보다 높은 출생아수를 보인다.

흥미로운 발견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대학과 대학원인 경우, 강남의 기혼여성이 강북의 기혼여성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강남여성은 강북여성에 비해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또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표 16> 강남북 기혼여성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별 평균출생아 수

	전체		중졸		고졸		대학(전문대)		대학원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강남	강북
20-24세	0.83	0.81	1.00	1.17	1.50	0.91	0.67	0.62	0.00	0.00
25-29세	0.92	0.83	1.00	1.14	0.90	0.99	0.90	0.76	1.07	0.77
30-34세	1.17	1.26		1.53	1.38	1.40	1.17	1.23	1.08	1.06
35-39세	1.65	1.65	1.50	1.66	1.66	1.70	1.66	1.63	1.59	1.44
40-44세	1.85	1.86	1.93	1.95	1.91	1.91	1.84	1.81	1.72	1.66
45-49세	1.94	1.90	1.95	1.89	1.98	1.92	1.91	1.89	1.94	1.81
50-54세	1.96	1.95	2.09	2.02	1.95	1.93	1.93	1.90	1.99	1.72
55-59세	2.12	2.17	2.27	2.29	2.11	2.10	2.07	2.01	2.13	2.19
60세 이상	3.05	3.16	3.46	3.35	2.73	2.69	2.56	2.65	2.42	2.67

III. 결론

먼저 한국의 비혼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여성이 45-49세까지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은 지난 15년 사이 거의 세 배가 되었다.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1995년과 2000년 사이 30-34세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6.2%에서 28.5%로 증가했다. 2010년에는 30-34세 여성 3.5명 중 1명이 비혼여성이다. 1995년 이후의 비혼구성비 변동은 혼인시점의 연기뿐 아니라 비혼 자체의 변동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여성의 비혼구성비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이러한 비혼과 교육수준 관계는 베커의 성역할 전문화 이론이 오픈하이머의 경력이론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증가율은 중졸이 가장 높지만, 증가폭은 교육수준이 대학원이상인 여성이 가장 크다. 교육수준이 중졸이하 여성과 대졸 여성 사이의 격차는 지난 15년간 30대에서는 감소했지만 40대에서는 증가했다.

한국 남성의 비혼구성비도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비혼구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혼구성비가 낮아진다. 지난 15년 동안 비혼구성비는 교육수준이 낮은 중졸과 고졸 남성이 대졸 혹은 대학원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현재 44-49세 중졸남성은 5명 중 1명이 비혼, 40-44세는 3명 중 1명, 35-39세는 2명 중 1명이 비혼이다. 여성이 비해 남성이 교육수준에 따른 비혼구성비 격차가 더 크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뜻한다.

두번째로 한국의 이혼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한국여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이혼구성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이혼구성비는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 교육수준과 이혼구성비 사이의 관계는 30대와 40대에서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50대에서는 특정 패턴이 없고, 60대 이상은 교육수준과 이혼구성비는 정적관계를 보여준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교육수준에 따른 이혼구성비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는 30-39세 1.9%에서 8.0%로, 40-49세 1.8%에서 5.8%로, 50-59세는 2.6%에서 2.8%로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2.6%에서 2.3%로 감소했다.

남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도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40대와 5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1995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구성비가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중졸 남성의 이혼구성비와 대학원 남성의 이혼구성비 사이의 차이는 30-39세 3.1%에서 5.7%로, 40-49세 3.6%에서 10.7%로, 50-59세는 1.0%에서 7.3%로 증가했다. 60세 이상 남성은 0.1%에서 0.9%로 증가했다. 이혼구성비가 1995년에는 대학원이상 남성이 중졸 남성보다 높은 반면 2010년에는 반대로 중졸 남성이 대학원 남성보다 더 높다.

세 번째로 평균 출산아수의 변동을 살펴보자. 최근 코호트일수록 낮은 평균 출산아수를 보인다. 출산을 거의 마감하거나 마감한 연령대인 40대 이후를 살펴보면, 최근 코호트인 40대가 가장 낮은 평균출산아 수를 보인다.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35-39세 여성을 제외하고는 중졸 이하 여성이 가장 높은 출산아수를 보인다. 대졸과 대학원 기혼여성은 고졸이하의 기혼여성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특히 대학원 기혼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네 번째로 강남·북의 비혼구성비를 살펴보자. 여성의 경우, 25-39세는 강남이 45-49세는 강북이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강남이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원에서는 강북이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30-34세 여성의 경우, 강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구성비가 낮아지는 반면, 강북은 반대로 높아진다.

남성은 30세 이후 강북이 강남보다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특히 45-49세 남성의 비혼구성비는 강북(11.2%)이 강남(5.9%)의 2배이다. 여성과 유사하게,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중졸 남성은 강남이,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원은 강북이 더 높은 비혼구성비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중졸인 남성과 대학원인 남성의 격차는 모든 연령대에서 강남이 강북보다 더 크다.

다섯 번째로 강남·북 이혼구성비를 살펴보자. 서울여성은 45-59세가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모든 연령에서 강북여성이 강남여성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강남이 높은 경우는 강북이 더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서울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45-59세가 가장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지만, 여성보다는 낮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에서 강북여성이 강남여성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고졸을 제외한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강북보다 강남이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를 비교해보자. 강남과 강북의 기혼여성 평균 출산아 수를 비교해 보면, 강남은 20대와 45-54세에서, 강북은 55세 이상에서 더 높은 평균 출생아 수를 보인다. 일차 베이비 붐 세대 기혼여성은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강남이 강북보다 더 높은 평균 출생아 수를 보이지만, 이차 베이비붐 세대는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대학과 대학원인 경우, 강남의 기혼여성이 강북의 기혼여성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강남여성은 강북여성에 비해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또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 문헌 >

이 성 용. 2012. "한국의 혼인상태 변동: 1995~2010년" 『가족과 문화』 24 (3):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Jones, W. Gavin and Bina Gubhaju. 2009.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Mean Ages at First Marriage and Proportions Never Marrying in the Low-fertility Countri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5(3): 237-266.

Macfarlane, A. 1986. *Marriage and Love in England 1300~1840*. Oxford: Basil Blackwell.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563-591.

Oppenheimer, V. K. 1994. "Women's Rising Employment and the Future of Family in Industrial Socie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 293-342.

Oppenheimer, V. 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431-53.

Oppenheimer, Valerie. Kincade., Matthijs. Kalmijn, and Nelson Lim. 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311-330.

Part II

Part II는 가구분야로서 고령자 및 독신자, 가구구조, 다문화가구를 주제로 총 3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먼저 제 5장에서는 고령자 및 독신자(1인 가구) 특성분석(김정석 교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인 가구 가구원들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형성요인과 함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인가구의 급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가구 거주자들의 생애주기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혼상태를 둘러싼 생애주기 단계는 대체로 연령을 통해 어느 정도 접근가능하다.

1인가구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과 함께,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의대상을 인구(가구원)와 가구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은 전체 인구 중 1인가구 가구원의 비율과 그 규모를 가늠하게 해 주는데, 이를 통해 가족가구의 변동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가구수를 제시함으로써 주택규모 및 수량 예측,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인가구 가구원이 곧 가구주이며, 또한 가구로 환산될 수 있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가구원(인구)으로 할 것인가 가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보여줄 수 있는 추이와 현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1인가구의 국제적 현황과 추이,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1인가구의 성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 2010년 1인가구 가구원들의 비율 변화를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이어 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율 분포를 가구주들의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인가구 가구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분포와 건강, 경제, 사회참여활동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1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1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1인가구를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앞으로 고려할 인구학적 특성(예. 결혼상태)은 15세 이상 인구에 한정해서 그 정보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전 연령층 대비 1인가구 비율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제 6장에서는 고려대학교 황명진 교수가 사회변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가구변화를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복지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인 가구, 그 중 노인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가구경제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유형별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노인1세대)가구의 규모와 인구사회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단독가구는 아니지만 사회전반적인 가구구조의 변화 속에 부양과 지원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구와 조손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구규모의 축소, 전통적인 핵가족 수의 감소와 독거노인, 조손가족,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관찰되는 가구구조의 변화, 즉 독신가구의 증가, 노인단독가구 혹은 노인1세대가구의 증가,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의 증가는 그 원인이 이혼의 증가나 결혼연기 혹은 기피,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 사회적 이전, 그리고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복지적인 쟁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가구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정책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특히 가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다문화가구의 가구구성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혜경)을 통해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변화된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현상을 심층분석하였다.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총조사)는 국내 센서스 역사상 처음으로 센서스 문항에 '현재국적'과 '출생국적' 그리고 '입국시기'를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2010년 총조사의 표본자료는 전국적으로 10%의 표본가구를 조사하였지만,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나 외국인 1인가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구를 이루었다가 이혼과 사별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홀로 남겨진 경우는 분석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 연구는 10% 표본자료에 집계된 한국인과 가구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이들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경우, 가구주인 경우, 그리고 며느리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그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기혼부부인 경우만 골라내어 가구주와 배우자를 합친 부부 data를 만들어 한편으로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가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10% 표본조사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을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로 비교하였고, 동시에 내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준거집단으로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2010년 표본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구를 분석할 경우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부부 각각의 연령분포가 매우 다르므로,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 그리고 다문화가구 간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10% 표본조사를 활용하여 향후 다문화가구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에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배우자는 물론 며느리인 경우까지 포함해야 할 것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가구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가구외에도 매우 다양한 다문화가구가 존재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에서 다문화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5년, 2006년, 2009년, 2012년 조사가 있고, 2010년 총조사 10%표본조사가 있다. 2015년 총조사 등 향후 총조사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에 대한 조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그간의 다른 조사와의 수평적 및 수직적(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총조사의 표본조사에 있어서 외국인 1인가구는 물론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구태여 표집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사실혼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주이민과 일시이민의 구별 자체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총조사는 물론 표본조사에서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외국인 1인가구도 그 조사대상에 포함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5주제: 고령자 및 독신자(1인가구) 특성분석 -일인가구의 구조와 변화(연령대별 구성과 특성 연구)-

김 정 석(동국대학교)

I. 서론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급증을 살펴보는 데에는 적어도 이들 가구 거주자들의 생애주기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혼상태를 둘러싼 생애주기는 단계는 대체로 연령을 통해 어느 정도 접근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 가구원들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형성요인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인가구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과 함께,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의대상을 인구(가구원)와 가구로 구분해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가구원은 전체 인구 중에서 1인가구 가구원의 비율과 그 규모를 가늠하게 해 주는데, 이를 통해 가족가구의 변동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가구수를 제시함으로써 주택규모와 수량의 예측과 공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인가구 가구원이 곧 가구주이며, 또한 가구로 환산될 수 있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가구원(인구)으로 할 것인가 가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보여줄 수 있는 추이와 현황을 매우 다르게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우선 1인가구의 국제적 현황과 추이,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1인가구의 성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2010년 현재 1인가구 가구원들의 비율변화를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다. 이를 이어 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율 분포를 가구주들의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가구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분포와 건강, 경제, 사회참여활동의 분포로 살펴보고자 한다.

1인가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앞서, 이 글에서는 1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우선, 1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1인가구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앞으로 고려할 인구학적 특성(예. 결혼상태)은 15세 이상 인구에 한정해서 그 정보가 확보되었다. 현실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할 수 있고, 인구학적 특성 비교에 통일성을 마련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약하였다. 따라서 전 연령층 대비 1인가구 비율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한편, 실질적인 분석에서 15-19세 연령층에서는 대부분이 미혼이며, 1인가구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연령층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주요 OECD 국가의 최근 가구분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 국가마다 자료의 제공년도 및 가구분류형태 등이 서로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의 1인가구 평균 비율은 27.7%이다. 제시된 국가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은 독일이 35.8%로 가장 높고,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 1인가구 비율이 20%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가구형태분류가 OECD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다.

<표 1> 주요 OECD국가 최근 가구형태분포

	(단위:%)			
	부부가구	일인가구	한부모가구	기타일반가구
프랑스	58.3	31.0	8.0	2.7
독일	55.4	35.8	5.9	2.9
그리스	64.9	19.7	8.7	6.6
이태리	62.3	24.9	8.9	3.9
일본	49.5	29.5	8.4	12.1
한국	72.6	..	9.4	18.6
스페인	62.9	20.3	9.9	6.9
스웨덴	63.9
영국	53.5	30.2	9.8	6.6
OECD 평균	57.6	27.7	9.1	11.8

.. 자료 가용하지 않음

1. 자료시점프랑스(1999), 한국(2000), 미국(2000), 그리스(2001) 이태리(2001), 스페인(2001), 영국(2001), 스웨덴(2002) 일본(2005),

2. 부부가구는 적어도 부부의 자녀 혹은 노부모 등이 함께 사는 가구도 포함한 것으로 보임 2 and 3, see notes 2 and 3 to Char tSF1.1.A

4. Estimates for 2008 (Statistics Iceland): refers to the proportion of sole-parent families with a child under age 18.

5. This proportion includes potentially lone person households which can not be identified separately from the data.

6. Estimate for 2006: US Population Reference Bureau.

Sources: EU countries (except Iceland and Sweden): 2000 round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Iceland: Hagstofa Iceland's committee survey on living conditions except see note 4; Sweden: OECD (2005), Babies and Bosses, Vol. 4, Paris; Australia: ABS 2006 census; Canada: Census 2006, Statistics Canada; Bureau of statistic; Eurostat; Other countries: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except: Japan: Population Census 2005 ;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Mexico: Conteo de Poblacion y Vivienda, 2005 (INEGI), II Population and Housing National Count 2005; United States, US Decennial Census of Population, except as referred to under note 6.

다음의 <표 2>는 미국, 스웨덴, 일본의 1인가구 비율변화를 가용한 기간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1995년에 1인가구 비율이 이미 45.4%에 이르렀고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 해당 비율이 13.1%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2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1960년과 2005년 사이에 1인가구 비율이 16.5%에서 29.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주요 OECD 국가에서 1인가구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표 2> 미국, 스웨덴, 일본의 1인가구 변동

연 도	미국		스웨덴		일본	
	총가구수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	1인가구 비율
1960	52,799,000	13.1%	—	—	22,538,645	16.5%
1965	57,436,000	15.0%	—	—	—	—
1970	63,401,000	17.1%	—	—	30,297,014	20.3%
1975	71,120,000	19.6%	—	—	33,595,728	19.5%
1980	80,776,000	22.7%	—	—	35,823,609	19.8%
1985	86,789,000	23.7%	—	—	37,979,984	20.8%
1990	93,347,000	24.6%	—	—	40,670,475	23.1%
1995	98,990,000	25.0%	4,244,000	45.4%	43,899,923	25.6%
2000	104,705,000	25.5%	4,363,000	46.5%	46,782,383	27.6%
2005	113,343,000	26.6%	4,441,000	46.3%	49,062,530	29.5%
2010	117,538,000	26.7%	4,660,000	48.6%	—	—

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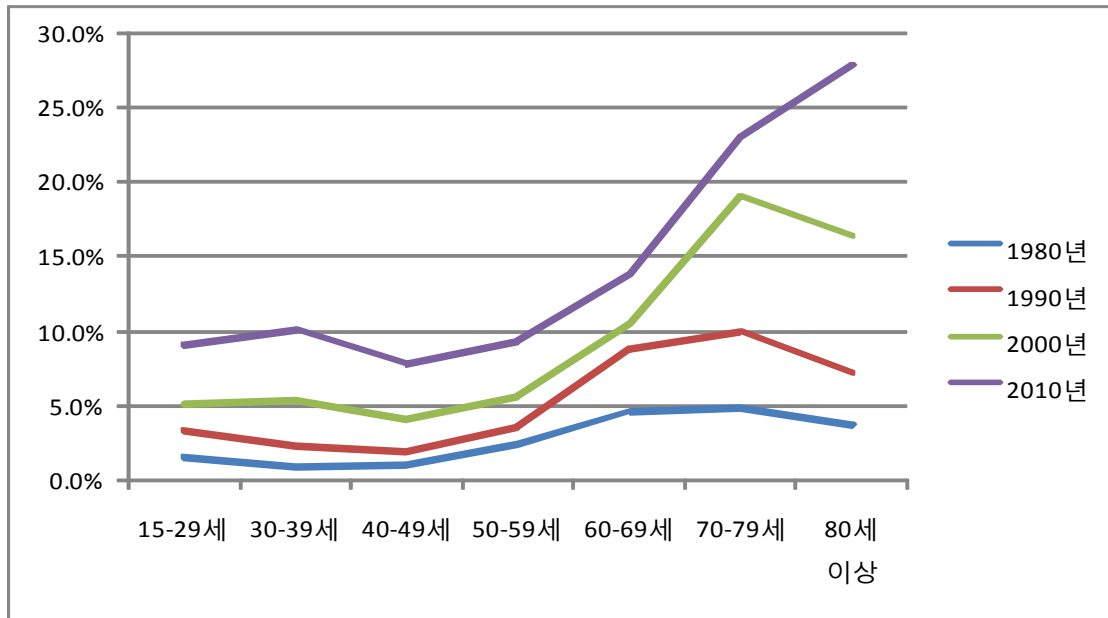
미국: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 and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2011 and earlier.

스웨덴: Statistics Sweden. Wwww.scb.se

일본: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www.e-stat.go.jp), 2005 Population Census>POPULATION OF JAPAN (Final Report of the 2005 Population Census)

다음의 <그림 1>은 15세 인구 대비 1인가구 가구원의 비율을 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80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로부터 확보된 원시자료(raw data)의 표본을 이용하였다(따라서 이후에 표본조사의 원시자료표본분석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인구의 연령층의 10세 단위로 구분(하한층은 15-29세 이하, 상한층은 8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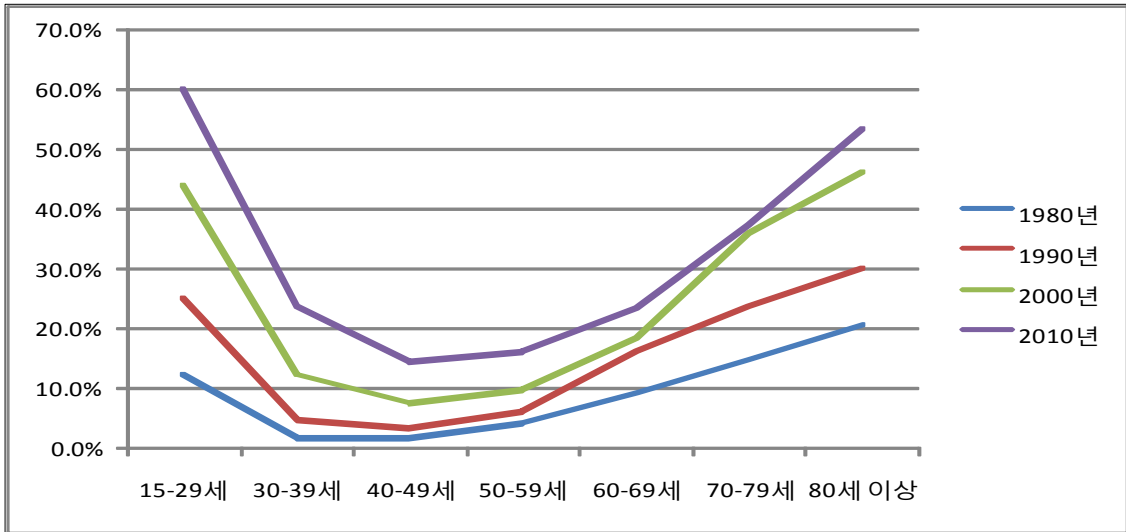
이상)하여 연령대별 인구대비 1인가구 가구원을 제시한 <그림 1>에 의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령대별 인구 대비 1인가구 가구원 비율변화: 1980-2010년

특이한 사항은 2000년 이전에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오면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8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년에도 건강한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과 함께, 세대간 동거가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 들어 30대 연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미혼자들이 혼자 사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1인가구 가구원 비율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하여왔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전체 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구의 특성은 15세 이상 가구주의 특성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2>는 15세 이상 가구주들의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에 관계없이, 지난 40년간 1인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29세 사이의 가구주의 경우 지난 40년간 1인가구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혼이 많은 29세 이하 연령층이 가구주일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이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또한 고령층의 인구가 가구주일 경우, 이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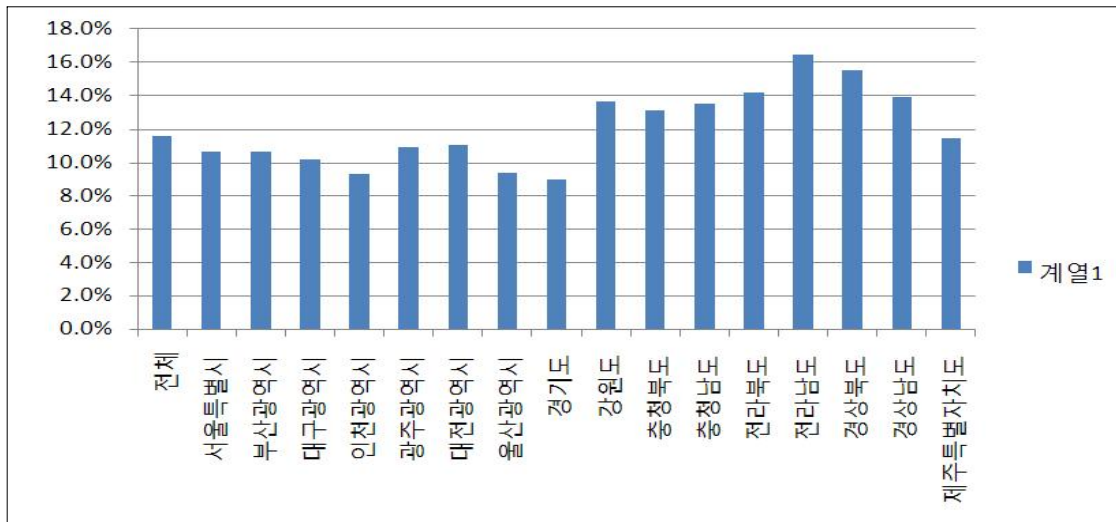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변화: 1980-2010년

II. 본론

1. 인구대비 1인가구 가구원 비율: 2010년

여기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에서 확보된 원시자료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1인가구를 형성하는 인구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3>은 행정시도별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15세 인구 중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11.6%에 이른다. 즉 1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1-12명이 혼자살고 있는 셈이다. 행정시도별로 보면 제법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그림 3> 행정시도별 인구(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가구원비율: 2010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1인 가주 거주자 비율이 각각 16.5%와 15.5%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에 남은 고령자들이 혼자 사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연령대의 미혼자나 이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현재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이 농촌지역에 남은 노년층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을 초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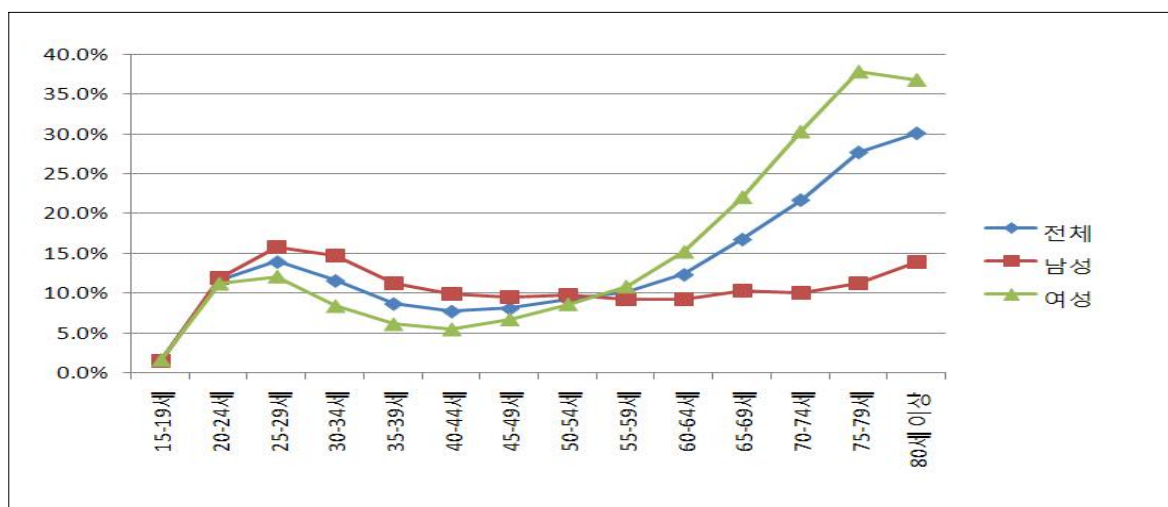
다음의 <표 3>은 15세 이상 인구중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을 연령대(5세간격), 거주지역, 성,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인 11.6%를 상회하는 집단은 25-29세, 그리고 60세 이상 층에서 발견된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1인가구 가구원비율이 25%를 상회해서 75세 이상 노인들 4명중 1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미혼들이 많은 집단으로 이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자인 노년층의 경우는 성장한 자녀들의 분가와 배우자와의 사별로 혼자 된 후,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연령대별 인구(1세이상) 대비 1인가구 가구원비율: 2010년

인구수		해당비율	인구수		해당비율
392,817		11.6%			
<전체>			거주지역		
연령 5세간격			동부		10.4%
15-19세	29,393	1.6%	읍면부		15.0%
20-24세	22,836	11.6%	<성>		
25-29세	32,005	13.9%	남성		10.4%
30-34세	33,913	11.6%	여성		12.6%
35-39세	38,485	8.7%	<결혼상태>		
40-44세	39,426	7.7%	미혼		16.8%
45-49세	39,670	8.1%	유배우		2.6%
50-54세	38,428	9.2%	사별		46.3%
55-59세	29,082	10.1%	이혼		36.2%
60-64세	23,917	12.4%	<교육수준별>		
65-69세	21,036	16.8%	초등이하		22.3%
70-74세	19,462	21.7%	중학교		10.0%
75-79세	13,516	27.7%	고등학교		8.1%
80세이상	11,648	30.1%	초대 이상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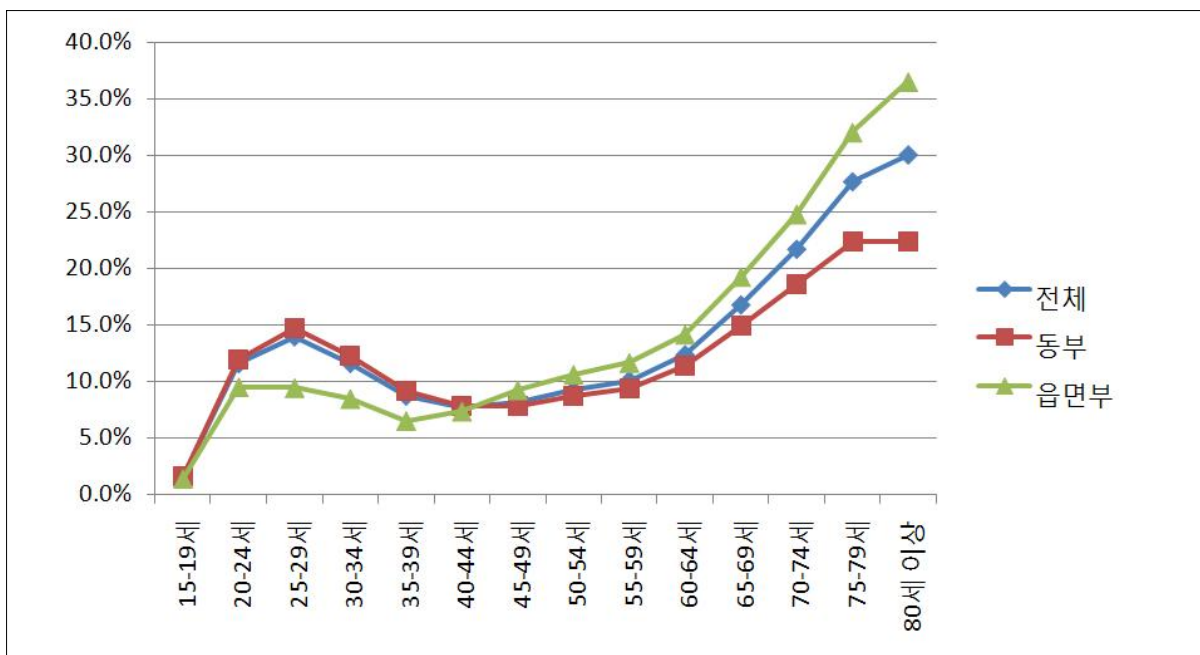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보다는 읍면부 지역의 인구중에서 1인가구 형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남은 노년층이 독거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들에게서 다소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고령층의 여성인구비율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 미혼 중에서 1인가구 가구원비율은 16.8%에 이른다. 미혼자들 중에서도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별자들 중에서는 1인가구 가구원비율이 46.3%로 가장 높은데, 이는 고령층의 1인가구 현황을 반영한다. 이혼자들 중에서도 1인가구 가구원비율은 36.2%로 상당 수준에 이른다. 이혼 후에 혼자 살아가는 비율이 그 만큼 높다는 의미를 가진다. 교육수준은 연령 분포를 대체로 반영한다.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 중에서 1인가구 가구원비율이 22.3%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고령층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그림 4>는 성에 따라 연령대(5세간격)별 인구 대비 1인가구 가구원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패턴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25-34세 층에서 1인가구 가구원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진 후, 이후에도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 이후 65세 이후 층에서 약간 더 남성들의 1인가구 가구원비율이 약간 더 높아진다. 따라서 남성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 약간 더 높기는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변동이 폭이 매우 크다. 젊은 층과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소의 변동은 있지만 남성들에 비해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낮다. 그러나 55세를 기점으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여성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년층을 넘어 노년층에 이르면서 여성들의 사별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이 혼자 사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림 4> 연령대 및 성별 인구(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가구원비율: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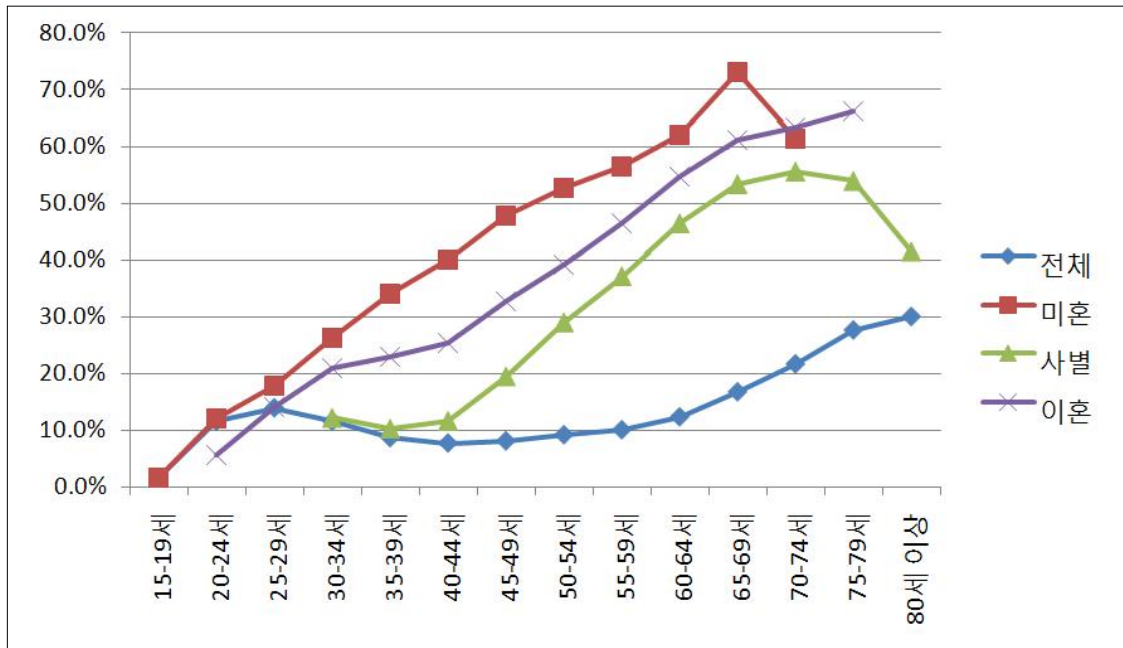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5>는 동부와 읍면부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 대비 1인가구 가구원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동부의 인구가 읍면부의 세 배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 패턴이 동부의 패턴을 닮아있다. 동부의 경우, 젊은 층 (특히 25-29세)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동부의 젊은 미혼남녀들이 읍면부의 미혼남녀들에 비해 더 많이 1인가구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년층이후에서는 읍면부의 1인가구 가구원비율이 동부의 그것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노년층에서는 그 차이가 현격해진다. 이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년층이 세대와 동거를 할 수 없고 또한 사별자가 많은 상황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림 5> 연령대 및 거주지역별 인구(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가구원비율: 2010년

다음의 <그림 6>은 결혼상태에 따라 연령대별 1인가구 가구원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유배우의 경우 대부분이 2인 이상 가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하지는 않는다. 미혼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1인가구 가구원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의 경우에서 혼자 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만 40세 이후에는 미혼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주어진 비율을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별과 이혼의 경우는 젊은 층에서 소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별의 경우는 이혼의 경우보다 혼자 사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60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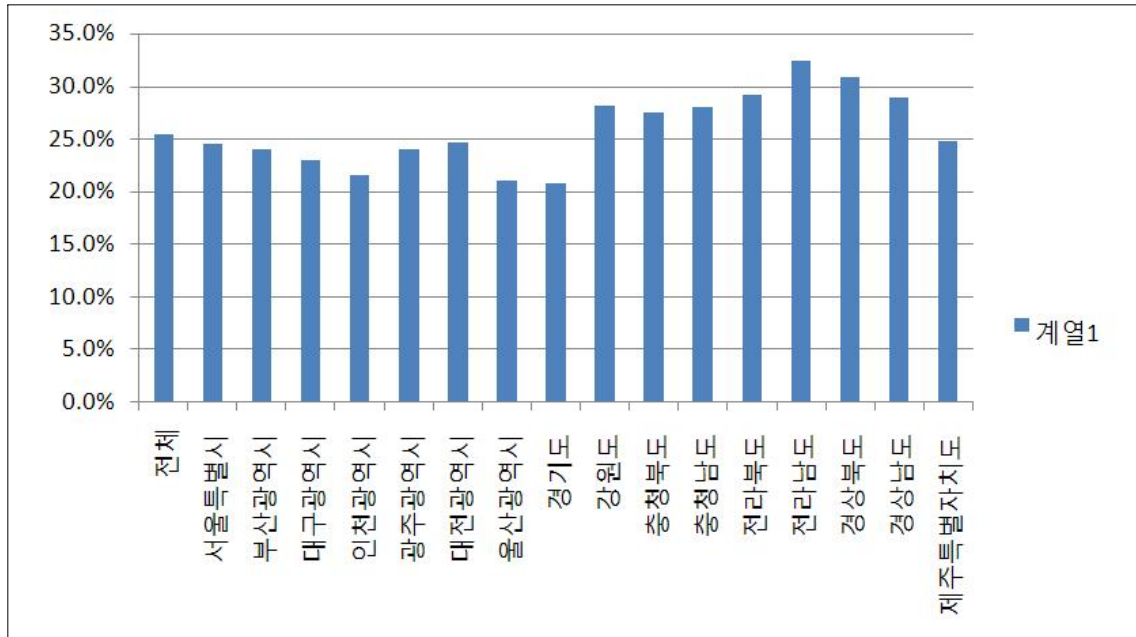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대 및 결혼상태별 인구(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가구원비율: 2010년

2. 가구대비 1인가구 비율: 2010년

앞에서는 인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가구대비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대비 1인가구 비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특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4>는 행정시도별 가구주 대비 1인가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비율 또한 인구 대비 1인가구 가구원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체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 가구주 비율은 평균 25.4%이다. 따라서 2010년 현재, 네 가구중 한 가구는 1인가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인 가구 비율은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라남도는 32.4%, 경상북도는 30.8%로 1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림 7> 행정시도별 가구주(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가구원 비율: 2010년

다음의 <표 4>는 15세 이상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구주의 연령대, 거주지역, 성,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젊은층(34세 이하)의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다 (이 중에서 19세 이하는 소수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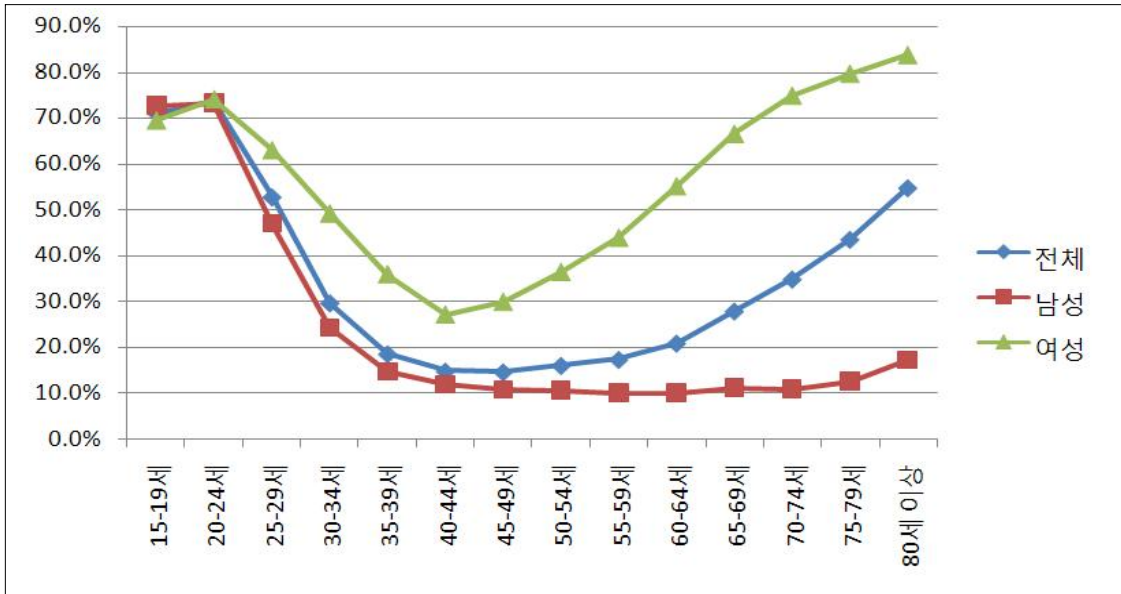
젊은층에서 독립가구를 형성하면 대부분은 1인가구임을 보여준다. 한편,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구주가 노년인 경우 1인가구를 형성할 비율이 높고, 이 비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

<표 4> 연령대별 가구주(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비율: 2010년

2010년 표본센서스					
		가구주	해당비율		
<연령 5세 간격>	전체	179,289	25.4%	<거주지역>	
	15-19세			거주지역	
	20-24세	653	71.1%	동부	128,871 23.5%
	25-29세	3,583	73.7%	<읍면부>	
	30-34세	8,458	52.8%	가구주 성	50,418 30.2%
	35-39세	13,243	29.7%	남성	131,756 14.9%
	40-44세	18,026	18.6%	<여성>	
	45-49세	20,609	14.8%	가구주 결혼상태	47,533 54.5%
	50-54세	21,968	14.6%	미혼	23,922 73.9%
	55-59세	22,025	16.0%	유배우	118,334 5.1%
	60-64세	16,873	17.4%	사별	24,458 65.8%
	65-69세	14,129	20.9%	<이혼>	
	70-74세	12,635	27.9%	가구주 교육수준	12,575 45.2%
	75-79세	12,106	34.9%	초등이하	37,696 41.8%
	80세 이상	8,590	43.6%	중학교	19,516 21.1%
		6,391	54.8%	고등학교	57,288 18.9%
				초대 이상	64,789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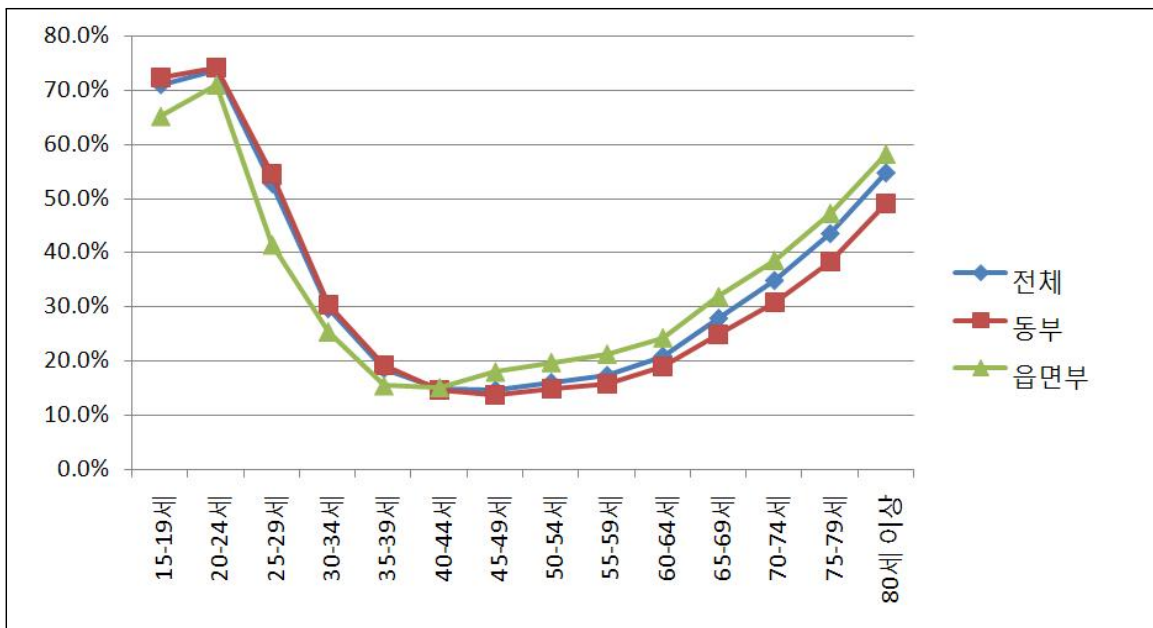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보면 역시 읍면부 지역의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남녀별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남성들이 가구주인 경우, 1인가구 가구주 비율은 14.9%에 그친다. 그러나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1인가구를 형성할 비율은 54.5%에 이른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 73.9%가 1인가구를 형성한다. 가구주가 사별자인 경우는 86.8%, 이혼자인 경우는 45.2%로 그 뒤를 따른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에게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41.8%로 나타난다. 이는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이 사별하고 혼자사는 경우를 반영한다.

다음의 <그림 8>은 가구주의 연령대와 성별 1인가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구대비 비율과는 달리, 연령층에 상관없이 여성가구주에게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U자 형태를 보이는데, 젊은층과 노년층에서 1인가구 형성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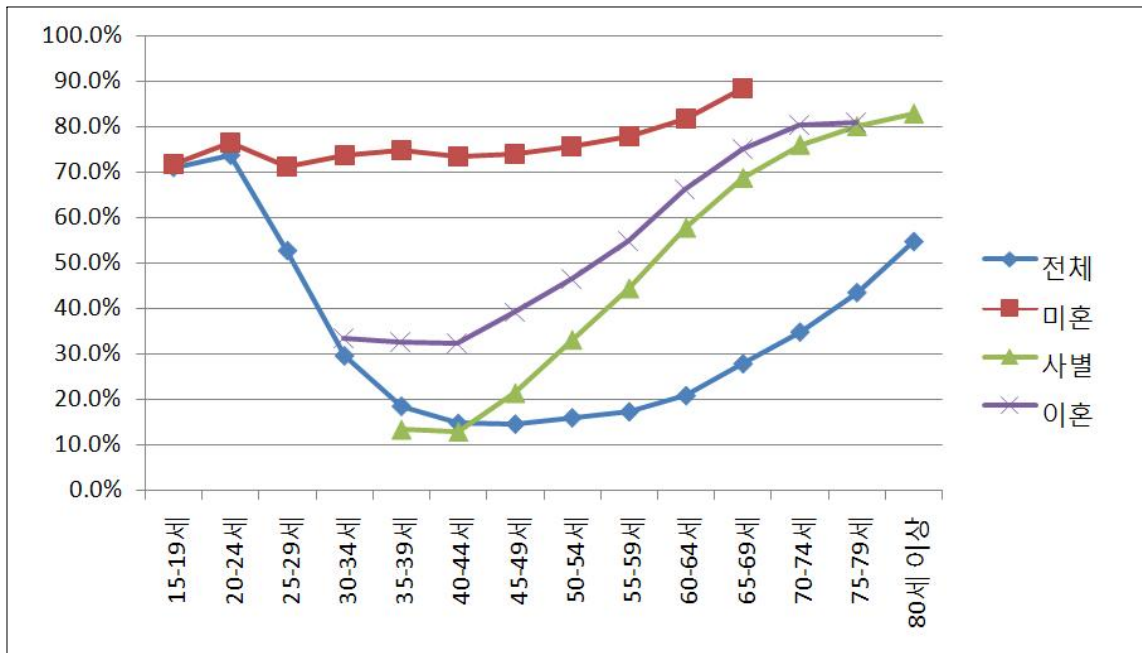
<그림 8> 연령대 및 성별 가구주(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가구주비율: 2010년

동부와 읍면부 지역에서 가구주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읍면부 지역의 가구주들은 동부 지역의 가구주들에 비해 젊은층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다소 낮고, 중년층 이후부터는 더 높게 나타난다. 동부 지역에서 가구주들이 젊은 연령대이면 이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또한 읍면부 지역에서 그와 반대로 가구주가 중년층 이상일 때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연령대 및 거주지역별 가구주(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비율: 2010년

다음의 <그림 10>은 가구주의 결혼상태와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가 미혼자인 경우, 대체로 1인가구를 형성할 비율이 높고 이는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구주가 사별자인 경우 연령증가와 함께 1인가구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한다. 가구주가 이혼자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사별이나 이혼한 가구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다가 이들이 분가 혹은 독립함으로써 혼자살게 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연령대 및 결혼상태별 가구주(15세이상) 대비 1인가구 비율: 2010년

3. 1인가구 가구원의 특성분포: 2010년

여기에서는 1인가구 가구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2인이상 가구원들(15세 이상)의 특성분포를 비교준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5>는 1인가구 가구원과 2인이상 가구 가구원의 행정시도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시도별 분포를 반영하듯이 1인가구 가구원과 2인이상 가구 가구원들이 대체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가구원들은 2인이상 가구 가구원들에 비해 특별시와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1인가구 가구원이 더 많이 나타난다.

<표 5> 1인가구 가구원과 2인 이상 가구 가구원(15세 이상)의 연령 분포: 2010년

	1인가구	2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인구(명)	45,529	347,288	경기도	15.4	20.5
합계	100.0	100.0	강원도	4.7	3.9
<행정 시도>			충청북도	4.2	3.6
서울특별시	17.4	19.0	충청남도	5.5	4.6
부산광역시	6.6	7.2	전라북도	5.8	4.6
대구광역시	4.0	4.6	전라남도	7.2	4.8
인천광역시	4.3	5.5	경상북도	8.7	6.2
광주광역시	2.6	2.7	경상남도	8.1	6.6
대전광역시	2.8	3.0	제주자치도	1.1	1.1
울산광역시	1.6	2.0	합계	100.0	100.0

다음의 <표 6>은 1인가구 가구원들의 성, 결혼상태, 거주지역, 연령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성별 분포를 보면, 2인 이상 가구 가구원들에 비해 1인가구 가구원들중에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한다. 결혼상태 분포에서는 1인가구의 특성이 좀 더 분명해진다.

1인가구 가구원들 중 미혼은 38.8%, 사별은 35.4%, 이혼은 12.5%으로 대부분이 미혼(젊은층)이거나 사별(노년층)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1인가구 가구원들에 비해 2인 이상 가구 가구원들 중에는 미혼이 25.2%를 차지할 뿐 대부분이 유배우 상태이다.

<표 6> 1인가구 가구원과 2인이상 가구 가구원(15세이상)의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분포: 2010년

인구(명)	1인가구		2인가구	
	45,529	347,288	1인가구	2인가구
<성>			거주지역	
남성	43.1	48.4	동부	66.6 75.1
여성	56.9	51.6	읍면부	33.4 24.9
<결혼상태>			<연령 집단분포>	
미혼	38.8	25.2	15-39세	32.6 40.8
유배우	13.3	66.5	40-64세	34.5 44.6
사별	35.4	5.4	65세이상	32.9 14.6
이혼	12.5	2.9	<연령 세간격>	
<교육수준>			10-29세	16.6 22.1
초등이하	34.6	15.8	30-39세	16.0 18.8
중학교	9.0	10.7	40-49세	13.8 21.0
고등학교	23.7	35.5	50-59세	14.2 17.6
초대 이상	32.6	37.9	60-69세	14.2 11.1
			70-79세	17.5 7.2
			80세이상	7.7 2.3

교육수준 분포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1인가구 가구원들의 34.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년층 여성의 단독가구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1인가구 가구원들의 32.6%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미혼의 젊은층을 대변한다. 거주지역 분포에서는 1인가구 가구원들이 읍면부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고령층의 단독가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령대 분포에서 눈에 띄는 것은 65세 이상 노년층이다.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 해당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2.9%에 이른다. 따라서 2인이상 가구 가구원들에 비해, 1인가구 가구원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연령대별로 1인가구 가구원들의 행정시도, 거주지역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연령층에 따라 1인가구가 집중된 지역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 15세-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해당 가구원 비중이 높다. 한편,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타나난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지역별 분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5세-39세 이하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 읍면부는 12.3%를 차지하지만, 65세 이상층에서는 읍면부가 58.7%를 차지한다.

<표 7> 1인가구 가구원과 2인이상 가구 가구원(15세이상)의 연령대별 행정시도 및 거주지역분포: 2010년

연령대	1인가구 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				2인이상 가구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			
	15-39세	40-64세	65세이상	전체	15-39세	40-64세	65세이상	전체
인구수	14,849	15,688	14,992	45,529	141,783	154,835	50,670	347,288
<행정시도>								
서울특별시	27.2%	16.2%	9.0%	17.4%	21.4%	18.5%	13.8%	19.0%
부산광역시	6.0%	7.9%	5.6%	6.6%	7.1%	7.6%	6.2%	7.2%
대구광역시	4.0%	4.6%	3.3%	4.0%	4.8%	4.7%	3.7%	4.6%
인천광역시	4.8%	5.1%	3.0%	4.3%	6.0%	5.5%	3.9%	5.5%
광주광역시	3.4%	2.5%	1.9%	2.6%	3.1%	2.7%	2.0%	2.7%
대전광역시	4.4%	2.6%	1.5%	2.8%	3.3%	2.9%	2.0%	3.0%
울산광역시	1.9%	1.9%	1.0%	1.6%	2.2%	2.2%	1.2%	2.0%
경기도	19.1%	17.3%	9.9%	15.4%	22.7%	20.2%	15.2%	20.5%
강원도	3.4%	5.2%	5.5%	4.7%	3.1%	4.0%	5.7%	3.9%
충청북도	3.7%	3.9%	4.9%	4.2%	3.3%	3.6%	4.8%	3.6%
충청남도	4.7%	5.0%	6.8%	5.5%	4.0%	4.4%	6.6%	4.6%
전라북도	3.2%	5.1%	9.2%	5.8%	3.7%	4.5%	7.4%	4.6%
전라남도	2.3%	6.1%	13.2%	7.2%	3.3%	4.8%	9.0%	4.8%
경상북도	6.1%	7.5%	12.7%	8.7%	4.7%	6.4%	9.9%	6.2%
경상남도	5.1%	7.9%	11.3%	8.1%	6.0%	6.8%	7.6%	6.6%
제주자치도	0.8%	1.2%	1.2%	1.1%	1.2%	1.1%	1.0%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동부	87.7%	70.7%	41.3%	66.6%	82.7%	75.2%	53.7%	75.1%
읍면부	12.3%	29.3%	58.7%	33.4%	17.3%	24.8%	46.3%	24.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대별로 1인가구 가구원들의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분포를 행정시도별, 거주지역 분포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연령층에 따라 1인가구 가구원들의 남녀분포가 크게 차이를 알 수 있다. 15세-39세 이하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는 여성이 41.7%를 차지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해당 비중이 80.9%에 이른다. 결혼상태분포 역시 연령층에 따라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15세-39세 이하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 미혼이 90.5%를, 65세 이상 1인가구 가구

원중에서는 사별이 85.7%를 차지한다. 중간연령층에서는 이혼이 28.6%를 차지함으로써 연령대별 결혼상태분포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분포에서도 노년층의 1인가구 가구원중 8.18%가 초등학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1인가구 가구원과 2인 이상 가구 가구원(15세 이상)의 연령대별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분포: 2010년

연령대	1인가구 거주자(15세 이상 인구중)				2인 이상 가구 거주자(15세 이상 인구중)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전체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전체
인구수	14,849	15,688	14,992	45,529	141,783	154,835	50,670	347,288
<성별>								
남성	58.3%	51.5%	19.1%	43.1%	48.5%	49.1%	46.3%	48.4%
여성	41.7%	48.5%	80.9%	56.9%	51.5%	50.9%	53.7%	5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상태별>								
미혼	90.5%	25.4%	1.7%	38.8%	58.4%	3.0%	0.3%	25.2%
유배우	5.8%	25.4%	8.1%	13.3%	40.1%	88.3%	73.8%	66.5%
사별	0.2%	20.6%	85.7%	35.4%	0.1%	3.7%	25.1%	5.4%
이혼	3.6%	28.6%	4.5%	12.5%	1.3%	5.0%	0.8%	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수준분포>								
초등이하	0.4%	21.9%	81.8%	34.6%	0.4%	14.2%	64.1%	15.8%
중학교	1.5%	17.5%	7.6%	9.0%	4.4%	15.4%	13.9%	10.7%
고등학교	26.4%	37.1%	7.1%	23.7%	36.8%	41.5%	13.7%	35.5%
초대 이상	71.6%	23.5%	3.5%	32.6%	58.4%	28.9%	8.2%	3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의 <표 9>는 1인가구 가구원들의 점유형태, 주택유형, 1년전 거주지변동유무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1인가구 가구원 전체 중에서 자가나 전세에 살고 있는 비중은 적고, 월세에 살고 있는 비중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유형태 분포 또한 연령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15세-39세 이하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는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 비중이 46.3%,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 비중이 7.4%로 나타난다. 따라서 젊은층의 1인가구는 대체로 월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65세 이상 1인가구 가구원들의 경우는 자가의 비중이 72.7%에 이른다. 이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이 자가에 머물면서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1인가구 가구원과 2인이상 가구 가구원(15세이상)의 연령대별 점유형태, 주택유형, 1년간 거주지변동유무분포: 2010년

연령대	1인가구 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				2인이상 가구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			
	15-39세	40-64세	65세이상	전체	15-39세	40-64세	65세이상	전체
인구수	14,849	15,688	14,992	45,529	141,783	154,835	50,670	347,288
<점유형태별>								
자가	11.7%	38.1%	72.7%	40.9%	56.7%	69.7%	83.2%	66.4%
전세	24.5%	16.5%	10.2%	17.0%	22.5%	15.0%	8.0%	17.0%
보증금있는월세	46.3%	27.1%	7.9%	27.1%	14.0%	10.1%	5.1%	10.9%
보증금없는월세	7.4%	7.7%	2.9%	6.1%	1.6%	1.5%	1.0%	1.5%
사글세	3.3%	2.3%	1.4%	2.3%	0.9%	0.7%	0.5%	0.7%
기타	6.7%	8.2%	4.9%	6.6%	4.3%	3.0%	2.3%	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유형별분포>								
단독주택	15.2%	39.6%	74.0%	49.3%	20.8%	32.8%	62.2%	32.6%
아파트	50.3%	41.9%	18.4%	33.4%	64.3%	54.3%	28.5%	54.3%
연립주택	3.1%	3.5%	1.8%	2.7%	3.6%	3.5%	2.7%	3.4%
다세대	13.3%	7.6%	3.5%	7.0%	9.2%	7.3%	4.6%	7.6%
기타	18.1%	7.5%	2.4%	7.5%	2.1%	2.2%	2.1%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전 거주지 변동>								
이동없음	77.3%	91.4%	98.4%	89.1%	92.7%	96.8%	97.9%	95.3%
1년간이동	22.7%	8.6%	1.6%	10.9%	7.3%	3.2%	2.1%	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유형의 분포 또한 연령대별 차이를 뚜렷하게 보인다. 15세-30세 이하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 아파트에 사는 비중은 50.3%이지만, 65세 이상 층에서 해당 비중은 18.4%에 그치고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거주지 이동이 있었던 비중 또한 연령대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동은 대체로 젊은 층에서만 발견된다. 15세-30세 이하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 지난 1년간 이동이 있었던 비중은 22.7%로, 2인이상 가구 가구원들의 7.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젊은층의 1인가구 가구원들은 대체로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동이 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년층에서는 농촌지역의 자가에 거주하면서 이동이 적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결론

1. 1인가구 가구원의 건강, 경제, 사회활동참여: 2010년

여기에서는 1인가구 가구원들의 건강, 경제, 사회활동참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2인 이상 가구 가구원들(15세 이상)의 현황을 비교준거로 제시한다. 다음의 <표 10>은 연령대별로 1인가구 가구원들의 활동상태제약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활동제약은 이동 제약, 시청각 및 언어장애, 장보기 등의 제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약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난다. 가구규모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1인가구 가구원들이 2인 이상 가구 가구원들에 비해 활동제약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각 연령층에서 동일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활동제약이 있는 1인가구 가구원의 비율이 46.0%, 2인 이상 가구 가구원의 비율이 33.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 1인가구 중에서 활동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이들의 복지수요를 의미한다.

<표 10> 1인가구 가구원과 2인 이상 가구 가구원(15세 이상)의 연령대별 활동제약비율: 2010년

	인구수	활동제약있음	시/청각언어장애	이동 제약	정신 질환	배우기 제약	옷입기 제약	장보기 제약	취업활동제약
	(15세 이상인구중 1인가구 거주자)								
전체	45,529	19.9%	4.8%	15.3%	1.8%	2.2%	1.5%	3.7%	1.2%
<연령 3집단>									
15-39세	14,849	2.1%	0.5%	0.6%	0.5%	0.3%	0.3%	0.4%	0.5%
40-64세	15,688	11.9%	2.3%	7.5%	2.0%	0.9%	0.8%	1.5%	1.4%
65세 이상	14,992	46.0%	11.6%	38.1%	2.7%	5.5%	3.3%	9.3%	1.8%
<연령 세 간격>									
15-29세	7,570	1.6%	0.3%	0.4%	0.3%	0.3%	0.3%	0.4%	0.5%
30-39세	7,279	2.7%	0.7%	0.9%	0.8%	0.3%	0.2%	0.4%	0.5%
40-49세	6,269	6.9%	1.3%	3.4%	1.8%	0.4%	0.5%	0.7%	1.1%
50-59세	6,465	12.1%	2.6%	7.3%	2.3%	1.2%	0.8%	1.5%	1.3%
60-69세	6,481	26.5%	4.7%	20.6%	2.0%	1.9%	1.4%	3.8%	2.2%
70-79세	7,964	45.3%	9.8%	37.7%	2.4%	4.8%	2.6%	8.2%	2.1%
80세 이상	3,501	63.4%	21.8%	53.2%	4.3%	10.3%	7.0%	16.8%	0.4%

다음의 <표 11>은 1인가구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종사상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1인가구 가구원들의 54.7%로 2인 이상 가구 가구원들의 해당 비율에 비해 다소 낮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1인가구 가구원에서 다소 높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연령증가와 함께 낮아진다. 흥미로운 점은 15세-39세 이하 1인가구 가구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2인 이상 가구 가구원들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는 1인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활동이 요구된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한편, 65세 이상 층에서는 1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활동이 저조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활동제약과도 연결된다.

<표 11> 1인가구 가구원과 2인 이상 가구 가구원(15세이상)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종사상지위비율: 2010년

	인구수	경제활동 하였음	인구수	임금 근로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1인가구 거주자(15세이상인구중)							
← 전체 3 연령 집단 →	45,529	54.7%	24,613	66.2%	25.8%	5.4%	2.6%
15-39세	14,849	71.4%	10,534	85.4%	9.3%	4.5%	0.8%
40-64세	15,688	67.1%	10,396	62.7%	27.3%	7.5%	2.4%
65세이상	14,992	25.0%	3,683	21.2%	68.9%	1.9%	8.0%
<연령 10세간격>							
15-29세	7,570	59.6%	4,477	91.1%	5.2%	3.0%	0.6%
30-39세	7,279	83.7%	6,057	81.2%	12.3%	5.5%	1.0%
40-49세	6,269	77.7%	4,822	68.9%	21.4%	8.1%	1.7%
50-59세	6,465	65.8%	4,193	61.0%	28.5%	7.8%	2.7%
60-69세	6,481	42.2%	2,683	39.2%	51.2%	3.7%	5.9%
70-79세	7,964	26.2%	2,054	16.3%	74.4%	1.5%	7.8%
80세이상	3,501	9.3%	327	11.3%	76.5%	1.5%	10.7%

다음의 <표 12>는 연령대별로 1인가구 가구원들의 사회활동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회활동은 종교분야단체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2인 이상 가구 가구원들에 비해 1인가구 가구원들의 사회활동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이러한 차이는 두드러진다. 1인가구 가구원들의 사회활동참여형태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5세-39세 이하 층에서는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문화분야단체 혹은 친목단체활동에 집중된다. 이러한 현상은 2인이상 가구 가구원의 해당 연령층과도 다소 대조적이다(이들은 친목단체와 종교분야단체에 집중된다). 한편, 1인가구 가구원의 노년층에서는 종교분야단체와 친목활동단체에 집중되며, 이는 2인이상 가구 가구원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표 12> 1인가구 가구원과 2인이상 가구 가구원(15세이상)의
연령대별 사회활동참여율: 2010

	인구수	사회활동 있음	사회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정치 분야	종교 분야	지역 단체	친목 단체	교육 단체	기타 활동
1인가구 거주자(15세이상인구중)											
전체	45,529	25.8%	2.2%	1.6%	4.9%	0.3%	8.7%	1.2%	11.6%	1.1%	0.3%
<연령3집단>											
15-39세	14,849	25.9%	2.3%	2.7%	7.5%	0.3%	5.1%	0.4%	11.0%	2.1%	0.2%
40-64세	15,688	31.0%	3.1%	2.1%	5.4%	0.3%	9.9%	1.7%	16.5%	1.1%	0.2%
65세이상	14,992	20.3%	1.0%	0.1%	1.8%	0.1%	11.1%	1.6%	7.1%	0.2%	0.3%
<연령10세간격>											
15-29세	7,570	23.0%	2.2%	2.4%	6.9%	0.2%	4.6%	0.2%	8.7%	2.0%	0.2%
30-39세	7,279	28.9%	2.5%	3.0%	8.1%	0.5%	5.5%	0.6%	13.4%	2.1%	0.2%
40-49세	6,269	30.7%	3.0%	3.0%	7.1%	0.4%	7.2%	1.2%	16.5%	1.4%	0.2%
50-59세	6,465	31.6%	3.5%	1.9%	4.8%	0.4%	10.9%	2.1%	17.4%	1.0%	0.2%
60-69세	6,481	28.1%	2.2%	0.5%	3.1%	0.1%	12.7%	2.0%	13.1%	0.4%	0.3%
70-79세	7,964	20.7%	1.0%	0.1%	1.8%	0.1%	11.3%	1.6%	7.2%	0.2%	0.4%
80세이상	3,501	13.2%	0.2%	0.1%	0.8%	0.0%	9.5%	1.0%	2.2%	0.1%	0.4%
<2인이상 가구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											
전체	347,288	33.3%	2.9%	2.0%	5.4%	0.3%	10.3%	2.1%	18.2%	2.1%	0.2%
<연령3집단>											
15-39세	141,783	26.9%	2.1%	1.9%	5.4%	0.2%	8.1%	0.8%	12.2%	2.4%	0.3%
40-64세	154,835	41.5%	4.1%	2.7%	6.4%	0.5%	12.3%	3.3%	24.9%	2.4%	0.1%
65세이상	50,670	26.6%	1.5%	0.3%	2.3%	0.1%	10.7%	2.3%	14.5%	0.4%	0.2%
<연령10세간격>											
15-29세	76,664	21.1%	1.8%	1.1%	4.3%	0.1%	7.4%	0.2%	8.3%	1.3%	0.4%
30-39세	65,119	33.7%	2.3%	2.8%	6.7%	0.3%	9.0%	1.5%	16.7%	3.8%	0.1%
40-49세	72,827	41.5%	4.3%	3.4%	7.4%	0.5%	11.2%	3.1%	23.4%	3.6%	0.1%
50-59세	61,045	42.5%	4.1%	2.4%	5.8%	0.5%	13.2%	3.6%	26.8%	1.5%	0.2%
60-69세	38,472	36.0%	2.6%	0.7%	3.8%	0.3%	12.8%	2.7%	22.7%	0.6%	0.1%
70-79세	25,014	25.9%	1.3%	0.3%	2.0%	0.1%	10.3%	2.4%	13.7%	0.3%	0.2%
80세이상	8,147	15.0%	0.6%	0.1%	0.8%	0.1%	8.6%	1.4%	4.9%	0.2%	0.2%

제 6주제 : 사회변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가구구조별 유형별 특성과 가족관계 연구-

황 명 진(고려대학교)

I.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인해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사회적 도전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있다. 선진국형 복지국가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주로 복지체계에 있어서 급여위주에서 서비스위주로, 경쟁하는 사회적 욕구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 예산 편성과 정책 서비스프로개발에 있어서의 중앙 집권형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지방분권화로, 그리고 평가과 환류체계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정부주도적인 방법에서 산·학이 연계가 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형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는 지속된 안정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괄목할 만한 향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성큼 다가온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서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와 기준도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성의 다양화로 일컫어지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와 직업형태 변화, 그리고 복지예산의 지출증가로 인해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미래형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우리 사회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양성 평등, 일가족 양립, 사교육비와 교육 불평등, 노인복지 급여 지출 팽창과 세대간의 갈등, 장년고용프로그램과 청년실업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 일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 가족과 가구구성의 변화로 인한 인구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다(김정석, 2011; 김석호, 황명진 2011).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구조나 가구구성의 변화, 그리고 가구구조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증가는 사실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가구구성의 변화를 과거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1980년 전체가구의 15.7%를 차지하던 여성가구의

비중은 2010년 현재 22.2%까지 증가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구구성의 세대 차원을 고려하면 1세대로만 구성된 부부가구가 1980년 6.3%에서 2010년 15.2%까지 8.9%p 증가했다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중이 같은 기간 53.0%에서 41.3%로 감소했다. 또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고려하면 1인 가구의 증가가 1980년 4.8%에서 2010년 현재 23.9%로 단독가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1). 이 같은 가구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느날 갑자기 다가온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의 문제가 최근에서야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실제 변화의 징조는 오래되고 변화의 양상은 매우 지속적이다.

1인 가구의 증가양상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만혼의 증가,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혼 및 별거,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기러기 가족의 증가, 노동시장 경쟁구조에 기인한 대도시 중심의 취업형 단독가구,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변미리, 2008). 전반적으로 가구구성의 다양화는 급변하는 환경 및 욕구에 대한 물질적·정서적 가족자원의 획득이나 대응양식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족생계를 위협하는 저소득과 빈곤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들 가구의 다양한 형성요인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초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복지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1인 가구, 그 중 노인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경제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유형별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노인1세대)가구의 규모와 인구사회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단독가구는 아니지만 사회전반적인 가구구조의 변화 속에 부양과 지원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구와 조손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주로 2010년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가능하면 이전 센서스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인구센서스나 기타 사회조사는 조사단위인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가구 내 구성원이 1인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본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 I절 개요에 이려 제 II절 노인인구 중 단독가구(1인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변화 요인을

노인 1세대가구(2인 가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제Ⅲ절에서는 조손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여 요약·정리하고 제Ⅳ절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가구주의 성별변수 즉, 남성가장과 여성가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제Ⅴ절에서는 결론부분으로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구규모의 축소 추세와 특성에 따른 인구 및 사회복지학적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과 부양문제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인구 집단에 비하여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및 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면서도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인구집단이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한 반면, 가구의 규모는 급속도로 축소되어 1인가구가 증가하였고 자녀세대에 의한 노인부양이 기피되는 추세 속에서 노인단독가구나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0)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000년 약 54만 명에서 2010년에는 102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에서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10년 6%로 증가되었는데, 이 비율은 2020년 8.0%, 2030년 11.8%로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통계청, 2010).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는 407만4천가구이며, 전체 일반가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1인가구는 106만6천가구로 전체 1인가구(414만2천가구)의 25.7%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복·송노원(2010)의 연구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경우 74.5%가 노후준비를 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노인 61%에 비해 약 13%포인트나 높았다. 이로 인해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독거노인이 22.9%로 전체노인 10.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노인의 비율도 독거노인(61.8%)이 전체노인(48.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전체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경우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황명진, 2012).

< 표 1 > 고령자수 및 가구원수별 고령자 거주 가구(2010)

(단위 : 천가구, %)

가구원수 \ 고령자수	고령자가구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 체	4,074 (100.0)	1,066 (100.0)	1,456 (100.0)	618 (100.0)	383 (100.0)	550 (100.0)
1명	2,885 (70.8)	1,066 (100.0)	710 (48.8)	402 (64.9)	296 (77.2)	411 (74.8)
2명	1,167 (28.7)	-	745 (51.2)	204 (33.1)	83 (21.7)	134 (24.5)
3명 이상	21 (0.5)	-	-	12 (2.0)	4 (1.1)	4 (0.7)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표 2>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30대에서는 남성의 1인가구 비율이 59%에서 65세 이상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20%이며,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은 2-30대에서 40%에서 65세 이상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보면, 2-30대는 미혼인 경우가 9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분가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4-50대 또한 미혼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연령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또한 4-50대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1인가구가 높게 나타내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혼자사는 경우가 많고, 기러기 가족과 맞벌이로 인한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다. 50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가 3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에서는 사별로 인한 단독가구가 83%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에서는 20대에는 대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20대에는 대졸의 비율이 43%인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중졸이하가 86%로 65세이상 에서는 중졸이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대에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경남, 경북, 전남에 분포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농촌형 독거노인의 형태를 볼 수 있다.

< 표 2 >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전체
연령		1,585,850 37.95	636,965 15.24	605,997 14.50	261,570 6.26	1,088,568 26.05	4,178,950 100.00
성별	남성	937,596 59.12	384,552 60.37	298,143 49.20	95,165 36.38	220,601 20.27	1,936,057 46.33
	여성	648,254 40.88	252,413 39.63	307,854 50.80	166,405 63.62	867,967 79.73	2,242,893 53.67
혼인상태	미혼	1,434,294 90.44	282,812 44.40	101,130 16.69	17,368 6.64	20,592 1.89	1,856,196 44.42
	배우자유	90,251 5.69	146,406 22.98	168,325 27.78	53,323 20.39	89,361 8.21	547,666 13.10
	사별	2,347 0.15	22,155 3.48	125,164 20.65	133,056 50.87	912,446 83.82	1,195,168 28.56
	이혼	58,958 3.72	185,592 29.14	211,369 34.88	57,823 22.11	66,169 6.08	579,991 13.88
교육수준	중졸이하	28,973 1.83	101,093 15.87	279,119 46.06	177,210 67.75	943,517 86.68	1,529,912 36.61
	고졸	418,295 26.38	310,131 48.69	214,129 35.34	58,382 22.32	96,198 8.84	1,097,135 26.25
	2년제 대졸	340,011 21.44	67,806 10.65	32,048 5.29	7,064 2.70	12,728 1.17	459,657 11.00
	4년제 대졸	689,393 43.47	121,728 19.11	59,115 9.76	15,092 5.77	30,658 2.82	915,986 21.92
	석사이상	109,178 6.89	36,207 5.68	21,577 3.56	3,822 1.47	5,467 0.50	176,251 4.22
지역	서울	436,201 27.51	126,955 19.33	103,793 17.13	45,979 17.58	143,082 13.14	856,010 20.48
	부산	83,328 5.25	43,289 6.80	54,123 8.93	25,395 9.71	81,436 7.48	287,571 6.88
	대구	65,824 4.15	32,341 5.08	23,098 5.30	13,971 5.34	49,743 4.57	193,977 4.64
	인천	73,824 4.66	38,237 6.00	30,051 4.96	11,401 4.36	39,350 3.61	192,863 4.61
	광주	52,159 3.29	17,178 2.70	16,018 2.64	7,274 2.78	28,306 2.60	120,935 2.89
	대전	63,317 3.99	19,230 3.02	18,369 3.03	6,849 2.62	22,524 2.07	130,289 3.12
	울산	27,783 1.75	14,842 2.33	14,078 2.32	4,873 1.86	13,948 1.28	75,524 1.81
	경기	338,336 21.33	148,066 23.25	110,637 18.26	42,627 16.30	150,137 13.79	789,803 18.90
	강원	47,628 3.00	21,426 3.36	27,181 4.49	10,868 4.15	48,129 4.42	155,232 3.71
	충북	54,605 3.44	19,934 3.13	21,896 3.61	7,953 3.04	43,484 3.99	147,872 3.54
	충남	75,131 4.74	26,001 4.08	28,667 4.73	12,375 4.73	60,596 5.98	207,270 4.96
	전북	47,044 2.97	21,376 3.36	25,911 4.28	13,536 5.17	71,844 6.60	179,711 4.30
	전남	33,518 2.11	21,197 3.33	27,181 4.49	15,184 5.80	101,543 9.33	198,623 4.75
	경북	92,643 5.84	35,816 5.62	41,545 6.86	18,889 7.22	112,010 10.29	300,903 7.20
	경남	81,914 5.17	42,847 6.73	46,559 7.68	21,392 8.18	102,553 9.42	295,265 7.06
제주	12,595 0.79	8,230 1.29	7,881 1.30	3,004 1.15	15,383 4.41	47,093 1.13	

< 표 3 > 1인가구 및 독거노인가구의 경제 및 사회활동상 특성

		2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전체
경제활동	주로근로	1,079,605 68.08	461,867 75.51	363,778 60.03	106,179 40.59	192,577 17.69	2,204,006 52.74
	부로근로	48,703 3.07	13,128 2.06	14,199 2.34	6,670 2.55	19,494 1.79	102,194 2.45
	잠시엄	35,628 2.25	17,483 2.74	13,463 2.22	3,622 1.38	7,664 0.70	77,860 1.86
	안함	421,914 26.60	144,487 22.68	214,548 25.40	145,099 55.47	868,833 79.81	1,794,881 42.95
종사상 지위	임근근로자	1,006,085 86.44	351,986 71.47	251,746 64.31	64,033 54.98	63,749 29.01	1,737,599 72.88
	자영업 (고용원무)	99,604 8.56	94,623 19.21	100,983 25.80	42,522 36.51	133,682 60.84	471,414 19.77
	자영업 (고용원유)	50,219 4.31	39,899 8.10	30,971 7.91	6,154 5.28	7,085 3.22	134,328 5.63
	무급가족 종사자	8,028 0.69	5,970 1.21	7,740 1.98	3,762 3.23	15,219 6.93	40,719 1.71
직업	관리자	21,653 1.86	15,406 3.13	9,290 2.37	1,612 1.38	1,166 0.53	49,127 2.06
	전문가	351,111 30.17	74,206 15.07	41,026 10.48	6,942 5.96	6,644 3.02	479,929 20.13
	사무	240,860 20.69	63,382 12.87	28,500 7.28	4,266 3.66	3,737 1.70	340,745 14.29
	서비스	122,404 10.52	65,907 13.38	62,846 16.06	14,770 12.68	11,317 5.15	277,244 11.63
	판매	136,829 11.76	59,654 12.11	39,524 10.10	10,780 9.26	15,261 6.95	262,048 10.99
	농림어업	5,936 0.51	12,544 2.55	29,736 7.60	23,470 20.15	122,063 55.55	193,749 8.13
	기능원	87,800 7.54	60,697 12.32	43,693 11.16	8,480 7.28	5,137 2.34	205,807 8.63
	기계 조립/조작	133,583 11.48	73,853 15.00	51,142 13.07	9,249 7.94	5,518 2.51	273,345 11.47
	단순노무	59,146 5.08	65,750 13.35	85,281 21.79	36,887 31.67	48,892 22.25	295,956 12.41
	군인	4,614 0.40	1,079 0.22	402 0.10	15 0.01	0 0.00	6,110 0.26
사회활동	사회단체	34,345 2.17	19,441 3.05	20,252 3.34	7,193 2.75	12,487 1.15	93,718 2.24
	경제단체	44,065 2.78	20,719 3.25	12,039 1.99	1,165 0.45	1,352 0.12	79,340 1.90
	문화단체	122,567 7.73	41,098 6.45	30,083 4.96	9,931 3.80	22,963 2.11	226,642 5.42
	정치단체	4,522 0.29	3,006 0.47	1,945 0.32	529 0.20	952 0.09	10,954 0.26
	종교단체	79,418 5.01	46,283 7.27	65,859 10.38	34,904 13.34	136,056 12.50	362,520 8.67
	지역단체	5,621 0.35	6,726 1.06	9,631 1.59	4,458 1.70	15,662 1.44	42,098 1.01
	친목단체	178,483 11.25	98,287 15.43	99,582 16.43	37,505 14.34	81,435 7.48	495,292 11.85
	교육단체	33,628 2.12	9,525 1.50	6,293 1.04	1,555 0.59	2,057 0.19	53,058 1.27
	기타단체	3,051 0.19	1,296 0.20	1,005 0.17	539 0.21	3,881 0.36	9,772 0.23
	없음	1,170,760 73.83	447,473 70.25	418,242 69.02	183,681 70.22	849,958 78.08	3,070,114 73.47

<표 3>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서는 20대는 주로 근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나, 65세 이상에서는 79%이상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과 경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을 하는 65세 이상의 지위는 자영업이 높았고, 직업 또한 단순노무, 농업 어업의 단순노무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활동에 있어서 20대는 문화 단체와 친목단체를 통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반면에, 65세 이상은 종교단체가 12%로 종교문화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 >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상 특성

		60~64 세	65 세이상	전체			60~64 세	65 세이상	전체
경제 활동	주로 근무	351,062 46.03	571,598 31.45	922,660 35.76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147,115 37.21	145,711 22.22	292,826 27.86
	부로 근무	34,942 4.58	69,137 3.80	104,079 4.03		자영업 (고용원무)	131,701 33.31	294,289 44.89	425,990 40.53
	잠시 취업	9,357 1.23	14,886 0.82	24,243 0.93		자영업 (고용원유)	26,613 6.73	30,018 4.58	56,631 5.39
	안 합	367,345 48.16	1,161,964 63.93	1,529,309 59.27		무급가족 종사자	89,932 22.75	185,603 28.31	275,535 26.22
직업	관리 자	7,809 1.98	8,415 1.28	16,224 1.54	사회 활동	사회 단체	25,428 3.33	34,834 1.92	60,262 2.36
	전문 가	25,287 6.40	235,561 35.93	260,848 24.82		경제 단체	6,188 0.81	7,611 0.42	13,799 0.54
	사무	17,295 4.37	16,413 2.50	33,708 3.21		문화 단체	39,641 5.20	58,362 3.21	98,003 3.83
	서비 스	26,720 6.76	17,866 2.73	44,586 4.24		정치 단체	2,516 0.33	4,056 0.22	6,572 0.26
	판매	38,530 9.75	40,434 6.17	78,964 7.51		종교 단체	112,330 14.73	220,878 12.15	333,208 13.02
	농림 어업	135,435 34.26	400,582 61.10	536,017 51.00		지역 단체	23,311 3.06	42,640 2.35	65,951 2.58
	기능 원	25,200 6.37	15,023 2.29	40,223 3.83		친목 단체	198,933 26.08	313,987 17.27	512,920 20.05
	기계 조립/조 작	41,226 10.43	28,203 4.30	69,429 6.61		교육 단체	6,598 0.87	8,630 1.47	15,228 0.60
	단순 노무	77,793 19.67	105,113 16.03	182,906 17.40		기타 단체	1,075 0.14	4,486 0.25	5,561 0.22
	군인	66 0.02	11 0.00	77 0.01		없음	449,871 58.98	1,260,042 69.33	1,709,913 66.84

<표 4>에서 60-64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48%로 주로 근무를 하는 비율 46%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65세 이상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59%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근무를 하는 비율은 35%로 일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서 60-64세는 임금근로자가 37%를 차지하였던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자영업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가 28%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도 65세 이상의 직업은 61%가 농림어업이었고, 단순노무가 16%로 대부분 지속적인 임금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노무직을 통한 일시적인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 > 준령자 부부가구, 고령자 부부가구 특성

		60~64세	65세 이상	전체			60~64세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생활비 원천	본인 일/직업	443,530 58.15	650,984 35.82	1,094,514 42.78	활동 제한	시청각 /언어	18,600 2.44	135,933 7.48	154,533 6.04
	예적금	113,835 14.93	274,431 15.10	388,266 15.18		이동	71,570 9.38	428,597 23.58	500,167 19.55
	공적 연금	155,595 20.40	343,746 18.91	499,341 19.52		정신적	7,855 1.03	45,255 2.49	53,110 2.08
	개인 연금	16,701 6.12	90,049 4.95	106,750 4.17		학습/가역 /집중	8,736 1.15	63,317 3.48	72,053 2.82
	부동산	48,430 6.35	141,373 7.78	189,803 7.42		목욕 /식사	6,851 0.90	54,356 2.99	61,207 2.39
	주식/채권 /펀드	3,955 0.52	6,833 0.38	10,788 0.42		시장/병원 가기	12,733 1.67	97,036 5.34	109,769 4.29
	동거 자녀	0 0.00	0 0.00	0 0.00		경제 활동	8,118 1.06	32,106 1.77	40,224 1.57
	비동거 자녀	135,436 17.76	656,499 36.12	791,935 30.96		없음	664,645 87.14	1,271,834 69.97	1,936,479 75.69
	친인척	2,997 0.39	13,841 0.76	16,838 0.66					
	국가 /지자체	33,094 4.34	304,951 16.78	338,045 13.21					
	이웃 /단체	2,629 0.34	8,007 0.44	10,636 0.42					
	기타	6,811 0.89	17,510 0.96	24,321 0.95					

<표 5>에서 준령자의 활동제한은 이동이 9%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이 되면서 23%로 크게 증가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에 활동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청각/언어가 7%, 시장/병원가기 5% 순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준령자 부부가구, 고령자 부부가구의 생활비 원천

		60-64세	65세이상	전체
고령자 생활비 원천	직업소득	443,530 58.15	650,984 35.82	1,094,514 42.78
	자산소득	182,920 27.92	512,686 28.21	695,607 27.19
	공적연금	155,595 20.40	343,746 18.91	499,341 19.52
	사적지원	138,433 18.15	670,340 36.88	808,773 31.62
	공적지원	35,723 4.68	312,958 17.22	348,681 13.63

<표 6>에서 준령자의 경우, 생활비 원천은 직업소득을 통한 생활비가 58%, 자산소득 27%, 공적연금 순이었으나, 고령자의 경우 자녀나 친인척을 통한 생활비가 36%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준령자와 고령자 부부가구의 생활비 원천은 직업소득 48%, 사적지원 31%, 자산소득 27%, 공적연금 19%, 공적지원 13% 순이었다.

2. 조손가구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1995년 35,194세대, 2000년 45,225세대, 2005년 58,101세대이었고 2010년에는 12,1845 가구에 이르렀다. 이를 전체세대 수와 비교할 때, 그 수는 1000가구 중 3개 내지 4개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은 1995년에 비하여 절대수가 약 1만 가구나 증가하였고, 2005년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무려 2만 가구 이상이 증가하였으면 2010년에는 그전 기준년도에 비해 두배가까이 늘어났다.

그 증가율을 보면, 2000년은 5년 전과 비교하여 28.5%, 2005년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무려 65.1%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가구 증가율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전체가구 증가율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전과 비교하면 10.4%,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전과 비교하면 22.6%였다. 조손가구의 증가율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조손가구가 전체가구보다 3배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1996; 2001; 2006; 2011).

< 표 7 > 아동인원수별, 세대구성별 아동보육상태(2010)

(단위 : 천명, %)

		아동인원	부모	조부모	기타가족등	가사도우미등	유치원	어린이집이방	기타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학원	혼자아동끼리	기타
아동인원수	계	6,264 (100.0)	3,009 (48.0)	637 (10.2)	82 (1.3)	64 (1.0)	537 (8.6)	1,058 (16.9)	40 (0.6)	535 (8.5)	1,655 (26.4)	277 (4.4)	7 (0.1)
	1명	2,251 (100.0)	1,027 (45.6)	279 (12.4)	38 (1.7)	24 (1.1)	129 (5.7)	305 (13.6)	14 (0.6)	196 (8.7)	635 (28.2)	123 (5.5)	3 (0.1)
	2명	3,342 (100.0)	1,637 (49.0)	308 (9.2)	35 (1.1)	35 (1.0)	344 (10.3)	617 (18.5)	20 (0.6)	269 (8.0)	868 (26.0)	131 (3.9)	3 (0.1)
	3명이상	672 (100.0)	345 (51.4)	49 (7.3)	9 (1.4)	5 (0.8)	64 (9.6)	135 (20.1)	6 (0.9)	71 (10.5)	152 (22.6)	23 (3.5)	1 (0.1)
세대구성	친족가구	6,262 (100.0)	3,009 (48.1)	637 (10.2)	82 (1.3)	64 (1.0)	537 (8.6)	1,057 (16.9)	40 (0.6)	534 (8.5)	1,654 (26.4)	277 (4.4)	7 (0.1)
	1세대	9 (100.0)	- (0.1)	0 (0.1)	1 (13.8)	1 (5.5)	0 (5.3)	2 (18.7)	0 (2.7)	3 (33.5)	3 (29.0)	1 (9.7)	0 (0.6)
	2세대	5,350 (100.0)	2,682 (50.1)	359 (6.7)	68 (1.3)	58 (1.1)	461 (8.6)	904 (16.9)	35 (0.6)	454 (8.5)	1,444 (27.0)	255 (4.8)	6 (0.1)
	3세대이상	903 (100.0)	327 (36.3)	278 (30.7)	13 (1.4)	5 (0.5)	75 (8.4)	151 (16.8)	5 (0.6)	78 (8.6)	207 (23.0)	21 (2.3)	1 (0.1)
	비친족가구	2 (100.0)	- (-)	- (-)	0 (5.6)	0 (8.0)	0 (3.0)	0 (19.9)	0 (11.7)	1 (30.8)	1 (24.4)	0 (8.0)	0 (1.7)

* 아동보육상태는 주된 것 2개까지 선택가능 하도록 조사되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 표 8 > 조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	%			수	%
연령	40~49세	647	0.52	지역	서울	38,250	17.53
	50~59세	9,768	7.91		부산	15,519	7.11
	60~64세	15,519	12.57		대구	12,141	5.56
	65세 이상	97,495	78.99		인천	11,249	5.16
성별	남성	58,597	47.47		광주	6,246	2.86
	여성	64,832	52.53		대구	5,616	2.57
교육수준	중졸이하	94,962	76.94		울산	3,304	1.51
	고졸	20,059	16.25		경기	41,282	18.92
	2년제대졸	1,972	1.60		강원	9,921	4.55
	4년제대졸	5,198	4.21		충북	7,787	3.57
	석사이상	1,238	1.01		충남	11,332	5.19
					전북	11,696	5.36
			전남		12,690	5.82	
			경북		14,354	6.58	
			경남	13,842	6.34		
			제주	2,946	1.35		

<표 8>를 살펴보면, 조손가구의 연령은 65세 이상이 97,495명으로 전체 연령의 78%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나 여성이 52%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76%로 가장 많았고, 고졸 16%, 4년제대졸 4%, 2년제대졸 1%, 석사이상 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지역이 각각 17%, 18%를 나타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북, 경남, 전남에서 높게 나타나 농촌형 조손가족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손가구의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1995년 3,875가구였던 조손 가정이 2005년에는 7,207가구로 3,332가구로, 2010년에는 %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울산 지역의 경우 2000년 491가구에서 2005년 699가구로 208가구가 증가해 약 30%가량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995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조손 가정이 28%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6; 2011년).

조손가구의 특성

2000년대 들어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맞벌이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시간제로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증가, 그리고 조손가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관련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 양육관련특성 중 손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양육자는 '조부'가 5.3%이고 '조모'가 64.3%로 조모가 월등히 많아, 여성은 노인이 되어서도 관습적으로 가사 내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자녀양육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약 9시간으로, 평균 60대 중반의노인에게는 과도한 노동 시간이었다. 그리고 4명 중 1명의 조부모만이 손자녀 양육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으로 받고 있었고, 대가를 받고 있는 조부모만의 평균 보상비용은 월 37만 3천원 정도였다. 둘째, 조부모의 소득관련특성 중 취업자는 약 30%였는데, 그 중 단 2명(3.4%)만이 전문직에 종사하였고 약 80%는 농업 및 단순노무직이었다. 또한 약 80%의 건강보험 적용률과 약 55%의 노인교통수당을 제외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아, 공적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조손가구가 아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고(서병선, 1994; 권인수, 2000), 이후 조손가구의 증가와 함께 조손가의 조부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손가구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가족학적인 접근이 대다수이다(김다울, 2006; 김미혜, 김혜선, 2004; 김혜선, 2005; 배진희, 2007;

서혜석, 2005; 옥경희, 2005; 윤현숙, 2003; 이정화, 한경혜, 2008; 이화영, 2006; 이화진, 2004; 최해경, 2002). 예컨대,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행동, 스트레스, 우울, 생활만족도나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세대관계, 사회적 지원망과 같은 주제가 주요 이슈였다. 따라서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과 빈곤율과 같은 구체적인 가구경제상황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형태와 규모 등의 소득보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 표 9 > 조손가구의 경제 및 사회 활동상 특성

		수	%			수	%
경제 활동	주요근무	30,142	24.42	직업	관리자	343	1.03
	부요근무	1,918	1.55		전문가	1,488	4.46
	잠시엄	1,267	1.03		사무	1,146	3.44
	안함	90,102	73.00		서비스	1,980	5.9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4,049	42.16		판매	2,615	7.85
	자영업(고용무)	15,709	47.14		농림어업	12,031	36.10
	자영업(고용유)	1,865	5.60		기능원	2,067	6.20
	무급가족종사	1,704	5.11		기계조립/조작	3,203	9.61
고령자 생활비 원천	본인 일/직업	26,512	18.25		단순노무	8,447	25.35
	예적금	9,669	6.58		군인	7	0.02
	공적연금	15,540	10.58		사회단체	41,360	2.52
	개인연금	3,943	2.68		경제단체	24,926	1.52
	부동산	5,255	3.58		문화단체	65,458	3.99
	주식/채권/펀드	212	.014	정치단체	4,035	0.25	
	동거자녀	2,541	1.73	종교단체	181,052	11.05	
	비동거자녀	50,156	34.15	지역단체	25,467	1.55	
	친인척	3,125	2.13	친목단체	212,090	12.94	
	국가/지자체	27,155	18.49	교육단체	31,464	1.92	
	이웃/단체	1,271	0.87	기타단체	2,817	0.17	
	기타	1,495	1.02	없음	737,713	72.23	

<표 9>을 살펴보면, 조손가구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73%로 경제활동 부분에서 많은 제약과 소득활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전체응답자의 47%로 지속적인 소득을 통한 경제활동이 아닌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구의 직업은 농림어업이 36%를 나타냈으며, 단순노무가 25%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구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손가족은 생활비 의 대부분을 비동거자녀(34.15%)와 국가나 지자체(18.49%)의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직접 직업활동(18.25%)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10.58%)의 노인소득보전 기능이 완전치 않아서 조손가족의 소수만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 조손가구의 손자녀 관련 특성

		수	%			수	%
연령	9세 이하	38,846	23.89	아동보육	부모	19	0.02
	10~19세	83,322	51.24		조부모	40,719	53.03
	20~29세	34,429	21.17		기타 가족	622	0.81
	30~39세	5,654	2.48		도우미	232	0.30
	40~49세	343	0.21		유치원	3,692	4.81
	50~59세	14	0.01		어린이집	6,861	8.94
					기타 시설	917	1.19
성별	남성	86,782	53.37		방과후학교	8,518	11.09
	여성	75,826	46.63		학원	12,550	16.34
					아동혼자	2,562	3.34
				기타	90	0.12	

<표 10>는 손자녀의 특성을 표로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9세 이하가 23%, 10대가 51%로 나타나 대부분 어린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족의 아동들은 주요 발달시기의 대부분을 조부모의 보육의 아동보육에 있어서 아동은 조부모에게 25%, 학원이 7%, 방과후 학교가 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손가구의 손자녀들이 보육에 있어서 조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부모 가구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한부모가구는 2005년 137만여 가구에서 2010년 159만여 가구로 증가하였다.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부모가구는 이혼 및 사별 가구, 주말 부부 가구 등, 직업 등에 의한 분리가구의 증가, 자녀 독립의 지연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216만5천 가구, 비중은 0.5%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가구수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데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수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한부모가구의 유형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다. 사별 가구주가 급격히 감소하여 1985년 전체 한부모 가구의 52.2%에서 2010년 25.9%로 크게 감소하지만 이혼 가구주의 경우는 1985년 5.9%에서 2010년 32.8%로 급증하였다. 한부모 가구 중 모자가구의 비중에도 큰 변화가 없어 1995년 82%에서 2010년 78.2%로 소폭 감소했지만, 한부모 가구주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은 여전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한부모 가족의 수가 증가하지만,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비교적 농어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2010년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수는 18만5천여 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11.7%로 10% 수준을 조금 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0)에 의하면 모자가족과 미혼모가족을 합하면 14만여 가구 중 저소득 여성 한부모 가구로 정부의 지원 받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 한부모의 수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한부모 가구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한분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증가가 뚜렷하게 보였다. 즉, 이들 한부모 1자녀 가구는 1995년 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8.0%를 차지했던 것이 2010년은 총 86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0.4%를 차지하여 47만 가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11 > 시도별 연령별 한부모+자녀 가구(2010, 2035)

(단위: 천가구,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한 부 모 +	총가구	17,359	3,500	1,247	867	920	515	532	375	3,839	560	556	755	660	687	1,006	1,152	187	
	한부모+자녀	1,595	351	140	94	100	55	53	32	347	46	44	50	56	46	70	92	18	
	2010 35미만	144	30	10	7	10	5	5	3	35	4	4	5	5	4	6	8	1	
	35~64	1,295	283	113	79	82	46	44	27	285	36	36	40	44	36	56	75	15	
	65이상	156	37	16	8	8	4	4	2	27	5	4	6	7	7	8	9	2	
자 녀 가 구	총가구	22,261	4,113	1,417	988	1,262	622	696	435	5,475	744	811	1,120	799	838	1,250	1,465	224	
	한부모+자녀	2,165	464	156	109	159	70	71	39	567	57	65	74	66	49	84	116	20	
	2035 35미만	107	20	6	4	8	5	5	2	31	3	3	3	4	3	4	6	1	
	35~64	1,469	306	98	74	109	54	51	25	403	36	45	49	43	32	54	77	14	
	65이상	589	138	52	31	43	11	15	12	134	18	17	22	18	14	25	34	6	
구 성 비	한부모+자녀/총	9.2	10.0	11.2	10.9	10.9	10.7	9.9	8.5	9.0	8.2	8.0	6.7	8.5	6.7	6.9	8.0	9.6	
	2010 35미만	9.0	8.7	7.2	7.6	9.9	9.9	9.8	8.6	10.0	9.1	9.7	9.8	9.4	9.0	8.3	8.8	6.5	
	35~64	81.2	80.7	81.2	83.8	82.3	83.0	82.9	84.3	82.1	79.0	80.7	78.3	78.8	76.8	79.6	81.2	80.7	
	65이상	9.8	10.7	11.5	8.6	7.9	7.1	7.2	7.1	7.9	11.9	9.6	11.8	11.8	14.2	12.1	10.0	12.9	
	한부모+자녀/총	9.7	11.3	11.0	11.0	12.6	11.2	10.2	8.9	10.4	7.7	8.1	6.6	8.2	5.9	6.7	7.9	9.1	
	2035 35미만	4.9	4.3	3.6	3.7	4.8	7.2	6.4	4.3	5.4	5.6	5.1	3.9	6.7	6.4	4.8	5.0	4.9	
	35~64	67.9	66.0	63.1	67.7	68.4	77.3	72.7	64.8	71.0	62.5	69.0	66.3	65.4	65.3	64.9	65.8	67.7	
	65이상	27.2	29.7	33.2	28.6	26.9	15.5	20.9	30.8	23.6	31.9	25.9	29.8	27.9	28.3	30.3	29.1	27.4	
	연 평 균 변 화	한부모+자녀	22.8	4.5	0.6	0.6	2.3	0.6	0.7	0.3	8.8	0.5	0.8	0.9	0.4	0.1	0.6	1.0	0.1
		2010 35미만	-1.5	-0.4	-0.2	-0.1	-0.1	-0.0	-0.0	-0.0	-0.2	-0.0	-0.0	-0.1	-0.0	-0.0	-0.1	-0.1	-0.0
35~64		7.0	0.9	-0.6	-0.2	1.0	0.3	0.3	-0.1	4.7	-0.0	0.4	0.4	-0.0	-0.1	-0.0	0.1	-0.0	
65이상		17.3	4.0	1.4	0.9	1.4	0.3	0.4	0.4	4.3	0.5	0.5	0.6	0.5	0.3	0.7	1.0	0.1	
한부모+자녀		1.4	1.3	0.5	0.6	2.3	1.0	1.4	0.9	2.5	1.0	1.9	1.9	0.7	0.3	0.8	1.0	0.5	
증 가 율	2010 35미만	-1.0	-1.4	-1.8	-1.7	-0.9	-0.3	-0.5	-1.6	-0.5	-0.9	-0.9	-1.7	-0.7	-0.9	-1.2	-1.1	-0.6	
	35~64	0.5	0.3	-0.5	-0.3	1.3	0.7	0.7	-0.3	1.7	-0.1	1.0	1.0	-0.1	-0.4	-0.1	0.1	-0.2	
	65이상	11.1	10.7	8.9	11.3	17.7	7.0	11.5	17.1	15.5	9.4	11.9	10.8	7.1	4.5	8.0	10.7	5.7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2010~2035”.

<표 12>에서 한부모가구의 연령은 4-50대가 전체 연령의 6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한부모가구의 연령은 4-50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78%로 한부모가구가 주로 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41%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하 36%, 4년제대졸 11%, 2년제대졸 7%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3%, 21%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부산 9%, 대구 5%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초혼연령은 20대가 80%로 대부분의 한부모가구는 20대에 초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로는 사별과 이혼이 각각 36%, 34%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비율도 28%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12 > 한부모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	%			수	%
연령	9세 이하	0	0.00	지역	서울	698,669	23.68
	10~19세	34	0.00		부산	267,348	9.06
	20~29세	11,602	0.71		대구	171,393	5.81
	30~39세	186,660	11.39		인천	185,310	6.28
	40~49세	556,512	33.96		광주	98,848	3.35
	50~59세	504,344	30.78		대구	96,398	3.27
	60~64세	136,523	8.33		울산	59,977	2.03
	65세 이상	242,828	14.82		경기	639,222	21.67
성별	남성	352,624	21.52		강원	78,059	2.65
	여성	1,285,879	78.48		충북	76,889	2.61
교육수준	중졸이하	604,886	36.92		충남	85,662	2.90
	고졸	685,381	41.83		전북	96,922	3.29
	2년제대졸	123,073	7.51		전남	80,123	2.72
	4년제대졸	187,717	11.46		경북	122,287	4.14
	석사이상	37,446	2.29		경남	161,829	5.49
					제주	31,403	1.06
초혼연령	19세이하	167,265	10.26	혼인상태	미혼	7,455	0.45
	20~29세	1,320,063	80.99		배우자유	467,000	28.50
	30~39세	138,421	8.49		사별	592,526	36.16
	40~49세	3,682	0.23		이혼	571,522	34.88
	50세이상	384	0.02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 한부모가구 비교

선행연구에 의하면(이연주 김승권, 2011) 여러 가구유형의 부와 모 중에서 무배우부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다. 특히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양부모가구와 비교하면, 양부모의 경우 부는 모에 비해 대학이상 비율이 높고 중학교이하

비율이 낮지만, 무배우의 경우 부의 중학교이하 비율이 모보다 현저히 더 높다. 별거형 부의 경우 교육수준의 분포가 양부모가구 부와 무배우 가구 부의 중간정도 이었다. 나아가 편부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도 편모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 표 13 > 한부모가구의 경제 및 사회활동상 특성

		수	%			수	%
경제 활동	주로그무원	862,791	52.6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36,428	67.11
	부로그무원	48,863	2.98		자영업(고용무)	203,286	21.44
	잠시썸	36,654	2.24		자영업(고용유)	86,984	9.17
	안함	690,195	42.12		무급가족종사	21,610	2.28
직업	관리자	13,147	1.39	사회 활동	사회단체	41,360	2.52
	전문가	116,746	12.31		경제단체	24,926	1.52
	사무	101,591	10.71		문화단체	65,458	3.99
	서비스	186,145	19.63		정치단체	4,035	0.25
	판매	149,802	15.80		종교단체	181,052	11.05
	농림어업	35,519	3.75		지역단체	25,467	1.55
	기능원	78,716	8.30		친목단체	212,090	12.94
	기계조립/ 조작	102,326	10.79		교육단체	31,464	1.92
	단순노무	163,369	17.23		기타단체	2,817	0.17
	군인	947	0.10		없음	737,713	72.23

<표 13>에서 한부모가구의 경제 및 사회활동상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서 주로그무원하는 비율이 52%, 안함이 42%로, 안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구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활동수준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67%로 가장 많았고, 혼자 자영업을 하는 비율도 21%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서비스업이 19%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가 17%, 전문가 12% 순으로 한부모가구의 직업은 서비스와 단순노무로 전문직의 직업보다는 단순한 직업 중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구의 사회활동에서는 친목단체와 종교단체를 통해 많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4 > 한부모가구의 자녀관련 특성

		수	%			수	%
연령	9세 이하	248,037	10.59	아동보육	부모	147,166	6.29
	10~19세	823,797	35.18		조부모	32,731	1.40
	20~29세	748,017	31.95		기타가족	8,580	0.37
	30~39세	373,309	15.94		도우미	4,410	0.19
	40~49세	120,436	5.14		유치원	26,153	1.12
	50~59세	25,506	1.09		어린이집	53,705	2.29
	60~64세	1,973	0.08		기타시설	6,051	0.26
	65세이상	363	0.02		방과후학교	59,374	2.54
성별	남성	1,305,448	55.75	학원	137,242	5.86	
	여성	1,035,990	44.25	아동혼자	44,431	1.90	
				기타	672	0.03	

<표 14>에서 한부모가구의 자녀는 10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1%, 9세 이하 10%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에서 10대와 20대의 비율이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가 계속적으로 한부모가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남성이 55%, 여성이 44%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에 있어서 한부모가구는 부모가 6%, 학원 5%, 방과후학교가 2% 순으로 나타나 아동보육에 있어서 부모와 학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구 규모의 축소, 전통적인 핵가족 수의 감소와 독거노인, 조손가족,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관찰되는 가구구조의 변화, 즉 독신가구의 증가, 노인단독가구 혹은 노인1세대가구의 증가,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의 증가는 그 원인이 이혼의 증가나 결혼연기 혹은 기피,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 사회적 이전, 그리고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복지적인 쟁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가구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정책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특히 가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진욱(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1010-125.
- 김철북·송노원(2010).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모델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2);187-212.
- 류정희(2011). “저소득층 조손 가정의 특성과 그들을 위한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질적연구:아이 돌보미이용자 가정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기채(2010). “연구 논문: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구성원과 총소득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30(2);323-341.
- 배다영·진미정(2011).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의차이”.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9(5);121-140.
- 오지연·최옥금(2011). “노인 가구 유형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3(0);7-28
- 이신숙·김성희(2011).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11(1);23-60
- 이연주·김승권(2011). “12세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편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비교:이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2);17-43.
- 이윤화·김동기(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조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1-22
- 최광선(2012).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생태체계적 특성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0~2035”.
- 황명진(2012).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독거노인의 생활비원천 영향요인 연구“. 통계연구
- 허경옥·이현진·박귀영(2009).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분석-확대가계 및 핵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69-84

제 7주제: 다문화가구의 가구구성 및 특성에 관한 분석

이 혜 경(배재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구의 가구구성과 특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는 처음으로 센서스 문항에 '현재국적'과 '출생국적' 그리고 '입국시기'를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총조사의 10% 표본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구단위로 조사되며, 외국인이 한국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조사가 되었으나, 외국인 1인가구이거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에는 표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총조사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구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10% 표본조사에 집계된 외국인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그간 사회적인 관심사였던 다문화가구의 출산 정도, 사회참여 정도, 그리고 경제활동 등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구에 대한 몇몇 전국적인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5, 2006; 김승권 외, 2009)가 있었지만, 그 규모나 체계적인 자료수집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내국인과 내국인가구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0년 총조사의 표본조사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구를 내국인가구와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문화 가구의 유형별 비교, 출신국적별 비교, 그리고 내국인가구와의 비교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총조사 표본조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시 유의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2015년 표본조사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도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론

1. 2010년 표본조사에 집계된 외국출생자

통계청의 2010년 총조사 10% 표본자료에 집계된 외국출생자의 규모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외국출생 남성은 46,307명, 외국출생 여성은 169,813명이다 (<표 1>과 <표 2> 참조). 이를 다시 혼인상태별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은 남성에 한하여 혼인상태별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외국에서 출생한 남성의 약 15% (7,116명 + a) 정도는 한국인의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관심인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부분은 외국출생 남성이 유배우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이다. 외국인 남성이 사별 및 이혼 가구주인 경우도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은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출생 여성의 경우에도 약 7,000명 (6,623 + a) 정도는 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다문화가구에는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경우(약 11만명), 외국인 여성이 유배우, 사별 및 이혼 가구주인 경우(17,000명),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17,000명)이다.

<표 1> 외국 출생 남성의 혼인상태별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배우자	자녀	자녀 배우자	고용인, 하숙인	기타	계
미혼	1,600		5,867		4,764	2,085	14,316
유배우	11,521	11,209	1,163	613	3,860	1,944	30,310
사별	191		2		38	238	469
이혼	690		84		176	262	1,212
계	14,002	11,209	7,116	613	8,838	4,529	46,307

<표 2> 외국 출생 여성의 혼인상태별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배우자	자녀	자녀 배우자	고용인, 하숙인	기타	계
미혼	2,034	-	5,611	-	2,017	1,603	11,265
유배우	8,828	111,703	836	17,236	2,946	4,435	145,984
사별	2,411	-	46	131	658	1,778	5,024
이혼	5,988	-	130	-	475	947	7,540
계	19,261	111,703	6,623	17,367	6,096	8,763	169,813

2. 개인data 분석

<표 1>과 <표 2>를 옆두에 두고, 10% 표본조사에 집계된 1)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경우, 2)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그리고 3)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경우(약 11만여명),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다시 이들이 귀화한 경우(약 18,000명)와 비귀화(약 2,000명)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거나, 유배우 가구주(약 9,000명), 사별 가구주(약 2,000명), 그리고 이혼 가구주(약 6,000명)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17,000명)도 살펴보았다.

연령 면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가 가장 젊고, 그 다음은 배우자인 경우이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비교적 연령이 높은 편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이 사별 가구주인 경우는 30%가 60대 이상이다. 교육수준 면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특히 귀화한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거나 사별 가구주인 경우가 가장 학력이 낮은 편이다.

출생 국적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의 거의 절반 가까이(45%)가 베트남 여성이다.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21%가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베트남 출신이 적은 편이다. 한편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조선족과 중국한족이 많다. 외국인 여성이 비귀화한 상태로 가구주인 경우에는 조선족(45.2%)과 중국한족(14.2%) 외에 일본(14.9%) 여성도 많은 편이다.

입국연도 면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가 비교적 최근에 입국한 경우가 많고,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입국연도가 비교적 오래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이 세 집단을 비교해 보면, 며느리인 경우는 92%, 배우자인 경우는 80%, 가구주인 경우는 47~63%가 2000년대 이후에 입국하였다.

경제활동 면에서는 며느리인 경우는 64%가 비취업이고, 그 다음은 배우자인 경우는 54%가 비취업이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비취업인 경우가 31%~41%에 불과하다. 한편 거주지역 면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63~77%)가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32%)나 배우자인 경우(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며느리인 경우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충청, 전라, 경상도 등 도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 가구주, 며느리인 경우의 주요 특성

	1. 배우자	2.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					3. 며느리
	외국인 여성	외국인 여성 (귀화)	외국인 여성 (비귀화)	외국인 여성	외국인 여성	외국인 여성	외국인 여성
	배우자	가구주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	사별 가구주	이혼 가구주	며느리
사례수	111,703	17,599	1,645	8,828	2,411	5,988	17,367
20대&미만	34.7	8.3	16.7	6.6	2.8	2.5	70.6
30대	34.0	29.2	37.8	37.1	12.2	27.4	22.1
40대	22.4	34.8	30.5	33.8	27.9	44.1	6.6
50대	6.7	20.1	10.3	18.7	27.1	21.2	0.6
60대	1.9	6.5	1.8	3.7	21.0	4.8	0.1
70대이상	0.3	1.1	2.9	0.1	9.0	0.0	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정도							
중학교 이하	29.4	35.4	24.2	23.8	39.1	26.1	34.0
고등학교	46.2	43.7	50.2	56.7	46.1	54.5	45.1
대학교 이상	24.4	20.9	25.6	19.5	14.8	19.4	20.9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적							
중국	24.7	37.7	14.2	34.3	29.3	41.9	14.0
조선족	27.9	43.7	45.2	48.2	38.1	44.0	11.0
일본	6.3	0.2	14.9	1.2	5.7	0.4	3.4
필리핀	7.3	2.6	2.4	3.1	2.6	2.7	11.4
베트남	21.3	1.2	8.1	2.1	2.3	1.3	45.1
미국	0.3	0.4	3.3	0.4		0.2	0.4
기타	12.2	14.2	11.9	10.7	22.0	9.5	14.7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입국연도							
1989년이전	2.9	5.6	6.4	2.8	13.8	6.1	1.2
1990년대	16.9	38.3	32.7	34.6	39.3	47.1	7.1
2000년대	80.2	56.1	60.9	62.6	46.9	46.8	91.7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활동							
상시work	38.4	58.4	50.5	61.3	50.8	57.6	29.3
틈틈이work	5.5	4.0	6.2	4.1	4.3	4.2	4.6
잠시 쉽	2.1	4.1	6.5	3.4	3.5	6.2	2.0
not work	54.0	33.5	36.8	31.2	41.4	32.0	64.1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도(16)							
서울	18.6	38.5	26.9	38.2	30.1	37.9	11.6
부산	4.0	3.2	6.0	2.8	5.1	4.0	4.8
대구	3.0	1.5	2.1	1.3	1.4	1.9	3.1
인천	6.4	7.0	7.4	6.9	9.8	6.8	4.4
광주	2.4	1.2	0.7	1.2	0.8	0.8	2.0
대전	2.2	1.1	2.0	1.0	1.7	1.4	1.7
울산	2.3	0.9	1.7	1.0	1.1	0.9	1.4
경기도	27.5	30.9	28.6	32.1	23.8	32.4	15.8
강원도	3.1	1.8	0.7	1.3	2.9	1.4	5.1
충북	3.5	2.3	4.8	2.1	5.8	1.4	4.8
충남	4.7	3.3	6.0	2.7	7.5	3.2	9.2
전북	4.0	1.2	1.8	1.4	1.9	1.2	6.3
전남	4.7	1.5	2.2	1.8	1.7	1.1	8.6
경북	5.7	1.8	4.2	1.9	2.5	1.8	10.3
경남	6.8	3.4	3.8	4.1	3.1	3.1	9.3
제주도	1.1	0.4	1.1	0.2	0.8	0.7	1.6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 여성의 국적에 따라 이들이 표본조사에서 며느리, 배우자, 가구주로 집계되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즉 외국인 여성이 베트남(45%)과 필리핀(11%) 등 동남아 여성인 경우에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들어 온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주로 며느리로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조선족(28%), 중국한족(25%), 베트남(21%)의 순이다. 한편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대부분(60~85%)이 조선족 또는 중국한족이다. 10% 표본자료를 개인자료로 분석할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어떠한 경우에 센서스에 가구주라고 응답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자료에 배우자 정보를 붙여, 부부자료를 만들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부부자료(data) 분석

이제 다문화가구의 특성을 부부 각각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10% 표본조사에서 외국출생자가 기혼인 경우만을 골라내어, 본인의 정보에 배우자의 정보를 덧붙인 부부data를 만들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집단은 규모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그 수가 가장 많은 (즉 전형적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구인데, 이들은 다시 1) 한국인 남편 + 외국인(비귀화자) 부인 가구 (약 6만1천 가구), 2) 한국인 남편 + 외국인(귀화자) 부인 (약 4만3천 가구), 그리고 3) 한국인 남편이 아니라, 외국인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 (1,450 가구)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외국인 남편 + 한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구인데, 이는 다시 1) 외국인 남편이 가구주인 경우(3,080 가구), 2) 출생 한국인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8,123 가구), 그리고 귀화한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2,858 가구)이다.

이러한 다문화가구의 비교대상(또는 준거집단)으로 내국인 부부(= 출생내국인 + 출생내국인)의 특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10% 표본조사에는 이러한 내국인 부부로 이루어진 내국인가구가 974만여 가구였다.

1) 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는 한국인 남편의 연령 면에서 차이가 크다. 즉 다문화가구는 노년층이 적어서, 특히 한국인 남편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가 극히 드

물다(<표 4>). 그러므로 이러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추후 어떠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가구주의 연령을 제한하고, 분석해야 의미가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 부인의 연령 역시 내국인 부인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젊다. 교육정도에서는 남편과 부인 각각 내국인 + 내국인 준거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다. 그러나 외국인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내국인가구의 부인과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다. 즉 내국인 부인에 비해 중학교 이하가 훨씬(18%) 적고, 고등학교 수준이 훨씬(15%) 더 많고, 대학교 이상도 약간(2.4%) 많다.

출생국적 면에서는 외국인 부인이 비귀화인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베트남여성(29%)과 일본(11%) 여성이 많은 편이다(<표 6>). 외국인 부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중국(32%)과 조선족(28%)이 많고, 그 다음은 베트남(18%), 필리핀(10%) 여성이다. 외국인 부인이 가구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42%가 조선족이고, 그 다음은 중국(32%)여성이다.

거주지역 면에서 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는 내국인 가구에 비해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에 약간 더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지역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표 7>).

2) 외국인 남편 + 한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도 연령 면에서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젊다(<표 4>). 특히 외국인 남편이 가구주인 경우보다는 한국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령이 더 젊은 편이다.

한편 교육정도 면에는 외국인 남편 + 한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구의 세 집단 중 외국인 남편이 가구주인 경우와 출생한국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내국인가구(준거집단)보다 남편과 부인 모두 교육수준이 높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귀화한 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즉 외국인 남편 + 귀화 부인)에는 외국 남편과 귀화부인 모두 내국인 부부와 비교하여 그 교육수준이 낮다(<표 5>).

이러한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외국인 남편의 출생국적을 살펴보면, 이 역시 처음 두 집단과 나중 한 집단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우선 그간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 조선족과 중국인 남편이 많지만, 특히 귀화한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외국인 남편의 76%가 조선족이고 20%가 중국한족이다. 즉 조선족과 중국인 남편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남편들은 4%에 불과하다. 물론 10%표본에 집계된 수

치에 Weighting을 주어 100%라고 환산했을 경우에 그 수가 고작 2,858명에 불과하나, 이 집단은 조선족과 중국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이후, 다시 외국(주로 모국) 남성과 재혼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표 6>). 그러나 이 집단은 현재 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의 연령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편과 사별 (이혼 포함) 후 향후 모국의 남성과 재혼하는 연쇄이동(chain migration)이 확대될 경우,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국인 남편 + 한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귀화여성가구주 + 외국인 남편인 경우에는 93%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0% 표본자료를 부부data로 만들어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는 특히 연령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출산율과 경제활동 등을 비교할 경우에는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거나, 남편의 연령을 특정 연령집단(25세~64세)으로 한정된 이후에 비교해야 할 것이다.

<표 4> 부부data로 살펴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부부의 연령

	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			외국인남편+한국인부인			내국인+내국인가구
	부인(비귀화)	부인(귀화)	외국부인이가구주	남편(가구주)	출생한국부인(가구주)	귀화한국부인(가구주)	
사례수	61,030	42,926	1,450	3,080	8,123	2,858	9,743,344
만나이(남편)							
20대&미만	1.7	0.7	1.7	3.0	9.6	4.3	1.9
30대	26.6	17.3	17.6	27.8	43.7	23.8	18.2
40대	51.0	56.0	53.2	26.7	29.2	43.4	27.1
50대	16.1	20.0	20.4	14.7	12.5	24.3	24.7
60대	3.6	5.0	4.5	21.3	3.9	3.9	16.3
70대이상	1.0	1.0	2.6	6.5	1.1	0.3	11.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나이(부인)							
20대&미만	44.5	24.8	8.1	9.6	13.8	8.2	4.2
30대	29.2	41.1	48.0	28.6	47.1	33.5	23.2
40대	19.7	25.5	30.0	25.0	28.7	36.6	28.6
50대	5.3	6.6	9.9	23.8	7.5	19.2	23.5
60대	1.1	1.9	4.0	9.7	2.5	2.2	13.5
70대이상	0.2	0.1	0.0	3.3	0.4	0.3	7.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부부data로 살펴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부부의 교육정도

	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			외국인남편+한국인부인			내국인+ 내국인 가구
	부인 (비귀화)	부인 (귀화)	외국부 인이 가구주	남편 (가구주)	출생 한국 부인 (가구주)	귀화 한국 부인 (가구주)	
사례수	61,030	42,926	1,450	3,080	8,123	2,858	9,743,344
교육정도(남편)							
중학교 이하	23.1	29.8	26.4	18.3	10.0	23.7	25.6
고등학교	51.3	54.5	48.4	24.7	22.5	58.4	33.8
대학교 이상	25.6	15.7	25.2	57.0	67.5	17.9	40.6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정도(부인)			c				
중학교 이하	30.8	30.0	14.4	22.8	11.2	26.1	32.3
고등학교	42.9	48.5	53.0	31.5	31.9	60.2	37.5
대학교 이상	26.3	21.5	32.6	45.7	56.9	13.7	30.2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부부data로 살펴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외국인 부인의 국적과 입국연도

	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			외국인남편+한국인부인		
	부인 (비귀화)	부인 (귀화)	외국 부인이 가구주	남편 (가구주)	출생 한국 부인 (가구주)	귀화 한국 부인 (가구주)
사례수	61,030	42,926	1,450	3,080	8,123	2,858
외국인의 국적						
중국	16.9	31.7	32.3	10.9	8.4	19.5
조선족	21.8	28.3	42.3	15.6	18.5	75.5
일본	11.2	0.6	3.9	9.3	8.4	0.0
필리핀	7.4	10.3	6.2	0.2	1.2	0.4
베트남	28.5	18.0		0.3	1.0	0.4
미국	0.5	0.1	0.8	10.9	16.0	0.3
기타	13.7	11.0	14.5	52.8	46.5	3.9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입국연도						
1989년이전	2.3	3.7	7.3	42.4	8.0	0.4
1990년대	11.7	26.5	43.9	13.7	15.7	13.1
2000년대	86.0	69.8	48.8	43.9	76.3	86.5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부부data로 살펴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거주 지역

	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			외국인남편+한국인부인			내국인+ 내국인 가구
	부인 (비귀화)	부인 (귀화)	외국 부인이 가구주	남편 (가구주)	출생 한국 부인 (가구주)	귀화 한국 부인 (가구주)	
사례수	61,030	42,926	1,450	3,080	8,123	2,858	9,743,344
서울	16.0	14.0	24.3	35.5	34.1	55.7	18.1
부산	4.4	4.1	2.5	5.8	5.5	0.4	7.3
대구	3.0	3.1	1.5	2.9	3.6	0.7	4.8
인천	6.0	6.9	10.5	6.3	7.6	6.5	5.3
광주	2.6	1.9	5.4	1.0	1.2	0.0	2.7
대전	2.3	2.2	1.9	2.5	2.2	0.7	2.9
울산	2.3	2.1	0.8	2.5	1.7	0.8	2.3
경기도	22.0	22.8	35.3	23.8	27.7	30.3	20.4
강원도	4.0	5.8	2.8	3.2	1.1	0.2	4.2
충북	4.4	4.2	1.4	2.2	1.4	1.3	3.6
충남	5.5	5.5	3.7	1.9	2.6	0.4	4.9
전북	5.1	5.9	2.5	1.2	0.7	0.0	4.4
전남	6.7	6.5	2.1	0.8	0.4	0.9	5.0
경북	7.2	7.5	1.4	5.6	3.1	0.7	6.7
경남	7.3	6.7	3.5	3.8	5.6	1.4	6.4
제주도	1.2	0.8	0.4	1.0	1.5	0.0	1.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다문화가구의 연령별 출생아 수 비교

그간 다문화가구의 출산율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시작된 1990년대 초기에는 국내에서 그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 노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했기에, 이러한 국제결혼은 그간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인구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이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확산되었다(이혜경, 2010). 2000년대 이후 최저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보다는 출산율이 높은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출산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2010년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다문화가구의 출산율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표본조사에서 출산과 관련된 문항은 여성에게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여기에는 결혼한 자녀,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 등은 포함되며 입양한 자녀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결혼이민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경우에는 모국에서 출산한 자녀까지 다 포함하여 지금(총조사 조사시점)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는가 이므로, 이러한 출생아 수에 대한 응답은 실제로 어느 정도가 국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 제 5주제(이성용)에서 분석한 20세 이상 전체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와 다문화가구의 출생아 수를 비교하여 보자. 그러므로 <표 8>의 준거집단인 전체기혼여성이란 실은 내·외국인을 모두 합한 10% 표본조사에 표집된 전체 기혼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출생 여성은 1%도 채 안되므로, 이를 내국인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10% 표본조사에 집계된 기혼 외국인 여성이 모두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일부는 한국을 잠시 방문하여 내국인 또는 다문화가구와 잠시 동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표 2> 참조), 외국인 기혼여성을 다시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 배우자, 또는 며느리인 경우만을 추출하여 평균 출생아 수를 살펴보았다(<표 8>).

우선 10% 표본조사를 개인data로 분석한 경우에는 기혼 외국인 여성이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이거나, 며느리인 경우는 약 14만명이다. 이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할 경우, 우선 중국과 조선족 기혼 여성은 내국인 여성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출생아 수가 적다. 일본 여성은 35세~54세인 경우에, 필리핀 여성은 20세~34세인 경우에, 그리고 베트남 여성은 20세~29세인 경우에 같은 연령층의 내국인 여성보다 출생아 수가 약간 더 많다. 이를 전체 외국인여성으로 묶어서 비교할 경우에는 단지 20대 외국인 기혼여성이 20대 내국인 기혼여성에 비해 약간 출생아 수가 많을 뿐,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내국인 여성보다 출생아 수가 적은 편이다.

<표 8 > 출생국적별 연령별 외국출생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 수

	전체 기혼 여성a	외국출생 기혼여성b							
		전체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20-24세	0.87	0.90	0.82	0.56	-	0.92	0.95	-	0.82
25-29세	1.01	1.08	.93	0.91	0.89	1.11	1.21	.62	1.11
30-34세	1.44	1.22	1.21	1.19	1.10	1.52	1.15	.94	1.24
35-39세	1.79	1.38	1.27	1.32	1.84	1.75	1.15	1.65	1.46
40-44세	1.95	1.38	1.11	1.17	2.29	1.88	1.05	1.59	1.82
45-49세	1.99	1.33	1.11	1.12	2.35	1.54	1.00		1.60
50-54세	2.10	1.44	1.25	1.38	2.40	0.93	-	-	1.78
55-59세	2.40	1.53	1.58	1.48	1.11	-	-	-	1.96
60세 이상	3.90	2.36	2.40	2.24	2.84	-	-	-	2.42
사례수	315,240	144,283	36,280	40,881	7,942	10,488	30,355	455	17,882

a: 2% 표본조사(개인data)의 20세 이상 전체 기혼여성: 출처: 이성용 본보고서 제5주제 <표 5>.

b: 10% 표본조사(개인data)의 20세 이상 외국출생 기혼 가구주, 배우자 또는 며느리인 여성.

-. 셀 안의 사례수가 인구승수(Weighting) 이후,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을 표기하지 않음.

<표 9> 출생국적별 연령별 다문화가구의 평균출생아 수

	전체 기혼여성 a	외국출생 기혼여성b							
		전체b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20-24세	0.80	0.93	0.85	0.68	-	0.99	0.97		0.83
25-29세	1.00	1.11	.96	.97	.80	1.13	1.24	0.53	1.13
30-34세	1.48	1.26	1.25	1.25	1.07	1.56	1.16	1.03	1.26
35-39세	1.84	1.42	1.31	1.36	1.85	1.77	1.19	1.69	1.46
40-44세	2.00	1.43	1.11	1.15	2.30	1.92	1.01	1.59	1.84
45-49세	2.04	1.33	1.07	1.09	2.29	1.55	0.78		1.54
50-54세	2.15	1.42	1.17	1.29	2.38	0.90	-	-	1.67
55-59세	2.47	1.46	1.46	1.42	1.19	-	-	-	2.22
60세 이상	3.65	2.44	2.71	2.26	2.50	-	-	-	2.60
사례수	101,018	103,370	25,419	26,863	7,072	8,036	22,874	338	12,768

a: 1% 표본조사(부부data)의 20세 이상 유배우 내국인가구(내국인+내국인)의 내국인 부인

b: 10% 표본조사(부부data) 20세 이상 유배우 다문화가구(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의 외국인 부인

-. 셀 안의 사례수가 인구승수(Weighting) 이후,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을 표기하지 않음.

한편 <표 9>는 10% 표본조사의 가구주와 배우자 정보를 묶어서 부부data를 만들어,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구 중에서 한국인 남편 + 외국인부인이라는 다문화가구에 한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9>에 의하면, 다문화가구는 특정 국적의 부인이 특정 연령층인 경우에만 내국인가구에 비해 평균 출생아 수가 약간 더 많을 뿐, 전반적으로 평균 출생아 수가 내국인가구보다 많지는 않다. 즉 35세~54세 사이의 일본인 부인, 20세~34세 사이의 필리핀 부인, 20세~29세 사이의 베트남 부인 등이 내국인 부인에 비해 평균 출생아 수가 약간(0.01~0.3 정도)더 많다. 이러한 결과(<표 9>)는 개인data로 분석한 <표 8>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표 8>과 <표 9>는 그간 우리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평균 출생아수에 있어서, 기혼 내국인과 결혼이민 여성 사이에, 또는 내국인가구와 다문화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국내 다문화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조선족 출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이들의 상당수가 재혼이며, 모국(중국)에서의 1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평균 1자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소수인종인지라 1자녀 정책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조선족 역시 중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구 중에서 평균 출생아 수가 내국인에 비해 약간이라도 높은 경우는 30대 후반 이후의 일본 여성이거나, 20대의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뿐이다. 일본과 필리핀 여성의 약간 높은 출산율은 통일교와 카톨릭이라는 이들의 종교적인 영향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가구주 연령이 25~64세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비교

앞에서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는 연령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연령제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표 10>부터 <표 14>까지는 가구주의 연령을 25~64세로 제한하여, 한국 남편 + 외국부인의 경우와 외국남편 + 한국부인의 경우로 나누어 그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표 10>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부부간 연령차이인데, 다문화가구인 경우에는 성별을 막론하고, 한국인이 연상인 경우가 많다. 즉 한국남편 + 외국부인(비귀화)의 경우에는 15%가 남편이 20살 이상 연상이고, 41%는 남편이 10~19살 연상이어서, 결국 56%가 남편이 10살 이상 나이가 많다. 한국남편 + 외국부인(귀화)인 경우에는 46%가 남편이 10살 이상 연상이다. 그리고 외국인 부인이 한국인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5~6%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남편 + 한국부인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외국남편인지, 한국부인인지에 따라 부부간 연령차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어떠한 경우이건 한국남편 + 외국부인인 경우에 비해 외국남편 + 한국부인의 경우에는 부인이 연상인 경우가 더 많고, 특히 한국부인이 거주구인 경우에는 60% 가까이가 부인(한국부인)이 남편(외국남편)보다 나이가 더 많다.

<표 10>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부부의 연령

	한국남편 + 외국부인 가구		외국남편 + 한국부인 가구	
	부인(비귀화)	부인(귀화)	가구주=외국남편	가구주=한국여성
만나이(남편)				
25~34세	9.9	4.8	19.5	36.7
35~44세	50.3	43.2	37.1	43.1
45~54세	32.8	42.7	19.5	16.7
55~64세	7.0	9.3	23.9	2.3
65세 이상	0.0	0.0	0.0	0.4
소계	100.0%	100.0%	100.0%	100.0%
만나이(부인)				
25세 미만	23.1	9.4	0.5	0.0
25~34세	38.7	34.9	28.1	31.4
35~44세	24.9	38.2	33.4	42.5
45~54세	12.2	15.3	20.5	19.4
55~64세	1.1	2.2	17.1	6.7
65세 이상	0.0	0.0	0.4	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부부간 연령차이				
남편20살이상연상	15.0	8.3	0.3	0.2
10~19살연상	40.6	37.7	9.1	2.3
1~9살연상	35.0	46.2	59.9	29.8
동갑	3.4	2.5	7.4	8.6
부인1~9살연상	5.9	5.1	21.2	49.5
10살이상연상	0.1	0.2	2.1	9.6
소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9,917	40,678	3,022	7,868

<표 11>은 다문화가구의 유형별로 부부 각각의 교육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한국남편 + 외국부인 유형에 비해 외국남편 + 한국부인 유형에서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각각 더 높다. 그리고 다문화가구의 유형별로 입국시기도 크게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표 12>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외국남편 + 한국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구 중 외국인 남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입국 시기가 80년대 및 그 이전에 입국한 경우가 35%이고, 90년대에 입국한 경우도 16%로 절반 정도(51%)가 국내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즉 90년대 이전에 입국)이다. 그러나 나머지 세 집단의 경우는 70~87%가 2000년대에 입국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이다.

<표 11>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부부의 교육정도

	한국남편 + 외국부인 가구		외국남편 + 한국부인 가구	
	부인(비귀화)	부인(귀화)	가구주=외국남편	가구주=한국여성
교육정도(남편)				
중학교 이하	20.4	26.5	13.3	10.7
고등학교	52.0	56.5	25.0	31.6
대학교 이상	27.6	17.0	61.7	57.7
소계	100.0%	100.0%	100.0%	100.0%
교육정도(부인)				
중학교 이하	28.4	28.1	16.3	9.8
고등학교	44.3	49.8	33.1	22.9
대학교 이상	27.3	22.1	50.6	67.3
소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9,917	40,678	3,022	7,868

<표 12>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연도

	한국남편 + 외국부인 가구		외국남편 + 한국부인 가구	
	부인(비귀화)	부인(귀화)	가구주=외국남편	가구주=한국여성
1989년 이전	2.1	3.5	35.0	7.1
1990년대	11.0	26.2	16.2	16.0
2000년대	86.9	70.3	48.8	76.9
소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9,917	40,678	3,022	7,868

<표 13>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부부의 경제활동

	한국남편 + 외국부인 가구		외국남편 + 한국부인 가구	
	부인(비귀화)	부인(귀화)	가구주=외국남편	가구주=한국여성
경제활동(남편)				
상시work	83.1	81.5	82.4	42.8
틈틈이work	1.0	0.8	1.4	7.4
잠시 쉽	2.1	2.4	2.9	4.7
not work	13.8	15.3	13.3	45.1
소계	100.0%	100.0%	100.0%	100.0%
경제활동(부인)				
상시work	34.3	42.8	41.3	79.9
틈틈이work	5.4	6.2	5.8	4.7
잠시 쉽	2.0	1.9	3.0	3.2
not work	58.3	49.1	49.9	12.2
소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9,917	40,678	3,022	7,868

<표 13>은 다문화가구의 유형별로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 본 것이다. 부부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네 가지 유형의 다문화가구 중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외국남편 + 한국부인(가구주)인 경우가 다른 세 유형과 확연히 구분된다. 즉 앞의 세 유형에서는 남편의 85% 이상이 일을 하고 있으며 부인은 42~51%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유형인 외국남편 + 한국부인(가구주)의 경우에는 남편은 55%가 부인은 88%가 일을 하고 있다. 즉 이 마지막 유형에서는 남편(외국남편)이 일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신 부인(한국부인)의 대부분(88%)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 중 누가 가구주인가는 경제활동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4>는 다문화가구의 유형별로 이들의 거주지역을 비교한 것이다. 거주지역 면에서는 다문화가구는 앞의 두 유형(한국남편 + 외국부인)과 뒤의 두 유형(외국남편 + 한국부인)이 구별이 된다. 즉 전자(한국남편 + 외국부인)에 비해 후자(외국남편 + 한국부인)의 경우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14>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인 다문화가구의 유형별 거주지역

	한국남편 + 외국부인 가구		외국남편 + 한국부인 가구	
	부인(비귀화)	부인(귀화)	가구주=외국남편	가구주=한국여성
서울	17.0	15.5	34.0	34.2
부산	4.5	4.1	5.9	5.5
대구	3.1	3.4	2.9	3.9
인천	6.2	7.0	5.9	7.9
광주	2.8	2.0	1.1	1.2
대전	2.4	2.3	2.4	2.1
울산	2.5	2.3	2.2	1.6
경기도	26.7	27.6	27.0	27.0
강원도	2.9	3.8	2.0	1.2
충북	3.6	3.4	1.0	1.5
충남	4.9	5.0	1.9	2.6
전북	3.9	4.7	1.0	0.8
전남	5.0	4.9	0.4	0.4
경북	6.0	6.1	5.9	3.0
경남	7.3	7.0	4.6	5.8
제주도	1.2	0.9	1.8	1.3
소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9,917	40,678	3,022	7,868

6. 전형적인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의 외국인 부인의 출신 국적별 비교

그간 다문화 가구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그 특성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설동훈 외, 2005, 2006; 김승권 외, 2009). 2010년 10% 표본조사에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구 유형도 있으나, 이 유형은 그 수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이를 다시 외국인 남편의 출신국적별로 나누어 분석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국내에 있는 전형적인 다문화가구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에 한하여,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적별로 그 인구학적 특성, 사회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미 있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 사

이이고, 한국인 남편이 가구주인 경우로 제한하여,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적별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다문화가구의 특성을 내국인만으로 이루어진 내국인가구와도 비교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표 15>는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의 부부 각각의 초혼연령을 보여준다. 우선 내국인가구는 남편이 평균 28세 부인이 평균 25세에 초혼을 하여 남편이 부인보다 평균 3살 정도 더 많다. 그러나 내국인가구에 비해, 전형적인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가구주) + 외국인 부인(배우자))에서는 남편의 초혼연령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외국인 부인의 국적에 따라서도 부부의 초혼연령이 다르다. 즉 한국인 남편의 초혼연령이 가장 낮은 경우는 외국인 부인이 미국인인 경우(29.5세)이거나 일본인인 경우(31.2세)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의 초혼연령이 약 36세 정도이고, 부인이 베트남인 경우에는 38세로, 내국인가구에 비해 약 10살 정도 더 높다.

한편 외국인 부인의 초혼연령은 베트남 여성이 가장 낮은 22세이고, 조선족의 경우는 30세로 가장 높다. 그러므로 부부간 연령차이가 적은 경우는 부인이 일본인(2세)이거나, 미국인(3세)인 경우로 이는 내국인가구와 유사한 편이다. 그러나 다른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부부간 연령차이가 상당히 크고, 특히 부인이 베트남인(17.4세)이거나 필리핀인(11.2세) 경우에 훨씬 크다.

<표 15>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 +외국인 부인)의 초혼연령
평균 및 표준편차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남편초혼 연령	35.6 (7.5)	35.7 (8.1)	31.2 (5.1)	36.1 (5.9)	37.7 (6.2)	29.5 (3.7)	35.0 (6.9)	35.7 (7.2)	27.8 (12.6)
부인초혼 연령	28.6 (7.0)	29.8 (8.0)	29.4 (4.5)	26.0 (5.4)	22.0 (4.5)	26.2 (3.4)	26.0 (5.8)	26.9 (7.0)	25.0 (12.6)
연령 차이	8.1 (5.3)	6.8 (5.5)	2.1 (3.7)	11.2 (6.5)	17.4 (5.5)	3.4 (2.4)	10.2 (8.3)	10.0 (7.4)	2.9 (9.7)
사례수	24,778	25,583	6,899	8,100	23,733	311	12,317	101,721	805,873

내국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비교할 때,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한국인 남편의 현재 연령은 부인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를 제외하면, 35~54세 중간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표 16>). 그러나 부인이 미국 국적인 경우는 남편의 31%가 25-34세로 매우 젊은 편이다. 한편 부인의 현재 연령은 베트남 부인의 51%가 25세 미만으로 가장 젊다. <표 17>은 외국인 부인이 배우자인 경우만을 살펴 본 것으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며느리인 경우도 상당하여(<표 2>와 <표 3> 참조) 그러한 경우까지 합한다면, 25세 미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표 16>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남편의 현재 연령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25-34세	9.1	6.6	14.0	5.5	4.6	31.1	11.2	7.8	11.5
35-44세	43.7	38.7	39.1	50.0	59.7	55.0	53.5	47.5	31.6
45-54세	37.3	40.3	43.8	41.4	32.4	13.9	30.1	36.8	34.5
55-64세	9.9	14.3	3.1	3.1	3.3	0.0	5.1	7.9	22.5
소계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1%
사례수	24,617	25,614	7,016	8,048	22,821	309	12,170	100,595	8,301,056

<표 17>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부인의 현재 연령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25세미만	5.9	2.2	0.2	18.2	50.5	0	19.3	17.6	0.4
25-34세	37.8	29.2	19.1	43.9	43.1	51.4	46.0	37.2	18.0
35-44세	39.3	41.9	49.0	29.8	5.7	45.0	25.1	30.3	35.4
45-54세	15.1	23.2	30.4	7.9	0.4	3.5	8.9	13.4	33.3
55-64세	1.9	3.5	1.3	0.2	0.2	0.0	0.7	1.6	12.8
65세이상	0	0	0	0	0	0	0	0	0.2
소계	100.0%	100.0%	100.0%	100.0%	99.9%	99.9%	100.0%	100.1%	100.1%
사례수	24,778	25,583	6,899	8,100	23,733	311	12,317	101,721	8,253,365

<표 18>은 내국인가구와 다문화가구의 한국인 남편의 교육정도를 보여준다. 부인의 국적이 미국 또는 일본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한국인)

남편의 교육정도는 내국인가구의 남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비록 그 규모(사례수)는 작지만, 한국인 남편 모두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내국인가구 남편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

이로써, 그간 국내에서는 한국남성 + 일본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는 대부분이 통일교로 들어온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구로 알려져 왔으나, 다른 유형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표 18>과 <표 19>는 이들 부부의 교육수준이 내국인가구와 비교할 때, 남편은 비슷하고, 일본 부인은 내국인 부인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다. 물론 <표 19>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베트남과 기타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미국, 일본, 필리핀) 부인의 교육수준은 내국인가구에 비해 높다. 사례수가 너무 적은 한국남편 + 미국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는 부부 모두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다문화 여성 가운데는 베트남 여성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다. 한편 외국인 부인의 입국연도는 미국부인의 입국시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은 일본, 중국(조선족 포함), 필리핀, 베트남의 순이다(<표 20>).

<표 18>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남편의 교육정도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중학교이하	21.9	27.1	13.6	29.5	23.3	0.0	16.7	22.9	14.1
고등학교	54.2	56.9	37.1	50.3	60.2	0.0	47.7	53.8	37.4
대학교이상	24.0	16.0	49.3	20.2	16.5	100.0	35.6	23.3	48.5
소계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4,617	25,614	7,016	8,048	22,821	309	12,170	100,595	8,301,056

<표 19>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부인의 교육정도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중학교이하	27.0	26.9	0.8	8.5	49.9	0.0	21.2	28.3	18.0
고등학교	52.3	57.3	33.1	34.2	45.0	0.0	32.3	46.5	44.4
대학교이상	20.8	15.9	66.1	57.3	5.0	100.0	46.5	25.2	37.6
소계	100.1%	100.1%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4,778	25,583	6,899	8,100	23,733	311	12,317	101,721	8,253,365

<표 20>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부인의 입국년도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1989년이전	2.0	1.7	6.6	1.2	0.9	35.4	7.2	2.6
1990년대	19.1	23.0	49.0	17.7	2.8	6.8	10.5	17.1
2000년대	78.9	75.3	44.4	81.0	96.3	57.9	82.3	80.2
소계	100.0%	100.0%	100.0%	99.9%	100.0%	100.1%	100.0%	99.9%
사례수	24,778	25,583	6,899	8,100	23,733	311	12,317	101,721

2) 다문화가구의 사회참여(사회활동)

그간 다문화가구의 사회참여 정도는 사회적인 관심사였다. 그 이유는 외국인 부인이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활발히 사회참여를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전형적인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사회활동 정도는 부인의 출생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내국인가구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10년 총조사의 10% 표본조사에서는 사회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활동이라는 질문을 신설하였다. 이 문항은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가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사회분야 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경제분야 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종교분야 단체,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조사하였다.

<표 21>과 <표 22>는 부부 각각의 사회활동을 부인의 출신국적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내국인가구의 사회참여 정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전반적으로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부부 모두 사회참여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1>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남편의 사회활동

	다문화가구(한국인 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사회활동 있음	28.3%	26.8%	48.2%	32.6%	28.8%	36.2%	31.2%	30.1%	43.9%
사회단체 (환경봉사등)	1.5%	1.7%	7.2%	3.2%	1.7%	3.9%	2.9%	2.3%	3.9%
경제단체 (노조 등)	6.2%	5.5%	3.8%	3.6%	4.9%	7.4%	4.1%	5.1%	4.8%
문화단체 (취미 등)	3.2%	3.4%	8.7%	4.1%	3.3%	17.5%	4.7%	4.0%	8.9%
정치단체 (정당활동등)	0.3%	0.4%	0.7%	0.2%	0.4%	0.0%	0.8%	0.4%	0.7%
종교단체	5.8%	4.6%	24.1%	9.3%	4.1%	15.5%	7.6%	6.9%	10.0%
지역단체 (주민단체 등)	1.0%	1.2%	3.8%	2.8%	1.7%	0.0%	1.3%	1.6%	2.7%
친목단체 (동창회 등)	15.0%	14.7%	21.3%	17.4%	17.7%	9.4%	16.1%	16.3%	27.1%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	0.5%	0.4%	2.4%	1.3%	0.4%	0.0%	0.6%	0.6%	1.7%
기타사회 활동	0.3%	0.2%	0.2%	0.5%	0.1%	0.0%	0.1%	0.2%	0.1%
사례수	24,617	25,614	7,016	8,048	22,821	309	12,170	100,595	8,301,056

우선 내국인가구에서는 남편의 43.9%가 사회활동이 있음에 비해, 다문화가구에서는 남편의 30.1%만이 사회활동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국인가구 남편의 사회활동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27.1%)이거나 종교단체(20.0%)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한국인 남편 역시 이러한 두 가지 사회활동이 가장 많으나, 동창회 등 친목단체 활동(16.3%)과 종교단체 활동(6.9%) 정도가 내국인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내국인가구건 다문화가구건 남편들의 사회참여는 특히 정치단체, 교육단체, 그리고 기타 사회활동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표 21>).

내국인가구의 남편과 비교할 때 다문화가구의 남편이 더 사회참여가 높은 경우는 오직 부인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로, 남편의 48.2%가 사회활동이 있었다. 특히 부인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에는 남편의 24.1%가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21.3%는 친목단체에 참여하여, 전반적인 사회참여 정도가 내국인가구의 남편에 비해 4%정도 더 높다. 부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다문화가구 남편의 사회활동이 내국인가구에 비해 낮다. 특히 남편의 사회참여가 가장 낮은 다문화가구는 부인이 조선족, 중국, 베트남인 경우이다.

<표 22>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부인의 사회활동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사회활동 있음	13.3%	13.4%	45.3%	24.6%	8.9%	39.2%	19.5%	16.2%	37.8%
사회단체 (환경봉사등)	1.2%	1.1%	6.0%	2.1%	0.9%	3.5%	2.0%	1.6%	3.3%
경제단체 (노조 등)	0.2%	0.3%	0.2%	0.2%	0.0%	3.5%	0.5%	0.2%	1.2%
문화단체 (취미 등)	1.4%	1.5%	5.6%	1.7%	0.6%	4.5%	2.6%	1.7%	5.5%
정치단체 (정당활동등)	0.1%	0.0%	0.2%	0.0%	0.0%	0.0%	0.0%	0.0%	0.3%
종교단체	5.6%	5.3%	34.4%	12.2%	3.2%	19.0%	8.0%	7.8%	13.6%
지역단체 (주민단체 등)	0.5%	0.7%	1.9%	1.1%	0.4%	0.0%	1.1%	0.8%	2.5%
친목단체 (동창회 등)	5.0%	5.4%	6.5%	7.5%	3.4%	5.1%	4.8%	5.0%	19.4%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	1.4%	1.2%	5.3%	3.1%	0.8%	3.5%	3.3%	1.8%	4.7%
기타사회 활동	0.2%	0.2%	0.3%	0.9%	0.5%	0.0%	0.4%	0.4%	0.1%
사례수	24,778	25,583	6,899	8,100	23,733	311	12,317	101,721	8,253,365

<표 22>는 부인의 사회활동 정도를 보여준다. 우선 <표 21> (남편의 사회활동)에 비해, <표 22> (부인의 사회활동)는 전반적으로 부인의 사회참여가 남편에 비해 낮음을 보여준다. 내국인가구의 경우 부인(37.8%)은 남편(43.9%)에 비해 6% 정도 사회참여 정도가 낮다. 다문화가구의 외국인 부인들 역시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내국인가구에 비해 사회참여가 낮은 편이나, 외국인 부인의 출신 국적별로 차이가 훨씬 크다. 우선 일본(45.3%)과 미국(39.2%)부인은 내국인부인(37.8%)에 비해 사회활동이 더 많다. 일본(34.4%)과 미국(19.0%) 부인은 종교단체 활동이 높으며, 특히 일본부인의 종교단체 참여는 내국인부인의 2배 이상으로 높다.

일본과 미국 부인을 예외로 하면, 다른 다문화가구의 외국인 부인들은 내국인부인에 비해 사회참여가 현저히 낮다. 외국인 부인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장 많은 집단은 일본인 부인으로 이들은 종교활동(34.4%)외에도, 친목단체(6.5%), 사회단체(6.0%), 교육단체(5.3%) 등 다른 국적의 부인에 비해 사회참여가 높고 비교적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참여가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 부인으로 8.9%만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참여가 낮은 집단은 중국(13.3%)과 조선족(13.4%)으로 7명 중 한 명 정도만이 사회활동이 있었다.

3) 다문화가구의 경제활동

경제활동 측면에서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가구내에서는 부인의 출신국적별로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활동과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등을 비교하였다. 우선 내국인가구에 속하는 내국인 남편(89%)과 다문화가구의 한국인 남편(86%)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남편들의 경제활동 정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표 23>).

그러나 남편들의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사업주로 일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 역시 외국인 부인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집단은 부인이 미국인인 경우(92.9%)이고,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집단은 필리핀 (23.2%), 조선족(20.1%), 베트남(20.0%) 부인과 결혼한 경우이다(<표 24>).

<표 25>는 한국인 남편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을 보여준다. 미국인 부인과 결혼한 경우는 그 수가 극히 적지만, 주로 전문과학서비스업(25.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5%), 교육서비스업(13.1%)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내국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은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 부인과 결혼한 경우이다. 한편 한국인 남편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은 미국부인과 결혼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다문화가구이다. 특히 베트남(33.1%), 기타(30.2%), 중국(29.5%)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남편이 제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인 남편의 직업은 미국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전문가(46.4%), 관리자(19.9%), 사무직(17.6%) 등 화이트칼라 직업 종사자가 많다. 그 다음은 일본인 부인과 결혼한 경우로, 전문가(19.2%), 사무직(14.1%) 종사자가 다른 중국 및 동남아 부인들과 결혼한 경우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한편 한국인 남편이 기계조립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은 베트남(33.1%)과 중국(32.2%)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고, 남편이 단순노동직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는 경우는 필리핀(19.1%)이거나 조선족(16.7%)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다.

<표 23> 한국인 남편(가구주, 25-64세)의 경제활동여부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주로 일	82.0	82.5	84.2	79.3	83.1	79.9	83.2	82.4	86.3
틈틈이 일	0.6	1.0	1.2	1.5	0.9	3.6	1.0	0.9	0.8
휴가 등 잠시	2.3	2.8	2.4	2.5	1.6	2.9	1.7	2.2	1.5
일하지 않음	15.2	13.8	12.2	16.7	14.4	13.6	14.1	14.4	11.4
소계	100.1%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사례수	24,617	25,614	7,016	8,048	22,821	309	12,170	100,595	8,301,056

<표 24> 한국인 남편(가구주, 25-64세)의 종사상 지위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임금 근로자	74.5	71.5	71.3	70.3	74.2	92.9	72.2	72.9	65.4
자영자	17.5	20.1	19.6	23.2	20.0	0.0	17.8	19.3	21.3
사업주	6.7	7.2	7.4	3.9	3.9	7.1	8.7	6.3	11.9
무급가족 종사자	1.3	1.2	1.7	2.6	1.9	0.0	1.3	1.6	1.4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사례수	20,873	22,081	6,157	6,707	19,534	267	10,455	86,074	7,351,972

<표 25> 한국인 남편(가구주, 25-64세)의 산업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농림어업	5.3	5.0	8.5	15.6	12.2	0.0	6.3	7.9	5.1
광업	0.1	0.1	0.2	0.2	0.2	0.0	0.1	0.1	0.2
제조업	29.5	27.0	24.3	28.3	33.1	18.4	30.2	29.3	22.1
전기가스 수도	0.3	0.3	0.7	0.6	0.7	0.0	0.3	0.5	0.7
하수및환경 복원업	0.5	0.6	0.6	1.0	0.7	0.0	0.2	0.6	0.5
건설업	16.0	21.0	11.6	14.4	15.0	4.1	12.3	16.1	11.5
도소매업	9.7	8.7	11.3	6.9	7.4	4.9	10.6	8.9	12.6
운수업	13.1	11.1	6.2	8.7	9.4	0.0	9.8	10.5	8.3
숙박음식점업	5.5	7.0	2.3	3.1	3.3	3.4	4.3	4.8	3.8
출판및정보 서비스업	1.7	1.2	5.1	1.2	0.7	4.5	2.6	1.7	3.2
금융보험업	0.7	1.0	1.7	0.7	0.5	8.6	1.3	0.9	3.5
부동산임대업	1.7	2.6	2.6	1.0	1.3	0.0	1.7	1.8	2.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9	1.0	4.8	0.8	1.2	25.5	2.6	1.8	4.8
사업시설관 리및지원업	5.0	5.5	4.2	5.0	4.6	0.0	4.0	4.8	2.9
공공행정국 방등행정	2.0	1.7	3.5	3.3	2.3	0.0	2.3	2.2	5.8
교육서비스업	1.6	1.2	5.0	2.7	1.3	13.1	4.0	2.1	4.8
보건업사회 복지서비스업	0.4	0.5	1.2	0.7	0.8	13.5	1.3	0.7	2.0
예술여가관 련서비스업	0.7	0.8	1.4	0.7	0.8	4.1	2.2	1.0	1.2
협회수리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4.4	3.7	4.5	5.3	4.6	0.0	3.8	4.3	4.3
가구내고용 활동등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국제및외국 기관	0.0	0.0	0.2	0.0	0.0	0.0	0.1	0.0	0.1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사례수	20,873	22,081	6,157	6,707	19,534	267	10,455	86,074	7,351,972

<표 26> 한국인 남편(가구주, 25-64세)의 직업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관리자	1.6	1.2	5.2	1.0	0.4	19.9	3.7	1.7	5.6
전문가	7.1	4.8	19.2	7.0	5.0	46.4	12.3	7.7	18.8
사무직	10.0	8.2	14.1	5.2	5.1	17.6	11.7	8.6	17.1
서비스직	4.9	6.0	3.9	4.6	3.9	3.4	4.6	4.8	5.1
판매직	5.6	5.9	7.0	3.8	4.2	9.4	7.0	5.5	10.1
농·어업	5.3	5.0	9.2	14.4	11.8	0.0	6.3	7.8	5.0
기능직	20.1	23.8	15.3	20.1	22.0	0.0	17.5	20.8	13.2
기계조립직	32.2	28.4	19.0	24.7	33.1	3.4	25.8	29.0	18.3
단순노동직	13.2	16.7	7.2	19.1	14.5	0.0	11.0	14.1	6.9
소계	100.0%	100.0%	100.1%	99.9%	100.0%	100.1%	99.9%	100.0%	100.1%
사례수	20,834	22,075	6,127	6,707	19,522	267	10,434	85,966	7,291,474

<표 27>은 부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준다. 우선 외국인 부인의 4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 부인의 취업률(52%)에 비해 7% 정도 낮은 편이다. 외국인 부인 중에서 경제활동참여가 가장 높은 집단은 조선족 부인(54%)이고, 그 다음은 중국(48%), 필리핀(46%) 부인의 순이었다. 한편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낮은 집단은 미국(34%), 베트남(38%), 일본(40%) 부인이다. 미국과 일본 여성의 교육정도가 높은 것(<표 19>)을 고려할 때, 이들의 취업정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표 27> 외국인 부인(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주로일	41.3	46.2	25.5	35.9	32.3	30.9	31.8	37.8	43.7
틈틈이일	5.0	4.8	11.8	9.0	4.5	3.5	5.7	5.7	6.1
휴가등잠시취업	1.6	2.7	2.4	1.2	1.5	0.0	2.0	1.9	2.5
일하지않음	52.2	46.3	60.3	53.9	61.6	65.6	60.5	54.6	47.8
소계	100.1%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1%
사례수	24,778	25,583	6,899	8,100	23,733	311	12,317	101,721	8,253,365

외국인 부인의 종사상의 지위는 미국부인을 예외로 하면 다문화부인들은 내국인부인에 비해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약간 더 많고, 자영자나 사업주인 경우가 적

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다문화가구 남편의 모습과 유사하다(<표 28>).

<표 28> 외국인 부인(배우자)의 종사상의 지위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임금근로자	77.2	73.8	72.5	72.5	74.8	57.0	72.2	74.5	64.8
자영자	6.5	8.0	6.1	6.1	3.4	22.4	7.6	6.4	11.3
사업주	3.5	4.6	4.7	2.7	0.6	10.3	3.6	3.3	6.2
무급가족종사자	12.8	13.7	16.8	18.7	21.2	10.3	16.6	15.8	17.8
소계	100.0%	100.1%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사례수	11,854	13,750	2,739	3,731	9,115	107	4,871	46,167	4,312,323

<표 29>를 통해, 다문화부인들이 취업을 한 경우에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인 부인은 대부분이 교육서비스업(78.5%)이거나 개인서비스업(11.2%) 또는 전문기술서비스업(10.3%)에 종사하고 있다. 내국인 부인에 비해 외국인 부인이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에 더 종사하는 경우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 부인이고, 제조업에 더 종사하는 경우는 베트남(41.6%), 중국(28.3%), 조선족(22.6%), 필리핀(21.9%) 여성이고, 숙박·음식점업에 더 종사하는 경우는 조선족(34.8%)과 중국(25.7%) 부인이다. 즉 조선족과 중국 부인은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과 필리핀 부인은 28%정도가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베트남 여성은 42%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30>은 부인들의 직업을 보여준다. 내국인 부인들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다양한 직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외국인 부인의 직업은 출신 국적에 따라 특정 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미국부인은 전문직(65.4%)과 서비스직(24.3%)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부인 다음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내국인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집단은 일본(37.6%), 필리핀(31.6%), 기타(21.3%) 국적의 부인이다. 서비스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우는 조선족(30.2%)과 중국(22.9%) 부인이고, 농림어업직에는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일본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베트남 여성은 단순노동직(34.3%)과 기계조립직(21.8%)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표 29> 외국인 부인의 산업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농림어업	5.8	5.4	10.7	14.3	17.6	0.0	10.4	9.5	6.7
광업	0.0	0.0	0.0	0.0	0.0	0.0	0.1	0.0	0.0
제조업	28.3	22.6	13.8	21.9	41.6	0.0	26.0	27.5	14.8
전기가스수도	0.0	0.0	0.0	0.0	0.0	0.0	0.0	0.0	0.1
하수및환경 복원업	0.1	0.1	0.0	0.1	0.0	0.0	0.0	0.1	0.1
건설업	2.0	1.3	1.0	0.0	0.4	0.0	0.2	1.1	1.7
도소매업	10.3	7.6	11.5	4.8	5.1	0.0	8.9	7.9	16.3
운수업	0.4	0.6	0.1	0.3	0.3	0.0	1.3	0.5	1.2
숙박음식점업	25.7	34.8	5.1	6.0	8.1	0.0	10.8	20.5	11.8
출판및정보 서비스업	0.3	0.5	0.4	0.6	0.1	0.0	1.1	0.4	1.4
금융보험업	0.5	0.9	0.4	0.1	0.5	0.0	0.6	0.6	4.4
부동산임대업	0.4	1.0	0.9	0.2	0.2	0.0	0.1	0.5	2.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2	1.0	3.6	0.2	0.7	10.3	3.5	1.4	2.1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업	4.6	4.7	6.6	6.1	7.1	0.0	6.4	5.5	4.2
공공행정국방등 행정	2.1	2.1	6.9	4.6	5.6	0.0	5.2	3.6	3.8
교육서비스업	7.2	6.2	28.4	27.6	1.7	78.5	12.7	9.5	11.6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4.1	4.2	5.7	7.4	2.7	0.0	5.0	4.3	9.5
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0.5	0.6	1.0	0.2	0.3	0.0	0.0	0.4	1.2
협회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	5.2	4.5	3.8	5.3	7.1	11.2	7.0	5.5	5.5
가구내 고용활동등	1.3	1.8	0.0	0.3	0.7	0.0	0.1	1.1	1.4
국제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0.0	0.7	0.1	0.0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사례수	11,854	13,750	2,739	3,731	9,115	107	4,871	46,167	4,312,323

<표 30> 외국인 부인(배우자)의 직업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관리자	0.3	0.3	0.4	0.3	0.0	0.0	1.9	0.4	1,2
전문가	9.2	8.3	37.6	31.6	2.2	65.4	21.3	12.5	19,7
사무직	5.6	4.1	7.0	2.4	2.1	0.0	6.3	4.3	15,9
서비스직	22.9	30.2	6.8	8.8	7.3	24.3	11.0	18.6	15,7
판매직	9.0	8.1	10.7	4.0	3.6	10.3	6.7	7.1	16,1
농·어업	5.6	5.5	9.7	12.5	16.6	0.0	9.8	9.0	6,4
기능직	7.1	6.8	3.3	5.3	12.1	0.0	8.8	7.8	4,9
기계조립직	16.8	13.3	3.4	11.8	21.8	0.0	11.9	15.0	6,2
단순노동직	23.5	23.5	20.9	23.3	34.3	0.0	22.4	25.3	13,9
소계	100.0%	100.1%	99.8%	100.0%	100.0%	100.0%	100.1%	100.0%	100.0%
사례수	11,854	13,750	2,739	3,731	9,115	107	4,871	46,167	4,311,448

이상을 통하여, 한국인 남편(가구주) +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다문화가구에 속해있는 외국인 부인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국인 부인에 비해 외국인 부인들은 특정 산업과 직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족과 중국여성은 숙박·음식점업에서의 서비스직이거나 제조업 등에서의 단순노동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베트남 부인은 일부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제조업 공장에서의 단순노동직과 기계조립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취업중인 일본과 필리핀 부인의 3명 중 1명은 교육서비스업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 부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육서비스업의 전문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 일본, 필리핀 부인들은 학원과 학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4) 다문화가구의 가구 특성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의 평균 가구원의 수는 평균 3.3명으로, 이는 내국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3.5명)와 큰 차이는 없으나, 표준편차에서 차이가 크다. 즉 내국인가구는 1인가구부터 7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분산이 비교적 큰 편이나, 다문화가구의 경우에는 2인~4인 정도로 가구원의 수가 몰려

있는 편이다. 특히 부인의 국적이 중국, 조선족, 미국인 경우에는 2~4인으로 가구원의 수가 적은 편이다. 다문화가구 가운데 가구원의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부인이 일본인인 경우로, 가구원의 수가 3명~5명 정도이다(<표 31>).

그러나 <표 31>은 부부자료(data)를 이용하여 가구원의 수를 분석한 것이므로, 외국인 부인이 며느리인 경우는 그 분석대상에서 빠져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가 더 포함된다면, 다문화가구의 가구원 수는 <표 31>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표 31>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의
외국인 부인(배우자)국적별 가구원 수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가구원 수	3.1 (1.1)	3.1 (1.1)	4.0 (1.4)	3.7 (1.2)	3.4 (1.1)	3.1 (1.0)	3.4 (1.2)	3.3 (1.1)	3.5 (3.3)
사례수	24,690	25,743	7,013	8,125	23,002	303	12,128	101,004	806,407

<표 32>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의
외국인 부인(배우자) 국적별 거처의 점유형태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자기집	40.2	37.1	42.7	43.8	51.3	51.2	44.1	42.9	62.7
전세	27.6	28.1	31.1	22.4	23.9	31.7	25.0	26.4	23.5
보증금 있는 월세	27.5	30.6	20.1	24.0	18.0	12.2	23.4	24.8	10.4
보증금 없는 월세	1.8	1.8	1.2	3.3	1.8	0.0	2.6	2.0	0.8
사글세	0.9	0.9	1.4	2.4	1.7	0.0	1.3	1.3	0.6
무상	2.0	1.5	3.4	4.1	3.3	5.0	3.5	2.6	2.1
소계	100.0%	100.0%	99.9%	100.0%	100.0%	100.1%	99.9%	100.0%	100.1%
사례수	24,690	25,743	7,013	8,125	23,002	303	12,128	101,004	8,280,534

한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의 거쳐 점유형태는 <표 32>와 같다. 우선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내국인가구(62.7%)에 비해 다문화가구(42.9%)는 매우 낮다. 대신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는 경우가 더 많다. 다문화가구 중에서는 부인이 베트남이거나 미국인인 경우는 절반(51%) 정도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부인이 조선족인 경우는 37%만이 자기집을 가지고 있었다.

<표 33> 다문화가구(25-64세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의 거주 지역

시도 (가구주)	다문화가구(한국인 남편 + 외국인 부인)								내국인+ 내국인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서울	18.1	21.2	21.3	9.9	8.2	44.0	18.7	16.4	19.4
부산	3.7	4.2	3.6	2.8	5.5	0.0	5.0	4.3	7.1
대구	3.4	2.4	1.6	1.8	5.5	0.0	2.4	3.3	5.2
인천	8.2	8.5	4.2	4.2	4.6	3.9	5.5	6.5	5.6
광주	2.0	2.1	3.4	5.0	2.9	0.0	1.5	2.5	3.0
대전	2.3	1.4	2.5	3.9	2.9	0.0	2.6	2.4	3.1
울산	2.3	1.6	1.3	1.4	3.9	0.0	2.6	2.4	2.6
경기도	30.3	34.1	24.4	18.2	19.4	40.8	27.0	27.1	24.4
강원도	2.4	2.2	3.9	6.4	3.5	0.0	4.1	3.2	2.9
충북	3.3	2.8	3.1	5.0	4.6	0.0	3.4	3.6	3.1
충남	4.6	3.7	4.8	7.7	6.1	2.9	4.4	4.9	3.9
전북	4.0	2.8	5.0	7.4	4.9	0.0	4.0	4.2	3.4
전남	3.2	2.7	7.4	10.6	6.8	0.0	4.8	5.0	3.4
경북	5.0	4.5	4.6	6.6	9.2	0.0	6.0	6.0	5.3
경남	6.1	4.9	8.1	7.1	10.9	8.4	6.7	7.2	6.7
제주도	1.0	0.9	0.6	2.1	1.2	0.0	1.2	1.1	1.0
소계	100.0%	100.0%	99.8%	100.1%	100.1%	100.0%	99.9%	100.1%	100.1%
사례수	24,617	25,614	7,016	8,048	22,821	309	12,170	100,595	8,301,056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의 거주지역은 <표 33>에 제시하였다. <표 33>은 다문화가구의 부인의 출신국적에 따라 이들의 거주지역이 확연히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특정 거주지역에 가장 집중된 집단은 한국인 남편과 미국인부인의 경우로, 이들의 90% 가까이가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내국인가구와 비교할 때 조선족과 중국인 부인들은 경기도에 더 집중되어 있고, 필리핀인 부인은 주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그리고 베트남 부인들은 경상도에 상대적으로 더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구는 그 외국인부인의 출신국적에 따라 수도권 집중형(미국, 조선족, 중국)과 전라도와 경상도 등 지방집중형(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Ⅲ. 결론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총조사)는 국내 센서스 역사상 처음으로 센서스 문항에 '현재국적'과 '출생국적' 그리고 '입국시기'를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계청은 전수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현재국적'과 '출생국적'을 조합하여, 내국인(귀화)과 외국인으로 분류한 후, 이러한 귀화 내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를 모두 다문화가구로 분류하였다. 즉 2010년 총조사 전수자료의 다문화가구란 귀화자나 외국인이 1명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한다. 그 결과, 전수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38만여 가구가 '다문화가구'로 집계되었고, 다문화가구에 속한 구성원의 수는 94만여명에 달하였다. 통계청의 이러한 '다문화가구' 개념은 그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한국인(출생과 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귀화자 포함) 가족에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더욱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혜경 2011).

한편, 2010년 총조사의 표본자료는 전국적으로 10%의 표본가구를 조사하였고, 가구조사라는 특성 상 기본적으로 내국인 가구 내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는 집계되었지만,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외국인 1인가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구를 이루었다가 이혼과 사별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홀로 남겨진 경우는 분석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10% 표본자료에 집계된 외국인들 가운데 누가 다문화가구에 속하나를 살펴보았다. 우선 출생국적을 이용하여 외국출생 남성과

여성 가운데,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인과 가구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이들이 배우자인 경우, 가구주인 경우, 그리고 며느리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다문화가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혼부부인 경우만을 골라내어 가구주와 배우자를 합친 부부 data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구와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구를 비교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0% 표본조사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인 한국인 남편(가구주)과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을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로 비교하였고, 동시에 내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준거집단으로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문화 가구의 유형별 비교, 출신국적별 비교, 그리고 내국인가구와의 비교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문화가구의 출산정도, 사회참여,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우리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평균 출생아수에 있어서, 내국인가구와 다문화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국내 다문화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조선족 출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이들의 상당수가 재혼이며, 모국(중국)에서의 1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평균 1자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구 중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내국인에 비해 약간이라도 높은 경우는 30대 후반 이후의 일본 여성이거나, 20대의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뿐이다. 일본과 필리핀 여성의 약간 높은 출산율은 통일교와 카톨릭이라는 종교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부부 모두 사회참여가 낮은 편이다. 특히 외국인 부인의 사회참여는 일본과 미국여성을 예외로 하면 매우 낮다. 외국인 부인 가운데 사회참여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본 부인으로 이들은 종교활동 참여가 높고, 그 밖의 여러 단체활동도 높은 편이다. 한편 사회참여가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 중국, 그리고 조선족 부인이다.

셋째, 경제활동은 한국인 남편(가구주) +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국인 부인에 비해 외국인 부인들은 특정 산업과 직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조선족과 중국여성은 숙박·음식점업에서의 서비스직이거나 제조업 등에서의 단순노무직, 베트남 부인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거

나, 제조업 공장에서의 단순노동직과 기계조립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취업중인 일본과 필리핀 부인은 3명 중 1명꼴로, 미국 부인은 거의 대부분이 교육서비스업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학원과 학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10% 표본조사에서는 한국남편 + 외국부인의 경우만을 부인의 출신국적별로 나누어 심층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5년 20% 표본조사가 가능하다면, 외국남편 + 한국부인의 경우와 다문화가구내 부부 중 누가 가구주이냐에 따른 더욱 다양한 심층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가구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가구외에도 매우 다양한 다문화가구가 존재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2010년 표본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구를 분석할 경우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다문화가구는 내국인가구에 비해, 부부 각각의 연령분포가 매우 다르므로, 다문화가구와 내국인가구 그리고 다문화가구 간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10% 표본조사를 활용하여 향후 다문화가구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에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배우자는 물론 며느리인 경우까지 포함해야 할 것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총조사의 10% 표본자료를 개인data로 분석할 경우에는, 2010년 표본조사에는 외국인 남성의 약 50%정도와 외국인 여성의 약 80%정도만이 결혼이민자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 data에서 혼인상태와 가구주와의 관계 등을 잘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를 먼저 추출한 후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다문화가구는 기본적으로는 1) 한국남편 + 외국부인과 2) 외국남편 + 한국부인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러한 두 유형을 다시 부부 중 누가 가구주인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 및 귀화여부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여러 다문화가구로 나눌 수 있고, 각 세부 유형별로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2010년 총조사의 표본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구를 분석할 경우에는 개인 data로 사용하기보다는 가구주 정보와 배우자 정보를 합하여 부부data로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유용성도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만 부부data를 만들 수 있어서, 이혼과 사별 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개인은 부부data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외국인이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며느리이거나 사위 중인 경우도 부부data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표본조사를 부부data로 만들어 분석할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책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었다면, 향후에는 2010년 총조사는 물론 2012년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더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매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2012년 조사는 통계청에 의뢰하여 그 조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인구 총조사 표본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내에서 다문화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5년, 2006년, 2009년, 2012년 조사가 있고, 2010년 총조사 10%표본조사가 있다. 2015년 총조사 등 향후 총조사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에 대한 조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그간의 다른 조사와의 수평적 및 수직적(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표본조사를 위해 추후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내·외국인 개념에 대한 논의: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외국인인가?

총조사 표본조사에서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외국인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10년 표본조사(전수조사 포함)에서는 출생국적과 현재국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국제이동이 증가하여, 미국 등 속지주의 국적법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우리 국민의 자녀(출생국적이 외국)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생국적과 현재국적을 이용하여 이들과 외국인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즉 부모 모두 한국인의 자녀가 미국(출생)국적이었다가, 한국국적 선택한 경우와 부모가 외국인인 미국국적 사람이 나중에 귀화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총조사 질문에서 종족 등을 질문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문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은 표본조사를 개인data로 분석할 경우이거나 부부data로 분석할 경우에 다문화가구에 속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1% 미만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향후 다문화가구 등 외국인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경우에는, 국적을 통제하지 않고 총조사에 집계된 모든 사람들을 내국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표본조사에서 다문화 1인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문제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84호) 제2조(정의)에 의하면, 다문화가족(개정 2011.4.4.)이란 1)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2) 한국인과 귀화자; 그리고 3)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법의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서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혼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이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와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이 법의 저축을 받는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아직 이 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1인 가구라 할 지라도 명백한 다문화가족에 속한다.

더욱이 다문화가구는 부부간 연령차이가 크고,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평균 17살 정도 차이가 있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홀로 남겨지는 다문화 1인가구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2015년 이후 총조사 표본조사에 있어서 외국인 1인가구는 물론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구태여 표집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사실혼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문화가구는 부부간 연령차이가 매우 큰 편이므로, 향후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결혼이민자 가구나 다문화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 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도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정주이민과 일시이민의 구별 자체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총조사는 물론 표본조사에서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외국인 1인가구도 그 조사대상에 포함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희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이해경. 2010.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2010 사회동향]. 통계청.

이해경. 2011. “통계로 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결과 심층분석 연구: 이슈페이퍼]. 2011년 통계청 정책연구보고서

Part III

PartⅢ는 주택부문이다. 주택분야는 주거밀도의 변화(이재훈), 주택 관련 주거혼잡도 등 파생지표 개발(박신영)의 두 가지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택 및 주거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까운 장래의 주거형태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우선 제 8장 주거밀도의 변화(이재훈)를 살펴보자. 주거밀도는 사용하는 방 당 사람 수, 또는 일정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당 거주인원수, 거주 지역 단위별로는 단위 면적당 주택 수(거주 지역 단위별, 아파트 등의 유형별 주택 수)를 연구할 수 있다.

주거과밀은 사생활 보장과 건강,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주거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큰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보다 작은방에 한명씩 생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에, 1인당 하나의 방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오래 동안 미국에서의 질적 주거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전수조사(주택유형, 주택 당 평균면적 등)와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거환경(사용방수, 주거시설 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유형별 평균가구원수를 활용한 주택유형별 주거 밀도, 주택 및 시설별 사용가구수를 토대로 한 주거 밀도, 행정구역별 거주가구수와 평균가구원 수를 토대로 한 행정구역별 주택 당 주거 밀도,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주거 밀도를 1980년대 이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토대로 제시함으로써 30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사용과 관련된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행정구역별 주거 밀도의 변화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지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당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제시되는 통계인 가구의 종류, 방의 종류에 따른 사용 수, 거처의 종류, 주거 연면적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거주하는 가구(가구 수/가구원 수)별 밀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수준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한편, 이를 행정구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성장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PartⅢ의 두 번째 주제인 제 9장 주택관련 주거혼잡도 등 파생지표 개발(박신영)연구에서는 기존 통계청의 통계표 작성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표의 작성에서부터 주택의 양과 질, 그리고 가구의 주거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통계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수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로 가구원수를 제시하면서 이들 가구가 사용하는 방수, 그리고 평균 사용방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처(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또는 주택(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종류별로 사용방수와 가구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종류별/주택면적 구간(20㎡ 이하, 20~40㎡, 40~60㎡, 60~85㎡, 85~100㎡, 100~130㎡, 130~165㎡, 165~230㎡, 230㎡ 이상)별로 가구수와 가구원수 등의 숫치를 제공하고 있다. 10% 표본조사를 통해서도 해당 거처의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임대료 등의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와 주택에 관한 각종 통계는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표의 상당수가 주택(거처)를 중심으로 생산되며, 가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자료조차 가구의 주거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거처는 14,186,668개이나 거처와 가구를 매치하는 표에서 거처수는 17,339,422개로 늘어남으로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가구별로 전용 사용여부를 물어본 시설(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샤워시설)의 사용실태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통계표의 작성에서부터 주택의 양과 질, 그리고 가구의 주거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통계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열악한 주택사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과밀주거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심리적 긴장을 유발해서 고혈압, 사망률 증가, 정신이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동 증대,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배순석 외, 1997: 35-36).

부적절한 주택은 학습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Arthurson & Jacobs(2003)는 부적절한 주거는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주거는 그 입지, 물리적 환경, 점유의 안정성, 과밀,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가구 또는 구성원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가져온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 자료는 이러한 지표로 주택보급률,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가구원수가 감안된 가구당 사용방수, 가구별 시설전용사용비율, 불량주택 거주 가구수 비율을 제안하였으며, 통계청의 수치 등을 활용하여 지표별 수치중 가능한 것을 살펴보았다.

지표별로 정확한 통계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등 추가분석이 필요하나, 6개의 지표가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8주제 : 주거 밀도의 변화

이 재 훈(단국대학교)

I. 서론

1. 연구개요

주거밀도는 사용하는 방 당 사람 수, 또는 일정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당 거주인원수, 거주 지역 단위별로는 단위 면적당 주택 수(거주 지역 단위별, 아파트 등의 유형별 주택 수)를 연구할 수 있다.

주거과밀은 사생활 보장과 건강,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주거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큰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보다 작은방에 한명씩 생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에, 1인당 하나의 방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오래 동안 미국에서의 질적 주거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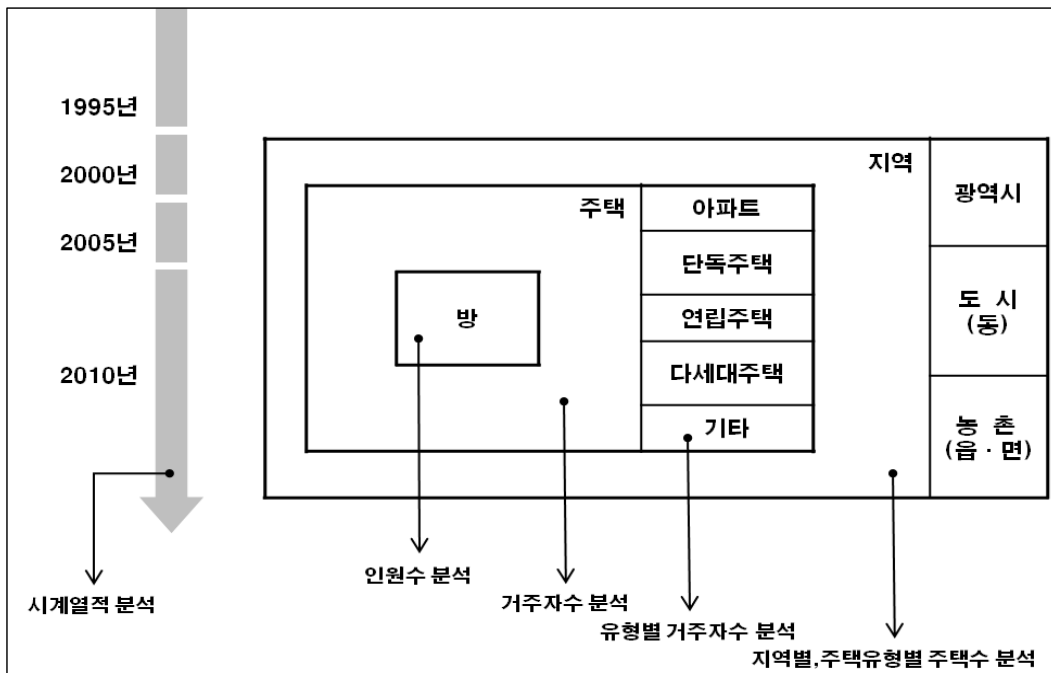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전수조사(주택유형, 주택 당 평균면적 등)와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거환경(사용방수, 주거시설 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유형별 평균가구원수를 활용한 주택유형별 주거 밀도, 주택 및 시설별 사용가구수를 토대로 한 주거 밀도, 행정구역별 거주가구수와 평균가구원 수를 토대로 한 행정구역별 주택 당 주거 밀도,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주거 밀도를 1980년대 이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토대로 제시함으로써 30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사용과 관련된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행정구역별 주거 밀도의 변화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지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당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2. 연구방향 및 내용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제시되는 통계인 가구의 종류, 방의 종류에 따른 사용 수, 거처의 종류, 주거 연면적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거주하는 가구(가구 수/가구원 수)별 밀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수준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한편, 이를 행정구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성장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거주자수와 사용하는 방수에 대한 대비를 통해 1인당 사용하는 방수를 따져, 거주밀도를 분석하고 가구의 종류(1인 가구, 2인 이상의 가구)별 거주밀도를 분석하여 가구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표.1의 구성 체계에 따라 국가정보포탈(kosis.kr)의 자료와 주거실태 표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행정구역별 주택면적 밀도를 분석하기위해 행정구역별 주택 수 및 주택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정보포탈 2010년 자료를 사용 하였다.

<표 1> 주거밀도 분석항목 : 방당 인원수, 주택 당 거주자 수, 주택 유형별 거주자 수, 지역별 주택 수 등의 시계열적 분석



II. 본론

1. 1인 평균 사용 방수

2010 주거실태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체 179,293명의 응답에서 1인가구의 응답자수는 45,520명 (25.39%), 2인 이상의 가구의 응답자수는 133,763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포탈의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의 1인가구와 2인 이상의 가구로 분류하여 1인가구수(1인 가구원 수)와 2인 이상의 가구 수 및 가구원수를 구하여 평균 가구원 수를 추출하였다. <표 1>은 가구 구분별, 방의 종류별 평균 방의 개수로 혼자서 살림하는 1인가구와 2인 이상의 가구에서 1인당 평균 사용 방의 수를 구하여 비교 하였다.

<표 1> 가구 구분별, 방의 종류별 평균 방의 개수

가구 구분	혼자서 살립하는 1인가구	2인 이상의 가구	전체
응답자 수	45,530	133,763	179,293
비율	25.39%	74.61%	100%
잠자는 방수-계	45,530	287,535	333,065
기타 용도방 ²⁾ 계	42,310	90,409	132,719
잠자는 방+기타용도방-계	87,840	377,944	465,784
평균가구원수	1	3.221	2.690
가구당 평균 방의 개수(잠자는 방+기타용도 방)	1.929	2.825	2.598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1.929	0.877	0.877

자료 : 2010년 주택인구총조사(가구/주택) 표본조사

<표 2> 평균 가구원수를 구한 계산식

□ 1인 가구(표본) : 45,530 호 (25.39%)

● 전국 1인가구의 가구수³⁾ = 전국 1인 가구원 수 = 4,142,165 가구

□ 2인 이상의 가구(표본) : 133,763 호 (74.61%)

●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수 = 전체 가구수⁴⁾ - 1인 가구 가구수
 = 17,339,422 - 4,142,165
 = 13,197,257 호

●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수 = 전체 가구원수⁵⁾ - 1인가구 가구원수
 = 46,650,668 - 4,142,165
 = 42,508,503 명

● 2인 이상 가구 평균 가구원 수 = 2인 이상 가구원수/2인 이상인 가구수
 = 42,508,503 ÷ 13,197,257 ≒ 3.221명/가구

2) 잠자는 방, 거실, 식사방을 제외한 방

3)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 1인가구 수

4)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합계.

5)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의 가구원 합계.

전국 2인 이상의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221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를 바탕으로 평균 1인당 사용 방수가 1인가구의 경우 1.929개, 2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0.877개로 나타났으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자는 방과 기타용도 방의 평균 개수에서 1인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해 평균 방수가 낮지만 1인당 평균 사용 방수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1인 가구의 연령별 평균 사용방수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가구/주택)의 표본 179,293개 중 1인 가구 45,530를 나이별, 거처의 종류별로 분류 하였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답자 수는 20세 이하가 811명(1.8%)로 가장 낮았으며 71세 이상의 응답자 수가 10,654명(2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표본에서는 1인 가구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인당 평균 방의 수도 20세 이하의 연령층이 1.187개로 가장 적었으며 5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1가구당 평균 방의 수가 2개를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1인 가구의 거처의 연령별 평균 사용 방의 개수>6)

연 령	응답자 수	잠자는 방의 수	기타 용도 방수	잠자는 방 + 기타 용도 방수-계	1가구당 평균 방의 수
20세 이하	811 (1.8%)	811	152	963	1.187
21세 이상 ~ 30세 이하	7,692 (16.9%)	7,692	3,082	10,774	1.401
31세 이상 ~ 40세 이하	7,040 (15.5%)	7,040	5,340	12,380	1.759
41세 이상 ~ 50세 이하	6,344 (13.9%)	6,344	5,599	11,943	1.883
51세 이상 ~ 60세 이하	6,283 (13.8%)	6,283	6,855	13,138	2.091
61세 이상 ~ 70세 이하	6,706 (14.7%)	6,706	8,361	15,067	2.247
71세 이상	10,654 (23.4%)	10,654	12,921	23,575	2.213
합 계	45,530 (100%)	45,530	42,310	87,840	1.929

자료 : 2010년 주택인구총조사(가구/주택) 표본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1인가구의 연령별 거처의 종류를 보면, 50세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29.8% ~ 31.5%)이, 51세 이상의 경우(32.4% ~ 33.0%)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혼자서 살림하는 1인가구 표본 45,530개의 잠을 자는 방의 수와 기타 용도 방의 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표 2-A> 1인가구 연령별 거처의 종류

연령	거처의 종류	응답자수 (명)	비율 (%)
20세 이하	계	811	100.0%
	단독주택	242	29.8%
	아파트	455	56.1%
	연립·다세대주택	66	8.1%
	기타	48	5.9%
21세 이상~30세 이하	계	7,692	100.0%
	단독주택	2,363	30.7%
	아파트	4,226	54.9%
	연립·다세대주택	664	8.6%
	기타	439	5.7%
31세 이상~40세 이하	계	7,040	100.0%
	단독주택	2,218	31.5%
	아파트	3,876	55.1%
	연립·다세대주택	569	8.1%
	기타	377	5.4%
41세 이상~50세 이하	계	6,344	100.0%
	단독주택	1,950	30.7%
	아파트	3,558	56.1%
	연립·다세대주택	500	7.9%
	기타	336	5.3%
51세 이상~60세 이하	계	6,283	100.0%
	단독주택	2,072	33.0%
	아파트	3,399	54.1%
	연립·다세대주택	467	7.4%
	기타	345	5.5%
61세 이상~70세 이하	계	6,706	100.0%
	단독주택	2,172	32.4%
	아파트	3,693	55.1%
	연립·다세대주택	464	6.9%
	기타	377	5.6%
71세 이상	계	10,654	100.0%
	단독주택	3,497	32.8%
	아파트	5,738	53.9%
	연립·다세대주택	814	7.6%
	기타	605	5.7%

자료 : 2010년 주택인구총조사(가구/주택/인구) 표본조사

3.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 사용 방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2인가구 표본 133,763개를 대상으로 거처의 종류별 잠자는 방의 수와 기타용도 방의 수를 분류하여 주택별 평균 방의 개수와 1인당 평균 사용 방의 수를 분석한 자료는 표3.과 같다.

<표 3> 2인 이상 가구의 거처의 종류별 평균 사용 방의 개수⁷⁾

거처의 종류	응답자 수	잠자는 방수-계	평균 (개)	기타용도 방-계	평균 (개)	잠자는 방수+기타용도방-계	평균 (개)	1인당 평균 사용 방의 수
단독주택	39,445 (29.5%)	84,553	2.144	26,679	0.676	111,232	2.820	0.875
아파트	50,001 (37.4%)	107,738	2.155	34,356	0.687	142,094	2.842	0.882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2,287 (9.2%)	26,634	2.168	8,525	0.694	35,159	2.861	0.888
기타	32,030 (23.9%)	68,610	2.142	20,849	0.651	89,459	2.793	0.867
합계	133,763 (100%)	287,535	2.150	90,409	0.676	377,944	2.825	0.877

자료 : 2010년 주택인구총조사(가구/주택) 표본조사

2인 이상의 가구 표본 133,763개 중 단독주택은 39,445 (29.5%)를 차지하며 가구당 평균 2.820개의 방을 사용하고 1인당 평균 사용 방의 수는 0.875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50,001 (37.4%)로 가구당 평균 2.842개의 방을 사용하고 1인당 평균 사용 방의 수는 0.882로 나타났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2,287 (9.2%)로 가구당 평균 2.861개의 방을 사용하고 1인당 평균 사용 방의 수는 0.888로 나타나 2인 이상의 가구가 평균 2.825개의 방(잠자는 방, 기타용도 방)을 사용하며 1인당 평균 0.877개의 방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사용 방수는 거처의 종류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방의 종류를 잠을 자는 방, 거실, 부엌, 화장실로 분류하여 1인가구와 2인 이상의 가구의 가구당 평균 방의 개수를 분석 하였다. 표3-A.에서 보여 지듯이 2인 이상의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구당 사용하는 거실 수, 부엌 수, 화장실 수는 1인가구의 평균 개수와 비슷하거나 낮게 분석되어 2인 이상 가구의 거실 및 부엌, 화장실 사용 여건이 1인가구에 비해 상당히 열악함을 보여준다.

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2인가구 이상 표본 개수 : 133,763개 중 거처의 종류 미 응답 28,600개 기타목록에 합한 자료.

<표 3-A> 방의 종류별, 가구 구분별(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평균 방의 개수

분 류	잠을 자는 방	거실	부엌	화장실
1인가구 총 방의 개수 (개)	45,530	42,548	45,784	60,411
1인가구 가구당 평균 방의 개수 (개)	1.00	0.93	1.01	1.33
2인 이상 가구 총 방의 개수 (개)	1,287,535	120,007	139,508	171,121
2인 이상 가구 가구당 평균 방의 개수 (개)	2.15	0.90	1.04	1.28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 방의 개수 ⁸⁾ (개)	0.67	0.28	0.32	0.40
전체 평균 방의 개수 (개)	1.87	0.91	1.04	1.30

자료 : 2010년 주택인구총조사(가구/주택) 표본조사: 1인 가구(45,530개), 2인 이상 가구(133,763개)

4. 주택유형별, 행정구역별 1인 주거면적

가구원수는 국가통계포털의 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주택의 종류별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을 산출 하였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2000년도 6.0평(19.8㎡)에서 2010년 25.0㎡로 26.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종류별로는 단독 주택이 2000년 6.0평(19.8㎡)에서 2010년 26.2㎡로 3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주택의 종류에 따른 평균 1인당 주거면적을 분석 했을 때 단독주택, 기타,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순으로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구당 주거면적을 분석 했을 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부와 동부를 구분한 결과 읍·면부의 평균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도에 7.0평(23.1㎡)에서 2010년 28.9㎡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동부 보다 읍·면부의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8)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방의 개수 : 2인 이상 가구 가구당 평균방의 개수 ÷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3.221)

<표 4> 연도별, 행정구역별, 주택의 종류별 1인 주거면적⁹⁾

행정 구역	주택의종류	2000			
		가구 (가구)	가구원 (명)	가구당 주거면적 (평)	1인당 주거면적 (평)
전국	계	14,311,807	44,711,584	18.9	6.0
	단독주택	7,102,765	20,427,602	17.3	6.0
	아파트	5,237,582	17,887,519	21.1	6.2
	연립주택	836,174	2,846,187	20.0	5.9
	다세대주택	458,026	1,531,838	17.8	5.3
	기타	677,260	2,018,438	17.6	5.9
동부	계	11,229,476	35,750,609	18.5	5.8
읍·면부	계	3,082,331	8,960,975	20.3	7.0
행정 구역	주택의종류	2005			
		가구 (가구)	가구원 (명)	가구당 주거면적 (평)	1인당 주거면적 (평)
전국	계	15,830,062	45,620,984	20.1	7.0
	단독주택	7,064,128	17,959,023	18.3	7.2
	아파트	6,628,993	21,433,266	22.2	6.9
	연립주택	526,948	1,652,073	21.4	6.8
	다세대주택	1,168,481	3,582,507	18.6	6.1
	기타	441,512	994,115	17.8	7.9
동부	계	12,706,025	37,324,198	19.7	6.7
읍·면부	계	3,124,037	8,296,786	21.6	8.1
행정 구역	주택의종류	2010			
		가구 (가구)	가구원 (명)	가구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전국	계	17,210,364	46,440,297	67.4	25.0
	단독주택	6,859,694	15,668,457	59.8	26.2
	아파트	8,169,349	24,953,167	75.1	24.6
	연립주택	502,488	1,449,270	72.3	25.1
	다세대주택	1,241,590	3,504,553	60.9	21.6
	기타	437,243	864,850	55.4	28.0
동부	계	13,928,598	38,273,565	66.3	24.1
읍·면부	계	3,281,766	8,166,732	71.9	28.9

9)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

5. 행정구역(시·도)별 주택면적 밀도

<표 5> 2010년 행정구역(시·도)별 평균 1인당 주거면적¹⁰⁾, 주택면적 밀도¹¹⁾

행정구역	2010						
	일반가구 (가구)	가구원 (명)	가구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주택 총 연면적 (㎡)	행정구역 면적 (km ²)	주택 면적밀도 (%)
전국	17,210,364	46,440,297	67.4	25.0	1,159,978,534	100,033	1.16%
서울특별시	3,459,093	9,398,573	63.2	23.3	218,614,678	605	36.13%
부산광역시	1,236,746	3,294,813	67.7	25.4	83,727,704	767	10.92%
대구광역시	864,704	2,371,070	71.0	25.9	61,393,984	884	6.95%
인천광역시	914,939	2,578,090	64.2	22.8	58,739,084	1,029	5.71%
광주광역시	513,930	1,419,615	69.6	25.2	35,769,528	501	7.14%
대전광역시	529,719	1,436,425	68.2	25.1	36,126,836	540	6.69%
울산광역시	372,626	1,040,341	68.9	24.7	25,673,931	1,059	2.42%
경기도	3,801,321	10,871,575	68.6	24.0	260,770,621	10,167	2.56%
강원도	554,406	1,385,620	68.1	27.3	37,755,049	16,693	0.23%
충청북도	556,275	1,434,380	67.6	26.2	37,604,190	7,433	0.51%
충청남도	742,101	1,890,054	70.9	27.8	52,614,961	8,630	0.61%
전라북도	656,709	1,692,629	69.9	27.1	45,903,959	8,067	0.57%
전라남도	677,062	1,660,684	68.8	28.1	46,581,866	12,247	0.38%
경상북도	999,926	2,447,695	67.8	27.7	67,794,983	19,028	0.36%
경상남도	1,145,285	3,007,433	68.1	25.9	77,993,909	10,533	0.74%
제주특별자치도	185,522	511,300	68.3	24.8	12,671,153	1,849	0.69%

행정구역(시·도)별 단위 면적당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면적 밀도를 분석하였다. 주택면적 밀도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포털의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면적으로 나누어 주택면적 밀도를 분석하였다.

전국 평균 1.16%의 주택면적 밀도를 가지며 행정 구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36.13%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부산광역시가 10.92%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게 분석

10)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전국 가구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 빈집은 제외 하였음.

11) 행정구역 면적은 e-나라지표_행정구역별 국토면적을 사용, 주택면적 밀도의 계산은 주택총면적 ÷ 국토면적 으로 함.

되었다. 낮은 순으로는 강원도가 0.23%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고 그다음으로 경상북도 0.36%, 전라남도 0.38% 순으로 분석되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행정구역별 가구당 주거면적은 68㎡~71㎡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인당 주거 면적은 전라남도(2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22.8㎡)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시군구)별, 주택 밀도 - 1 (2000)

행정구역별	행정구역 면적 ¹²⁾	2000			
		가구 ¹³⁾ (가구)	가구당 연면적 (평)	주택총면적(㎡)	주택면적 밀도(%)
서울특별시	605,253,717.8	3,085,936	17.8	181,585,648.700	30.00%
종로구	23,907,600.0	56,284	18.9	3,516,586.976	14.71%
중구	9,960,122.9	44,461	16.8	2,469,238.916	24.79%
용산구	21,867,448.7	74,981	19.4	4,808,698.663	21.99%
성동구	16,848,502.2	102,285	16.8	5,680,621.275	33.72%
광진구	17,062,039.7	122,206	17.3	6,988,970.978	40.96%
동대문구	14,200,676.7	121,650	16.0	6,434,379.924	45.31%
중랑구	18,495,947.0	134,969	16.3	7,272,709.479	39.32%
성북구	24,565,761.0	143,756	17.2	8,173,894.570	33.27%
강북구	23,611,301.7	103,674	16.2	5,552,128.056	23.51%
도봉구	20,702,416.4	103,822	18.3	6,280,801.748	30.34%
노원구	35,436,394.3	179,842	17.4	10,344,630.360	29.19%
은평구	29,692,597.5	133,971	17.9	7,927,539.868	26.70%
서대문구	17,602,098.7	110,057	18.7	6,803,523.381	38.65%
마포구	23,871,768.3	120,632	17.1	6,819,197.100	28.57%
양천구	17,409,198.9	136,316	18.1	8,156,428.124	46.85%
강서구	41,420,960.6	154,489	16.5	8,426,672.411	20.34%
구로구	20,119,393.9	122,794	16.5	6,697,854.294	33.29%
금천구	12,999,566.7	85,649	14.9	4,218,743.974	32.45%
영등포구	24,565,151.8	124,302	17.1	7,026,658.249	28.60%
동작구	16,348,789.6	126,663	17.9	7,495,099.554	45.84%
관악구	29,568,597.4	159,048	16.3	8,570,189.431	28.98%
서초구	47,003,346.6	116,250	23.4	8,992,561.646	19.13%
강남구	39,535,493.5	171,076	21.6	1,221,5674.250	30.90%
송파구	33,877,724.4	193,043	18.9	1,2061,198.560	35.60%
강동구	24,580,819.3	143,716	17.4	8,266,639.029	33.63%

12) 행정구역 면적은 e-나라지표_행정구역별 국토면적을 사용, 주택면적 밀도의 계산은 주택총면적 ÷ 국토면적 으로 함.

13)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전국 가구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 빈집은 제외하였음.

<표 6> 연도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시군구)별, 주택 밀도 - 2 (2005~2010)

행정구역별	2005				2010			
	일반가구 (가구)	가구당 주거면 적 (평)	주택총면적 (㎡)	주택 면적 밀도(%)	일반가구 (가구)	가구당 주거면 적 (㎡)	주택총면적 (㎡)	주택 면적 밀도(%)
서울특별시	3,298,018	19.2	209,328,737.900	34.59%	3,459,093	63.2	218,614,677.6	36.12%
종로구	53,668	21.3	3,778,936.718	15.81%	56,713	66.8	3,788,428.4	15.85%
중구	45,129	17.6	2,625,687.174	26.36%	44,156	59.9	2,644,944.4	26.56%
용산구	75,913	21.9	5,495,850.042	25.13%	84,959	67.9	5,768,716.1	26.38%
성동구	111,331	18.0	6,624,654.297	39.32%	106,292	59.5	6,324,374.0	37.54%
광진구	125,824	18.2	7,570,237.071	44.37%	133,100	56.7	7,546,770.0	44.23%
동대문구	130,488	17.8	7,678,301.861	54.07%	127,161	59.4	7,553,363.4	53.19%
중랑구	137,707	17.2	7,829,951.442	42.33%	144,567	55.7	8,052,381.9	43.54%
성북구	146,595	19.7	9,546,847.576	38.86%	160,854	65.5	10,535,937.0	42.89%
강북구	112,517	17.6	6,546,443.391	27.73%	116,204	58.2	6,763,072.8	28.64%
도봉구	116,407	19.7	7,580,885.336	36.62%	118,301	64.8	7,665,904.8	37.03%
노원구	191,256	18.4	11,633,422.370	32.83%	196,882	60.7	11,950,737.4	33.72%
은평구	145,144	19.0	9,116,482.303	30.70%	154,495	64.1	9,903,129.5	33.35%
서대문구	117,790	19.0	7,398,379.888	42.03%	111,532	63.2	7,048,822.4	40.05%
마포구	134,884	18.1	8,070,744.821	33.81%	139,409	60.0	8364,540.0	35.04%
양천구	148,231	20.1	9,849,398.308	56.58%	153,925	66.7	10,266,797.5	58.97%
강서구	177,822	18.3	10,757,495.790	25.97%	192,268	60.6	11,651,440.8	28.13%
구로구	132,611	18.9	8,285,447.293	41.18%	138,975	63.0	8,755,425.0	43.52%
금천구	85,062	17.2	4,836,582.959	37.21%	84,152	53.2	4,476,886.4	34.44%
영등포구	135,078	19.2	8,573,545.464	34.90%	135,827	64.5	8,760,841.5	35.66%
동작구	136,521	19.3	8,710,265.128	53.28%	141,671	61.6	8,726,933.6	53.38%
관악구	201,663	16.2	1,0799,803.230	36.52%	206,458	51.1	10,550,003.8	35.68%
서초구	123,623	25.9	10,584,580.430	22.52%	135,493	87.4	11,842,088.2	25.19%
강남구	183,609	23.1	14,021,050.380	35.46%	198,139	74.3	14,721,727.7	37.24%
송파구	186,539	20.4	12,579,819.690	37.13%	218,513	69.3	15,142,950.9	44.70%
강동구	142,606	18.7	8,815,643.306	35.86%	159,047	61.9	9,845,009.3	40.05%

또한, 주택면적 밀도가 높게 나타난 서울특별시를 구별, 연도별로 분석하여 2000년 도에서 2010년도 사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95년 주택면적 밀도를 구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2000년도에서 2010년도의 10년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주택의 분포 정도를 알 수 있다. 2010년 서울특별시 구별 주택면적 밀도가 가장 높게

분포하는 곳은 양천구 58.97%이며 그다음으로 동작구 53.38%, 동대문구 53.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로구는 15.85%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증가 폭으로는 양천구가 2000년 46.85%에서 2010년 58.97%로 약 12%가 증가 하였으며 종로구는 2000년 14.71%에서 2010년 15.85%로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금천구는 2005년 37.21%에서 2010년 34.44%로 약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주차장

2010 주거실태 표본조사 179,293명의 주차장소 응답에 자가 주차장(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내)을 이용하는 비율이 79.92%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변, 골목길 등(주차 구획 안 된 곳)의 응답자 비율이 9.96%를 차지하고 있어 주차구획이 안 된 곳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주차장

주차장소	응답수1	응답수2	응답수 합계	비율 (%)
자가주차장(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내)	132	87,733	87,865	79.92%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59	2,571	2,630	2.39%
노상 주차장(주차 구획 된 곳)	0	5,943	5,943	5.41%
도로변, 골목길(주차 구획 안 된 곳)	1	10,945	10,946	9.96%
공휴지 (공터)	0	1,897	1,897	1.73%
기 타	0	657	657	0.60%
합 계	192	109,746	109,938	100.00%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2인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방의 개수가 1인 가구의 평균 방의 개수보다 현저히 낮을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큰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보다 작은 방에 한명씩 거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에 2인이상 가구에서 1인당 1개의 방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1세 이상 연령층이 38%정도로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주택의 방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편으로, 노인 가구의 주택규모 및 밀도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이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연도별, 행정구역별(동·읍면부) 1인 주거면적의 분석내용에 따르면 읍·면부의 주거가 동부주거보다 1인당 주거면적이 넓게 나타나는데 이는 읍·면부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주거의 수는 유지하고 있어 주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별 주택면적밀도에서 나타나는 집중된 주택밀도는 질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2010년 행정구역별(시도)에서 나타나는 주택면적 밀도는 서울특별시가 3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 10.92%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별로는 강원도(0.53%), 경상북도(0.36%), 전라남도(0.38%) 순으로 주택면적 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주거밀도를 통한 지역적 편차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시 행정구역별(시군구) 주택면적밀도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금천구(2.8%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주택면적 밀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내 주택밀도의 편중 현상을 볼 수 있다. 주택면적 밀도는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사용과 관련된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당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주차장소에 대한 응답을 보면 주차구획이 안 된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주차하는 비율이 15.5%로 나타나는데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주차로 인한)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0 주거실태 표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주거밀도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해 나간다면 질적 주거수준을 향상 시켜 거주자의 생활의 보장, 건강, 심리정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참 고 문 헌 >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인구/가구/주택)-표본 179,293개
- 국가정보포털(kosis.kr)2000년, 2005년, 2010년자료
- 진흥철 외 2,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밀도 변화요인 분석 1995-2005, 주택 연구, 2009
- 이성우 외 2, 이중생산모형을 이용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주거밀도 변화추이와 주거과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2002
- 조성범. 공동주택 주거밀도 변화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학논, 1999
- 박환용, 김수암외 1명, 주거단지 개발의 계획지표와 주거밀도, 한국주택학회, 1998

제 9주제 : 주택관련 주거혼잡도 등 파생지표 개발

박 신 영(한국도시연구소)

I. 서론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수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로 가구원수를 제시하면서 이들 가구가 사용하는 방수, 그리고 평균 사용방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처(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또는 주택(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종류별로 사용방수와 가구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종류별/주택면적 구간(20㎡ 이하, 20~40㎡, 40~60㎡, 60~85㎡, 85~100㎡, 100~130㎡, 130~165㎡, 165~230㎡, 230㎡ 이상)별로 가구수와 가구원수 등의 숫치를 제공하고 있다. 10% 표본조사를 통해서도 해당 거처의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임대료 등의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와 주택에 관한 다양한 통계는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표의 상당수가 주택(거처)를 중심으로 생산되며, 가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자료조차 가구의 주거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거처는 14,186,668개이나 거처와 가구를 매치하는 표에서 거처수는 17,339,422개로 늘어남으로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가구별로 전용 사용여부를 물어본 시설(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샤워시설)의 사용실태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0% 표본조사를 통해 필수주거시설 미달가구라는 형태로 주거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가구는 7.0%이며, 세대주 성별과 연령대별로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 갖추지 못한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발표¹⁴⁾된 바 있으나, “필수주거시설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라는 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필수주거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가구”라는 표현은 어문법에 맞지 않으며, 이것이 가구가 그러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구가 거주하는

14) 통계청 보도자료(2011.10.27: 2)

거처에 해당 시설이 없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과밀하게 살고 있는지, 또한 가구가 주거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계표의 작성에서부터 주택의 양과 질, 그리고 가구의 주거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통계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열악한 주택사정,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혼잡도를 나타내기 위해 어떠한 통계치가 필요한지 또한 나아가 주택의 질, 주거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지표의 어원은 지적·측정·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indicare'에서 찾을 수 있다. 지표란 어떤 현상이나 그 변화에 대한 표현 또는 요약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지표는 그 값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상에 대한 정보가 쉽게 전달되도록 복잡한 현상을 계량화 또는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 또는 요약된 정보인 것이다.

지표는 성격에 따라 설명지표, 성과지표, 효과지표, 통합지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설명지표는 오염배출량 또는 오염도와 같이 현재 환경 등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과지표는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추구하는 목표에 어느 정도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효과지표는 생단단위당 에너지 소비와 같이 생산이나 소비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지표이며, 통합지표는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수준, 즉 지속가능성이나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으로 보면, 주택관련 지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의 주거상황을 설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관련 지표를 발굴할 때는 설명력이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표는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타당성 또는 객관성, 단순성 또는 용이성, 지속성, 유용성, 신뢰성 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이란 주제와 관련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며, 타당성 또는 객관성이란 지표작성이 신뢰할만한 방법론에 의한 과학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단순성 또는 용이성이란 지표의 의미 및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성이란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자료갱신이 가능하여야 함을 말한다. 유용성이란 적절한 시간과 비용수준에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성이란 반복측정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관련 지표도 이러한 속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관련 지표의 성격이 설명변수인 점에서 주택정책의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관성과 측정의 용이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야 할 것이다.

2. 문헌 검토

과밀주거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심리적 긴장을 유발해서 고혈압, 사망률 증가, 정신이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동증대,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배순석 외, 1997: 35-36). 부적절한 주택은 학습능력의 저하¹⁵⁾를 초래한다. Arthurson & Jacobs(2003)는 부적절한 주거는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였다. 즉, 주거는 그 입지, 물리적 환경, 점유의 안정성, 과밀,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가구 또는 구성원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이러한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과 사용해야 할 필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주거기준으로 1961년 발표된 파커 모리스(Parker Morris) 기준을 보면,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주거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방 등 설비 수준과 주택 주변 및 외부 공간의 수준도 주거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기준은 1969년부터는 건설되는 모든 공공주택이 이를 준수해야 했다. 1985년 주택법 체제에 이르기까지 주거기준 평가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계속해서 존속하였고, 민간부문의 건축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早川和男, 1987). 영국에서는 주거기준을 구성

15) 과밀상태로 거주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서 수학능력이 9개월, 독해력이 10개월 떨어진다는 일본의 연구결과가 있음(早川和男·岡本祥浩, 1993: 23-24)

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주에 적당하지 않은 부적격(unfit) 주택으로 판정된다. 주거기준은 2006년 4월 6일 새로이 효력이 발생한 「주거위생·안전평가체제」(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로 전환되었고, 기존의 최저주거기준도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 Standard)으로 대체되었다(DCLG, 2006). 영국의 주거기준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공적 주택의 건설을 통해 민간부문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된 것에 특징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주택관련 기준은 1867년 주택에 대한 물리적 기준을 규정한 뉴욕시의 공동주택법(First Tenement Housing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세기 중반 미국으로 대규모 유럽이민자들이 몰려들고, 도시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임대주택이 급증하였으나, 이러한 주택들은 보건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주택 생활환경에 대한 뉴욕대도시보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한 법이 뉴욕시 공동주택법이다. 이후 미국 상무성 표준국은 1922년 소형주택 건설을 위한 최소기준 권고안을 제정하였으며,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34년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of 1934)에 기원을 두고 있는 모기지대출 보증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을 확립하였다(CDC and HUD, 2006).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와 전문협회에서 제시하는 표준모델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의 최저주거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보편적인 것을 규정하며, 지방정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보다 지역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기준은 통일주택규정(Uniform Housing Code, 1997)과 미국공중보건협회·미국공중보건국 질병통제센터의 최소주거기준(APHA-CDC Recommended Minimum Housing Standards, 1986)이다.

일본 정부는 주거기준이라는 용어가 아닌 최저거주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¹⁶⁾. 최저거주수준이 도입된 것은 1976년 제3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이다. 이는 1973년 주택보급률 105% 달성으로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주거기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주택정책에 구현된 결과이다. 주택 설비와 주거환경 등도 주거기준에 포함되었지만, 그 초점은 주거면적에 있었다. 정부는 최저 수준과 평균 수준으로 이원화해서 주거기준을 제시했다. 1980년 시작된 제4기 계획에서는 평균거주수준을 도시형 및 일반형 유도거주수준으로 변경해서 제시했는데, 이러한 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1986년 시작된 제5기 계획

16)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기준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되는 점에서 주거수준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다.

에서는 인구 노령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인 인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도입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의 특수 욕구 문제를 중시함으로써,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기준 설정의 틀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일본의 주거기준은 최저거주수준의 경우 2000년 제 8기 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1인 가구의 면적 기준이 16㎡에서 18㎡로 늘어났으며, 유도거주수준의 경우는 2006년 주택건설계획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주생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인은 약간 늘어난 반면 3인 이상은 약간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다. 일본 정부가 최저거주수준을 도입할 당시 발표에 의하면 2000년에는 최저거주수준 미달가구가 없어져야 하나, 2008년 현재 최저 거주수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6.7%에 달한다(國土交通省, 2011).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부터 절대적 주거빈곤의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 서울시가 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한 바 있으며, 1997년 건설교통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용역 시행¹⁷⁾하고 그 결과를 2000년 9월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60)로 공표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당시의 “최저주거기준”은 ① 면적기준, ② 시설기준, ③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침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등을 합한 총 주거 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2㎡(3.6평), 4인 가구의 경우 37㎡(11.2평)이었다.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 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으로서 침실은 기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 초과자녀의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되어야 하며,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침실과 노부모의 침실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용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되, 부엌에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다.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는 한편,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다.

2000년 도입당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76년 일본이 발표한 최저기준(1인 가구 면적16㎡, 4인 가구 50㎡)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면적기준이 지나치게 좁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사용기준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확보로 표기되어 있어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17) 1997년 시행된 연구는 건설교통부 「주거기준도입 방안 연구」이다.

<표 1> 2000년 한국과 1976년 일본의 가구의 최저주거면적 비교

가구 원수	실구성	주거면적(m ²)			주거전용면적(m ²)		
		한국(A)	일본(B)	A-B	한국(C)	일본(D)	C-D
1인	1K	8.16	7.5	0.66	12.28	16	-3.72
2인	1DK	13.80	17.5	-3.70	20.29	29	-8.71
3인	2DK	19.56	25.0	-5.44	28.76	39	-10.24
4인	3DK	25.32	32.5	-7.18	37.24	50	-12.76
5인	3DK	28.12	37.5	-9.38	41.38	56	-14.62
6인	4DK	34.90	45.0	-10.10	49.00	66	-17.00
7인	5DK	36.14	52.5	-16.36	51.87	76	-24.13

2003년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이 주택법에 반영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새롭게 고시(2004-173호)한 바 있으나, 면적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 기준중 새롭게 바뀐 것은 필수설비에 목욕시설을 추가하고 부엌과 화장실 기준을 각각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정도로 큰 개선은 없었다.

2011년 5월 면적기준이 지나치게 과밀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발표된 이후 11년만에 개선되었다¹⁸⁾. 면적기준과 관련해서는 3인 가구의 면적기준이 29m²에서 36m²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이 추가되었으며,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이 추가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방수, 주택면적 기준, 시설기준으로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 그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①. 영구건물로 구조강도 확보, 구조부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등에 양호,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출 것, ③. 소음·진동 등의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④. 자연재해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 불가,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8) 개선시 고려사항은 평균신장의 증가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6,741호에 대한 면적조사 결과 하위 3% 면적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79년부터 '04년 사이에 20~24세 평균신장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167.7cm에서 173.8cm로 여자의 경우 155.5cm에서 160.7cm로 늘어났다.

<표 2> 2000년과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방수와 최저주거면적 비교

가구원수 (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총주거 면적(m ²)	
			현행	개선
1	1인 가구	1 K	12	14
2	부부	1 DK	20	26
3	부부+자녀1	2 DK	29	36
4	부부+자녀2	3 DK	37	43
5	부부+자녀3	3 DK	41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55

이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여나가는 것은 정부주택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감소를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관련 지표도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1) 지표도출시 고려사항

현재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한 주거비 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주택설비(난방, 화장실, 욕실)상태, 주택규모, 주택유형, 공가, 주택과 이웃환경의 질(housing and neighborhood quality), 근로소득과 근로외의 소득은 물론이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상태, 소득대비 모기지 대출정도, 주택가격,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정도를 알 수 있는 통계가 제공된다. 주택관련 국제비교시 자주 등장하는 주택가격대비 소득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임대료 대비 소득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¹⁹⁾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소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PIR이나 RIR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통계

19)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Income Ratio, PIR)은 주택구입의 용이도를 측정하는 주택구입 용이도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HAI),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ent Income Ratio, RIR)과 함께 특정 주택시장의 주거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지표들 중 대표적인 지표이다(Quigley & Raphael 2004).

청이 제공하는 가구와 주택에 관련된 표를 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고).

<표 3> KOSIS 주택전수 통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 현황

조사표 항목	제공되는 정보
행정구역/가구주의 연령/성/거처의 점유형태별 총조사가구(일반가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과 점유형태 알 수 있음
행정구역/가구원수 및 사용방수/거실수/식당수 (일반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방수, 거실수, 식당수 파악 가능
행정구역/거처의 종류 및 평균사용방수 (일반가구)	거처별 가구수, 가구원총수, 가구당 평균인원, 가구당 평균사용방수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 점유형태/가구원수/사용방수.	점유형태별 가구원수별로 사용방수와 평균사용 방수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 가구원수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가구원수별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의 종류, 그리고 거처별로 가구가 사용하는 방수, 평균사용방수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및 평균방수	거처유형별로 가구수, 총 거주가구원수, 가구당 평균인원, 가구당 평균사용방수, 1인당 평균사용방수
행정구역/거처의 종류 /주거시설 형태별 총조사가구(일반가구)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거처내의 부엌 및 화장실의 개수와 유무, 온수샤워시설의 개수와 유무
행정구역/거처의 종류/가구형태별 총조사가구(일반가구)	거처유형별 거주하는 가구수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가구원수/거실수,식당수,침실수 별 총조사가구(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가 사용하는 거실수, 식당수, 침실수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점유형태 및 가구형태별 가구(일반가구)	거처의 종류별로 점유형태 그리고 가구형태일반가구, 1인 가구, 20세 이하 세대주 가구, 편부·모 가구, 60세 이상 남자 단독가구, 60세 이상 여자단독가구, 고령자 부부 가구 등을 알 수 있음
행정구역/거주층별 일반가구	거주층(지상, 지하, 옥탑)별 일반가구수를 알 수 있음
타지 주택 소유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점유형태별 타지주택소유 여부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주택의 종류 및 총방수별 주택	주택유형별 방수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주택의 종류 및 연면적 및 건축연도	주택종류별 연면적구간과 건축연도를 알 수 있음
행정구역/연면적 및 거주가구수 단독주택 행정구역/ 거주가구 및 총방수 단독주택 행정구역/ 연면적 및 편의시설수 단독주택 행정구역/ 연면적 및 대지면적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거주가구수, 총방수, 편의시설수 등의 자료를 알 수 있음

전수조사외에 표본조사를 활용해서도 가구의 성/연령별 주택 거주기간, 거처의 유형, 점유형태, 그리고 임대료 관련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의 가구와 주택관련 통계는 정책입안자나 주택연구자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유용한 통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구의 주거실태, 특히 과밀과 주거시설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다음 <표4> 거처의 종류별 점유형태별 가구와 <표5> 거처의 종류 및 거처, 가구, 일반가구를 보면 과연 과밀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4> 거처의 종류별 점유형태별 가구수

거처의 종류	일반 가구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
계	17,339,422	9,389,855	3,766,390	3,148,209	341,583	229,725	463,660
주택	16,985,480	9,332,714	3,687,624	2,995,224	304,418	223,058	442,442
주택 구분	단독주택	6,859,694	3,057,652	1,408,344	1,774,383	241,939	186,533
	아파트	8,169,349	5,182,211	1,767,659	970,021	32,051	18,878
	연립주택	502,488	313,908	120,595	42,866	4,878	3,687
	다세대주택	1,241,590	696,725	350,751	156,647	9,953	8,28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12,359	82,218	40,275	51,307	15,597	5,677
주택이외의 거처	353,942	57,141	78,766	152,985	37,165	6,667	21,218

<표 5> 거처의 종류 및 거처, 가구중 일반가구

거처의 종류	거처 (호)	가구-계 (가구)	일반가구 (가구)
계	14,186,668	17,574,067	17,339,422
주택	13,883,571	17,183,370	16,985,480
단독주택	3,797,112	7,013,254	6,859,694
아파트	8,185,063	8,191,313	8,169,349
연립주택	503,630	505,495	502,488
다세대주택	1,246,486	1,248,403	1,241,59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51,280	224,905	212,359
주택이외의 거처	303,097	390,697	353,942
오피스텔	232,911	232,987	224,884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7,530	15,830	14,255
기숙사 및 특수 사회 시설	17,349	28,176	11,943
판잣집, 비닐하우스	15,344	16,880	16,475

자료: 거처의 종류 및 거처, 가구, 가구원 자료중 일반가구까지만 발췌

<표 4>와 <표 5>의 주택을 보면, <표 4>에서는 16,985,48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 5>에서는 13,883,571로 되어 있어 주택수를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는 주택수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일치하는 점에서 가구중에 독립된 주택을 사용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표 5>를 보면 1 채의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1 가구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공동주택에도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와 <표 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은 3,797,112호이지만 다가구 주택을 한 호로 간주하는 경우 6,859,694호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단독 주택에 한해서는 거주가구수와 사용방수를 다음의 <표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단독주택에는 1가구만 거주하는 비율이 71.8%, 2가구 거주 비율이 11.3%, 3 가구가 거주하는 비율이 6.2%, 4가구 이상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10.7%로 나타난다. 또한 <표 6>을 보면 단독주택수는 3,797,112호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수의 합은 알 수 없다. 게다가 사용방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에 있는 총방수인 점에서 가구의 사용방수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1가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총방수가 5개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79.2%로 나타나는 등 방수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인가에 의문을 느끼게 된다.

<표 6> 단독주택 거주가구수 및 사용방수

거주 가구 수별	단독주택	총방수 1개	총방수 2개	총방수 3개	총방수 4개	총방수 5개	총방수 6개	총방수 7개	총방수 8개	총방수 9개	총방수 10개 이상
계	3,797,112	21,367	108,582	446,356	934,772	904,021	311,609	168,233	142,764	116,757	642,651
1가구	2,725,835	21,367	106,812	439,336	911,956	857,135	234,990	77,398	37,877	18,844	20,120
2가구	427,234	0	1,770	6,381	21,037	43,009	68,489	76,808	80,448	56,314	72,978
3가구	235,270	0	0	639	1,381	3,144	6,538	11,278	19,041	33,402	159,847
4가구	132,577	0	0	0	398	490	1,034	1,871	3,557	5,122	120,105
5가구	96,505	0	0	0	0	243	304	519	1,071	1,764	92,604
6가구	47,586	0	0	0	0	0	254	214	411	699	46,008
7가구	32,339	0	0	0	0	0	0	145	201	303	31,690
8가구	19,980	0	0	0	0	0	0	0	158	186	19,636
9가구	14,421	0	0	0	0	0	0	0	0	123	14,298
10가구 이상	65,365	0	0	0	0	0	0	0	0	0	65,365

이상 몇 개의 표에서 소개한 것처럼 가구의 주택사용실태, 특히 주거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계청이 많은 비용을 들여 소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중 주거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의 주거관련 데이터를 쉽게 찾아보고 다른 지역과 쉽게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주거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관련 지표는 주택의 양, 주택의 질, 가구의 주거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2) 지표내용

(1) 주택의 양을 판단하는 지표

①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 지표는 지역별 주택수와 가구수를 단순대비한 것으로 주택의 양적 상태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지역별 주택의 수급상태를 보여주는 점에서 주택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기준을 적용하면 숫자가 계산되는 점에서 객관적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며, 시계열분석이 가능하며, 반복측정에서도 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지표가 갖추어야 할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타당성 또는 객관성, 단순성 또는 용이성, 지속성, 유용성,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성방법

$$\text{주택보급률} = (\text{주택수}/\text{가구수}) \times 100$$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주택 보급률	상	상	상	상	상	상

다만 이 경우 주택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통계청의 주택에 대한 정의가 영구건물, 부엌과 독립된 출입구, 매매 또는 거래의 한 단위로 파악하는 점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한 호의 주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앞의 <표 4>와 <표 5>에 소개된 주택수를 보면, 현재 통계청의 정의대로 주택을 보면 주택수는 13,883,571이지만 다가구주택을 호당 주택으로 계산하면 주택수는 16,985,480으로 늘어난다.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을 정의한다면 주택수는 다가구주택을 한 호로 간주하는 개념의 사용이 적적할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다가구 주택을 각각 한 호로 헤아리는 주택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 기준의 전국과 서울,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은 다음 <표 5>와 같다. 다만 주택 보급률은 주택수와 가구수를 매치시킨 개념인 점에서 주택의 과부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한 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가구의 주거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는 할 수 없다.

<표 7> 2010년 국토부 기준의 신주택보급률 (전국, 수도권, 서울) (단위:천호)

전 국			수 도 권			서 울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101.9	17,672	17,339	99.0	8,173	8,254	97.0	3,400	3,504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보급률 지표는 서울시와 광역시,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제시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숫자까지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국토해양부, 2012: 442). 따라서 통계청이 시군구별 가구수와 주택수를 계산한 주택보급률 지표를 만들어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주택의 양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제비교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주택사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선진국이 대부분 인구 1000명당 400호 이상을 상회²⁰⁾하고 있어 주택정책의 양적인 공급의 목표치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인구수를 활용한 주택수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보급률 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타당성 또는 객관성, 단순성 또는 용이성, 지속성, 유용성,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성방법

$$\text{인구 1000명당 주택수} = (\text{주택수} / \text{인구수}) \times 1,000$$

20) 미국의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27, 2008년 일본 452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4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자료는 <http://www.census.gov/prod/cen2010/cph-2-1.pdf>, 일본자료는 http://www.stat.go.jp/data/jyutaku/2008/nihon/1_1.htm 참고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상	상	상	상	상	상

이 경우 역시 주택보급률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정의에 따라 숫자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 표는 국토부가 다가구 주택수를 한 채의 주택으로 계산한 것으로 2005년 인구 1000명당 주택수 280, 2010년 302.1에 불과하나, 다가구 주택을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하면 2005년 330.4, 2010년 363.8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8>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1000명당 주택수 (다가구계산)	142	151	179	207	249	280 (330.4)	302.1 (363.8)

201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주택수에 대한 통계는 전국,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나(국토해양부, 2012: 443),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주택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주택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

① 전체주택수 대비 20년 이상 주택수 비율

건축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해당지역의 주택의 질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축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20년만 경과되어도 재건축이 쉽게 추진되는 등 재고주택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재고주택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20년이 경과되었다고 주택의 질적 상태가 노후화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20년 이상 주택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표 자체는 단순성 또는 용이성, 지속성, 유용성,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성방법**

$$\text{전체주택 대비 20년 경과주택수 비율} = (\text{20년 경과주택수} / \text{전체주택수}) \times 100$$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	중	중	최상	상	상	상

<표 9> 전체주택 대비 20년 이상 주택수 (단위:천호)

전 국			수 도 권			서 울		
비율(%)	20년이상 주택수	주택수	비율(%)	20년이상 주택수	주택수	비율(%)	20년이상 주택수	주택수
14.0	2,434	17,339	7.2	595	8,254	7.8	273	3,504

②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는 주택내 화장실,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수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계산시 애로사항인 주택에 대한 정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가 높게 나타나면 날수록 해당지역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함을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주택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농촌지역과 같이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 재고가 많지 않은 곳이 있으며, 아파트 공급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의문도 제기될 수 있어 정책적 적합성이나 타당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단순성 또는 용이성, 지속성, 유용성,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성방법**

$$\text{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 = (\text{아파트수} / \text{인구수}) \div 1,000$$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	중	중	최상	상	상	상

<표 10> 인구 1000명당 주택수와 아파트수

	주택수	아파트수	주택수(다가구 구분하여 계산)
1975	136.41	2.57	-
1980	142.08	9.98	-
1985	150.91	20.31	192.78
1990	164.94	37.50	200.29
1995	206.35	77.44	259.86
2000	248.66	118.78	304.43
2005	279.67	147.27	339.42
2010	302.13	176.53	362.08

자료: 인구총조사(2000~2010), 주택총조사(1975~1995)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1000명당 다가구 포함 주택수: 주택총조사(출입구 수로 단독주택 재계산 후 증가분을 주택수에 추가하여 계산)

③ **주택의 평균면적**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주택의 평균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택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전반적인 주택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주택재고의 평균 면적은 물론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이 공식적인 통계기관을 통해 제시됨으로써 지역별 주택상태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주택의 평균면적을 통계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도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타당성 또는 객관성, 유용성,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성, 단순성 또는 용이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면적 자료가 일관해서 수집된 것인 또한 정확한 것인지에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측정방법

$$\text{평균 주택면적} = \text{총주택의 연면적} / \text{총주택수}$$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주택의 평균면적	상	상	중	중	상	상

(3) 가구의 주거상태(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지표

①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선진국에서는 주택수가 가구수를 능가함에 따라 1주택에 1가구가 거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1주택에 1가구가 거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에 1가구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사정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내 혼잡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주택당 거주가구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거처가 아닌 주택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점에서 오피스텔은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지표는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타당성 또는 객관성, 단순성 또는 용이성, 유용성, 지속성, 신뢰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성방법

$$\text{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 \text{주택유형별 주택수} / \text{해당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최상	최상	상	상	상	상

통계청이 제공한 1% 자료로 1가구 1주택이 실현된 비율을 살펴보면 (주택내 거주 가구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16.6%로 높은 문제가 있으나) 거주가구수가 제시된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1%였다.

<표 11> 1% 표본을 활용한 1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비율 (%)
1주택 1가구 거주	94.1
1주택 2가구 거주	2.5
1주택 3가구 거주	1.3
1주택 4가구 거주	0.7
1주택 5가구 거주	0.5
1주택 6가구 이상	0.9
합 계	100.0

자료 : 1% 표본을 활용한 주택당 거주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가구당 사용면적을 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로 수집된 주택면적이 가구당 주택의 사용면적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는 가구당 사용면적을 알려면 1 주택을 1 가구만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가구별로 자기가 사용하는 주택면적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당 거주가구수 지표는 1가구 1주택 거주가 구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가구당 사용면적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통계청의 KOSIS 자료를 통해 파악한 주택면적과 관련된 자료로는 거주인수별 주택규모가 있다. 다음 표는 해당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이를 보면 평균적인 주택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인당 주택의 사용면적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로는 가구당 거주면적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12> 거주인수별 주택규모 변화추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1980		10-14평(28.09) 15-19평(26.13) 20-29평(20.94)		15-19평(27.71) 20-29평(25.49) 10-14평(24.75)	15-19평(26.80) 20-29평(26.05) 10-14평(23.40)	15-19평(27.48) 20-29평(26.27) 10-14평(22.98)	20-29평(28.77) 15-19평(27.87) 10-14평(20.70)
1985		15-19평(31.44) 10-14평(29.50) 20-29평(20.38)		15-19평(31.23) 20-29평(26.44) 10-14평(26.44)	15-19평(30.94) 20-29평(27.96) 10-14평(22.89)	15-19평(31.34) 20-29평(31.02) 10-14평(20.19)	20-29평(36.28) 15-19평(20.26) 30-39평(15.39)
1990		14-19평(31.30) 19-29평(27.66) 9-14평(23.55)		19-29평(32.90) 14-19평(30.22) 9-14평(17.92)	19-29평(34.30) 14-19평(28.16) 9-14평(15.43)	19-29평(35.74) 14-19평(25.98) 9-14평(13.06)	19-29평(31.35) 14-19평(17.21) 29-39평(15.34)
1995		19-29평(33.80) 14-19평(31.92) 9-14평(19.33)		19-29평(41.31) 14-19평(30.26) 9-14평(13.31)	19-29평(43.91) 14-19평(25.49) 29-39평(11.73)	19-29평(44.06) 14-19평(20.02) 29-39평(16.36)	19-29평(23.00) 49-69평(19.45) 29-39평(19.04)
2000		19-29평(34.32) 14-19평(33.91) 9-14평(16.44)		19-29평(42.38) 14-19평(33.38) 29-39평(9.04)	19-29평(44.00) 14-19평(24.89) 29-39평(14.42)	19-29평(40.04) 29-39평(21.36) 14-19평(15.27)	49-69평(23.48) 69평이상(21.26) 29-39평(17.61)
2005	14-19평(33.02) 19-29평(26.97) 9-14평(24.85)	19-29평(38.45) 14-19평(30.48) 9-14평(12.61)	19-29평(41.05) 14-19평(31.98) 29-39평(10.23)	19-29평(45.43) 14-19평(30.82) 29-39평(10.67)	19-29평(44.21) 14-19평(22.37) 29-39평(16.06)	19-29평(35.56) 29-39평(22.39) 39-49평(13.81)	69평이상(28.66) 49-69평(25.32) 39-49평(16.72)
2010	40-60㎡(33.02) 20-40㎡(26.37) 60-85㎡(25.39)	60-85㎡(35.38) 40-60㎡(32.48) 20-40㎡(10.63)	60-85㎡(39.08) 40-60㎡(32.59) 100-130㎡(8.78)	60-85㎡(43.37) 40-60㎡(29.61) 100-130㎡(10.36)	60-85㎡(38.89) 40-60㎡(21.40) 100-130㎡(14.06)	60-85㎡(27.33) 130-165㎡(19.32) 100-130㎡(17.94)	230㎡초과(29.46) 165-230㎡(24.60) 130-165㎡(21.39)

② 가구원수가 감소된 가구당 사용방수

가구원수에 입각한 가구당 사용방수는 가구의 과밀을 판단하는 것에 매우 유용하다. 최저주거기준에서의 사용방수란 가구원의 연령별 특성, 예를 들어 자녀가 6살 이하인 경우 부모와 함께 침실을 사용해도 되는 점에서 가구원 특성이 필요한 한계가 있으나, 그래도 가구원수에 입각해서 가구가 몇 개의 방을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가구의 주거수준을 짐작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지표는 1인가구의 경우는 사용방수를 파악하면 간단하나, 가구원수별로 사용방수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가구가 사용하는 방수를 가구원수로 나누는 방법이 활용된다. 가구의 사용방수, 가구원수 모두가 정확해야 가구원수가 고려된 가구당 사용방수가 제시될 수 있다. 이 숫자가 1 이하인 경우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1실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표는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타당성 또는 객관성, 단순성 또는 용이성, 유용성, 지속성, 신뢰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성방법

가구당 사용방수/가구원수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가구원수가 감안된 가구당 사용방수	상	상	상	상	상	상

가구원수가 감안된 가구의 사용방수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나, 가구원수별 사용방수와 관련된 통계청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1~2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1인 1실은 실현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인 가구중 1실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9.5%, 3인 가구중 2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29.0%, 4인 가구중 3실 이하를 사용하는 비율은 66.5%, 5인가구중 4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95.8%, 6인 가구중 5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92.0%로 나타났다.

<표 13> 가구원수별 사용방수

	일반가구	방 1개	방 2개	방 3개	방 4개	방 5개이상
계	17,339,422	2,314,714	4,676,066	8,545,248	1,518,266	285,128
1인	4,142,165	1,790,112	1,341,829	896,574	96,029	17,621
2인	4,205,052	398,024	1,460,304	1,982,920	306,250	57,554
3인	3,695,765	85,386	985,041	2,205,277	360,282	59,779
4인	3,898,039	34,027	711,800	2,592,581	485,346	74,285
5인	1,078,444	6,928	149,402	685,935	191,006	45,173
6인	241,063	209	22,637	141,431	57,500	19,286
7인이상	78,894	28	5,053	40,530	21,853	11,430

자료: 가구원수 및 방, 거실, 식사용 방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중 전국기준 사용방수 발취

③ 가구별 시설 전용사용 비율

최저주거기준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구가 필수시설(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온수샤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가 여부이다. 따라서 가구의 시설사용여부를 각각 또한 전부를 구분하여 숫치를 제시한다면 주거수준 파악에 무엇보다 유용하다. 이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격차비교를 통해 비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표는 정

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타당성 또는 객관성, 단순성 또는 용이성, 유용성, 지속성, 신뢰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성방법**

① 가구의 전용수세식 사용비율

$$= \text{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수} / \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② 가구의 전용 입식부엌 사용비율

$$= \text{전용 입식부엌을 사용하는 가구수} / \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③ 가구의 전용 온수샤워시설 사용비율

$$= \text{전용 온수샤워시설을 사용하는 가구수} / \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가구의 전용 수세식 사용비율	최상	최상	상	상	상	상
가구의 전용 입식부엌사용비율	최상	최상	상	상	상	상
가구의 전용 온수샤워시설 사용비율	최상	최상	상	상	상	상

1% 표본을 활용하여 가구원수별 필수주거시설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가구원이 적은 가구일수록 필수시설의 사용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가 전용시설 사용비율이 가장 낮으며, 다음이 2인으로 나타난다. 가구에 따라서는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샤워시설중 일부를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중복성 여부를 확인한다면 가구의 주거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최종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이다.

<표 14> 가구원수별 필수주거시설 사용실태

가구원수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전용 온수목욕시설
1인	42714(94.8)	39880(87.7)	41854(97.2)
2인	46069(97.9)	43932(93.3)	45484(99.0)
3인	35823(98.9)	35225(97.2)	35823(99.6)
4인	36374(99.2)	36101(98.4)	36450(99.8)
5인	10250(99.0)	10117(97.6)	10264(99.6)
6인이상	3299(98.8)	3229(96.6)	3305(99.6)

가구원수가 아닌 가구구성(가족가구, 가족+타인, 1인가구, 비혈연가구)형태별로 필수주거시설 사용 비율을 보면, 1인가구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이 낮아 가구원수별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할 예정이다.

<표 15>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시설별 실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전용 온수목욕시설
가족가구	129,309(98.7)	126,136(96.2)	128,806(99.5)
가족+타인	718(97.0)	705(95.3)	724(98.9)
1인가구	42,714(94.8)	39,880(87.7)	41,854(97.2)
비혈연가구	1,788(96.9)	1,763(94.5)	1,797(98.1)

④ 불량주택 거주가구수 비율

최저주거기준의 성능기준을 응용하는 것으로 전체가구중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미 통계청이 불량주택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불량주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는 정책적 적합성 또는 대표성, 유용성, 지속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불량주택에 대한 정의가 타당한 것인지, 또한 쉽게 조사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작성방법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전체가구수 ×100

○ 지표평가

	정책적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지속성	유용성	용이성
가구원수가 감안된 가구당 사용방수	상	중	중	상	상	중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하거주가구 58만 6,649가구, 옥탑방 5만 1,139가구, 판잣집 거주가구 4만 5,239가구 등 전체가구의 4.3%인 68만 3,025가구가

불량한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2010년에는 지하거주가가 51만7,689가구, 옥탑방 4만8,988가구, 판잣집 거주가가 1만6,475가구로 전체가구의 3.4%인 58만 3,152가구가 불량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2005년에 비하면 2010년 불량주택 거주가구는 약 10만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감소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²¹⁾이나 주택재개발사업²²⁾, 그리고 2003년 도입된 뉴타운 사업²³⁾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불량주택 거주가구비율을 전국적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시한다면 해당지역 가구의 주거수준을 짐작하는 것은 물론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6> 2005년~2010년 불량주택거주가구수의 변화

구 분	지하거주	옥탑방거주	판잣집거주	합계	전체가구 대비비율
2005년	586,649	51,139	45,239	683,025	4.3%
2010년	517,689	48,988	16,475	583,152	3.4%

(출처 : 2005년도,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발표 자료)

(4) 지표종합

주택의 양과 질, 그리고 가구의 주거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보급률,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전체주택 대비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수 비율, 인구 1000명당 아파트 수,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가구원수가 감안된 가구당 사용방수, 가구별 시설전용사용비율, 불량주택 거주 가구수 비율을 제안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별 수치중 가능한 것을 살펴보았다. 지표별로 정확한 통계숫자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나, 이상 언급한 지표가 우리나라 주택과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21)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칭한다.

22)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칭한다.

23) 서울특별시는 강북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23일에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4065호)를 제정하였고, 2005년 1월 5일에는 이를 개정(서울특별시 조례 4250호)하였으나, 조례의 근거법이 필요하여 가칭 “뉴타운 특별법”의 제정을 도모하였다.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유사한 목적의 법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건교부가 당시 제시된 법안들을 종합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표 17> 지표특성 및 측정방법

	지표	측정방법	지표 특성	비고
주택의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100	주택의 양적 보급상태 판단으로 주택정책 수립 중요	주택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정 필요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주택수/인구수) ÷ 1,000	국제비교 가능, 주택의 양적 상태 판단에 유리	주택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정 필요
주택의 질적 지표	전체주택수 대비 20년 경과 주택수 비율	전체주택수 대비 20년경과 주택수 = (20년경과 주택수/주택수) × 100	주택의 질적 상태 파악 용이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 활용가능	현재 있는 자료로 생산 가장 용이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	인구 1000명당 아파트수 = (주택수/인구수) × 1,000	아파트가 현대적인 주택의 상징인 점에서 주거질 판단 가능, 재고주택 관리 인식가능 -농촌지역 주택사정 설명에는 미흡	현재 있는 자료로 생산 가장 용이
	주택의 평균면적	평균 주택면적 = 총주택의 연면적 / 총주택수	주택의 질을 판단하는 것에 유용, 가구의 주택사용면적을 조사할 수 없는 현행체계에서는 거주인수를 통해 가구의 질적 상태 판단 가능	시계열 데이터 생산에 약간 어려움 예상(통계청 주택면적 구간 데이터로 제공)
가구의 주거수준 지표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 주택유형별 주택수/해당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1주택에 1가구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점에서 가구주거실태 파악에 유리	주택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정 필요
	가구원수가 감안된 가구당 사용방수	가구당 사용방수/가구원수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용방수는 최저주거기준의 현실 파악에 유용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만 고려되는 것은 아님 (2인이라도 부부면 1실로 충분)
	가구별 시설 전용사용 비율	① 가구의 전용수세식 사용비율 =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수/전체가구수×100 ② 가구의 전용 입식부엌 사용비율= 전용 입식부엌을 사용하는 가구수/전체가구수×100 ③ 가구의 전용 온수샤워시설 사용비율== 전용 온수샤워시설을 사용하는 가구수/전체가구수×100	필수시설의 사용은 가구의 주거수준(상태) 파악에 가장 유용	반드시 필요한 지표
	불량주택거주가구수 비율	불량주택거주가구수= 불량주택가구수/전체가구수×100	최저주거기준의 성능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대체지표로 유용	불량주택에 대한 기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Ⅲ. 결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주택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총조사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택은 입지고정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전국단위보다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주택사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생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주택의 양, 주택의 질, 가구의 주거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가 중시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언어사용도 바뀌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통계도 거처라는 낯선 용어나 주택이라는 시설물을 주인공으로 하기보다는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1997, 「최저주거기준도입방안 연구」.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8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연구」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3,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의 실태」

국토해양부, 2007,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2,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

박신영,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p.33-46.

박신영, “주거빈곤가구의 특성”, 윤주현 편, 『한국의 주택』, 통계청, 2002.

박환용·문진아, 2004.4, “주택시장의 주거수준 격차분석,” 지역개발학회.

서울시, 1997,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지은영 외, 2008, 주거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II -수요자 측면의 주거복지체감지표와 지수를 중심으로 -, 한국 주거학회 23

하수정, 2011, “주택관련 통계조사 및 지표생산의 개선방향” 『국토정책 Brief』 제 331호

國土交通省, 2006.『住宅の長期計畫の在り方: 現行の計畫体系の見直しに向けて』.

國土交通省, 2011『住生活基本計畫』

Arthurson, Kathy & Kathie Jacobs, 2003, "Social inclusion and Housing" Final report for the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Melbourne.

Bratt, Rachel, 2000. "Housing and family well-being" *Housing Studies*, 17. 1
12-2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ealthy Housing Reference Manua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6, *Housing Fitness Standard: a Consultation Paper*.

Quigley, John M., and Steven Raphael, "Is Housing Unaffordable? Why Isn't It More Affordabl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18, No. 1, 2004, pp.191-214.

<http://www.census.gov/prod/cen2010/cph-2-1.pdf>

http://www.stat.go.jp/data/jyutaku/2008/nihon/1_1.htm

Part IV

Part IV는 인구주택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경상북도 노동생명표의 작성 및 기대직업여명의 추정(정승환)연구와 2015 인구총조사 표본조사방법 연구(김규성)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 졌다.

첫 번째, 제 10장 경상북도 노동생명표의 작성 및 기대직업여명의 추정(정승환)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와 2010년 완전생명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경제기반의 주축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 세대의 기대여명과 노동기대여명을 비교하여 고령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노동생명표 작성 시, 기존 우리나라 노동생명표를 다루었던 연구와 달리 노동생명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Greville 9차항 보정계수로 경제활동참가율을 평활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5세별 연령구간으로 제시하던 것에 비해 1세별 연령구간으로 작성하여 각 연령별 노동기대여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15~60세 이상 연령구간에 제한되었던 기존의 결과에 비해 85세 이상 연령구간까지 작성하여 사회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비율과 고령층의 노동기대여명도 파악하였다.

노년층 수명의 증가, 저출산 현상의 지속, 취업준비기간의 증가에 따른 만혼화 현상 등 우리나라 인구·경제·사회적 근간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연구는 계량적인 분석과 세세한 연령별 패턴을 파악하여 정책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노동력 인구 및 노동생애의 기간 예측 등의 연구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는 1세별 연령구간과 고령층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적합한 자료라 판단된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자료만을 사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과거부터의 각 연령별 노동력 추세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자료가 통일된 연령구간을 가진 형태로 과거 자료까지 제공이 된다면 과거 노동력 패턴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연구가 고령층까지 포함하여 세세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마련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의 패턴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모형의 모수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자료의 특성과 변화의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모수별 패턴을 파악하여 예측을 시행한다면 앞으로의 변화추세를 좀 더 면밀하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 11장 2015 인구총조사 표본조사방법 연구(김규성)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조사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많은 나라가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또한 가구에 주어지는 기본 질문지와 심층 질문지의 비율도 다르고 표본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많은 예산과 인력, 관리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제 나라의 실정에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게 된 결과 이런 상이함을 보이게 된 것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현행 표본조사의 개선을 모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총조사 표본조사 실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2000년 미국 총조사의 표본조사와 미국의 지역사회조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실시할 표본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개선 방안과 표본조사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 언급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방법론을 다루었다. 우선 총조사 모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2000년 미국에서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와 미국지역사회조사의 표본조사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2015년 표본조사 방법론으로서 표집틀, 층화, 층내 표집비율, 조사구 및 가구추출, 균등 표본조사, 가중치 생성, 표집틀 갱신, 그리고 표본조사 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본조사의 프레임 역할을 하는 주소 파일(master address file)의 정확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현행과 같이 5년에 한번만 하는 표본조사가 아니고 매년 2% 혹은 4%씩 5년에 걸쳐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집틀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신축 주택 등을 추가하는 등 주소 파일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을 최소화하는 무응답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표본조사 질문지를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응답 오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여 무응답률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방법(인터넷, 전화, 방문 조사 등)에 따라 조사를 최적화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모집단 수치의 주기적 갱신이 필요하다. 행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이민, 기타 행정정보 갱신하여 추후에 가중치를 산정할 때 모집단 자료를 이용한 보정 인자에 갱신된 수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주제: 경상북도 노동생명표의 작성 및 기대직업 여명의 추정: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를 이용한 노동생명표 작성 및 노동기대여명 추정

정 승 환(고려대학교)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회적 과제 앞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가파른 국가성장세와 맞물려 국민들의 영양수준과 의료보전수준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고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사망속도가 둔화되면서 사회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저출산 현상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는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고령화 ·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사회에 큰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과중한 고령인구의 부양부담이 젊은 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원인이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층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대학교육이 일반화되고 점점 고학력자가 많아지는 현상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이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고용형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는 젊은 층이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등으로 취업준비기간을 늘린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결국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젊은 층의 노동기간과 노동력 모두 줄어들게 되는 심각한 현상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우리나라 인구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인구자료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로 생명표(life table)가 있다. 생명표는 현재의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에 따라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생존과 사망확률, 기대여명 등

다양한 사망관련 지표를 연령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김기환 외, 2006). 이 중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현재의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연령 인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사망력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출생 시(0세)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으로 사용한다. 또한, 국가별로 생명표를 작성하는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 간 보건이나 복지 차원의 비교를 위한 척도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생명표(working life table)의 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생명표는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_nW_x$)을 이용하여 노동정지인구(${}_nL_{wx}$)를 작성하고 이를 생명표 기대여명 작성절차에 따라 노동기대여명(e_{wx})을 계산한 생명표이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인구 및 노동 현황에 대해서 생명표와 함께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해 연령별 노동생애(work life)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생명표 자료와 함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를 이용하여 전국 단위의 노동생명표 및 노동기대여명을 작성하고 연령별 은퇴기대여명을 추정하였고, 경상북도 지역의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전국 노동수준과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망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상태가 연령별, 남녀별로 어떠한 확률을 가지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II. 본론

1. 노동생명표 작성방법

생명표(life table)는 사망확률을 기초로 하여 한 사람이 출생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생존하다가 사망하는지를 함수식에 의해 계산하여 정리한 표이며, 현재 사망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각 연령에서 앞으로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표 작성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할 수 있다.

즉, 노동생애를 생명표에 응용하여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할 수 있고, 이는 연령별 취업확률을 이용하여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한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얼마 동안 노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노동기대여명은 생명표에서 기대여명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게 되는 기대연령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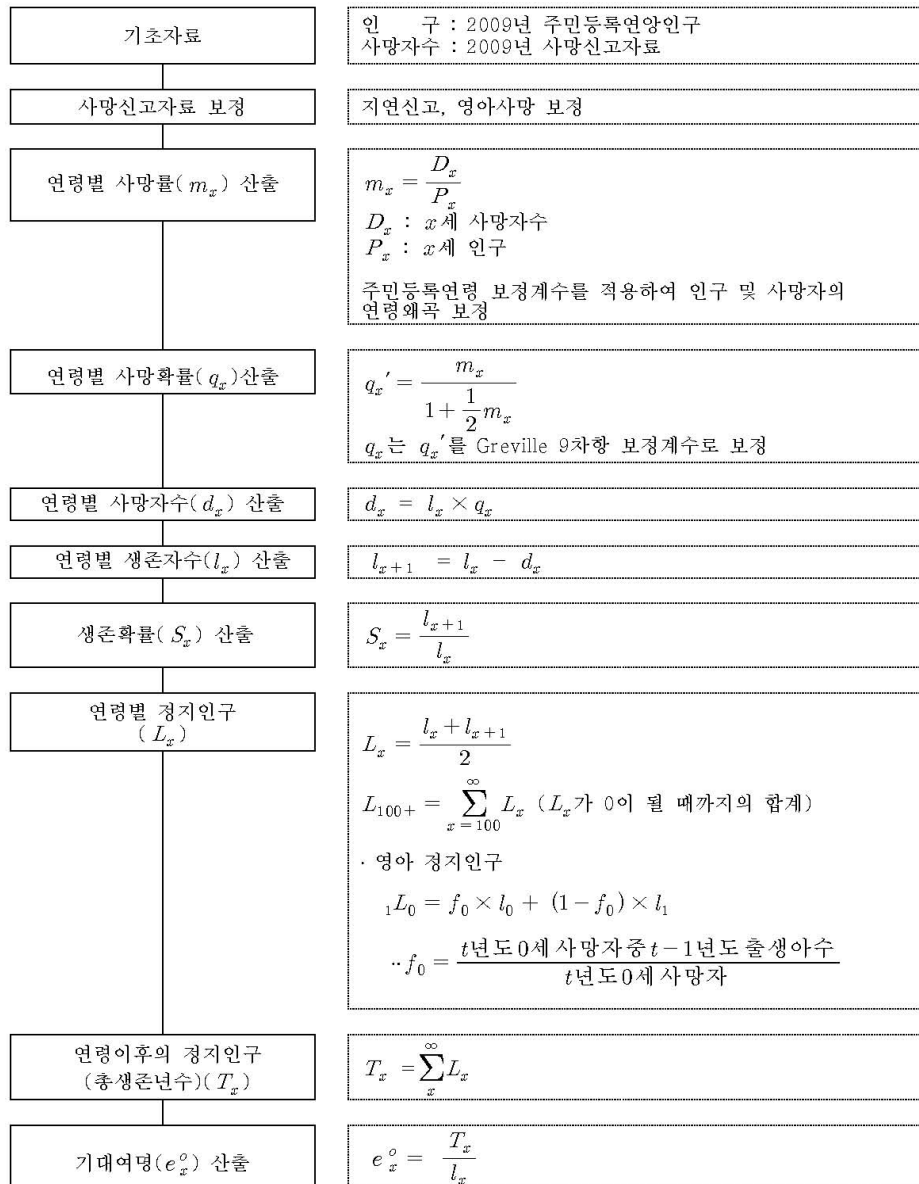
노동생명표를 작성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 노동성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S. L. Wolfbein and H. Wool (1950)이 1940년도 미국 남성 노동생명표를 작성한 것이 있다. Wolfbein-Wool 방법은 노동생명표 작성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을 이용한 사례로는 김정근 외(1977), 조진만(1990), 전태운(1999), 박원란(2001), 황수경(200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15세부터 60세까지 5세별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각 연령별(1세 단위) 노동기대여명은 작성이 불가능하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도 노동생명표를 작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각 연령별 경제활동상태와 고령층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분석에 있어 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0세부터 85세 이상 연령구간 자료를 취할 수 있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남녀별, 노동생명표를 85세 연령층까지 1세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5세 구간의 연령이 아닌 1세별로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고 고령층 노동력패턴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었다.

1) 일반생명표 작성절차와 노동생명표 작성 원리

노동생명표는 일반적인 생명표 작성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먼저 생명표 작성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림 1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생명표 작성절차를 인용한 그림이다. 생명표를 작성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절차로 생명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표는 가상의 코호트에 대하여 사망관련 변화를 모형화하여 작성하게 된다. 여기서 가상코호트란 최초(0세)의 출생인구를 100,000명으로 가정한 가상의 인구집단을 의미한다. 가상의 인구 100,000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위험을 겪으면서 사망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각 연령구간에서 사망 확률에 따라 가상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생명표라 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생명표 작성절차(2009년 생명표 작성방법, 통계청)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명표 정지인구(${}_nL_x$)가 필요하며, 일반생명표에서 사망확률(${}_nq_x$)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_nW_x$)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생명표 정지인구에 곱하여 노동력 정지인구(${}_nL_{ux}$)를 산출하게 된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_nW_x$)과 노동력 정지인구(${}_nL_{ux}$)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_nW_x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연령별인구}}$$

$${}_nL_{ux} = {}_nL_x \times {}_nW_x$$

그리고 총노동정지인구(T_{wx})는 해당연령 이상의 노동정지인구를 모두 합하여 산출되며, 이로부터 노동기대여명(e_{wx})을 산출할 수 있다. 총노동정지인구(T_{wx})와 노동기대여명(e_{wx})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_{wx} = \sum_n^{\infty} nL_{wx}$$

$${}^n e_{wx} = \frac{T_{wx}}{l_x}$$

2) 경제활동참가율의 계산 및 보정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가 되는 연령별 인구는 자료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인구수로 하였고, 분자가 되는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경제활동상태 항목에서 “일하고 있음”에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한 사람의 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경제활동참가율로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Congdon(1993)의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변화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원자료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 통계적 보정(statistical graduation)을 적용하여 자료를 보정한 후 사용하는 것이 모형 적합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기환·손강주(2011)의 연구에서는 Congdon의 연구에 나오는 인구관련 자료에서 통계적 보정의 역할과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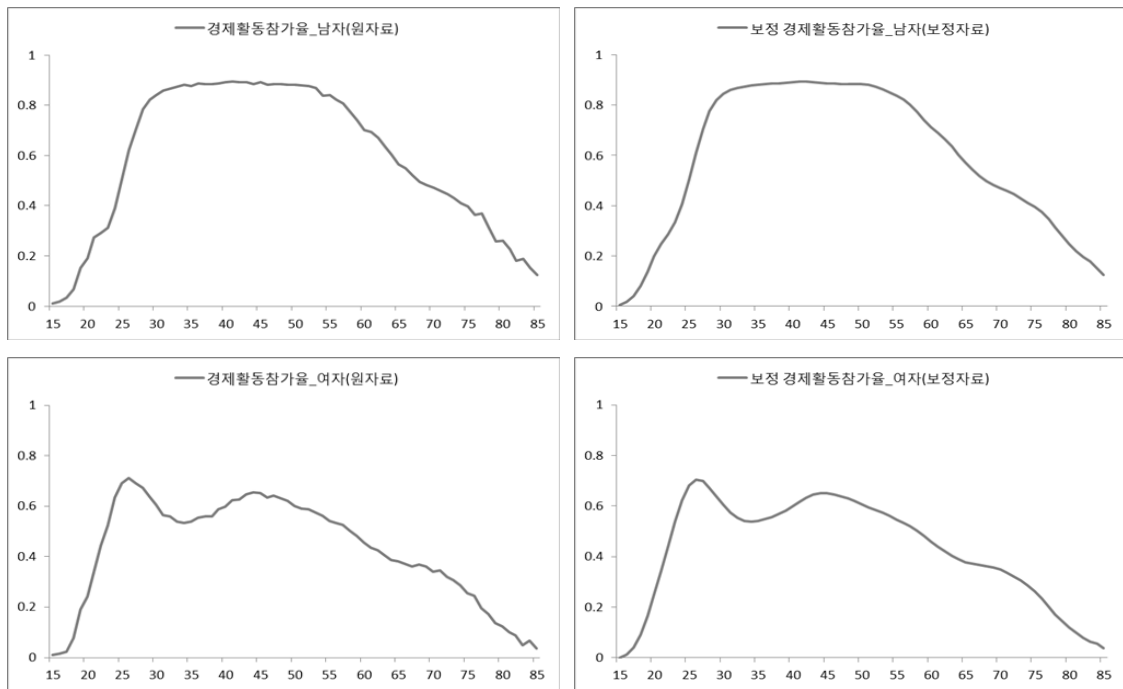
- 평활(smoothness) : 연령간의 불규칙한 변동을 보정을 통해 평활할 수 있다.
- 간소화(parsimony) : 최절약된 모수로 모형적합을 할 수 있다.
- 내삽(interpolation) : 보정을 통해 결측치를 대체할 보간값을 얻을 수 있다.

비교(comparison) : 변화패턴의 비교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추세와 예측(trend and forecasting) : 시간에 따른 변화로부터 추세파악이 용이하고 이는 예측 또는 전망(projection)의 기반이 된다.

분석적 활용(analytic manipulation) : 보정에 적용된 함수의 특성이 잘 알려져 있다면 이 함수 자체가 전망이나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

노동생명표를 다루었던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보정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보통 생명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사망확률은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평활된 사망확률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자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의 변동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표 사망확률을 평활하는 방법으로 Greville(1981)이 제안한 9차항 보정계수를 이용한다. 인구관련 자료의 평활을 위해 널리 쓰이는 Greville 보정방법은 비율(rate) 자료의 평활에 사용된다.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 보정결과(상: 남자, 하: 여자, 좌: 원자료, 우: 보정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로부터 구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비율 자료이고 임의 변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현재 통계청에서 사망확률 보정에 쓰이는 Greville 9차항 계수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정하였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Greville 9차항 보정계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유성 외(2009)를 참고하길 바란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로 만들어진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자료와 이를 Greville 9차항 보정계수로 평활된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상단이 남자, 그림 하단이 여자를 나타내면 좌측은 원자료, 우측은 평활된 자료이다. 그리고 그림에서 세로축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연령을 나타낸다. 원자료를 보면 크지는 않지만 임의 변동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평활과정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으며 불규칙한 부분이 발생한 원자료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료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활된 자료가 원자료에 얼마나 적합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평균 절대값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통계량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MAPE = \frac{1}{n} \sum_{x=15}^n \left| \frac{\hat{w}_x - w_x}{w_x} \right| \times 100$$

여기서 x 는 연령, n 은 연령구간을 의미하며, \hat{w}_x 는 Greville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된 경제활동참가율, w_x 는 원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MAPE 값이 10% 이하이면 매우 우수한 적합결과라 하며(Lewis, 198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적용시켜본 결과 남자는 2.89%, 여자는 4.87%의 작은 MAPE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보정된 자료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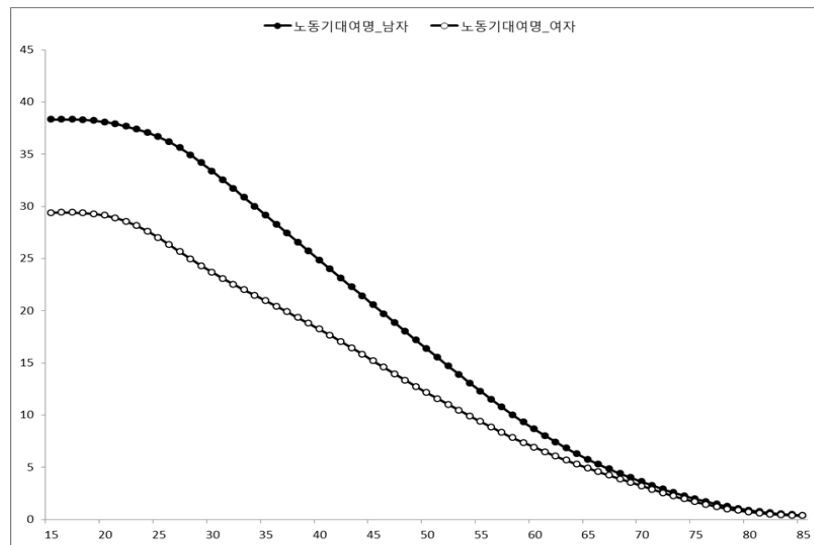
3) 노동생명표 작성결과 - 전국 단위

표 1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노동생명표 결과를 남녀별로 제시한 것이다. 기존 노동생명표 작성결과와 달리 5세별 연령구간이 아닌 남녀 모두 1세별 모든 연령구간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연령구간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15~60세 이상 연령구간보다 확장된 15세부터 85세 이상(85+로 표기) 연령구간에 대해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정지인구, 노동기대여명 작성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이 시작되는 연령인 15세 노동기대여명은 남자의 경우 38.33세, 여자의 경우 29.40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사망수준의 조건 하에서 15세 남성취업자는 대략 53세 정도, 15세 여성취업자는 44세 정도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40세를 전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26세를 전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활동참가 시점이 늦어지는 현상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 노동생명표 작성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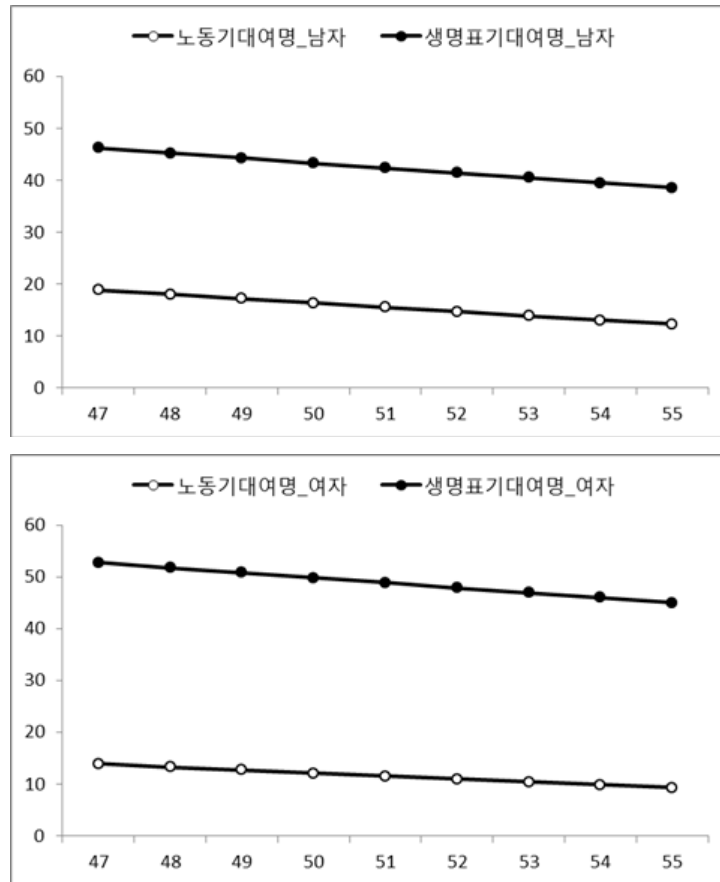
연령	남자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정지인구	노동기대여명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정지인구	노동기대여명
15	0.00471	468	38.33	0.00036	36	29.40
16	0.01755	1,744	38.33	0.01238	1,232	29.41
17	0.04074	4,047	38.32	0.04124	4,104	29.40
18	0.08151	8,093	38.29	0.09244	9,198	29.37
19	0.13862	13,757	38.22	0.16536	16,449	29.29
20	0.19847	19,687	38.09	0.25129	24,989	29.14
21	0.24729	24,516	37.90	0.34336	34,135	28.90
22	0.28683	28,421	37.67	0.43965	43,693	28.56
23	0.33477	33,152	37.39	0.53747	53,395	28.14
24	0.40656	40,235	37.07	0.62375	61,943	27.61
25	0.50285	49,731	36.68	0.68160	67,659	27.00
26	0.61049	60,334	36.20	0.70558	70,009	26.34
27	0.70547	69,668	35.61	0.69921	69,344	25.64
28	0.77520	76,496	34.92	0.67202	66,617	24.96
29	0.81987	80,840	34.17	0.63794	63,206	24.30
30	0.84556	83,304	33.37	0.60420	59,832	23.68
31	0.85985	84,640	32.54	0.57520	56,930	23.09
32	0.86805	85,370	31.71	0.55315	54,719	22.53
33	0.87420	85,896	30.86	0.54060	53,448	21.99
34	0.87850	86,234	30.01	0.53771	53,133	21.46
35	0.88137	86,424	29.15	0.54115	53,440	20.94
36	0.88327	86,513	28.29	0.54831	54,113	20.42
37	0.88466	86,543	27.44	0.55768	55,000	19.88
38	0.88665	86,625	26.58	0.56905	56,079	19.34
39	0.88908	86,737	25.72	0.58335	57,445	18.79
40	0.89170	86,854	24.86	0.60025	59,060	18.23
41	0.89326	86,846	24.00	0.61805	60,760	17.65
42	0.89283	86,626	23.13	0.63410	62,283	17.05
43	0.89088	86,239	22.27	0.64522	63,315	16.44
44	0.88848	85,790	21.41	0.65057	63,775	15.82
45	0.88653	85,369	20.56	0.64981	63,631	15.20
46	0.88521	84,987	19.71	0.64551	63,134	14.57
47	0.88436	84,628	18.87	0.63869	62,387	13.95
48	0.88361	84,252	18.03	0.63009	61,462	13.34
49	0.88283	83,847	17.19	0.61921	60,312	12.74
50	0.88279	83,483	16.35	0.60676	59,005	12.14
51	0.88000	82,834	15.52	0.59501	57,766	11.57
52	0.87332	81,796	14.69	0.58473	56,666	11.00
53	0.86262	80,358	13.87	0.57341	55,464	10.44
54	0.85000	78,721	13.07	0.56070	54,125	9.90
55	0.83694	77,026	12.28	0.54734	52,724	9.36
56	0.82227	75,167	11.51	0.53465	51,386	8.84
57	0.80136	72,725	10.75	0.52119	49,973	8.33
58	0.77282	69,585	10.02	0.50366	48,166	7.84
59	0.74141	66,188	9.32	0.48229	45,992	7.36
60	0.71319	63,081	8.65	0.45977	43,708	6.90
61	0.68849	60,293	8.01	0.43879	41,570	6.47
62	0.66348	57,488	7.40	0.42042	39,679	6.06
63	0.63459	54,362	6.82	0.40454	38,022	5.66
64	0.60283	51,012	6.27	0.39052	36,536	5.28
65	0.57144	47,714	5.76	0.37901	35,279	4.92
66	0.54362	44,724	5.27	0.37185	34,414	4.56
67	0.51949	42,042	4.82	0.36711	33,754	4.21
68	0.49904	39,650	4.40	0.36263	33,095	3.87
69	0.48275	37,578	4.00	0.35692	32,300	3.53
70	0.46990	35,753	3.61	0.34880	31,270	3.20
71	0.45844	34,006	3.25	0.33766	29,951	2.87
72	0.44577	32,140	2.90	0.32283	28,294	2.55
73	0.42932	29,986	2.57	0.30599	26,451	2.24
74	0.41213	27,782	2.26	0.28586	24,321	1.95
75	0.39570	25,644	1.97	0.26214	21,897	1.67
76	0.37481	23,248	1.70	0.23439	19,166	1.42
77	0.34712	20,502	1.45	0.20294	16,191	1.20
78	0.31485	17,602	1.23	0.17145	13,296	1.00
79	0.27986	14,709	1.03	0.14432	10,830	0.84
80	0.24730	12,129	0.87	0.12054	8,711	0.70
81	0.22038	10,008	0.74	0.10034	6,945	0.59
82	0.19603	8,172	0.62	0.07906	5,208	0.50
83	0.17823	6,754	0.53	0.06496	4,043	0.43
84	0.15144	5,160	0.45	0.05650	3,296	0.38
85+	0.12478	22,029	0.39	0.03723	14,765	0.34



<그림 3> 2010년 남녀별 노동기대여명

그림 3은 표 1의 결과 중 남녀별 노동기대여명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로축은 연령, 세로축은 노동기대여명을 의미하고, 검정색 표식은 남자, 흰색 표식은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을 의미한다. 남녀 모두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노동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60세 이후에 감소추세가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더 높고, 여성의 경우 출산 및 보육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직장여성을 위한 복지가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는 베이비붐 세대의 남녀별 노동기대여명을 제시한 결과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2010년을 기준으로 47세부터 55세까지 해당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시작하여 2020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윗세대의 부양과 자녀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세대이며, 타 세대에 비해 상대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은퇴와 고령화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황명진, 정승환, 2011).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기대여명과 노동기대여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베이비붐 세대의 남녀별 노동기대여명과 기대여명 비교(2010년 자료)

그림 4에서 윗부분은 남자, 아랫부분은 여자의 노동기대여명과 생명표 기대여명을 나타내고, 검정색 표식은 생명표 기대여명, 흰색 표식은 노동기대여명을 나타낸다. 또한 가로축은 201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노동기대여명 및 생명표 기대여명을 나타낸다. 그림 4를 보면 남녀 모두 생명표 기대여명과 노동기대여명 간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그 차이가 대략 30년 정도, 여자의 경우 대략 40년 정도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고령층 기대여명은 점점 높아지고 은퇴연령은 앞당겨지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은퇴 후 삶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고민해 봐야할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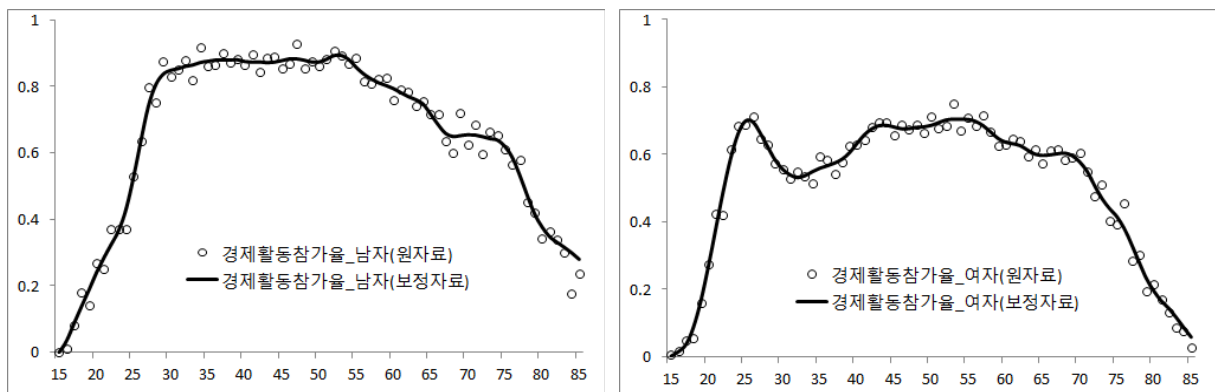
황명진 · 정승환(2011)의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및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대가 은퇴 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 경제 · 사회구조가 받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령층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방안 마련 및 은퇴

연령 이후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 노동기대여명과 기대여명의 추세를 반영한 교육 및 복지정책의 시행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생명표 작성결과 - 경상북도 지역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와 2010년 완전생명표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단위의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 지역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작성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그림 5은 경상북도 지역의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자료와 이를 Greville 9차항 보정계수로 평활된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좌측이 남자, 그림 우측이 여자를 나타내며,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은 원자료, 선으로 표시한 것은 평활된 자료이다. 그리고 그림에서 세로축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연령을 나타낸다. 원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의 자료에 비해 임의 변동이 더욱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평활과정을 통해 경상북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으면서 불규칙한 부분이 발생한 원자료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료를 구성하였다. MAPE 값도 남자는 8.06%, 여자는 8.47%로 나타나 보정된 자료의 적합도 또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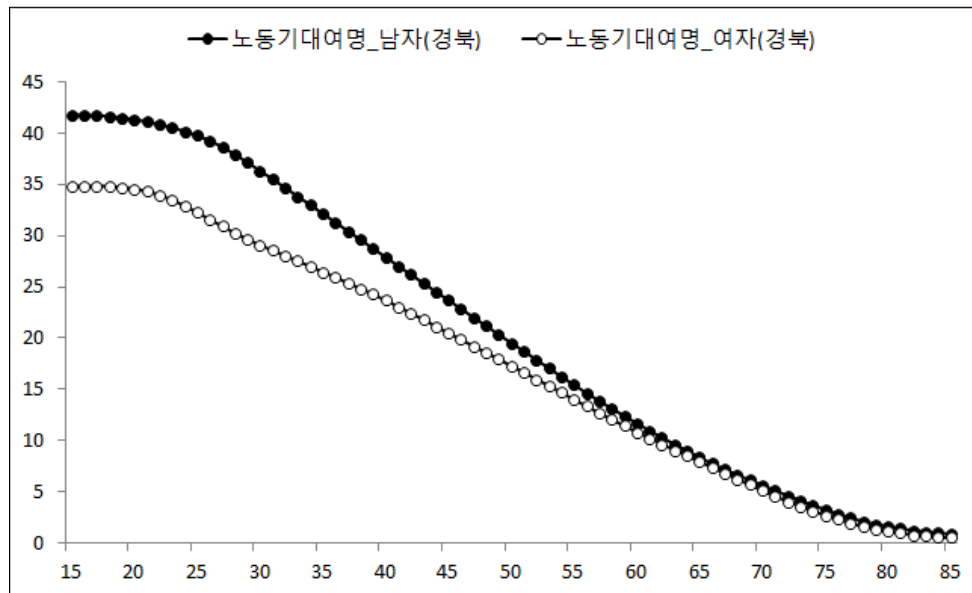
<그림 5> 경상북도 경제활동참가율 보정결과(좌: 남자, 우: 여자)

표 2은 2010년 센서스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경상북도 노동생명표를 남녀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 역시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1세별 모든 연령구간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연령구간도 15세부터 85세 이상(85+로 표기)에 대해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정지인구, 노동기대여명 작성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2 경상북도 노동생명표 작성결과

연령	남자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정지인구	노동기대여명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정지인구	노동기대여명
15	0.0000	0	41.74	0.00250	249	34.83
16	0.03490	3,468	41.74	0.01579	1,572	34.83
17	0.08686	8,627	41.72	0.03701	3,683	34.83
18	0.13735	13,637	41.64	0.08767	8,722	34.80
19	0.18701	18,559	41.51	0.16697	16,608	34.73
20	0.23848	23,655	41.33	0.26760	26,611	34.57
21	0.28353	28,109	41.11	0.38024	37,801	34.32
22	0.32433	32,137	40.84	0.49036	48,732	33.95
23	0.36602	36,246	40.53	0.58759	58,375	33.48
24	0.43050	42,604	40.18	0.66130	65,671	32.91
25	0.52561	51,982	39.77	0.69937	69,423	32.26
26	0.63669	62,923	39.26	0.69658	69,116	31.58
27	0.73936	73,016	38.64	0.66321	65,775	30.90
28	0.80414	79,352	37.92	0.62257	61,715	30.25
29	0.83643	82,473	37.14	0.58367	57,830	29.65
30	0.84805	83,550	36.33	0.55663	55,121	29.08
31	0.85322	83,987	35.50	0.53974	53,420	28.55
32	0.86004	84,582	34.67	0.53163	52,590	28.03
33	0.86409	84,902	33.84	0.53723	53,115	27.51
34	0.87174	85,570	33.00	0.54911	54,260	26.99
35	0.87549	85,848	32.15	0.55928	55,231	26.47
36	0.87892	86,087	31.30	0.56649	55,907	25.93
37	0.87898	85,987	30.45	0.57486	56,694	25.38
38	0.87911	85,888	29.60	0.58613	57,762	24.83
39	0.87988	85,840	28.75	0.60535	59,610	24.27
40	0.87459	85,187	27.90	0.63264	62,248	23.69
41	0.87244	84,822	27.06	0.65869	64,755	23.08
42	0.87343	84,743	26.22	0.67613	66,411	22.46
43	0.87103	84,317	25.38	0.68583	67,301	21.81
44	0.87273	84,270	24.54	0.68646	67,293	21.16
45	0.87733	84,483	23.71	0.68178	66,761	20.51
46	0.88259	84,735	22.87	0.67642	66,157	19.86
47	0.88237	84,437	22.03	0.67675	66,105	19.22
48	0.87848	83,763	21.20	0.68085	66,414	18.58
49	0.87308	82,921	20.37	0.68217	66,444	17.94
50	0.87345	82,600	19.55	0.68659	66,768	17.30
51	0.88163	82,988	18.73	0.69480	67,454	16.66
52	0.89253	83,595	17.91	0.70249	68,079	16.01
53	0.89286	83,176	17.08	0.70517	68,208	15.35
54	0.88014	81,512	16.25	0.70454	68,011	14.69
55	0.85668	78,843	15.44	0.70410	67,824	14.03
56	0.83692	76,506	14.65	0.69813	67,099	13.37
57	0.82229	74,625	13.89	0.68547	65,724	12.71
58	0.81061	72,987	13.14	0.66690	63,778	12.07
59	0.80237	71,629	12.41	0.64782	61,777	11.45
60	0.79320	70,157	11.70	0.63669	60,527	10.84
61	0.78091	68,387	11.00	0.63211	59,885	10.25
62	0.76917	66,645	10.32	0.62640	59,119	9.66
63	0.75984	65,092	9.65	0.61300	57,614	9.08
64	0.74621	63,145	9.00	0.60102	56,230	8.51
65	0.71633	59,811	8.36	0.59742	55,609	7.95
66	0.68523	56,374	7.76	0.59918	55,454	7.39
67	0.65873	53,310	7.20	0.60234	55,382	6.83
68	0.64913	51,576	6.67	0.60433	55,153	6.27
69	0.65157	50,719	6.16	0.59651	53,983	5.70
70	0.65433	49,785	5.65	0.57800	51,817	5.13
71	0.65339	48,467	5.15	0.55013	48,798	4.59
72	0.64850	46,757	4.65	0.50793	44,516	4.06
73	0.64268	44,888	4.18	0.46936	40,573	3.58
74	0.63808	43,014	3.72	0.44006	37,440	3.14
75	0.61919	40,127	3.27	0.41587	34,737	2.72
76	0.58607	36,352	2.85	0.38060	31,122	2.32
77	0.53263	31,459	2.47	0.33274	26,547	1.96
78	0.47278	26,430	2.13	0.28060	21,760	1.64
79	0.41619	21,874	1.85	0.23128	17,356	1.37
80	0.37728	18,505	1.62	0.19460	14,063	1.15
81	0.34827	15,816	1.43	0.16557	11,460	0.98
82	0.33121	13,807	1.26	0.14355	9,456	0.83
83	0.31602	11,975	1.12	0.11652	7,252	0.70
84	0.29897	10,187	0.99	0.08655	5,049	0.60
85+	0.27976	49,391	0.88	0.05868	23,270	0.54

표 2의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이 시작되는 연령인 15세 노동기대여명은 남자의 경우 41.74세, 여자의 경우 34.83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경상북도 지역 경제활동참가율과 사망수준의 조건 하에서 15세 남성취업자는 대략 60세 정도, 15세 여성취업자는 50세 정도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50세 초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20대 중반과 50대 초반 전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2010년 남녀별 경상북도 노동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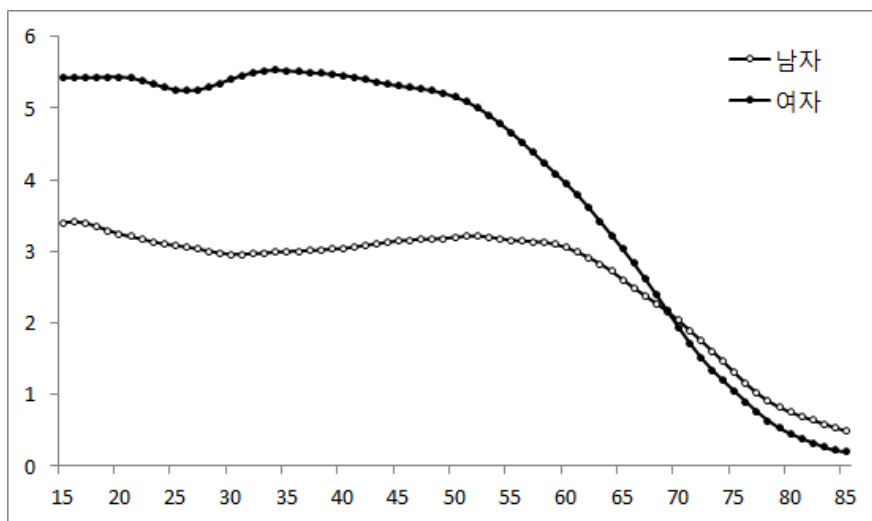
그림 6는 경상북도 지역의 남녀별 노동기대여명을 연령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가로축은 연령, 세로축은 노동기대여명을 의미하고, 검정색 표식은 남자, 흰색 표식은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을 의미한다. 남자는 20대 후반, 여자는 20대 초반을 기점으로 노동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60세 이후에 감소추세가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국의 노동기대여명과 마찬가지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3는 경상북도 지역의 연령별 노동기대여명과 전국의 연령별 노동기대여명 간의 차이를 남녀별로 제시한 것이고, 지면상의 이유로 5세 단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경상북도 지역의 노동기대여명이 전국의 노동기대여명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상북도 지역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노동기대여명 차이 비교(경북-전국)

연령	남자	여자
15	3.40	5.43
20	3.24	5.44
25	3.08	5.26
30	2.96	5.41
35	3.00	5.52
40	3.04	5.46
45	3.15	5.31
50	3.20	5.16
55	3.16	4.67
60	3.05	3.94
65	2.61	3.03
70	2.03	1.94
75	1.30	1.05
80	0.75	0.45
85+	0.49	0.20

그림 7은 표 3의 결과를 남녀별로 그린 것이다. 가로축은 연령, 세로축은 노동기대여명의 차이(경상북도 연령별 노동기대여명 - 전국 연령별 노동기대여명, 단위: 년)를 의미하고, 검정색 표식은 남자의 노동기대여명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5~70세까지의 노동기대여명 차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의 수준에 비해 경상북도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고, 70세 이후로는 미세하지만 남성 노동기대여명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림 7> 남녀별 노동기대여명 차이(경북-전국)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와 2010년 완전생명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전국단위와 경상북도 지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기존 우리나라 노동생명표를 다루었던 연구와 달리 노동생명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Greville 9차항 보정계수로 경제활동참가율을 평활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5세별 연령구간으로 제시하던 것에 비해 1세별 연령구간으로 작성하여 각 연령별 노동기대여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15~60세 이상 연령구간에 제한되었던 기존의 결과에 비해 85세 이상 연령구간까지 작성하여 사회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비율과 고령층의 노동기대여명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경제기반의 주축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 세대의 기대여명과 노동기대여명을 비교하여 고령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의 노동현황을 전국의 현황과 노동기대여명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노년층 수명의 증가, 저출산 현상의 지속, 취업준비기간의 증가에 따른 만혼화 현상 등 우리나라 인구·경제·사회적 근간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연구는 계량적인 분석과 세세한 연령별 패턴을 파악하여 정책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노동력 인구 및 노동생애의 기간 예측 등의 연구도 발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는 1세별 연령구간과 고령층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적합한 자료라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자료만을 사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과거부터의 각 연령별 노동력 추세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자료가 통일된 연령구간을 가진 형태로 과거 자료까지 제공이 된다면 추후 과제로서 과거 노동력 패턴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연구가 고령층까지 포함하여 세세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마련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의 패턴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모형의 모수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자료의 특성과 변화의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모수별 패턴을 파악하여 예측을 시행한다면 앞으로의 변화추세를 좀 더 면밀하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김기환 · 손강주 (2011) “국제인구이동자료를 위한 평활과 모형개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4B): 1821-1835.

김기환 · 이동희 · 정승환 (2006) “간이생명표 확장 기법을 통한 사망확률 추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3): 959-969.

김정근 · 김동희 · 이광실 (1977) “1970년도 한국인 남자노동력생명표” 『한국인구학회지』 1.

박원란 (2001) “생명표에 의한 한국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6(1): 1-17.

박유성 · 박성근 · 최보승 · 김기환 (2009) “Beer와 Greville 보정방법에 의한 사망 확률 보정방법 비교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1B): 97-110.

전태운 (1999) “한국남자의 간이 노동생명표 작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4(1): 30-41.

조진만 (1999) “우리나라 노동생명표에 의한 노동력 추이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3(2).

황수경 (2005) “노동생명표 작성법을 이용한 은퇴연령의 추정” 『노동리뷰』 1(1): 45-55.

황명진 · 정승환 (2011)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지』 34(2): 113-133.

Congdon, P. (1993) “Statistical Graduation in Local Demographic Analysis and Projec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Statistics in Society), 156(2): 237-270.

Greville, T. N. E (1981) "Moving-Weighted-Average Smoothing Extended to the Extremities of the Data. 1. Theory" Scandinavian Actuarial Journal 39-55.

Lewis, C. D. (1982) International and Business Forecasting Methods, Butterworth, London.

Wolfbein, S. L. and Wool, H. (1950) "Table of Working Life : Length of Working Life for Men"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ullentin 1001.

제 11주제: 2015 인구총조사 표본조사방법 연구

김 규 성(서울시립대학교)

I. 서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한 시점에 전국의 인구와 주택의 기본 사항을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뿐 아니라 지역 수준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짧은 조사 기간 안에 조사를 끝마쳐야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와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응답받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이다.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 대상 가구 중 10%의 가구가 표본조사 대상 가구로서 이들 가구에는 인구 및 주택의 심층 질문지(long form questionnaire)가 주어졌다. 표본조사 가구가 아닌 나머지 90%의 가구에는 기본 질문지(short form questionnaire)가 주어졌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조사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많은 나라가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또한 가구에 주어지는 기본 질문지와 심층 질문지의 비율도 다르고 표본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많은 예산과 인력, 관리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제 나라의 실정에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게 된 결과로 이러한 상이함을 보이게 된 것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현행 표본조사의 개선을 모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총조사 표본조사 실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2000년 미국 총조사의 표본조사와 미국의 지역사회조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실시할 표본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개선 방안과 표본조사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 언급하기로 한다.

II. 본론

1. 총조사 모형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대상은 전국의 가구이다.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조사의 이론적인 포함률(coverage rate)은 100%이다. 실제적으로는 조사

대상 가구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거나 중복, 부재, 무응답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응답 포함률이 100%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제한된 조사 기간 안에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및 주택관련 심층 질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기본 문항만을 질문하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심층 문항을 질문하는 것이 보편적인 총조사 형태이다. 기본 문항 조사를 위하여 기본 질문지(short form questionnaire)를 사용하는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하고 심층 문항 조사를 위하여 심층 질문지(long form questionnaire)를 사용하는 조사를 표본조사라고 한다면 총조사 모형은 전수조사 단일형과 표본조사 단일형 그리고 전수 및 표본조사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수조사는 80%~100%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인 인구 정보 및 가구 정보 문항을 질문하게 된다. 전수조사 포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응답자 부담을 줄여서 포함 범위 내의 응답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 제고 및 데이터 완비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반면 표본조사에서는 10%~20%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가구의 인구 및 주택 관련 사항을 심층 조사하게 된다.

총조사 모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혼합형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 비율이 80%, 표본조사 비율이 20%이다. 캐나다 북부 지역 및 원거리 지역, 인디언 보호구역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5가구 중 1가구를 표본조사 한다. 2011년 조사에서는 표본조사 문항이 지나치게 개인의 정보를 조사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자발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자발적인 표본조사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순 기능이 있는 반면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여 캐나다의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연구 기관, 학계, 경제계 등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많은 기관 및 개인이 자발적인 표본조사를 이전처럼 의무적인 표본조사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제기된 만큼 2016년 조사에서 캐над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브라질은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 표본조사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15,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표본조사 비율은 10%이고 15,000명 미만 거주 지역의 표본조사 비율은 20%이다. 소규모 거주지역의 표본조사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이 있다. 러시아는 전수조사를 75%, 표본조사를 25% 실시하고 있고 홍콩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수조사를 90%, 표본조사를 10% 실시하고 있다 (Ralphs and Tutton, 2011).

전수조사나 표본조사 중 하나의 조사만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2000년 총조사까지는 대상 가구의 83%를 전수조사하고, 17%의 가구를 표본조사 하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100%의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표본조사의 기능은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가 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국지역사회조사는 매월 약 250,000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및 주택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관련한 문항을 심층 조사한다. 영국도 100%의 가구를 대상으로 단일한 질문지를 조사한다.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전 인구의 70%를 5년에 걸쳐 조사한다(<표 1>). 프랑스에는 약 37,000개에 달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크기 만 명 미만의 소규모 자치구 수는 약 3만 5천개이고 인구비율은 약 50%이다. 만 명 이상의 중대규모 자치구 수는 약 1,250개이고 인구 비율은 약 50%이다. 소규모 자치구에서는 5년 순환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고 중대규모 자치구에서는 5년에 걸쳐 매년 4%씩 총 20%를 조사한다. 전체적으로는 5년에 걸쳐 전국 가구의 70%를 조사하는 셈이 된다(INSEE, 2006).

<표 1> 프랑스 순환총조사 표본조사 비율

	소규모 자치구 (만 명 미만)	중대규모 자치구 (만 명 이상)	합 계
자치구의 수	약 35,750개	약 1,250개	약 37,000개
인구 수	약 50%	약 50%	100%
표집 비율	100%	40%	
표집된 인구수	50%	20%	70%

2. 2000년 미국 총조사 표본조사 방법

미국은 2000년 총조사에서 대상 가구의 83%를 전수조사하고 17%를 표본조사 하였다. 그리고 2010년 총조사에서는 대상 가구의 100%를 전수조사하였다. 본 소절에서는 2000년 총조사에서 17%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Hefter, 1999; Hefter, Gbur, 2002). 표집틀, 표본설계 그리고 가중치 부여 등을 살펴본다.

표집틀의 체계는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 센서스 트랙, 센서스 블록, 가구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본추출의 단위는 가구이며 가구 구분은 가구 주소(address)로

한다. 표집틀은 1990년 총조사에서 이용된 대표주소 파일 (DMAF, Decennial Master Address File)을 기초로 이후에 발생한 주소 소멸, 주소 생성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표집틀은 주(state) 별로 4개 층으로 층화되었다. 층화 단위는 심층 질문지 대상 지역(LFSE, Long Form Sampling Entity)이며 시(city), 카운티, 학교 지역(school district), 센서스 트랙 등이 이에 속한다. 센서스 트랙의 크기는 대략 1,500에서 8,000가구 사이이고 평균은 약 4,500가구이다. 층화 단위는 4개의 층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층1 : 거주민 800명 미만의 LFSE
- 층2 : 거주민 800명 ~ 1,200명 미만의 LFSE
- 층3 : 거주민 1,200명 ~ 2,000명 미만의 센서스 트랙
- 층4 : 거주민 2,000명 이상의 센서스 트랙

표본추출을 위하여 층 내의 표집단위는 카운티, 센서스 트랙, 센서스 블록, 가구 순으로 정렬되었다. 그리고 가구 주소가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되었다. 층별로 가구 추출 비율이 다른데 층1의 추출률은 1/2, 층2의 추출률은 1/4, 층3의 추출률은 1/6 그리고 층4의 추출률은 1/8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추출률이 1/6 (17%)가 되도록 조정되었다. 2000년 표본주소 추출결과를 보면 모집단 가구 수가 123,411,977이고 표본 가구 수가 21,107,353로서 약 17.1%, 대략 1/6이 표본조사 가구로 선정되었다.

층별 추출률은 블록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는데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상대 표준오차의 범위를 분석한 후 결정되었다(Hefter & Gbur, 2002). 결과적으로 대규모 블록은 낮은 추출률이 결정되었고, 소규모 블록은 높은 추출률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상이한 추출률은 추정 단계에서 가중치에 반영되었다.

가중치는 가구 가중치와 개인가중치로 구분되었다. 표본가구 가중치는 가구 추출 확률을 이용하여 만들어졌고, 개인 가중치는 가중치 행렬 생성하여 사후적으로 보정되었다. 가중치 행렬에 반영된 변수는 가구 타입 (21 종류: 자녀 유, 자녀 무 등), 가구 크기/ 표집률, 가구주/ 비가구주, 인종/ 나이/ 성별 등이다. 총 39,312개 셀이 형성되었고 셀 병합 및 레이킹 기법 활용하여 개인 가중치가 생성되었다. 아래 <표 2>는 가중치 효과를 보여준다.

<표 2> 2000년 미국 표본조사 가중치 효과

인종	비가중 표본수	가중 표본수	100% 모집단	차이(%)
백인	33,750,956	211,297,184	211,460,626	-163,442 (-0.08%)
흑인	3,651,385	34,371,190	34,658,190	-287,000 (-0.83%)
미국 인디언	467,668	2,440,586	2,475,956	-35,370 (-1.43%)

출처: Hefter et. al. (2002)

3. 미국지역사회조사 표본조사 방법

2010년부터는 미국지역사회조사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의 기능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수조사만 실시되었고 표본조사의 심층 문항은 미국지역사회조사 조사 문항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본 소절에서는 미국지역사회조사 표본이 선정된 과정을 살펴본다(Lowental, 2006; US Census Bureau, 2009).

미국지역사회조사의 표집틀은 단위가 주소이며 1990년 총조사 대표주소 파일 기초로 하여 후속적인 주소 변경 및 주소 보완을 통하여 생성되었다. 주별로 층화를 하였고 층화단위는 표본추출 대상(sampling entities)으로서 이에는 카운티, 학교 지역, 정부 지역, 인디언 지역 등이 포함된다. 표본추출 대상은 표본추출 최소 단위 크기(smallest entity measure of size, SEMOS)와 센서스 트랙 크기(track measure of size, TMOS)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표본추출 대상은 주(state)별로 5개 층으로 층화되었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층1 : SEMOS > 1,200 & TMOS > 2,000
- 층2 : SEMOS > 1,200 & TMOS ≤ 2,000
- 층3 : 800 ≤ SEMOS ≤ 1,200
- 층4 : 200 ≤ SEMOS ≤ 800
- 층5 : SEMOS < 200

층별로 주소를 정렬한 후 주소가 계통 추출되었다. 추출률은 층별로 해마다 결정되는데 그 방법은 먼저 해마다 기준 추출률(base rate)이 결정하고 기준 추출률을 이용하여 층별로 상수를 곱하여 층별 추출률을 정하는 것이다. 아래의 그 기준이 나타나 있다.

- 층1 : $0.735 \times$ 기준 추출률
- 층2 : 기준 추출률
- 층3 : $1.5 \times$ 기준 추출률
- 층4 : $3.0 \times$ 기준 추출률
- 층5 : 10%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응답 시점(월)이 지정되고 CAPI 조사가 실시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지역사회조사의 표본수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미국지역사회조사 표본수

연도	일반 가구			집단 소속 개인		
	초기 선정 주소 수	최종 면접수	면접 응답률	초기 선정 개인 수	최종 면접수	면접 응답률
2010년	2,899,676	1,917,799	97.5%	197,045	144,948	97.6%
2009년	2,897,256	1,917,748	98.0%	198,808	146,716	98.0%
2008년	2,894,711	1,931,955	97.9%	186,862	145,468	98.0%
2007년	2,886,453	1,937,659	97.7%	187,012	142,468	97.8%

출처: www.census.gov/acs/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지역사회조사에 선정된 표본은 층별 표본추출률이 다르기 때문에 표본추출확률이 다르다. 따라서 이렇게 상이한 표본추출률은 추정단계에서 가중치 부여를 통하여 보정하게 된다. 먼저 가구 추출확률로 기본 가중치를 만들고 면접 실패 수를 반영하여 수정항을 계산하며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수정항을 계산한다. 모집단 크기에는 카운티 크기, 배우자/ 미혼/ 가구주 수 크기, 인종/ 성별/ 나이 크기 등이 반영되고 레이킹 기법 활용하여 최종 가중치를 생성하게 된다.

4. 2015 표본조사 방법론

이제까지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2015년에 실시하게 될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를 표본추출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표집틀

표집틀은 2010년 총조사 주소 파일(address file)을 기초로 생성한다. 2010년 주소 목록을 기초로 지리정보시스템(GPS)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역 경계를 정하고 2010년 이후의 신축 주택을 추가한다. 조사 체계는 시도, 시군, 읍/면/동, 조사구, 가구의 순으로 하고 행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가구 및 가구원 변동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또한 소지역의 모집단 특성치를 갱신하여 가중치 생성 과정에서 사후 층화 가중치 보정에 활용한다.

2) 층화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표본추출단계에서 층화를 하고 층별로 표본추출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다. 층화의 기준은 지역 단위의 크기이다. 소규모 지역 단위 층은 추출률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규모 지역 단위 층은 추출률이 상대적으로 작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지역 단위는 시도/ 시군 내에서 읍/면/동 그리고 조사구가 될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층을 나눌 수 있다. 즉 시/도 내에서 읍/면/동을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눈다.

<표 4> 층화 기준

	시 지역	군 지역	합계
읍/면/동 수	N_1	N_2	$N_1 + N_2$
조사구수	M_1	M_2	$M_1 + M_2$
인구	X_1	X_2	$X_1 + X_2$
표집 비율	p_1	p_2	$p = \frac{p_1 X_1 + p_2 X_2}{X_1 + X_2}$
표집된 인구	$p_1 X_1$	$p_2 X_2$	$p_1 X_1 + p_2 X_2$

3) 층내 표집비율

층 내에서 표집비율은 층내 가구의 동질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동일한 추출확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의 예에서와 같이 상이한 추출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동일한 추출률과 상이한 추출률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의 조사구의 동질성이다. 만일 두 층에서 조사구의 동질성이 유사하면 동일한 추출률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이한 추출률을 사용한다. 동질성이 큰 경우 큰 추출률을 사용한다.

4) 조사구 및 가구추출

추출률이 정해지면 층 내에서 조사구 및 가구를 추출한다. 조사구를 크기순으로 정렬하고 조사구내의 가구는 지리적인 인근성이 있는 주소를 정렬한 후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추출은 1단 집락추출과 2단 집락추출을 고려할 수 있다. 일단 집락 추출은 조사구를 선정한 후 조사구내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2단 집락추출은 1단계에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에서 2단계로 가구를 선정하는 것이다.

만일 가구 추출율이 10%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구 추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가구 추출률 및 추출된 가구 수는 동일하다. 단, 방법1에서는 $M/10$ 개의 조사구가 선정되었고 방법2에서는 $M/5$ 개의 조사구가 선정되었다.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는 조사구의 동질성과 연관이 있다. 조사구의 동질상이 큰 경우 방법2가 더 효율적이다.

<표 5> 가구 추출 방법 (가구 추출률 10%)

	방법 1 (1단 집락추출)	방법 2 (2단 집락추출)
조사구수	M	M
가구수	N	N
조사구 추출율	$f_1 = 0.1$	$f_1 = 0.2$
조사구내 가구추출율	$f_2 = 1$	$f_2 = 0.5$
가구추출률	$f = f_1 \times f_2 = 0.1$	$f = f_1 \times f_2 = 0.2 \times 0.5 = 0.1$
표집된 조사구수	$M/10$	$M/5$
표집된 가구수	$N/10$	$N/10$

5) 균등 표본조사

표본조사 비율이 10%일 때 10%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2010년 조사와 같이 2015년에 10%를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의 순환총조사나 미국의 미국지역사회조사에서와 같이 10%를 5년 동안 매년 2%씩 조사하는 것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는 10%의 표본을 5등분하여야 하는 후속 작업을 필요로 한다. 표본을 5등분 하는 방법으로 제한적 확률표집(restricted random sampling) 방법과 균형 표집(balanced sampling)을 고려해볼 수 있다 (Royall, 1992; Tille, 2011).

5.1 제한적 확률표집

표본 s 를 10% 표본조사 표본, s_j ($j=1,2,\dots,5$)를 2%표본이고 하자 ($s = \cup_{j=1}^5 s_j$). 그리고 $\bar{x}_s = \frac{1}{n} \sum_{k \in s} x_k$ 를 s 에서 구한 표본평균이라고 하고 $\bar{x}_j = \frac{1}{n_j} \sum_{k \in s_j} x_k$ 를 s_j 에서 구한 표본평균이라고 하자. 표본 s 를 5등분한 표본 s_j 가 다음의 식을 만족하면 s_j , $j=1,\dots,5$ 를 연도별 표본으로 한다.

$$|\bar{x}_j - \bar{x}| < c, \quad j=1,\dots,5$$

여기에서 c 는 주어진 상수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고 결정한다.

5.2 균형 표집

균형 표집은 제한적 확률표집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만족하는 표집방법이다. 균형 표본의 조건식은 다음과 같다.

$$\frac{1}{n_j} \sum_{k \in s_j} x_k = \frac{1}{n} \sum_{k \in s} x_k, \quad j=1,\dots,5$$

즉, 5개의 표본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도록 분할한 표본을 균형표집이라고 한다.

6) 가중치 생성

표본조사 가구 및 개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표본 추출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하여 무응답 보정 인자, 사후층화 보정인자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정한다.

- 표본추출 가중치 : $w_{0k} = \frac{1}{\pi_{0k}}$
- 무응답 효과 보정 : G_k
- 사후층화 효과 보정 : F_k
- 최종 가중치 산출 : $w_k = \frac{1}{\pi_{0k}} \times G_k \times F_k$

만일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매년 2%씩 조사하여 10%를 조사하는 경우 5개년 표본조사 자료를 결합하여야 한다. 자료의 결합은 수준에 따라 가구 수준의 데이터 결합과 소지역 수준의 데이터 결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만일 가구 수준에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매년 가중치와 함께 5개년 통합 가중치를 생산하여야 한다. 소지역 수준에서 자료를 결합하는 경우 소지역의 크기를 가중치로 하여 결과를 병합한다. 만일 $\hat{\theta}_i$ ($i=1, \dots, 5$)를 i 해의 소지역 추정치라고 하면 $\hat{\theta}_i$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hat{\theta}_i = \frac{\sum_{s_i} w_{ki} y_k}{\sum_{s_i} w_{ki}}, \quad i = 1, \dots, 5$$

여기에서 w_{ki} 는 i 번째 해에 가구 k 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k 는 k 번째 가구의 특성값이다. 이제 5개년 통합 추정치는 5개 추정치의 가중평균으로 얻는다.

$$\hat{\theta} = \sum_{i=1}^5 \lambda_j \hat{\theta}_j, \quad \sum_{j=1}^5 \lambda_j = 1$$

7) 표집틀 갱신

표본조사를 5개년에 나누어서 실시하는 경우 해마다 표집틀을 갱신하여야 한다. 5년 주기 총조사의 경우는 5년에 한번만 표집틀을 갱신하면 되지만 해마다 조사를 할 경우에는 매년 표집틀을 갱신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마다 통계 결과를 발표하여 자료 이용이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 표집틀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표집틀 변화는 주로 신축 건물 생성과 주민의 이동으로 발생한다.

<표 6>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수 변화이다. 인구는 2010년에 2005년보다 130만명 증가하였고(2.75%) 가구수는 158만호

(9.91%) 증가하였다. 이를 5개년으로 균등 분할하면 인구는 해마다 평균 약 26만명 증가하고 가구는 약 31만로 증가하는 셈이 된다.

<표 6>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및 가구수의 지역별 변화

지역	인구 (단위 천명)			가구수 (단위 천 호)		
	2005년	2010년	변동률	2005년	2010년	변동률
전국	47,278	48,580	2.75%	15,988	17,574	9.91%
서울특별시	9,820	9,794	-0.26%	3,341	3,577	7.06%
부산광역시	3,523	3,414	-3.09%	1,190	1,251	5.12%
대구광역시	2,464	2,446	-0.73%	817	873	6.85%
인천광역시	2,531	2,662	5.17%	828	929	12.19%
광주광역시	1,417	1,475	4.09%	461	518	12.36%
대전광역시	1,442	1,501	4.09%	480	536	11.66%
울산광역시	1,049	1,082	3.14%	340	377	10.88%
경기도	10,415	11,379	9.25%	3,361	3,908	16.27%
강원도	1,464	1,471	0.47%	522	560	7.27%
충청북도	1,460	1,512	3.56%	507	564	11.24%
충청남도	1,889	2,028	7.35%	663	758	14.32%
전라북도	1,784	1,777	-0.39%	621	663	6.76%
전라남도	1,819	1,741	-4.28%	667	684	2.54%
경상북도	2,607	2,600	-0.26%	943	1,014	7.52%
경상남도	3,056	3,160	3.40%	1,061	1,165	9.80%
제주도	531	531	0.00%	179	188	5.02%

출처 : 통계청 KOSIS

<표 7>은 인구의 연령별 변화이다. 전국적으로는 2.75%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39세 이하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증감률이 동일하지 않다. 서울 인구의 연령대 변화는 전국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5세~19세에서는 전국의 증가율이 10.9%인데 비하여 서울의 증가율은 3.2%이다. 35세~39세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0.31% 감소하였으나 서울에서는 2.4% 증가하였다. 인구의 지역 이동에 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 7>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의 연령별 변화

	전국 인구 (단위 천명)			서울 인구 (단위 천명)		
	2005년	2010년	변동률	2005년	2010년	변동률
합계	47,278	48,580	2.75%	9,820	9,794	-0.26%
0~4세	2,382	2,219	-6.84%	440	397	-9.77%
5~9세	3,168	2,394	-24.43%	551	411	-25.40%
10~14세	3,434	3,173	-7.60%	627	545	-13.07%
15~19세	3,100	3,438	10.90%	615	635	3.25%
20~24세	3,662	3,055	-16.57%	873	684	-21.64%
25~29세	3,671	3,538	-3.62%	961	898	-6.55%
30~34세	4,096	3,695	-9.79%	952	857	-9.97%
35~39세	4,112	4,099	-0.31%	830	850	2.40%
40~44세	4,123	4,131	0.19%	808	797	-1.36%
45~49세	3,900	4,073	4.43%	824	784	-4.85%
50~54세	2,855	3,798	33.02%	643	777	20.83%
55~59세	2,278	2,766	21.42%	519	592	14.06%
60~64세	1,888	2,182	15.57%	401	468	16.70%
65~69세	1,680	1,812	7.85%	299	362	21.07%
70~74세	1,252	1,566	25.07%	192	263	36.97%
75~79세	766	1,084	41.51%	114	159	39.47%
80~84세	432	595	37.73%	66	87	31.81%
85세 이상	233	366	57.08%	37	55	48.64%

출처 : 통계청 KOSIS

표집틀 갱신과 관련하여 <표 6>과 <표 7>이 시사하는 바는 인구 및 가구수 변화는 지역과 연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집틀을 갱신할 때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해야 한다.

8) 표본조사 평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10% 혹은 20%를 조사하는 표본추출률이 매우 높은 조사이기는 하지만 표본조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본조사에 부여되는 평가지표들을 기초로 표본조사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평가지표로는 표본크기(지역별 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응답률(단위 응답률, 지역별, 성별/연령대별 응답률), 포함률(지역별, 성별/연령대별 포함률), 항목 응답률(문항별 응답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0% 혹은 20%의 표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국의 수치를 추정할 때에는 일반 표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정치의 상대표준오차 혹은 신뢰구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방법론을 다루었다. 총조사 모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2000년 미국에서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와 미국지역사회조사의 표본조사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2015년 표본조사 방법론으로서 표집틀, 층화, 층내 표집비율, 조사구 및 가구추출, 균등 표본조사, 가중치 생성, 표집틀 갱신, 그리고 표본조사 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 언급한다. 먼저 표본조사의 프레임 역할을 하는 주소 파일(master address file)의 정확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현행과 같이 5년에 한번만 하는 표본조사가 아니고 매년 2% 혹은 4%씩 5년에 걸쳐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집틀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신축 주택 등을 추가하는 등 주소 파일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을 최소화하는 무응답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표본조사 질문지를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응답 오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여 무응답률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방법(인터넷, 전화, 방문 조사 등)에 따라 조사를 최적화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모집단 수치의 주기적 갱신할 필요가 있다. 행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이민, 기타 행정정보 갱신하여 추후에 가중치를 산정할 때 모집단 자료를 이용한 보정 인자에 갱신된 수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 문헌 >

- Hefter, S. P. (1999). "Long form sampling specification for census 200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 Hefter, S. P. and Gbur, P.M. (2002). "Overview of the U.S. census 2000 long form weighting". Proceeding of Joint Statistical Meetings, 1418-1423.
- INSEE. 2006. "The Population Censuses in France : from General Censuses to 'Rolling Census'".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Lowental, T.A. (2006). "American community survey: evaluating accuracy".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Ralphs, M. and Tutton, P. (2011). "Beyond 2011: International models for census taking: current processes and future development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 Royall, R. M. (1992). "Robustness and optimal design under prediction models for finite populations". Survey Methodology, 18, 179-185.
- Tille, Y. (2011). "Ten years of balanced sampling with the cube method: An appraisal". Survey Methodology, 37, 215-226.
- US Census Bureau (2009). "Design and methodology: American Community Survey".